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1991. 12.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序 文

1990년대 동북아에서는 국제적인 脫冷戰化 추세와 蘇聯의 변혁에 의한 동북아 4강간의 관계 재정립을 바탕으로 새로운 秩序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지역 국제관계의 변화에 즈음하여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에서는 전환기의 東北亞秩序를 현 시점에서 조명하므로써 韓國이 1990년대 동북아질서의 발전에 적응하면서 國家利益을 보호·확대하고 南北韓關係 개선을 통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 연구에서는 蘇聯의 對內外政策의 變化를 고찰하고 美·日·中·北韓 등 역내 주요 국가들의 대외정책 기조 및 동북아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蘇聯의 정책변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분석하므로써 1990년대 東北亞秩序의 展望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가 1990년대의 東北亞秩序 및 統一環境 變化의 전망에 도움이 되고 통일정책 입안에 기여할 수 있는 參考資料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1. 12.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目 次

要 約	1
第1章 序 論	35
第2章 蘇聯의 東北亞政策	39
1. 新思考 外交政策의 一般的 特徵	41
가. 經濟重視 外交政策 推進	42
나. 相互依存의 世界秩序에 대한 認識	44
다. 安保概念의 變化	47
2. 蘇聯의 東北亞政策 目標	53
가. 安 保	54
나. 經 濟	64
3. 政策推進 影響要因	78
가. 國內情勢 不安定	79
나. 經濟難 加重	83
다. 政策目標 實現手段의 制約性	89
라. 安保政策推進의 限界	90
4. 政策推進方向 및 展望	93
가. 政策推進方向	93
나. 對東北亞政策 展望	96

第 3 章 美國의 東北亞政策과 對蘇對應	110
1. 東北亞와 美國의 國家利益	110
2. 美國의 安保目標와 安保政策	114
가. 安保目標	115
나. 安保政策	125
3. 美國의 經濟目標와 經濟政策	151
가. 經濟目標	152
나. 經濟政策	158
4. 蘇聯의 東北亞政策에 대한 美國의 對應	168
가. 東北亞 勢力均衡에 미치는 影響과 美國의 對應	168
나. 主要 兩者關係에 미치는 影響과 美國의 對應	172
다. 多者關係에 미치는 影響과 美國의 對應	178
第 4 章 日本의 東北亞政策과 對蘇對應	184
1. 東北亞와 日本의 國家利益	184
가. 美·日同盟 下의 安保強化	184
나. 資源과 市場의 安定的 確保	185
2. 日本의 安保目標와 安保政策	185
가. 安保目標	186
나. 安保政策	191

3. 日本의 經濟目標와 經濟政策	207
가. 經濟目標: 亞·太地域의 經濟主導	207
나. 經濟政策	208
4. 蘇聯의 東北亞政策에 대한 日本의 對應	217
가.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에 대한 日本의 認識	217
나. 主要 兩者關係에 미치는 影響과 日本의 對應	220
다. 多者關係에 미치는 影響과 日本의 對應	227
第5章 中國의 東北亞政策과 對蘇對應	235
1. 東北亞와 中國의 國家利益	235
가. 安保利益	236
나. 經濟利益	239
2. 中國의 安保目標와 安保政策	241
가. 安保目標	241
나. 安保政策	244
3. 中國의 經濟目標와 經濟政策	257
가. 經濟目標	257
나. 經濟政策	260
4. 蘇聯의 東北亞政策에 대한 中國의 對應	280
가. 域內 勢力均衡에 미치는 影響과 中國의 對應	283
나. 中·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과 中國의 對應	284
다. 多者關係에 미치는 影響과 中國의 對應	287

第 6 章 北韓의 東北亞政策과 對蘇對應	297
1. 東北亞와 北韓의 國家利益	297
2. 北韓의 安保目標와 安保政策	298
가. 安保目標: 韓半島統一과 體制維持	299
나. 安保政策	304
3. 北韓의 經濟目標와 經濟政策	315
가. 經濟目標: 經濟의 主體化, 科學化, 現代化	316
나. 經濟政策	318
4. 蘇聯의 東北亞政策에 대한 北韓의 對應	328
가. 主要 兩者關係에 미치는 影響과 北韓의 對應	328
나. 多者關係에 미치는 影響과 北韓의 對應	336
第 7 章 國際 및 東北亞秩序의 現況과 展望	340
1. 國際秩序의 現況과 展望	340
가. 國際秩序의 現況	340
나. 國際秩序의 展望	350
2. 東北亞秩序의 現況과 展望	354
가. 東北亞秩序의 現況	354
나. 東北亞秩序의 展望	368
第 8 章 結論: 韓半島 統一環境 및 南北韓關係에	376
미치는 影響	

參 考 文 獻

要 約

1985년 집권한 고르바초프 蘇聯共産黨 서기장이 蘇聯의 근본적인 體制改革을 수행하고 美·蘇和解를 추구하므로써 동·서 양진영간의 冷戰的 兩極體制가 붕괴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조도 변화되고 있고 한반도 통일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蘇聯의 체제개혁 및 동북아정책 변화가 국제 및 동북아질서 개편에 미칠 영향을 분석, 예측하고 이의 한반도 통일환경 및 南北韓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主要 域內 國家들의 對應

가. 蘇聯의 東北亞政策

소연방이 공식 해체되고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1991. 12. 18)이 창설됨에 따라 蘇聯의 동북아 정책도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獨立國家聯合의 對外政策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연방은 蘇聯의 고르바초프 전대통령이 추진하였던 신사고외교 및 기존 동북아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지역이 蘇聯의 國益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이유는 이 지역이 蘇聯, 특히 러시아연방의 접경지역으로서 갖는 地戰略的 (geostrategic) 중요성 때문이다. 또한 동북아지역은 美·蘇·日·中

등 4強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亞·太地域 세력균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安保的 次元에서 동북아의 전략적 중요성은 蘇聯이 이 지역의 세력균형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지 못하는 한 亞·太地域 전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蘇聯의 安保政策은 역내 전략환경이 蘇聯에 유리하게 유지되는 방향으로 조성되도록 역내문제에 심도있게 관여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어 왔다. 그러므로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蘇聯의 具體的 目標은 美·中·日의 對 蘇安保威脅 완화,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域內 軍縮의 실현, 多者間 安保協議機構 創設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한편 蘇聯은 동북아지역에서 시베리아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동북아지역국가, 특히 韓國, 美國, 日本의 경제력이 시베리아개발 뿐만 아니라 蘇聯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中國, 北韓 등과의 경제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에서 蘇聯의 政策目標은 蘇聯의 경제발전 특히 극동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동북아를 포함한 亞·太地域國家들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데 있다. 따라서 蘇聯의 동북아에 대한 경제정책의 구체적 목표는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경제협력, 역내 국가들의 시베리아개발 참여 유도, 역내 경제협력 기구와의 참가, 그리고 동북아경제권 참여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現在 蘇聯은 國內情勢가 단기간내 안정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어 당분간 대외문제보다 국내정세 안정에 주력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서방으로부터의 경제협력 획득

이라는 경제적 목표 달성에 주력할 것이다. 옐친을 포함한 改革指導部가 美國의 국익에 전면 배치되는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蘇聯은 동북아정책 추진에 있어서 軍事·戰略的 政策目標보다는 經濟的 政策目標, 그리고 多者的 關係보다는 兩者的 關係를 우선시할 것이다.

蘇聯의 동북아정책은 단기적으로는 兩者關係改善 가속화, 역내 국가들로부터의 자본·기술 도입 등 경제협력 추진, 域內 經濟協力 機構에의 적극 참여, 역내 군축과 다자간 협의기구 창출을 통한 역내 국가의 對蘇 평화이미지 구축, 그리고 韓半島 긴장완화 추구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蘇聯은 동북아경제권 참가, 역내 군축의 실현,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 등 동북아정책을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政策推進의 水準과 範圍를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보다 작고 좁은 영역(subregional basis)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접근한다는 목표하에 兩者的 接觸에서 시작하여, 三者的, 四者的 接觸과 協商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방식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며, 이와 같은 노력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지역적 포럼」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包括的 全方位外交를 추진할 것이다. 域內 모든 국가들과의 政治, 經濟, 外交, 安保協力을 강조하면서 경제목표와 안보목표를 포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셋째, 역내 국가들의 對蘇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역내 국가와의 문화·체육·관

광 교류를 확대하여 평화애호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고양하면서 실리를 추구할 것이다.

蘇聯, 특히 러시아연방은 1990년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동북아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對美關係와 관련 동북아에서 美·蘇關係의 핵심은 역내 군사·전략적 균형문제이므로 蘇聯은 美國의 역내 기득권을 인정하면서도 域內 美軍事力(특히 海·空軍力) 減縮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이다. 한편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蘇聯은 일차적으로 經濟協力 增進에 노력할 것이고 安保的 友好關係 設定은 域內 美·蘇關係 改善이나 양해가 이루어진 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對日關係와 관련, 蘇聯은 국내경제난 해소를 위하여 對日關係 개선을 동북아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려 할 것이다. 1991년 8월 保守쿠데타 실패 후 발트3국의 독립으로 북방영토 반환이 국내정치에 불안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반감되었으므로 蘇聯은 北方領土의 조기 반환을 통하여 對日關係를 개선시킬 가능성이 크다. 蘇聯의 對日 北方領土 返還이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이는 동북아 안보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東北亞 軍縮 및 多者間 安保協議機構 창설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對中關係와 관련, 蘇聯은 中國式 社會主義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 中國과의 선린관계를 유지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경문제 해결 및 中·蘇 兩國間 군사대치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향후 蘇聯은 1991년 5월 江

澤民 訪蘇時의 공동성명에서 나타나듯이 對中關係 發展을 통하여 美·日을 견제하려 할 것이다. 또한 실리적 측면에서 蘇聯은 中國과의 국경문제를 해소하여 國境貿易을 진전시키고, 中國을 시베리아개발에 참여시킴과 동시에 역내 국가들의 시베리아개발에 대한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蘇聯 極東經濟特區 구상과 中國 東北經濟區의 연계를 시도할 것이다.

對韓半島關係와 관련, 蘇聯은 韓國과의 관계발전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蘇聯은 韓國과의 국교수립(1990. 9. 30)을 바탕으로 韓國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문화·학술교류 등 양국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할 것이다. 또한 蘇聯은 北韓의 고립이 蘇聯의 亞·太政策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인식하여 北韓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蘇聯이 모색하는 域內 多者間 經濟協力 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이 진전됨에 따라 多者間 經濟協力の 기회는 증대될 것이나 蘇聯을 포함한 공식적인 경제협력기구 형성은 중장기적 시일을 요할 것이다.

域內 軍縮問題와 관련하여 美·蘇의 단거리 핵무기 철폐 선언으로 역내 군축 실현가능성이 제고되고 있어 1990년대를 통하여 域內 軍縮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多者間 安保協議機構 창설과 관련하여 蘇聯은 기본적으로 亞·太地域에서의 헬싱키모델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域內 양자간 군축의 진전에 따라 아시아版 安保協力會議(CSCA) 창설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이다. 蘇聯은 우선적

으로 多者間 安保協議機構 創設을 위해 域內 국가들과의 兩者的 安保協力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蘇聯의 兩者間 安保協力 모색은 中·蘇軍事交流에 이어 1991년 10월 14일 日·蘇外相會談에서의 「日·蘇 安保隨時協議機構」 설치와 自衛隊 蘇聯海軍間 艦艇海上事故 防止協定の 체결교섭 개시 합의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韓·蘇 양국은 고위장성 상호방문 등 軍事交流 擴大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域內 多者間 安保協力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나. 域內 國家들의 東北亞政策 基調와 對蘇對應

(1) 美國

美國은 세계적 강국들인 美·蘇·中·日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이 세계적 안정과 美國의 지속적인 번영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美國은 전후 대소봉쇄를 위해서, 그리고 日本의 잠재력을 美國 주도의 세계질서에 통합하기 위해서 유럽에서와 같이 동북아지역에서 美國에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사활적 이익으로 간주해왔다. 美國의 동북아정책은 냉전 초기에는 주로 안보상의 이해관계가 중심이었던 반면에 탈냉전 이후에는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美國은 蘇聯威脅의 감소로 군사력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고 경제적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동북아에 대한 美國의 국가이익은 美國의 강력한 군사적 영향력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

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 美國은 국가간에 경제적 相互依存이 심화된 오늘날에도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에서 美國의 군사적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지역과 관련 美國이 갖고 있는 안보목표는 과거 對蘇 봉쇄일변도의 정책에서 對蘇 境界政策으로의 전환, 美國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체제 안에 日本을 묶어 두므로써 日本을 견제, 中國政治體制의 이질성과 아울러 中國政治에 내재한 격변가능성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美國이 힘의 優位를 기초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美國은 이러한 네가지를 중요한 동북아 안보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과거와 같은 對蘇 봉쇄일변도의 전략개념에서 탈피하여 「地域均衡者」 역할을 부각시키는 전략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美國의 균형자론과 이와 관련된 강력한 군사력유지론은 과거 냉전시대에 정립된 美國軍事政策들의 大綱을 유지하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즉 기존 군사동맹체제, 美군사력 전진배치, 전략핵 중심의 핵우산정책, 지역적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기동군 전력강화와 같은 요소들을 美國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美國의 새로운 전략개념은 기존정책의 基本骨幹은 유지하되 비용절감차원에서 그 규모와 운영방식을 상당히 조정한 것이다. 美國은 핵무기체계를 전략핵, 기동성 위주의 전술핵, 그리고 전략방위계획을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전진배치군사력의 규모를 축소하

는 동시에 그 구조를 가능한 한 기동군 중심으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외에서 협조적인 우방국들과의 군사역할 분담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의 군사력 개편작업은 美國이 향후에도 국제정세를 주도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후 美國이 東北亞를 포함한 세계적 차원에서 행사한 헤게모니적 리더쉽은 美國의 경제력에 뒷받침된 軍事的 優越性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정치에서는 脫冷戰으로 군사력의 효용성은 감퇴되고 경제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美國이 향후 국제질서에 대한 리더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는 美國經濟의 신속한 회복여부에 달려 있다.

美國은 새로운 국제정치·경제환경 속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경제목표와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바, 美·日經濟關係에 있어서 무역수지 개선을 통한 美國의 經濟主導權 회복과 사회주의권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 등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인 것이다. 美國은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한 다자간 접근, 쌍무적 시장개방 압력 강화, 亞·太경제협력각료회의(APEC)의 확대 추진, 아시아에서 자국에 배타적인 소경제블럭 형성 움직임 견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한편 美國은 과거 사회주의권과 관련하여 지난 1991년 8월 蘇聯의 군부 쿠데타실패와 그 이후 급진전되고 있는 蘇聯의 내부개혁과 대외개방확대 전망에 따라 蘇聯에 대한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蘇聯의 개혁과 안정을 촉진시키고 蘇聯을 시장경제권으로 통

합시킨다는 목적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蘇聯의 급격한 변혁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혼란과 불투명성 때문에 美國의 對蘇 경제협력은 양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蘇聯을 견제하려는 정치·전략적인 계산과 고려에 의하여 지배될 것으로 보인다.

美國은 동북아에서 기존 동맹체제와 전진배치전략, 그리고 일정 수준의 전략핵 및 공군용 전술핵에 바탕한 核抑止戰略을 유지함으로써 蘇聯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견지하고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되, 蘇聯의 현재상황을 활용하여 동북아에서 보다 안정된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별적인 군축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蘇聯邦의 解體로 인한 蘇聯 국내정세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蘇聯 핵무기체계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 문제는 1992년에도 美·蘇간 최대의 외교현안이 될 것이다.

美國은 또한 자신이 동북아정세에서 최대의 불안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北韓의 核開發問題와 관련하여 역내 국가들의 대북한 압력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1990년대 동북아 전반에 등장하고 있는 한가지 특징은 역내에 多者間 安保協議體가 형성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은 蘇聯이 먼저 제기했으나, 기존의 美·日 및 韓·美간 쌍무적 군사동맹체제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안보체제를 견지하고자 하는 美國의 반대에 부딪쳐왔다. 그러나 美國은 美國 주도의 쌍무적 동맹관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蘇聯의 붕괴로 인

한 역내 세력균형의 변화, 역내 국가들의 대미 안보의존도 상대적 약화 등으로 역내국가들의 다자간 압보협의체 구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美國도 저비용으로 역내 안정을 구축하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蘇聯은 동북아 안보체제의 변화를 위한 적극적 이니셔티브의 하나로 한반도에서의 非核地帶化를 제창해 왔다. 美國도 최근 地上 및 海上配置 短距離 核武器의 철수를 선언하므로써 동북아에서 핵군축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군사기술상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日本의 軍事大國化 傾向과 中國의 독자적인 핵정책 견지 등의 요인으로 美·蘇가 東北亞에서 더 이상의 핵군축을 포함한 다자간군축을 주도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美國은 동북아의 불안요인인 北韓의 핵개발저지를 포함한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접근을 제의한 바 있어, 南北韓間의 신뢰구축과 군축 및 「非核化」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2) 日本

蘇聯의 붕괴에 따라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경제 초강대국인 日本의 국제적 위상이 부각되고 있다. 日本은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적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어 향후 국제 및 동북아질서 개편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戰後 日本의 국가이익은 自國에 대한 안보위협 감소와 경제재건에 의한 자립국가 달성에 있었다. 日本은 美·日安保同盟을 기반으

로 방어적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고, 경제제일주의를 채택하였다. 동북아지역에서 日本의 안보목표는 美·日同盟을 견지하면서 蘇聯의 위협에 대한 방어, 中國에 대한 견제, 그리고 한반도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日本은 지역방위에 있어 안보역할을 확대해 왔는 바, 56중기 방위력증강계획기간(1983~1987)중 해상수송로 안전을 위해 자신의 책임구역을 확대해 나갔으며 해상자위대의 걸프지역 파견으로 해상수송로 안전확보를 위한 해외파병의 길을 열고 안보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日本은 蘇聯의 붕괴와 美國 세력의 상대적 약화로 인한 東北亞 및 亞·太地域에서의 세력공백으로 빚어질 수 있는 지역불안정에 대비하면서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적 위상정립을 위해 정치·군사적 역할 확대(PKO 등)를 모색하고 있다. 日本은 美·日同盟體制를 일방적인 관계에서 쌍무적인 대등관계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美國의 방위비분담 요구도 점진적으로 수용하면서 동맹체제를 공고히 해 오고 있다.

최근 亞·太地域國家들이 제의하고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기구의 창설제안과 관련하여, 日本은 「안보포럼」 구상을 제시하므로써 이 지역 안보문제에서도 자국의 지도력을 확대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나, 美國의 반대로 日本의 구상은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베이커 美國무장관이 제안한 北韓의 핵개발 저지와 동북아의 신뢰구축 및 군축을 위한 다자간 접근(2+4)은 美國의 주도 아래 지역안보를 구축하겠다는 외교 노력의 일환이며, 이것은 또한 日本의 脫美現象을 막고 日本을 美國의 영향력 아래 묶

어 두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美國의 다자간 접근 모색은 지역데탕트 추세 심화에 따라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日本의 경제목표는 자원과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亞·太地域의 경제관계를 주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日本은 全方位經濟外交, 美·日貿易摩擦 해소, 수출 주도 및 첨단산업의 비교우위 확대, 경제협력의 전략적 이용 그리고 日本 주도의 지역경제권 구축 등 포괄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美·日간의 경제마찰은 원천적으로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다. 美·日 양국은 경제마찰 해소를 위해 최근 무역, 투자 등에 대한 정부간 경제정책조정(SII) 노력 뿐 아니라 의회, 연구기관을 통한 상호불신 조정작업(SCHI) 구상 제의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美·日 양국은 통상마찰이 양국 국내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전제하기 위하여 우선 정부간 협의에 중점을 두고 亞·太 경제협력각료회의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등 다자간 경제협의기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은 세계경제의 지역화 추세에 대비하여 「환일본해경제권」 구상 등 동북아경제권 구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美國은 日本 주도의 배타적인 지역경제권 형성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국가들도 日本의 주도적 역할에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볼 때 日本이 구상하고 있는 「환일본해경제권」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타 지역의 경제블러화 추세와 지역국가들간의 경제협력 증대에 대응

하여 동북아 지역경제협력기구 창설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성격은 배타적인 지역경제협력기구보다는 역내의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를 전제로 하는 개방적인 경제협력협의체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日·蘇關係에서 日本은 對蘇 경제지원을 북방도서문제 및 美·蘇 전략관계에 연계시키는 政經不可分の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日本은 蘇聯 국내정치가 안정되고 日·蘇關係 개선의 최대현안인 영토문제가 협상에 의해 해결될 가능성이 가시화될 경우, 美國과의 상호협약 아래 대소 경제협력 및 진출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日·中關係에 있어서 日·中 양국은 지역강대국으로 상호경쟁관계에 있으나, 中國의 안정이 지역안정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日本은 경제면에서의 제한적 對中協力과 군사면에서의 對中牽制라는 이중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東北亞 및 亞·太地域의 국제정치·경제질서는 美·日의 군사경제력을 기반으로 美國의 우위가 유지된 상태하의 美·日「兩頭體制」(bigemony)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中國

세계 강대국인 美國, 蘇聯, 日本이 東北亞에서 중대한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中國의 동북부가 자국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東北亞는 中國의 안보에 있어 사활이 달려 있는 지역이다. 특히 최근 蘇聯의 붕괴와 이에 따른 日本의 군사대국화

가능성 증대는 中國에게 동북아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東北亞는 현재 경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日本을 비롯 韓國, 臺灣 그리고 홍콩 등 중진공업국가들이 위치하고 있어 中國의 經濟利益 추구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1990년대에도 이 지역에 대한 中國의 경제적 이해를 한층 강화하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동북아에서 中國의 핵심적인 안보목표는 「獨立自主」와 社會主義體制 유지 및 현대화 추진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安保目標을 실현하기 위한 中國의 구체적인 安保政策은 東北亞에서 美國과 蘇聯의 패권추구 반대와 平和共存 추구, 日本의 軍事大國化 견제, 日本의 역할 증대에 대비하고 臺灣統一을 위한 군사력 현대화 추진, 南北韓과 日本의 핵보유 반대(핵확산 반대), 그리고 주변 4강에 의한 南北韓 교차승인 수용 등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南北韓關係 改善을 위한 지원으로 나타날 것이다.

1990년대 中國의 經濟的 目標은 社會主義經濟體制를 유지하고 4個現代化의 성공적인 실현을 통해 경제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經濟目標을 달성하기 위해 1990년대 中國의 경제정책은 開放政策의 지속적 추진, 경제현대화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조달하기 위한 美國, 日本 및 韓國 등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내륙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蘇聯과의 경제교류 확대, 그리

고 日本, 南北韓, 蒙古 등이 참여하는 「東北亞經濟圈」 형성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中國은 蘇聯의 붕괴에 따른 東北亞 安保環境의 변화가 中國에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中國은 蘇聯의 약화에 따라 中·蘇國境地帶에 대한 군사적 부담에서 벗어나 對美·日關係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1990년대 東北亞秩序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천안문사태 이후 美國 및 西方側의 中國에 대한 「和平演變」 기도에 직면하고 있는 中國은 蘇聯의 세력약화가 美國의 中國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中國은 역내에서 美國의 영향력 강화가 臺灣의 생존을 연장시켜 中國의 통일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과 蘇聯의 영향력 쇠퇴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東北亞에서의 힘의 공백을 日本이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中國은 자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蘇聯의 영향력 약화에 따른 美·日の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여 中國은 蘇聯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美·日の 동북아지역에 대한 공동지배를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대국화를 노리는 中國은 美·日과의 지속적인 관계개선이 주요 외교사안인 만큼 美·日과의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中國改革의 폭과 속도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蘇聯의 東北亞에 대한 평화공세와 경제진출정책은 蘇聯·北韓關

係를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蘇聯의 정책변화는 中·北韓關係를 강화시켰고 동시에 中國의 北韓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 中國과 韓國의 수교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中國에게 한반도에 대한 정책선택에 있어서 보다 많은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南北韓간의 관계진전과 中國改革政策의 확대는 韓·中修交의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역내 핵확산문제와 관련하여 中國은 지역안정을 위하여 北韓의 핵무기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北韓이 핵무기개발을 감행할 경우, 이는 日本과 韓國의 핵무장을 유도하여 동북아안정 및 中國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中國은 北韓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北韓과의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집단적인 제재 조치보다는 외교적 설득을 통하여 北韓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고 있다.

한편 蘇聯의 東北亞에 대한 경제적 적극 진출정책은 中國의 국익에 부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많다. 蘇聯이 日本과 韓國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경우 中國이 日本과 韓國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中國은 北韓과의 이념적 결속 강화보다는 日本·韓國과의 경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실리를 추구할 것이다.

中國은 東北亞의 복잡한 문제와 갈등을 다자간 安保協力體에 의

해 해결하는 것이 현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역내 安保協力機構 창설은 양자간 關係正常化와 關係改善에 의해 역내 국가들간의 신뢰증진과 긴장완화를 도모하여 안보적 이행을 구축한 다음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中國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東北亞 國際秩序가 美·日同盟에 의해서 주도될 가능성이 증대될 경우, 中國은 美·日의 공동패권 추구를 견제하기 위하여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창설에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中國은 東北亞에서 獨逸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틀내에 묶어 견제하였던 것처럼 日本의 군사 대국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역내 安保協力機構 창설 노력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역내 다자간 地域經濟協力 노력과 관련하여 東北三省開發과 華東經濟圈開發을 계획하고 있는 中國은 현대화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역내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므로 東北亞經濟圈 형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中國은 日本 주도하의 경제권 형성에 대해서는 견제할 것이며, 日本과의 동등한 동반자로 東北亞經濟圈 창설을 추진하는데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北韓

東北亞는 北韓外交政策 추진의 핵심지역이며, 지정학적 위치, 小國이라는 國家屬性, 정권수립 이후의 역사적 경험 등 요인에 의해 北韓은 국제환경 변화, 특히 東北亞 國際環境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北韓 安保目標의 핵심은 體制維持에 있고, 이 목표의 적극적인 측면인 「남조선혁명」 이후 全韓半島의 共產化統一은 北韓의 국가목표인 동시에 안보목표이다. 이는 北韓體制가 존속되는 한 견지될 것이나, 체제유지목표의 중요성은 사회주의국가들의 정치변혁, 韓·蘇修交, 韓·中 무역대표부 설치 등 동북아 양자관계 재조정, 南韓과의 격차심화, 경제난 가중 등의 요인에 의해 증대되고 있다. 한반도통일과 체제유지라는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北韓의 安保政策은 「국방에서 자위」원칙에 입각한 정치사상적 준비강화, 경제력 강화, 4대군사노선의 실현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방에서 자위에 기초하여 北韓은 자체의 군사력 강화에 매진해온 한편, 中·蘇와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北韓은 극단적인 反美主義와 日本軍國主義의 부활에 대한 우려를 기반으로 한 反美反帝鬪爭의 지속 및 駐韓美軍撤收, 한반도의 非核地帶化, 不可侵宣言, 그리고 軍縮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北韓의 經濟政策目標은 「경제에서 자립」이다. 北韓이 自立的民族經濟를 건설하기 위해 표방하는 기본정책은 自力更生의 원칙이다.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경제에서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北韓의 실질적인 經濟目標은 「경제의 주체화, 과학화, 현대화」로 표출되고 있으며, 경제정책은 자력갱생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이다. 그러나 北韓은 經濟難을 해소하기 위해 「통제된 개방」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北韓은 蘇聯의 적극적인 對東北亞政策 推進에 구체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다, 사회주의체제의 변혁과 세계적 차원에서의 화해

협력추세, 동북아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과정에서 南北韓 유엔 동시가입과 美國·日本과의 관계개선 시도 등 체제유지를 위하여 대외정책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蘇聯의 급격한 정치변동은 北韓의 對中國關係 緊密化를 가속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中國에서 蘇聯과 같은 政治變動이 발생하지 않는 한 中國과 北韓은 정치·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주의체제 고수라는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긴밀한 協調體制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中國은 개방정책 추진에 따른 국제협력 증진 필요성과 자체 경제역량 한계 때문에 현체제를 유지하려는 北韓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실질적인 經濟援助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양국의 경제관계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재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蘇聯의 政治變革으로 北韓은 中國에 더 기울어질 것이나, 현재 北韓의 경제·군사적인 측면에서의 對蘇依存도에 비추어 北韓은 蘇聯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기존의 同盟關係를 최대한 유지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韓·蘇 修交, 蘇聯의 쿠데타 발발시 北韓의 목시적 지지, 蘇聯 자체의 근본적인 體制改革, 南北韓 유엔동시가입 및 南北韓關係 진전 등에 따라 蘇聯의 對北韓 경제·군사지원이 축소되고, 蘇·北韓 軍事同盟體制가 변화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北韓의 핵사찰수용과 핵무기개발 포기가 실현된다면 北韓의 對美·日修交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對南關係에서

北韓은 1988년 이래 南北韓 共存體制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南北韓 공존체제로의 이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北韓이 기존의 對南政策을 변경시키지 않는 한 南北韓關係 개선의 급속한 진전은 불가능하나, 1991년 12월 10~13일 개최된 제5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은 南北韓關係 개선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北韓은 短期的으로 국제적 고립 탈피와 체제고수의 일환으로 南北對話와 統一戰線戰術을 병행하면서 비정치적 교류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지만 1993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北韓의 對內外政策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中期的(1993~1995)인 측면에서 유엔동시가입에 의한 「두개 조선」 인정, 南北韓 국력격차의 심화, 한반도 현상인정에 대한 국제적 압력 증대 등의 요인에 의해 北韓이 南北韓간의 교류 협력을 수용하므로써 南北韓關係가 실질적인 「共存段階」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분단 50주년이며 南北韓 軍事力 均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995년을 계기로 北韓은 「守勢的 共存」 입장에서 「두개 조선」을 고정하므로써 體制維持를 도모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南北聯合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일성의 有故 또는 김정일에로의 권력이양 이후 예상될 수 있는 北韓內部的 급격한 政治變動은 이러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 北韓은 南韓에 의한 흡수통일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體制維持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자체의 국방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對中·蘇 軍事同盟體制를 유지시켜 나가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北韓은 주한미군, 핵무기의 철수, 군축, 비핵지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對美直接 接觸의 모색과 대남평화공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北韓의 당면과제는 경제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에 과도한 軍事費 지출은 억제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北韓이 韓·美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南北韓軍縮 등이 실현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아시아 安保協力機構의 형성이 가시화된다면 北韓은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기구에 불가피하게 참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北韓은 체제유지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통제된 개방」정책을 적극 전개할 것이며, 이는 「제한된 지역」의 자유무역지대화, 經濟特區 설정 등의 방법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를 통해 北韓은 동북아시아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려 할 것이며,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多者間 經濟協力도 활성화할 것이다. 또한 北韓은 자본주의적 국제경제질서와 경제협력기구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나, 시베리아개발, 中國의 동북경제구를 포함한 여타 경제특구에 적극 진출할 것이며, 北韓指導者들은 이미 태평양연안국가들의 經濟的 動態性을 인지하고 태평양연안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다자간 대화에 임하고 있다.

2. 國際秩序의 現況과 展望

가. 國際秩序의 現況

國際秩序는 1985년 3월 집권한 蘇聯의 고르바초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외관계 등 제분야에서 「公開性」과 「新思考」 및 「民主化」를 강조하는 새로운 개혁정책, 즉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 하므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蘇聯의 개방과 개혁정책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국가들의 근본적인 체제개혁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동·서대립이 종식되고 신데탕트 심화 및 신국제질서가 태동하고 있다.

현재 태동중인 新國際秩序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蘇聯이 국내 정세의 불안정과 경제난으로 인해 세력이 약화되고 국제정치에서 美國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구조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美國은 硬性的인 힘(군사와 경제)과 軟性的인 힘(이념과 리더쉽)을 보유한 다차원적인 초강대국으로 존속하고 있고, 이러한 美國의 지위는 금세기 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美國이 지향하는 新國際秩序는 국가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대를 통하여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자유민주주의이념과 집단안보체제 그리고 시장경제체제의 확산을 통하여 美國 주도의 평화공존적인 국제정치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록 현재로서는 신국제질서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과 행동양식이 정착되지 않았고 민족분쟁 등 여러가지 갈등과 불안요인들이 상존하고 있

어, 과도기적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新國際秩序에서는 냉전시대와 같은 군사적 대결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국가상호간 화해와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美國은 절대적으로 우세한 經濟力을 바탕으로 國際經濟秩序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2차에 걸친 석유과동, 日本 및 서유럽국가들의 경제력, 新興工業國의 부상 등 1970년대 국제경제상의 변화는 美國의 상대적인 경제력 약화를 초래하였고, 1980년대에도 美國의 무역적자 누적과 日本과 西歐經濟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美國의 국제경제적 지위는 계속 하락하였다. 따라서 現國際經濟秩序에서 국제경제적 문제점들을 多者間 協議를 통해 해결하고 그 비용을 경제강국들이 분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美國은 自國經濟力의 상대적인 약화와 日本經濟의 지속적인 성장 및 獨逸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단독으로는 國際經濟秩序를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이에 따라 美國은 주요 經濟強國들과의 협의하에 國際秩序 管理의 비용을 분담시키고 있다. 또한 韓國을 비롯한 新興工業國家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군으로 부상하므로써 國際經濟 管理에 있어서 先進國과 開發途上國間의 마찰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國際經濟秩序를 重層化된 구조로 이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유럽공동체(EC) 및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등 지역경제블럭의 발전과 蘇聯의 改革·開放으로 시작된 蘇聯 및 東歐圈 國

家들의 市場經濟體制로의 편입노력도 새로운 國際經濟秩序를 대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1990年代 國際秩序의 展望

1990年代 初가 美·蘇 冷戰的 국제체제가 붕괴되고 新國際秩序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약 10년간의 國際秩序에서는 구질서의 구조와 작동원리들이 잔존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1) 國際社會의 流動性 增大와 國際機構의 機能強化: 脫冷戰時代에는 과거 冷戰時代의 진영간 關係들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國際關係의 多變化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국가간의 關係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변화하게 되므로써 국제적 유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國際政治·經濟秩序의 안정유지에 불확실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990年代에 예상되는 다양한 위협요인들, 즉 걸프戰과 같은 전통적인 地域紛爭과 테러, 마약, 환경, 핵확산 및 후진국 외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國際機構 및 專門機能集團(레짐)들의 기능강화 및 참여 확대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추세는 국제정치의 「民主化」와 「多元化」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 單極構造下의 多極化 現象擡頭: 1990年代 國際環境은 국가간의 권력배분에서도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國

國際政治·經濟秩序의 재편과정에서 蘇聯의 역할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日本의 경제력 부상, 독일통일과 유럽통합 및 제3세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역강대국의 부상과 地域主義의 擴散現象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美國이 정치·경제·군사 부문에서 다차원적인 힘을 가진 초강대국으로서 「新國際秩序」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美國國力の 상대적 약화와 지역세력의 상대적 부상 등으로 인하여 蘇聯, 日本, 유럽共同體, 中國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單極構造下의 多極化 現象이 나타날 것이다.

(3) 美國 主導下의 「新國際秩序」 展開: 美國은 「新國際秩序」의 창출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美國은 自國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로 동맹국과 주요 강대국들에게 國際政治·經濟秩序 維持를 위한 責任과 役割을 분담시키므로써 저비용으로 유리한 국제적 지위를 견지하려 할 것이다. 또한 美國은 과거 냉전시대와 같이 동맹국에게 일방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베풀기보다는 자국의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相互主義와 多者主義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강조할 것이다.

둘째, 美國은 地域主義의 擴散과 지역강대국의 등장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협세력을 제거하기보다는 주요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美國은 蘇聯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蘇聯의 완전 붕괴를

막고, 日本 및 獨逸과의 기존 동맹관계를 유지하므로써 이들의 팽창을 견제할 것이며, 中國에 대해서는 開放과 改革을 지지하므로써 국제협력을 유도할 것이다.

셋째, 美國은 地域紛爭 가능성이 높은 제3세계 지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지원하고, 美國의 이익에 중요한 지역 및 국가들(걸프 지역, 中美, 이스라엘, 韓國 등)에 대한 안보공약 준수와 선별적인 개입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美國은 橫國家的 問題(transnational issues) 해결을 위하여 多者間 協力を 制度化하는 「레짐」 구축에 노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1990年代의 국제질서를 주도할 美國은 대외정책면에서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相互主義, 多者主義, 橫國家主義 등에 입각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 東北亞秩序의 現況과 展望

가. 東北亞秩序의 現況

(1) 兩者關係 再定立과 地域데탕트 趨勢 擴散: 동북아에서는 현재 탈냉전, 4強關係 재정립, 다자간 지역신뢰구축 움직임 등이 보이고 있으나 아직 冷戰的 構造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蘇聯은 美國과의 화해와 더불어 對中關係 改善(1989), 韓·蘇修交(1990), 日·蘇關係 改善을 위한 북방영토문제 협상 가능성 시사

및 日·蘇 安保隨時協議機構 창설합의(1991) 등으로 역내 국가들과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와 한반도를 둘러싼 冷戰的 構造下的 「北方三角關係」(蘇·中·北韓)와 「南方三角關係」(美·日·韓國)의 대결상태는 와해되고 있다. 蘇聯은 국내경제의 파탄과 내정의 혼란으로 인하여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퇴조하고 있고 당분간 능동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없을 만큼 위축되어 있다. 이에 따라 美·中關係와 美·日關係의 발전이 탈냉전시대의 동북아질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美·中關係에 있어서 中國은 전통적인 대륙세력으로 동아시아의 질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왔고 현재 4個現代化를 위한 실용주의 외교노선으로 주변정세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美國은 해양세력으로 태평양지역에서 지배적 위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영토획득보다는 이념과 경제이익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북아에서의 美·中の 전략적 이해관계는 갈등보다는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념갈등과 통상마찰 등 美·中 양국간의 현안 문제들은 기복은 있으나 상호이해와 협력 아래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동북아질서 유지의 핵심인 美·日關係는 상호의존의 심화로 특별한 관계로 발전되고 있다. 日本은 경제력 중심의 다극화시대에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여 국제적 위상의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日本의 영향력은 점증되고 있고 투자와 원조부문에서는 美國에 앞서고 있다. 그러나 美國은 세계강국으로의 주도권을 견지하고, 日本의 위상증대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인식하여 동북

아질서의 안정을 위한 균형자 및 보장자역할을 계속 수행 할 것이다. 한편 美國은 日本의 안보역할분담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므로써 美·日同盟關係를 성숙된 동반자관계로 재조정하고 있다.

美國의 대한반도 정책은 韓·美同盟關係를 주축으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 재발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美國은 北韓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이 결과에 따라 美·北韓關係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美國은 蘇聯의 위협 감소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소 견제보다는 대북한 전쟁억지와 지역안보 유지를 중심으로 조정하고 있다.

美國은 日本, 中國, 蘇聯의 지역패권 추구를 견제하면서 안보면에서는 기존의 양자간 동맹關係를 유지·보완하고 있으며 경제면에서는 쌍무적인 시장개방의 요구와 다자간 접근을 통한 역내 국가간의 경제마찰 해소와 경제협력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蘇聯은 국내사정으로 영향력이 감소되고 中國은 국내정치·경제 문제로 北韓과 베트남 등 주변국 이외 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北韓은 당면한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하여 南北韓關係 改善과 국제협력을 위한 대화에 응해오고 있다. 北韓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개방을 추구하는 이외의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동북아 4강간의 양자관계 재정립은 동북아에서 화해와 안정을 추구하는 새로운 질서 구축과 지역데탕트 추세 확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 相互依存의 深化와 美·日의 經濟主導: 동북아경제권에 속하는 韓國, 臺灣, 홍콩 및 中國의 對外經濟關係의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는 美國, 日本과의 무역이 각 해당국가의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데 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상호의존의 심화와 더불어 대두된 국가간 경제협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地域協力體를 구성하자는 제의가 역내 국가들에 의하여 여러번 제안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된 경우는 없으며 亞·太地域을 포괄하는 亞·太경제협력각료회의가 정부간 협의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3) 脫冷戰의 進展과 冷戰의 殘在 持續: 역내 국가간 경제관계의 심화와 中國과 蘇聯의 시장경제체제에의 편입 노력은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에 바탕을 둔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에서는 과거 냉전시대에는 생각 할 수 없었던 中·蘇關係 改善, 韓·蘇修交, 韓·中貿易代表部 交換設置, 日·蘇關係 改善, 日·北韓 修交交涉, 南北韓 유엔동시가입 등 역내 국가간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냉전의 유산인 日·蘇간 領土紛爭, 中·蘇간 국경문제 미해결, 美·中關係 경색, 그리고 南北韓간 긴장관계 지속 등 갈등요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위와 같은 냉전의 잔재로 동북아정세는 지역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탈냉전이라는 국제조류에 부응하여 역내 국가들은 국내문제 해결을 위하여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있어 지역분쟁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지역분쟁요인을 안고 있는 당사국들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어 지역데탕트 추세는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 東北亞秩序의 展望

동북아지역에는 단기적으로는 과도기적인 불안정국면이 초래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美國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공존적인 동북아질서가 정착될 전망이다.

(1) 美·日間の 成熟된 同伴者關係 確立: 美國은 日本과 韓國 등 동맹국들에게 적절한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여 저비용 저수준으로 美國의 안보역할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역 핵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日本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세력공유」 차원의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美國은 궁극적인 군사 안보의 보장자로서 日本, 蘇聯, 中國의 지역패권주의를 견제하면서, 美·日同盟을 주축으로 蘇聯과 中國의 협력하에 동북아질서 안정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 域內 多者間 信賴構築努力 增大: 동북아에서의 탈냉전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美·蘇간 또는 南北韓간의 군비통제 노력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와 같은 양자 및 소지역수준에서의 군비통제 실현 노력은 역내 국가들간의 다자간 신뢰노력으로 파급될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동북아 안보체제에 대한 다자간 접근 모색은 기존 동맹관계의 기반위에서 진행될 것이며, 美國은 균형자, 중재자, 안보의 보장자

로서 세력균형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3) 開放的 地域主義의 浮上: 단기적으로는 동북아지역만의 제도화된 지역경제기구가 설립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며 亞·太地域을 포괄하는 亞·太경제협력차료회의가 역내 국가간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협의체의 기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경제의 국제적 분업구조가 정착될 경우 동북아지역의 地域經濟協力機構가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동북아에서 美國의 기득권 유지와 日本의 경제주도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거부감 등으로 유럽공동체와 같은 강력한 기구의 구성보다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협의체 형태의 동북아 경제협력기구가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 單極構造下의 多極化現象 擡頭: 동북아 세력균형은 美國을 정점으로 하는 蘇聯, 中國, 日本간의 느슨한 4강체제로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多元的인 세력들이 이러한 4강체제 하에서 일정한 정도의 독자성을 가지고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동북아질서는 「單極構造下의 多極化」(uni-multipolar) 현상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안보면에서는 中國과 蘇聯의 국내정치 불안이 지역안정에 있어서 가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美國, 日本, 中國, 蘇聯 등 주요 4강간 양자관계의 改善과 相互協力の 증대로 동북아질서가 보다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면에서 美國의 시장개방 압력은 동북아국가와 美國과의 경제적 마찰 뿐만 아니라 동북아국가 사이에도 서로가 상대방 국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연쇄적 효과를 일으켜 역내 국가간의 경제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日本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분업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북아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和解와 協力이 지배할 것이나, 국익추구를 위한 상호간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역내 국가들의 경쟁은 국제적인 협력이라는 틀안에서 競爭的 共存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4. 韓半島 統一環境 및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탈냉전시대의 東北亞秩序는 中·蘇의 개혁지속 및 동북아 4강간의 관계재정립 등 과도기에 접어 들고 있어 한반도의 통일환경에 주요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 韓半島 周邊環境의 安定的 發展: 美·蘇와 유엔 등 국제사회는 중동과 캄보디아문제 등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와 같은 추세는 韓半島의 脫冷戰化와 南北韓 平和體制構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북아지역 데탕트의 심화와 확산추세는 南北韓關係 개선 및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긍정적인 주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 韓半島問題 解決을 위한 國際的 努力 增大: 한반도의 안정은 東北亞地域安保와 經濟協力 增大를 위한 핵심고리로 간주되고

있어 동북아 4강은 和解·協力趨勢를 발전시키기 위해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구축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는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 南北韓 平和體制 構築과 4強의 交叉承認: 北韓의 金日成體制는 유엔동시가입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 평화공존을 향한 정책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대내적으로는 「하나의 조선정책」을 주장하고 대외적으로는 南北韓 실체를 인정하는 이중정책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北韓의 태도변화와 南韓의 평화통일 노력은 남북정상회담과 南北韓간의 교류·협력 증대로 이어질 것이며 南北韓간 직접 협상을 통한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美·日·中·蘇 주변 4강은 한반도의 安定維持와 南北韓의 실제인정이 동북아정세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北韓도 체제유지를 위하여 4강의 현실인정 추세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南北韓關係의 진전에 따라 동북아 4강의 교차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라. 「한민족공동체」 實現 可視化: 1990년대 중반부터는 南北韓의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北韓의 지도층 개편에 따른 정책변화로 南北韓關係 改善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교류와 협력의 증대로 北韓의 「남북연합」 수용 등 공존공영을 바탕으로 한 「한민족공동체」의 구축이 가시화될 것이다.

빈 면

第1章 序 論

1. 國際秩序의 變化

냉전시대에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지배해왔던 美·蘇 兩極體制는 蘇聯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의 붕괴로 인하여 美國 중심의 一極體制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국제환경은 통신과 교통의 발달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및 평화공존이념의 확산, 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와 전 세계적인 시장경제체제 출현, 주권국가의 권리영역 축소와 國際機構의 기능강화 등 새로운 평화공존적 국제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냉전질서를 지배하였던 군사력은 국가의 영향력 행사에서 그 중요성이 약화되고 경제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체제의 성격변화는 국가간의 세력배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적인 세력배분은 美國을 정점으로 蘇聯, 日本, 유럽공동체(EC), 中國 등 느슨한 5角體制로 「單極構造下의 多極體制」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국가간의 관계는 냉전시대의 진영간 대립적 관계들에서 벗어나 다변화되고 있다. 또한 脫冷戰時代에서 과거 냉전시대의 안보위협이 제거됨으로써 동맹관계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일방적인 국익추구로 인해 국제관계는 더욱 유동적이고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는 종교·이념·인종간의 전통적인 갈등요인들과 환경, 인구, 마약, 테러, 핵확산 등 다양한 橫國家的 위협요인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기구 및 전문 機能集團들의 기능강화와 참여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국제정치의 多元化, 民主化 趨勢가 강화될 것이다.

1990년대의 국제질서는 냉전시기에서 탈냉전시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새로운 국제규범이 정착되지 않아 流動성과 不安定性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당면하게 될 불안정요인과 새로운 도전요인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2. 東北亞 國際秩序

동북아지역은 지리적으로 中國, 日本, 韓半島, 蘇聯의 시베리아와 極東地域, 臺灣, 홍콩을 포함한 아시아대륙의 동북부를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 국제질서 형성과 변화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美國을 포함하고 있으며, 臺灣, 홍콩은 경제활동에서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동북아지역은 美國·蘇聯·日本·中國 등 4大強國의 교차지역이다. 즉 동북아의 4대강국은 정치·경제·군사이익을 둘러싸고 동북아의 4大強國은 상호간에 갈등을 자주 빚어왔다. 동북아는 국제정치·경제의 중심부로 부상하고 있는 亞·太地域의 핵심국가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 국제정치·경제 군사력의 중심은 대서양지역에서 亞·太地域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亞·太地域은 영토·인구·국민총생산·군사력(방위비기준) 등 일반적인 국력지표를 감안할 경우

세계 5대강국(美·日·中·蘇·오스트레일리아)이 존재하고 있다. 亞·太地域은 세계영토의 47.5%와 세계인구의 44.7%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총생산의 57.9%와 군사비지출의 67.2%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다른 지역보다 높다. 동북아는 亞·太地域의 일부분이나 亞·太地域의 군사·경제면에서 주요 핵심국가들인 美國·中國·日本·蘇聯·韓國 등이 존재하며, 아직도 冷戰遺産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이념과 군사적인 대립상이 지속되고 있어 亞·太國際安保秩序의 핵심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편승하여 유럽보다는 늦으나 脫冷戰무드가 점진적으로 파급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蘇聯의 정책변화는 동북아 국제환경, 세력균형 및 국가간의 관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3. 研究範圍와 意義

蘇聯의 체제개혁과 對內外政策 變化는 동북아 4강간의 세력균형을 변화시킴으로써 동북아질서를 재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蘇聯의 변화가 동북아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1990년대의 동북아질서를 전망하는데 있다. 또한 1990년대의 동북아질서의 전망을 바탕으로 동북아질서의 변화와 발전이 한반도의 통일환경과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첫째, 동북아에서의 주요 행위자들을 선정하였으며 그 대상국가로서 지리적으로 동북아에 위치한 蘇聯,

日本, 中國, 北韓 및 東北亞秩序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안하여 美國을 포함시킨다.

둘째, 연구의 주요 대상분야는 각국의 대외정책으로서 안보와 경제분야로 구분하여 각국의 정책목표와 정책을 분석한다.

셋째, 시간적으로는 蘇聯의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의 蘇聯 및 각국의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동북아질서의 전망은 1990년대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첫째, 蘇聯의 대내외정책 변화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蘇聯의 동북아 적극진출정책을 안보와 경제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이에 대한 美·日·中·蘇·北韓 등 역내 주요 국가들의 동북아정책과 蘇聯의 진출에 대한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를 고찰한다. 이와 관련 역내 주요 국가들의 대외정책기조와 對蘇對應은 독립된 장으로 다루고자 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동북아 국제질서를 전망하고자 한다.

끝으로 한반도 통일환경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질서와 동북아질서 변화에 적응하면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보호·확대하고, 南北韓關係 개선을 통한 평화적인 통일 정책수립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第2章 蘇聯의 東北亞政策

일찍이 레닌이 “러시아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유럽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도 속해 있다”고 선언하였으나, 蘇聯*은 최근까지 유럽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아시아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蘇聯이 이러한 아시아정책을 추진하여 온 가장 근본적인 理由는 蘇聯의 外交政策 優先順位에서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亞·太地域이 유럽지역보다 낮게 위치되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蘇聯의 아시아지역은 賦存資源을 제외한다면, 모든 면에서 유럽지역보다 덜 중요하다. 즉 첫째, 모스크바는 태평양에서 10,000km나 떨어져 있으며, 둘째, 蘇聯의 아시아지역은 人口와 經濟面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셋째, 동유럽과 달리 蘇聯의 아시아지역은 國家安保에 대한 영향이 적으며, 넷째, 아시아에는 유럽에 비견할만한 政治·文化的 機構가 없고 美國도 유럽보다는 아시아지역을 경시하고 있다.¹⁾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亞·太地域이 北美 및 유럽과 함께 國際政治·經濟의 中心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蘇聯의 亞·太地域에 대한 關心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히 고르바초

* 蘇聯은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의 약칭으로서 특히 1991년 쿠데타 실패와 1991년 12월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창설 선포 이후 「소비에트연방」이 사실상 해체되었으므로 이미 적합하지 않은 용어이나, 本研究에서는 편의상 「蘇聯」이라고 지칭한다.

1) Yutaka Akio, "The Soviet Union's Asia Policy: Past, Present, and Future," *Japan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 no. 1 (Spring/Summer 1991), pp. 42~43.

프 집권 이래 蘇聯의 亞·太政策도 적극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수십년간 이루어 온 亞·太地域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이 지역의 國際的 重要性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발전 추세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즉 20세기말 日本의 국민총생산은 현재 美國의 국민총생산과 비슷한 4조달러에 이르고, 中國은 1조달러, 그리고 韓國은 4~5천억달러에 달할 것이며, 세계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北美地域에 비견하게 되는 등²⁾ 이른바 「太平洋時代」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蘇聯은 이 지역의 經濟的 繁榮에 동참하여야겠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고르바초프 집권 후인 1986년 4월 23일 亞·太地域에 관한 「蘇聯政府聲明」에서 스스로를 “亞·太地域의 최대의 열강”으로 규정하고, 동년 7월 28일의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에서도 스스로 “아시아·태평양국가”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³⁾

이에 따라 蘇聯은 특히 고르바초프 집권 이래로 적극적인 아시아 進出政策을 추진하고 있는데, 本章에서는 蘇聯의 동북아정책을 중심으로 政策內容과 方向을 분석·전망할 것이다.

그러나 특히 1991년 8월 보수쿠데타 실패 이후 최근 蘇聯에서는 연방해체 위기 등 급격한 變化가 일어나고 있어 향후 蘇聯의

2) Donald S. Zagoria, "Soviet Policy in East Asia: A New Beginning," *Foreign Affairs*, vol. 68, no. 1 (1988/89), p. 134. 차고리아 교수는 亞·太地域의 未來像을 다음과 같이 특징짓고 있다. ① 괄목할만한 경제성장, ② 모든 역내국가가 혜택을 얻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 ③ 4강간의 긴장완화. *ibid.*, pp. 134~135.

3) 蘇聯이 스스로 亞·太 열강이라는 주장은 이미 1970년대 후반 이래로 계속되어 왔다. John J. Stephan, "Asia in the Soviet Conception," in Donald S. Zagoria, ed., *Soviet Policy in East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p. 34.

對外政策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소연방체제가 와해되고 러시아만이 남게 될지도 모르는 流動的인 蘇聯情勢에 비추어, 향후 蘇聯의 外交政策을 전망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나,⁴⁾ 國內情勢 변화과정에 따라 새로운 外交政策이 입안·추진 된다고 하여도 기존의 정책과 별개로서 독자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며, 蘇聯邦이 해체되어도 東北亞 接境國家로서 러시아가 과거 蘇聯邦의 기존 동북아정책 수행을 대부분 계승할 것이고, 기존 정책노선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변화요인을 감안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현재 蘇聯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고려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蘇聯이 취해 온 東北亞政策 基調와 推進方向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政策內容과 方向을 분석·전망할 것이다.

1. 新思考 外交政策의 一般的 特徵

1985年 3月 고르바초프 집권 이래 蘇聯社會는 엄청난 양적·질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社會革命으로서의 페레스트로이카 (перестройка)는 政治·經濟·社會·文化·對外關係 등의 모든 영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외교정책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이른바 新思考 外交政策에 입각하여 美·蘇和解와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탈냉전을 도모하여 왔다.

따라서 蘇聯의 東北亞政策도 신사고 외교정책의 연장선 위에서

4) 蘇聯의 국내정세에 대한 전망은 「3. 政策推進 影響要因」 참조.

고찰될 수 있으며, 蘇聯 외교정책의 일반적 특징들이 東北亞政策에도 투영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蘇聯의 동북아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이하에서는 蘇聯 外交政策의 一般的 特徵을 살펴본다.

가. 經濟重視 外交政策 推進

1985년 3월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으로 취임하였을 때, 蘇聯은 國內적으로 극도로 혼미한 경제침체, 관료주의의 횡행과 비능률, 보수화한 노인지배(gerontocracy)와 사회지도층의 타락, 사회의 정신적 분위기의 황폐 등의 혼란과 對外的으로 대소 군사우위를 천명한 레이진 행정부의 도전, 베트남화한 아프가니스탄문제와 이에 따른 蘇聯의 국제적 고립 등으로 실로 危機狀況에 직면하고 있었다.

대내외적 위기상황 속에서 고르바초프는 무엇보다도 蘇聯 국내 경제상황 호전에 일차적인 중점을 두고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經濟沈滯 극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처음부터 外交와 內政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었으며, 經濟의 活性化야말로 蘇聯의 대외적 지위를 개선하는 관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찍이 1985년 4월 고르바초프는 “(蘇聯의) 역사적 운명, 현대세계 속에서의 社會主義의 地位는…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달려 있으며,” 소비에트社會의 發展은 오로지 「經濟의 質的 發展」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⁵⁾

5) <Права>, 1985. 4. 24.

蘇聯이 경제발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對外的 安定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세바르드나제 당시 외무장관은 1985년 7월 헬싱키회담에서 “어떤 국가의 경우에도 외교정책은 국내문제와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며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蘇聯은 지속적인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제27차 당대회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과제는 蘇聯共産黨의 국제전략을 결정한다”고 연설했다. 이는 蘇聯이 국내 경제발전을 위하여 對外的 安定 基盤을 모색하고 있음을 뜻하며, 蘇聯 外交政策이 經濟的 觀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바르드나제는 1987년 7월 외무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훈시하였다. “현대는… 국내 경제개혁의 순수한 경제적 현실이 蘇聯의 외교정책에 고려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이다. 蘇聯의 외교정책을 「경제화」시킬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왜냐하면 외교정책이 완전히 경제와 융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蘇聯經濟와 사회전체의 페레스트로이카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⁶⁾

경제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蘇聯의 이러한 정책은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國內經濟發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政策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政策基調로 반영되었고, 그것이 유럽에서의 군축과 탈냉전을 이끌어 왔다.

6) 「ソ連月報」, 第531號 (1987. 9), p. 38.

나. 相互依存的 世界秩序에 대한 認識

新思考 外交政策은 과거의 계급투쟁론이나 양대진영론에서 탈피하여, 세계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경제권」으로 변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사회주의국가들이 고립되어서는 안되며, 「世界統合經濟圈」에 참여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종래의 兩大陣營論에 입각한 「두개의 세계경제」 개념이 부정되어, 一國社會主義的 自給自足體制에서 탈피하여 相互依存的 世界分業體制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계급투쟁의 절대화는 「정치논리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유물사관적 도그마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포위된 陣地」(자본주의 포위론)로서의 蘇聯의 이미지도 초중앙집권화, 사회주의적 윤리관이나 애국주의로 포장된 강제노동, 경공업과 농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중공업의 창출 및 국민에 대한 군대적 규율 요구 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⁷⁾ 따라서 蘇聯은 相互依存的 世界經濟秩序 속으로 적극 편입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蘇聯은 1986년 여름 이래로 國際經濟機構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보여 왔다.⁸⁾ 유럽공동체(EC),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국제통화기금(IMF), 석유수출국기구(OPEC),

7) Т. Кунадзе, Об обороне достаточности вое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СССР,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no. 10, 1989, стр. 70.

8) Anders Aslund, "The New Soviet Policy towards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The World Today*, vol. 44, no. 2 (February 1988), pp. 27~30.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그밖에도 유엔의 지역경제위원회(특히 유럽경제위원회) 등 國際經濟機構에 대해 蘇聯이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은 蘇聯이 科學技術革命이라는 새로운 世界經濟的 潮流를 의식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蘇聯은 브레튼우드體制 창설과정에 매우 소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협정 초안의 몇 조항이 蘇聯의 요청에 의해 수정되었으나, 옵서버로서 참가한 제1차 회의(1946. 3) 이후 蘇聯은 교섭에 참가하지 않았다. 蘇聯이 불참한 가장 근본적인 理由는 냉전의 발발이었다.⁹⁾ 그러나 1986년 여름 蘇聯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의 가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1986년 8월 12일 가트교섭의 새로운 다자간 협상(우루과이라운드) 참가를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나, 美國의 부정적 반응으로 이 제안은 거부되었다.

그후 서방선진7개국(G7)은 1991년 7월 런던에서 열린 頂上會談에서 蘇聯에 대해 국제통화기금의 準會員國 加入을 제의하였으며, 蘇聯은 10월 5일 특별준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準會員國이 되면 기술적 지원은 받을 수 있으나 正會員國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 사용은 어렵다. 서방의 입장은 蘇聯에 정회원국 자격을 부여하기 이전에 蘇聯의 경제개혁 진전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트 가맹국중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된 국가들은 一般特惠制度(GSP)에 의해 선진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世

9) 상세한 내용은 Valerie J. Assetto, *The Soviet Bloc in the IMF and the IBRD* (Boulder: Westview Press, 1988) 참조.

界銀行으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일한 그룹이다. 社會主義圈 國家들 가운데 국제통화기금과 가트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는 루마니아 뿐이며, 헝가리와 폴란드는 세계은행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가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¹⁰⁾ 蘇聯이 가트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국제경제기구의 자본주의적 속성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으나, 또한 蘇聯이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 가입하면, 국제통화기금 규정에 따라 正會員 分擔金の 330%까지 貸出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도를 높히게 되어 外資導入에 유리한 조건을 얻게 된다. 또한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하면, 改革措置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改革을 가속화하여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은 개혁파의 입지를 강화시켜 개혁에 대한 국내의 반발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¹¹⁾

특히 經濟相互援助會議(COMECON)가 와해된 이래로 蘇聯이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고 계획관리방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제통화

10) 가트와 세계은행의 개발도상국 인정 기준은 상이하다. 世界銀行에서 헝가리의 개발도상국 인정을 둘러싼 문제는 Paul Marer, "Centrally Planned Economies in the IMF, the World Bank, and the GATT," in J. C. Brada, E. A. Hewett and T. A. Wolf, eds., *Economic Adjustment and Reform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9) 참조.

11) Josef van Brabant & Paul Marer, "Reform and Membership of the Planned Economies in the GATT, the IMF, and the World Bank," *Pressures for Reform in the East European Economies* (美上下兩院 合同經濟委員會 報告書, 1989. 10. 27), "社會主義諸國の改革とGATT, IMF, 世界銀行への加盟," 「ソ連東歐貿易調査月報」(1990. 3), p. 88.

기금, 가트 등 국제경제기구에 참여하고 世界市場의 競爭規則에 적응하는 등의 대외경제관계를 조정하는 정책은 중요한 현실성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세계무역의 80%가 가트체제에서 이루어지며, 외국기업들은 가트의 규제 하에서 시장경쟁을 하게되므로 「온실」적 조건 하에서 활동해 오던 소련기업들도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¹²⁾

다. 安保概念의 變化

페레스트로이카 하에서 蘇聯의 軍事戰略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의 최우선과제인 침체된 經濟를 活性化하기 위하여 고르바초프는 전통적인 팽창주의정책을 수정하고 군사비 지출을 경감하여 자원을 군수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재분배하고, 국내의 정치·경제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蘇聯의 군사전략을 규정하는 기본개념은 軍事독트린이다.¹³⁾ 軍事독트린은 “國家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戰爭의 기본적·근본적 문제에 관한 科學的 見解의 體系”이며, “將來戰의 정치적 평가, 국가

12) 韓國共產圈研究協議會, 「韓國의 極東·시베리아 投資進出에 대한 美·日·中·蘇의 視角과 그 對應方案 研究」(경제기획원 연구비지원 결과보고서, 1989. 12), pp. 20~21, 64.

13) 蘇聯에서 독트린과 戰略의 개념은 명확한 차이가 있다. 戰略은 일정한 규모의 軍事力(軍團級 이상)의 運用術 및 理論이며, 독트린은 戰略의 原則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병력운용에 관해서는 독트린이 아니라 전략이 규정하며, 독트린과 전략의 관계는 총론과 각론의 관계에 있다. 宮內邦子, “ソヴェト軍事ドクトリンの變遷: 抑止か破催か,” 「ソ連研究」, 第7號 (1988. 10), p. 7.

의 전쟁에의 자세, 장래전의 성격규정, 국가의 경제적·심리적 전쟁 준비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한 國家指導機關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며, “法的 拘束力을 가진 것”이다.¹⁴⁾ 따라서 軍事독트린은 군사·정치적 측면과 군사·기술적 측면을 포함한 “전쟁준비와 수행에 관한 見解의 體系”라고 정의될 수 있다.¹⁵⁾

이러한 軍事독트린은 蘇聯의 安保概念에 따라 규정되는데, 최근 蘇聯의 안보개념은 종래의 「絶對安保」(absolute security)개념에서 「共同安保」(common security)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작용·반작용 이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대안보」의 추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하여 軍備增強을 초래하고 결국은 蘇聯安保에 위협 요인이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상대방의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안보개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共同安保概念은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消極的 側面에서는 핵무기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積極的 側面에서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개념을 의미한다.

抑止戰略(deterrence strategy)에 입각한 絶對安保概念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도화된 핵무기 생산능력에 조응하여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확대지향적 군비경쟁을 심화시켰다. 결과적으로 핵억지를 위한 핵軍備의 증강은 지구 파괴력의 범위를 넘는 불

14)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военных терминов>, Москва, 1966 г., стр. 77; С.Н. Козлов и др., <О советской военной науке>, Москва, 1964 г., стр. 383; 上揭論文, p. 6.

15) 平井友義, “新思考下のソ連對外政策,” 「ソ連研究」, 第10號 (1990. 4), p. 109.

안정한 성격을 띠게 되어, 상대방의 불안을 가중시킨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위협도 증대시켜 온 것이다. 이러한 矛盾을 상호불신에 기초한 敵概念의 수정을 통해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공동으로 벗어나자는 것이 共同安保의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共同安保는 핵무기를 위시한 각종 무기의 군축과 불신 제거를 위한 신뢰구축 및 분쟁의 정치적 해결과정을 통하여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인류공영의 평화세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積極的 側面에서의 共同安保는 안전보장을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정치·외교·경제적 측면에서 추구한다는 包括的 安全保障體系의 형성이라는 차원으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 측면에서의 「공동안보」, 즉 「포괄적 안보」는 단순히 군비경쟁의 수준을 最小抑止(minimum deterrence)水準으로 낮추고, 경제협력, 과학·기술의 교환, 경제통합의 강화 및 환경오염 등에 대한 공동 대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¹⁶⁾ 이는 과거의 제로섬 게임적 敵概念에서 탈피하여 상호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相互依存의 확대·심화를 의미한다.

과거의 계급투쟁론이나 양대진영론에서 탈피하여, 세계가 「하나의 세계」, 「하나의 경제권」으로 변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고립되어서는 안되며, 「世界統合經濟圈」에 참여하는

16) 세바르트나제는 1989년 10월 23일 제2차 인민대회원대회에서의 報告에서 페레스 트로이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안전보장에 대한 확신이 필요불가결하다고 말하면서, “안전보장은 상대방보다 많은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무기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한 국가안보를 강조하였다. <Правда>, 1989. 10. 24.

동시에 전통적 안보 위주에서 경제·사회적인 필요를 중시하는 대외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現代世界는 과학·기술혁명의 딜레마로 文明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지구전멸의 위기라는 統合과 分裂의 모순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이한 체제 간의 단순한 공존이 아니라 相互依存의 필요성이 오늘날 발전의 변증법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와 기술부문에서 상호협조가 필요하며, 이러한 필요성을 경시하는 것은 인류문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人類生存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계급적 이익보다 계급초월적인 인류 전체의 利益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르바초프는 1988년 6월 제19차 黨協議會 報告에서 “현대의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에 원래부터 내포되어 있던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이익과 전인류적 이익의 상호관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全人類的 價値의 優位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⁷⁾

한편 소극적 측면에서의 共同安保概念을 규정하는 「合理的 充分性」(reasonable sufficiency) 원칙은 蘇聯의 새로운 軍事독트린의 核心概念을 이루고 있는데, 합리적 충분성에 대한 蘇聯의 공식적

17) 이는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對外介入의 正當化 名分을 부정하는 것이고, 나아가 蘇聯의 개입(원조 포함)이 義務가 아니라 選擇事項임을 천명한 것이다. 한편 제3세계 개입자제문제와 관련하여, 제3세계 급진파들은 蘇聯이 남북문제를 美·蘇關係 개선에 환원시켜 버렸으며, 美·蘇 접근은 大國共同支配를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제3세계의 비난과 蘇聯의 반대논리에 대해서는 A. Громико **За победу нов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мышления,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no. 3, 1989, pp. 2~4 참조.

언급은 蘇聯共産黨 제27차 당대회에서 행한 고르바초프 연설에서 나타난다. “蘇聯의 군사독트린의 지향점은 분명히 방어적이다... 蘇聯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해서는 안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 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이다... 蘇聯은 어떤 형태의 핵전쟁도 반대한다. 우리는 대량 파괴용 무기 사용의 금지, 군사력의 합리적 수준으로의 제한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上限線의 성격과 수준은 美國과 美國의 동맹국들의 태도와 행동에 의해 계속 제약되고 있다.” 合理的 充分性の 原則은 군사력의 규모, 전력구조 및 부대전개를 攻勢的 概念으로부터 防禦的 概念으로 수정한다는 것으로서 蘇聯의 군사독트린이 계속 공세적 전략을 강조하여 왔던 것에 비교한다면 획기적인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¹⁸⁾

合理的 充分性の 개념은 “防衛에만 충분하고 攻勢에 나오기는 불충분한 수준의 병력”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나,¹⁹⁾ 이러한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브레즈네프 시대에 확립된 「戰略的 均衡」(strategic parity)이 결국 美國의 군비증강을 촉발시켰으며 귀중한 자원의 낭비로 이어졌다는 반성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擴大指向的 戰略均衡에 입각한 絶對安保概念은 縮小指向的 戰略均衡에 입각한 合理的 充分性の 概念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군사독트린으로 확립되었던 것이다.

위협의 인식 차원에서 합리적 충분성의 개념은 한편으로 핵무기

18) 물론 蘇聯의 軍事독트린은 1980년대 초반부터 방어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여, 第2 擊型 核戰略으로 이행하는 등 보다 수동적인 군사 방침으로 전환하였다. 宮內邦子, 前掲論文, pp. 19~22.

19) 平井友義, 前掲論文, p. 106.

의 가공할만한 파괴력에 대한 공동인식이 상대방에게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기본 인식과 다른 한편으로 완전한 敵概念의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상호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단계의 개념이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설득과 대화의 과정 속에서 위협 수준이 경감될 수 있다는 假定에 입각하고 있다.²⁰⁾ 즉 合理的 充分性의 原則에 입각하여 군사력을 상호 감축하고 包括的 安保에 입각하여 정치적 관계 등이 증대되는 과정 속에서 핵무기가 폐기되고 군사력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는 동시에 相互敵概念이 철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合理的 充分性을 둘러싼 蘇聯 內部的 論爭은 대별하여 크게 3가지 경향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軍部の 입장으로서 합리적 충분성의 원칙을 지지하나 방어에 충분한 상한선을 가능한 한 크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입장은 방어수준이 상대방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소극적인 논리로서, 美國이 핵무기 선제공격의 공세적 군사독트린을 전지하면서 기본적으로 재래식무기의 근대화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군사력 삭감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의 논리는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및 미·캐나다연구소 등의 民間研究者들의 의견으로서 합리적 충분성은 확실한 객관적 기준을 갖고 있으므로 그것에 입각한 병력(특히 핵전력)의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입장은 대폭적인 비대칭적 삭감에 반대하지 않으나, 삭감에는 항상 당사국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삭감을 찬성하는 셋째의 소수 논리와 차이가 있다.

20) V. Zhurkin, "How to Break the Vicious Circle," *New Times*, no. 40, 1987. 10. 12.

마지막 論理는 서방으로부터의 對蘇 핵공격 가능성을 부정하고 당면한 蘇聯經濟의 재건에 전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²¹⁾ 다만 이러한 見解 差異는 군사력 삭감의 수준과 방법에 관한 것이며, 합리적 충분성의 원칙 자체에 대한 견해 차이는 아니다.

합리적 충분성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軍事部門에 투여될 수 있는 資源이 유한하다는 共同認識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확대균형적 군비증강보다는 방어에 충분한 수준의 군사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量에서 質로의 이행원칙에 합의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²⁾

2. 蘇聯의 東北亞政策 目標

蘇聯의 동북아정책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북아지역에 대한 蘇聯의 安保的·經濟的 利害關係가 분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東北亞에서의 蘇聯의 國家利益은 무엇보다도 먼저 동북아지역이 蘇聯, 특히 러시아의 接境地域으로서 蘇聯의 國益과 밀접하게 연

21) 이러한 論爭에 대한 연구와 소개는 G. Duffy and J. Lee, "The Soviet Debate on 'Reasonable Sufficiency'," *Arms Control Today* (October 1988), pp. 19~24; R. H. Phillips and J. I. Sands, "Reasonable Sufficiency and Soviet Conventional Defense: A Research Not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3, no. 2 (Fall 1988), pp. 174~175; 平井友義, 前掲論文, pp. 107~108. 특히 두번째 交涉削減派의 대표적 견해는 A. Arbatov, "How Much Defence is Sufficient?" *International Affairs*, 1989. 4; A. A. Kokoshin, "A Soviet View on Radical Weapon Cut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March 1988). 그리고 군부의 입장은 Raymond L. Garthoff, "New Thinking in Soviet Military Doctrine," *The Washington Quarterly* (Summer 1988) 참조.

22) 합리적 충분성의 원칙에 입각한 이러한 質的 基準의 강조는 한편으로는 軍事的手段의 政治的手段으로의 비중 이동을 의미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무기체계 속에서의 질적 개선 그리고 나아가 質的 軍備競爭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지역이 갖는 地戰略的(geostrategic) 중요성에 기인한다. 동시에 동북아지역은 美·蘇·日·中 등 4強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亞·太地域 세력균형관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安保的 次元에서 蘇聯은 동북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蘇聯이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관계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한, 亞·太地域 전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蘇聯은 東北亞地域에서 시베리아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經濟的 利害關係를 갖고 있다. 동북아지역국가 특히 韓國, 美國, 日本의 경제력이 시베리아개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蘇聯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지 않으며, 또한 中國, 北韓 등과 의 경제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지역에 대한 蘇聯의 이러한 이해관계는 특히 러시아가 동북아 접경국가이며 시베리아개발 주체라는 점에서 蘇聯邦의 장래와 관계없이 러시아의 對外政策目標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가. 安 保

동북아에서 蘇聯의 安保政策은 역내 전략환경을 蘇聯에 유리하게 전체적인 軍事的 均衡을 구축하려는 目標 위에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蘇聯의 東北亞政策 目標은 美國의 군사력 약화, 日本의 재무장 및 군사대국화 견제, 中國의 反蘇化 방지, 韓半島 問題에 대한 영향력 확대, 域內 軍縮의 실현, 그리고

多者間 安保協議機構 창설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1) 美·日·中의 勢力 牽制와 對外的 安定基盤 摸索

蘇聯은 亞·太地域에서 美軍事力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다. 蘇聯은 유럽과 아시아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처한다는 二重戰線(two front)戰略을 도모하여 왔으나, 유럽지역에서의 美·蘇간 군축이 진전됨에 따라 유럽에서의 안보위협이 감소되면서 아시아지역에서의 안보위협도 제거하여야 할 필요를 강력히 인식하게 되었다.

亞·太地域에서의 美·蘇간 군사력 현황을 볼 때, 蘇聯은 美國이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蘇聯安保를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美國의 전략무기에 의한 安保威脅을 차단하는 것이 亞·太地域에서의 蘇聯 政策目標인 것이다. 이는 蘇聯極東軍의 現代化를 통한 質的 向上과 軍縮을 통한 下向的 縮小均衡의 모색이라는 두가지 次元의 戰略으로 반영되고 있다.

日本의 기무라 교수는 亞·太地域에서의 蘇聯의 對美戰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현재 美國이 蘇聯보다 군사적으로 강세에 있으므로 蘇聯은 美國과의 정면대결을 가능한 한 회피한다. 즉 亞·太地域에서 「美·日·中(또는 美·日·韓) 對 蘇聯」의 對抗構造 형성을 저지한다. 이러한 3角同盟 또는 JANSUS(日本과 ANSUS)의 형성에 의한 反蘇 包圍網 형성을 저지하여, 적어도 이 지역에 있어서 強大國間 전력배치를 美·日·中·蘇 간의 4極關係로 한다. 즉

美·日·中 간의 모순, 대립, 갈등을 조장·선동하여, 이들 3국 상호 간의 이간과 분열을 도모한다. 나아가 蘇聯으로서 더욱 바라고 싶은 것은 이들 4강대국 가운데 美國과 蘇聯의 2大 軍事超強大國을 한단계 고양시켜 보다 발언권을 갖게 하여, 亞·太問題에 관해 中·日을 건너 뛰어 美國과 直接去來를 도모한다는 것이다.²³⁾

한편 蘇聯은 日本의 軍備增強을 「日本의 나토(NATO)化」 또는 「나토 東洋支部」라는 점에서 비판하면서²⁴⁾ 日本의 재무장에 따른 軍事大國化를 경계하고 있다. 특히 蘇聯은 美·日安保條約이 대소 봉쇄를 위한 제국주의적 의도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美國이 亞·太地域에서의 안보부담을 줄이기 위해 日本의 군비 증강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蘇聯은 美國이 對日貿易에서 엄청난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으나, 그 대가로 군사부문에 서 日本이 軍事力을 증강하여 주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美國방부는 日本의 국방비 증가추세가 너무 완만하다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⁵⁾ 蘇聯의 이러한 인식은 美國이 일종의 「分業」(разделение ролей)政策을²⁶⁾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일찍이 1979년 蘇聯에서 출간된 「美國과 太平洋問題」라는 저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종래와 같이 美國만이 亞·太地域에서 안전

23) 木村 汎, “總論·ソ連のアジア太平洋政策の展開,” 「ソ連研究」, 第3號 (1986. 10), pp. 8~9.

24) 上掲論文, p. 11.

25) V. Bunin, “Japan and Washington’s Asian Pacific Strategy,” *Far Eastern Affairs*, no. 3 (1987), p. 39.

26) В. П. Лукин, И. Б. Булай, В. А. Кременюк, ред. <США и Проблемы тихого океана>,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79г., стр. 179.

보장과 자유경제질서를 유지하는 警察官으로서 전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동맹국들에게도 책임을 분담시킨다는 방침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업체제에서 美國은 日本에게 「中心的 地位」, 즉 “예외적일만큼”²⁷⁾ 큰 책임을 맡기며,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게도 강력한 「同盟者」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여, 양국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美國은 中國을 美國과 공통의 이익을 갖는 「準同盟國」(хвасксызник)의 지위로 격상시키려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⁹⁾

따라서 蘇聯은 日本이 과거 어느 때보다 美國의 對蘇戰略에 깊이 편입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은 日本의 재무장 및 군사대국화에 대한 蘇聯의 우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³⁰⁾

한편 蘇聯은 中國을 美·日로부터 고립시키고자 원하며, 中國이

27) Там же, стр. 167.

28) Там же, стр. 37.

29) Там же, стр. 81.

30) 앞으로도 蘇聯이 亞·太地域에서 對美 軍事的 優位를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蘇聯의 亞·太地域에서의 군사력 증강은 美國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으며, 베트남전 이후 약화되었던 美國의 역내 군사력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美國의 태평양전략은 태평양함대를 증강하여 북태평양에서의 蘇聯 海軍力을 봉쇄하기 위한 공격적 해양전략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리하여 자위능력을 증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域內 同盟國인 日本과 함께 美國의 군사적 입장은 향후에도 태평양지역에서의 美·蘇間 軍事的 均衡이 美國에 유리한 방향으로 확보할 것이다”(Amitav Acharya, “The United States Versus the USSR in the Pacific: Trends in the Military Balance,”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9, no. 4 (March 1988), p. 298)라는 전망에서 나타나듯이, 美·日간의 對蘇 군사협력은 역내 평화구조 정착 등 軍事情勢의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고, 蘇聯이 이에 대항하여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는 없다. 따라서 美國 뿐만 아니라 日本의 再武裝과 軍事大國化는 蘇聯에 대한 군사안보 위협으로 나타난다.

美國이나 日本과 軍事同盟을 맺거나, 또는 反蘇化되는 것을 방지하려 한다. 蘇聯은 中國이 서구, 특히 美國이나 日本에 의해 현대화되고 무장될 경우 蘇聯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中·蘇關係는 고르바초프의 訪中(1989. 5)과 江澤民의 訪蘇(1991. 5)를 통하여 정상화되었지만, 지난 20여년간의 中·蘇對立은 蘇聯의 亞·太政策 뿐만 아니라 세계전략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쳤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中·蘇關係가 1990년대에 들어 정상화되었다고 하여도 中·蘇 양국관계가 50년대의 동맹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어 온 양국간의 문화적 적대감 및 국경분쟁 등 지정학적 경쟁관계 등으로 양국관계가 또 다시 경색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蘇聯은 中國이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蘇聯의 아시아정책은 中國을 견제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中國과의 關係改善을 통하여 전면적 화해를 모색하면서 中國이 反蘇化되지 않도록 하는 政策을 목표로 하고 있다. 中國에 대한 이러한 정책은 분명히 蘇聯의 對中國 包圍戰略에 대한 명확한 限界認識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中國은 蘇聯이 포위하기에는 인구·영토면에서 지나치게 大國인 것이다.

한편 蘇聯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蘇聯은 기본적으로 美國이 극동과 태평양지역에서 「패권주의적 계획」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美國·日本·韓國 사이에 「3각 군사동맹」을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 증거는 각종 형태의 합동군사훈련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韓半島와 極東情勢 전반에 대하여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³¹⁾

한반도에 긴장이 발생하면, 日本의 경제력이 군사화하여 蘇聯의 安保利益에 직접적인 도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蘇聯으로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日本의 재무장 가능성을 막는 방도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며,³²⁾ 이를 위해서 蘇聯은 韓半島의 軍事的 均衡 유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北韓과의 기존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韓國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2) 域內 軍縮의 實現

蘇聯의 安全保障政策이 外交政策과 軍事政策으로 이루어진다면, 軍縮政策은 그 중간에 위치한다. 즉 軍縮政策은 외교정책의 일환이면서도 군사정책의 요청에 의해 규정되어지고, 동시에 군사정책 자체를 구속하기 때문이며, 軍縮政策의 변화라는 것은 군사독트린의 변화를 기초로 하나, 한편으로는 교섭의 결과로 성립되는 군축합의가 이번에는 軍事戰略을 규정하기 때문이다.³³⁾

31) V. Tikhomirov, "Reunification Two Approches," *New Times*, June 1, 1985, pp. 21~22.

32) 일반적으로 駐韓美軍의 존재와 관련, 蘇聯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결과적으로 日本의 再武裝을 가져오게 된다면, 日本의 재무장보다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less evil)고 인식하여 왔다.

33) 小泉直美, "ゴルバチョフの軍備管理 軍縮政策," 「ソ連研究」, 第7號 (1988. 10), p. 34.

고르바초프 하에서 蘇聯의 軍事독트린이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防禦的 性格으로 전환함에 따라, 방어에 충분할 수준으로의 축소지향적 군축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蘇聯의 軍縮努力은 蘇聯의 팽창주의적·호전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蘇聯의 對西方 接近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軍縮의 결과로서 야기되는 제대군인의 사회적 흡수 등 철수병력의 처리문제에 관한 우려 때문에 특히 소련군부 내부의 반대도 적지 않으나, 군축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는 이미 蘇聯 정책결정권자 내부에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蘇聯의 군축정책은 유럽에서 美·蘇間 軍縮合意로 이어졌으며 世界的 脫冷戰을 가져왔다. 고르바초프가 1986년 1월 美·蘇의 모든 핵무기를 15개년 계획을 통하여 2000년까지 완전 철폐하고 「핵무기없는 세계」를 실현할 것을 주장한 이래, 美·蘇는 1986년 10월 레이카비크 정상회담에서 中距離核戰力(INF)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합의하고 1987년 12월 중거리핵전력 폐기협정을 정식으로 조인하였으며, 1991년 7월에는 戰略武器減縮協定(START)을 체결하였다.

한편 東北亞 및 亞·太地域에서 軍縮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蘇聯의 정책목표는 극동소련군이 확실히 美國에 비하여 열세에 있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³⁴⁾ 아시아지역에서 蘇聯의 군축정

34) 야조프 蘇聯 國防長官은 1989년 5월 29일 「프라브다」와의 인터뷰에서 蘇聯 극동 군사력이 美·日에 비해 탱크의 경우에서만 2:1로 우세하고 그외의 부문에서는 열세(병력 1:2, 해·공군력 1:2 등)라고 평가하였다. <Правда>, 1989. 5. 29;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ugust 31, 1989, p. 30.

책은 美國의 상대적 우위를 약화시킨다는 의미 이외에도, 蘇聯이 국내문제 해결을 위해 특히 시베리아개발 등 蘇聯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부적 안정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의 전통적인 對蘇 위협인식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³⁵⁾

이에 따라 蘇聯은 亞·太地域에서의 병력 삭감에 착수하여, 中·蘇 국경지대와 蒙古로부터 지상군을 대량 철수시키는 동시에, 東南아시아에서는 캄란만 기지의 海·空軍力을 축소하여 공격능력을 대폭적으로 약화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고르바초프는 1991년 4월 16~19일간 日本을 방문하면서 日本 衆議院 本會議에서 연설(4. 17)하였는데, 여기에서 고르바초프는 최초로 亞·太地域에서의 蘇聯의 軍縮結果를 밝히면서, 중거리핵전력 전폐조약에 의거, 蘇聯 아시아지역에서 424기의 중거리핵전력이 전폐되었으며, 1991년 중반까지 166기가 폐기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1991년까지 蘇聯 동부 병력 20만명 삭감과 극동지상군 12개 사단 및 11개 항공연대 해체가 완료되며, 금후 태평양함대의 대형수상함 9척, 잠수함 7척 등 16척이 퇴역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1991년 여름에 실시할 예정인 蘇聯 太平洋艦隊의 군사연습에 외국군의 옵서버를 초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5) 소련외무부의 파디에프는 최근 韓·蘇 학술회의에서 蘇聯의 國內外政策 變化가 蘇聯에 대한 好戰的 이미지를 없애게 했다고 특히 강조하고 있다. Yuri D. Fadeev, "New USSR Foreign Policy: A Product of Soviet Perestroika," 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K-USSR Cooperation in a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cosponsored by IFANS, ITBI, and IMEMO, at Seoul, on June 10~12, 1991, p. 9.

(3) 域內 多者間 安保協議機構 創設

1985년 5월 21일 蘇聯을 방문한 간디 인도수상 환영만찬회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全아시아포럼」(All-Asian Forum) 구상을 제창하였다.³⁶⁾ 이는 브레즈네프가 1969년 6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3차 세계공산당대회에서 천명한 「아시아 集團安保」構想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³⁷⁾

이후에도 고르바초프는 아시아지역에서의 집단안전보장체제의 확립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제27차 당대회 보고(1986. 2. 25)에서 「包括的 國際安全保障體制」의 확립, 블라디보스톡 연설(1986. 7. 27)에서 「아시아版 헬싱키會談」 제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1988. 9. 16)에서 「全아시아 安保協力會議」 제안, 그리고 北京演說(1989. 5. 17)에서 「全아시아過程」 주장 등이었다. 또한 세바르드나제는 1990년 9월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汎아시아 포럼」과 1993년 「아시아外相會議」를 제의하였다. 한편 고르바초프는 1991년 4월 17일 日本 衆議院 演說에서도 아시아 지역국가간

36) 고르바초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오늘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은 유럽과 동일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첨예하게 우려할만한 문제로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蘇聯, 印度 등의 국가들이 일련의 건설적 제언을 행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印度洋 平和地帶化案이라든지, 蘇聯과 中國이 행하고 있는 核先行不使用 표명 등은 높이 평가될 만하다. 이들 提言들을 감안하여, 유럽의 先例도 있듯이 아시아 안전보장문제에 관해 전체적·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하여 또는 아시아국가들의 노력을 통합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지금이야말로 생각해 볼 시기이다. 여기에는 兩者間 對話, 多者間 協議, 全아시아포럼 등의 다양한 방법이 생각된다.” <Правда>, 1985. 5. 22.

37) 蘇聯의 아시아 집단안보구상은 1933년 蘇聯의 태평양불가침조약 체결 제안과 태평양상호원조조약 체결 구상을 효시로 하고 있다고 한다. 木村明生, “アジア安保構想: スターリンからゴルバチョフへ,” 「ソ連研究」, 第3號 (1986. 10), p. 29.

의 상호불신을 제거하고 군축의 촉진과 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蘇·美·日 간의 3國會議 개최,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논의할 多者間 協議機構 창설을 위한 蘇·美·日·中·印 간의 5國會議 개최, 동북아시아·동해(일본해) 수역의 안전보장과 협력지대의 창설 등 이른바 「東京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蘇聯의 제의들은 표현만 약간 다를 뿐 모두 1975년 여름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안보協力會議(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와 같은 다자간 안보협의기구를 亞·太地域에서도 창설하자는 구상이었다. 즉 蘇聯은 유럽안보協力會議가 유럽의 安全(평화, 긴장완화, 신뢰구축, 군비통제)과 協力(경제, 과학기술, 문화, 인도주의, 인권)을 증진하는 기틀로 작용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시아에서도 유럽안보협력회의를 모델로 한 多者間 安보協議機構가 창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蘇聯이 아시아지역에서 多者間 安보協議機構를 창설하려는 구상은 다음과 같은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첫째, 고르바초프의 간디 환영만찬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도양 평화화지대안이라든지 核선제불사용 표명 등에서 나타나듯이 亞·太地域에서의 군사적 제한, 비군사화, 비핵화 등 軍備管理에 대한 관심이다. 즉 美·蘇 양자간 군축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多者的 協議속에서 실현하려는 의도이다. 둘째, 제27차 당대회 보고에서 나타나듯이 「包括的 國際安全保障體制」의 확립이다. 즉 國家安보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차원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등의 영역에 걸쳐 云謂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多者間 安全保障機構를 형성하여 포괄적 안보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편 아시아지역에서 다자간 안보협의기구를 창설하자는 고르바초프의 계속된 주장에서 무엇보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고르바초프案이 브레즈네프의 集團安保構想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브레즈네프 구상과 마찬가지로 「兩者間→多者間→全아시아國家間」이라는 단계적 협의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蘇聯의 아시아정책이 연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蘇聯이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나. 經 濟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의 蘇聯 外交政策은 최우선과제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부적 여건 조성이라는 國內經濟的 必要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蘇聯의 경제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입안, 추진되고 있다. 즉 동북아에서 蘇聯의 政策目標은 蘇聯의 경제발전, 특히 극동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동북아를 포함한 亞·太地域 國家들로부터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는데 있다.

이렇게 볼 때, 蘇聯의 동북아에 대한 對外經濟政策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目標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동북아 지역국가와의 경제 협력, 둘째, 역내 국가들의 시베리아개발 참여 유도, 셋째, 역내 경제협력기구에의 참가, 넷째, 동북아 경제권의 참여 등이다.

(1) 域內 國家들과의 經濟協力

구조적·만성적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페레스트로이카는 고르바초프 집권 이래 6년을 경과하면서도 아직도 뚜렷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1990년도의 경제상황도 高인플레이와 소비재 부족으로 주민생활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였다. 1990년도 국민총생산은 전년대비 2%, 생산국민소득은 4%, 그리고 사회적 노동생산성은 3% 각각 저하했다. 공업생산고는 전년대비 1.2% 감소하였고, 그 가운데 생산재 생산은 3.2% 감소하였으며, 소비재 생산은 4.4% 증가했다. 농업생산고는 2.3% 감소했다. 한편 노동규율의 저하가 계속되는 가운데 임금은 전년대비 13.5% 증가하였으며, 주민의 화폐소득은 16.9% 증가했다. 통화발행고는 전년대비 1.5배 증대하여, 인플레이는 한층 심해졌다. 소매판매고는 15.7% 증대되었으나, 이는 거의 물가인상에 기인한 것이었고, 民生用品의 부족은 여전하여 消費財市場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물가인상과 잠재적 인플레이를 고려할 때 1990년의 인플레이率は 19%를 넘었다.³⁸⁾

蘇聯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蘇聯經濟에 있어서 대외경제관계가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규모를 개선하므로써 경제효율을 높인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蘇聯經濟의 市場化에 기여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시 말

38) “1990~1991年のソ連經濟,” 「ソ連東歐貿易調査月報」(1991. 1), pp. 75~76.

하자면 시장관계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경쟁원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國家獨占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蘇聯에서는 오랜동안 거대기업을 만들어 특정산업분야에서 1~2개의 기업이 그 분야의 모든 제품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蘇聯의 國家獨占은 단기간 내에 타파되기는 매우 어려우며, 經濟體制改革과 동시에 이러한 기업이 적극적으로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國際市場의 競爭메카니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蘇聯經濟의 대외 경제관계 확대는 당연히 蘇聯經濟의 개방화와 함께 외국제품이 소련국내에 수입될 것이므로 이를 통해 獨占을 타파하는 조건을 만들어 낸다.³⁹⁾

즉 對外經濟關係의 확대가 蘇聯經濟의 市場經濟體制로의 移行에 기여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蘇聯은 대외경제관계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전체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1988년 10월 소연방 각료회의는 2005년까지의 蘇聯經濟 발전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經濟發展戰略의 핵심은 對外經濟部門이 國民總生産 또는 國民所得의 증가를 상회하여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蘇聯의 국민소득에 수출이 점하는 비율을 1980년대의 6%에서 2000~2005년까지 8~9%로 증대시키고, 蘇聯의 貿易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4%에서 6~7%로 높인다는 것이었다.⁴⁰⁾ 따라서 蘇聯이 대외경제협력을 증

39) I. P. ファミンスキー, “新5カ年計劃期におけるソ連の對外政策,” 『ソ連東歐貿易調査月報』(1990. 3), p. 5.

40) Ibid., pp. 5~6.

대시킨다는 것은 自給自足經濟의 開放經濟로의 이행, 즉 國民經濟의 世界經濟로의 편입을 의미하며 蘇聯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蘇聯의 대외경제협력 강화가 의미하는 중요한 것은 그것이 蘇聯經濟 침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이다. 페레스트로이카 6년을 경과하면서도 국민생활의 구체적인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반감되고 있으며, 페레스트로이카를 저지하고자 하는 강경보수세력의 개혁반대 주장에 국민들이 동요되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이 고르바초프를 위시한 蘇聯指導部の 권력기반까지 위협하는 요인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될 蘇聯指導部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은 西方으로부터의 經濟援助를 획득하여 生必需品供給을 확대하는 동시에, 서방세계가 현지도부의 개혁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마샬 플랜⁴¹⁾은 유럽經濟 回生을 위한 資金 전부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경제·정치 안정에 대한 財政基盤을 제공한 것으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41) 마샬플랜(Marshall Plan)은 16개 서방국가가 1948년 4월부터 1951년 말까지 4년간 약 124억달러, 즉 年平均 31억달러를 공여했다. 1989년 價値로 환산하면 654억달러, 즉 年平均 164억달러에 상당한다(1948~1951년과 1989년의 美國 GNP deflator 변화에 입각하여 계산). 國連歐洲經濟委員會 報告, “ソ連·東歐の經濟改革と西側經濟援助,” 「ソ連東歐貿易調査月報」(1990. 12), p. 23.

현시점에서 蘇聯이 기대하고 있는 서방의 경제지원은 蘇聯經濟를 직접적으로 회생시킨다는 차원보다는 개혁파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포함한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 진다.

이에 따라 고르바초프는 1990년 11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 참석한 유럽공동체 頂上들에게 1백억달러 규모의 경제지원을 요구하였으며, 한편 국제통화기금에 참석한 蘇聯代表團은 蘇聯이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총 2,500억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폴란드의 시장경제체제 이행정책 입안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던 하바드대학의 삭스(Jeffrey Sachs) 교수는 폴란드의 경우 국민총생산의 3~5%의 해외재정지원이 필요했다고 밝히면서, 蘇聯은 연간 국민총생산의 약 5%의 재정지원을 향후 5년간 지원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蘇聯의 국민총생산을 6천억달러로 추산할 때, 연간 약 30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반 정도는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美國 등 서방국가들이 부담하여야 하며, 특히 美國은 연간 30억달러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00억달러는 서방선진국 국민총생산의 0.2%에 불과하고, 美國 부담금은 美國의 연간 국방비의 1%에 불과하다. 따라서 美國은 蘇聯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美國의 예산을 절감하고 美國의 국익에도 유리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⁴²⁾

42) Jeffrey Sachs, "The West Can Help the Soviets Democratize," *International Herald*

그러나 서방선진국들은 蘇聯의 「전면적이고도 근본적인 改革」을 借款 提供의 前提條件으로 주장하며, 고르바초프의 대규모 경제원조 유치전략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市場經濟化政策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1991년 8월 強硬保守勢力의 쿠데타가 실패한 후 急進的 經濟改革을 주장하여 온 실라예프와 야블린스키 등이 經濟政策 立案의 核心으로 등장함에 따라 「500일계획」과 같은 급진적 경제개혁안이 모색되는 등 市場經濟體制로의 移行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西方의 經濟支援도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특히 東北亞 및 亞·太地域에 대한 蘇聯의 정책도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蘇聯經濟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目標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경제력, 특히 美·日 등 선진국과 韓國 등 신흥공업국들이 蘇聯經濟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서의 美·日의 협조가 불가결하다는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外交政策 추진에 있어서 經濟的 觀點을 최우선시하는 蘇聯이 亞·太政策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동북아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다.⁴³⁾

Tribune, May 15, 1991; "Lay Out Reform Dollars for Soviet People to Se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16, 1991.

43) 고르바초프는 집권 이래 蘇聯 極東地域의 개발과 亞·太地域國家들과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즉 "우리 경제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으로 經濟發展中心을 옮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코 亞·太地域과의 협력 증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M. S. Gorbachev,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7), p. 180.

(2) 域內 國家들의 시베리아開發 參與 誘導

蘇聯은 亞·太地域 특히 동북아시아의 경제력과 蘇聯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蘇聯內에서도 가장 후진적인 극동지역의⁴⁴⁾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亞·太地域에 대한 蘇聯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장기적으로 보아 蘇聯 經濟發展의 관건은 시베리아개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⁴⁵⁾ 시베리아는 蘇聯人口의 8.3%가 거주하고 국민소득의 11%가 생산되고 있으며, 燃料·에너지·天然資源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蘇聯의 전체 연료생산에서 차지하는 시베리아의 비중은 60%로서 蘇聯의 총연료수요의 증가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생산감소분까지 보전하고 있다. 또한 목재공업복합플렉스, 비철금속, 화학 및 석유화학공업 생산에서도 시베리아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베리아는 석유·가스, 석유화학, 목재, 석탄, 비철금속공업 분야에서 큰 輸出潛在力을 갖고 있다. 또한 시베리아는 바이칼호, 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 알타이지방, 브리야트자치공화국 등 훌륭한 觀光資源을 갖고 있다.⁴⁶⁾

특히 우랄 以西의 석유·천연가스 자원이 고갈되자 1963~64년부터 서부시베리아지역의 석유·가스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나,

44) 蘇聯 極東地域의 經濟的 後進性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Leslie Dienes, "Economic and Strategic Position of the Soviet Far East," *Soviet Economy*, no. 1 (1985), pp. 146~176 참조.

45) 辛承權, "中·蘇의 韓國에 대한 政策變化와 展望," 「中蘇研究」, 第11卷 第3號 (1987 가을), p. 153.

46) A. 그란벨그, A. 루빈시테인, "シベリアの對外經濟活動への參與," 「ソ連東歐貿易調査月報」 (1989. 10), p. 68 (Foreign Trade, 1989. 8).

1980년대 초에 이르러 서부시베리아의 油田·가스田의 증산에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油田·가스田의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따라서 개발 중점이 극동지역으로 이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고르바초프는 1986년 7월 극동지역 방문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행한 연설에서 극동지역의 경제개발을 강조하고, 이어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는 極東開發을 구체적인 經濟政策課題로서 확립했다. 즉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에서 “극동지역은 방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거대한 사회적·경제적 가능성을 내포한 매우 큰 국제적 전망을 가진 지방이다”고 논하고, “극동지방에 있어서 自給體制의 확립이 금후의 基本的 發展方向이며, 이를 위해서는 태평양지역국가들과의 무역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는 蘇聯極東地方에 대한 優待措置의 일환으로 첫째, 이 지역의 기업, 생산협동조직 및 지방대외경제기구에게 외국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貿易權限의 확대, 둘째, 이 지역에서의 합작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임금 협의 등의 특혜 부여, 셋째, 극동지역에서의 경제특구 설치 그리고 넷째, 中國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中國·日本·蘇聯 간의 쌍무 또는 삼각 경제협력 등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러한 협력을 증대시킬 것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7년 7월 23일 蘇聯共產黨 中央委員會 政治局이 채택한 「極東經濟地域, 부랴트 自治共和國 및 치타州의 2000년까지의 生産力 綜合發展 長期國家計劃」에 의하면, 첫째, 2000년까지 극동의 사회

발전지표들을 蘇聯의 여타지역의 평균치까지 제고시키고, 둘째, 극동의 경제구조를 개선시키며, 셋째, 태평양지역의 분업체제 속에 극동경제를 참가시킨다는 세가지 主要 課業이 제시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사업이 계획되었다.⁴⁷⁾ 이러한 개발 계획의 구체화와 함께 蘇聯은 극동지역에 經濟特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極東經濟特區를 설치한다는 蘇聯의 의도는 中國의 경제특구처럼 극동경제특구를 통해 외국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용이하게 하고,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亞·太地域에 대한 經濟進出의 據點을 확보하려는 것이다.⁴⁸⁾

그러나 극동개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980억루블의 거액 투자(이는 과거 15년간 극동지역 투자총액의 2.2배)가 필요하나, 하바롭스크에 있는 蘇聯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의 경제연구소 미나킬 부소장에 의하면, 극동지역에서 스스로 자기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필요 경비의 20%에 불과하며, 심지어 노동력도 생산기술도 부족하다.⁴⁹⁾ 따라서 經濟特區가 창설된다고 하여도, 特區內의 사회간접자본의 정비를 위해서도 外資導入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

47) 長期極東綜合發展計劃은 현재까지도 全文이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신문과 각종 학술지에 공표된 것을 취합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는 자료는 村上 隆, “ソ連極東經濟の實情と長期極東總合計劃の問題點,” 『ソ連東歐貿易調査月報』(1989. 3) 참조.

48) 또한 蘇聯은 1991년 10월30일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서 극동연해주에 「大블라디보스토크自由經濟地域」을 창설한다는 極東開發構想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정부는 국내법 정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構想은 연해주를 외국자본에 개방하고, 극동지역을 아시아경제권에 통합시킨다는 목표로 ① 산업기반 정비와 자원개발 촉진(1991~95), ② 유럽지역 의존에서 탈피, 다양한 상품의 현지 생산(1996~2000), ③ 고도 기술제품 생산으로의 이행(2001~2010) 등 3단계 계획에 따라 北韓 國境에서 나호드카까지의 東海沿岸地域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49) 小川和男, “環日本海經濟圈における國際經濟協力,” 『ソ連東歐貿易調査月報』(1990. 4), p. 27.

다.

따라서 蘇聯은 동북아시아국가들을 포함한 亞·太地域國家들을 시베리아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시베리아개발을 추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蘇聯極東地域은 광대한 亞·太市場에 인접하여 있고, 이 地域國家들이 관심을 갖는 原料資源과 完製品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隣接國家들로부터 여러 종류의 기계, 설비, 최신 기술, 원료자원 및 완제품을 수입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⁵⁰⁾ 그러므로 蘇聯 極東地域과 亞·太地域國家 간에는 經濟的 相互補完性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3) 域內 經濟協力機構에의 參加

蘇聯의 亞·太地域 경제협력기구에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이는 「東北亞經濟圈 參與」라는 蘇聯의 또 하나의 경제적 정책목표를 논의하면서 상술할 것이나, 亞·太地域國家들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蘇聯이 이 지역의 國際經濟機構에의 關心과 參與 意思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고르바초프가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太平洋經濟協力會議(PECC)에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이래 蘇聯의 亞·太地域經濟機構에 대한 관심은 적극화되었다. 蘇聯은 종래 美國과 日本이 태평양경

50) 현재 亞·太地域國家들은 소련극동지역과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類型은 삼림자원 개발을 위한 생산·노동의 합동(北韓), 운수서비스 어획·가공합작회사 설립(美國,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목재 및 석탄에 관한 구상무역협정(日本), 연안 및 국경무역(日本, 濠洲, 北韓, 中國) 등이다. 韓國共産圈 研究協議會, 「韓國의 極東·시베리아 投資進出에 대한 美·日·中·蘇의 視角과 그 對應方案 研究」(경제기획원 연구비지원 결과보고서, 1989. 12), pp. 20~21.

제협력회의 등 지역경제기구를 조직하여 정치·경제·군사적 국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亞·太地域이 美·日의 세계전략을 위한 군사·경제 블럭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여 왔다.⁵¹⁾ 그러나 蘇聯은 이러한 인식을 수정하고, 장차 태평양경제협력회의가 移轉機能을 수행하여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상업전략, 개발자원 등을 신속하게 이전받을 수 있는 기구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⁵²⁾

이에 따라 蘇聯은 1986년 1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5차 태평양경제협력회의 총회에 옵서버를 파견하였으며, 태평양경제협력회의의 가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프리마코프를 委員長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經濟協力國家委員會를 1988년 3월 설치하여 亞·太地域國家들과의 경제협력 진출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蘇聯은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해서도 1987년 4월에 日本 오오사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 최초로 옵서버를 파견하였으며, 1988년 3월 26일에는 로가쵸프 외무차관이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을 공식 천명하였다.

(4) 東北亞經濟圈 參與

亞·太地域의 경제력이 증대되고 국제정치·경제상의 역할이 제고되면서 동시에 전세계적인 경제블럭화 현상에 대응하여, 亞·太地

51) S. Bilveer, "The Pacific Community Concept: The View from Moscow," *The World Today*, vol. 41, no. 1 (January 1985), pp. 19~21.

52) A. Bogomolov, "Evolution of Pacific Cooperation Ideas," *Far Eastern Affairs*, no. 1 (1987), p. 60.

域에서도 經濟共同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필요는 일반적으로 「太平洋共同體」 창설 구상으로 집약된다. 그러나 蘇聯은 종래 太平洋協力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태평양공동체 창설 구상은 1962년 日本의 고지마 기요시에 의해 최초로 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후 1978년 11월 日本의 오오히라(大平正芳) 수상은 수상취임 소감을 밝히면서 이른바 「環太平洋連帶」構想을 자신의 기본정책의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⁵³⁾ 그러나 蘇聯은 「환태평양연대」 구상에 대하여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여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아시아版」이라고 비판하였다.⁵⁴⁾

日本 北海道大學의 蘇聯研究者 기무라 교수는 종래 蘇聯의 태평양공동체 구상에 대한 인식을 反社會主義的 性格에 대한 비판, 蘇聯 排除에 대한 불만, 軍事블록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 3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는데,⁵⁵⁾ 蘇聯은 태평양공동체 구상을 기본적으로 「태평양판 나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美·日 등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라고 인식하고 있었다.⁵⁶⁾

53) 오오히라 수상은 1979년 3월 「환태평양연대」 구상을 실현하는 사설자문정책연구그룹을 조직하고, 이 그룹의 議長인 大來佐武郎을 1979년 11월 外相으로 임명했다. 이는 오오히라 수상이 「환태평양연대」 구상을 중시하였음을 보여주는 예증이었다. 木村 汎, 「「太平洋共同體」構想とソ連,」 「ソ連研究」, 第3號 (1986. 10), p. 124.

54) Y. Bandura, "The Pacific Community: A Brainchild of Imperialist Diplomacy," *International Affairs*, no. 6 (June 1980), p. 65.

55) 木村 汎, 前掲論文, pp. 126~137.

56) V. Denisov, "Some Aspects of the U.S. New Far Eastern Strategy," *Far Eastern Affairs*, no. 2 (1983), pp. 10~23; Y. Stolyarov, A. Shmyrmov, "The 'Pacific Community': Economic Integration or a Military-Political Bloc," *Far Eastern Affairs*, no. 3 (1983), pp. 65~76 참조.

蘇聯의 이러한 인식은 中國이 태평양공동체에 대해 1984년 이래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던 것과는 달리,⁵⁷⁾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되어, 1986년 4월 23일 발표된 「亞·太地域에 관한 蘇聯政府 聲明」에서도 반영되었다. 이 聲明은 美·日の 일부 정치세력이 亞·太地域을 對決의 場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太平洋共同體 構想은 軍事블록化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聲明은 “社會體制的 차이와 관계없이 平等과 互惠의 原則에 입각하여 亞·太地域의 모든 국가들과 폭넓은 협력을 조직하는 것은 이 지역정부의 근본적 이익에 합치하고, 平等과 民主主義에 입각한 국제관계 건설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蘇聯은 확신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역적인 평화협력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自國이 보유한 經濟力과 科學技術力을 그러한 目的에 이용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하여 전혀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蘇聯의 이러한 상호모순적인 입장은 결국 蘇聯으로서도 亞·太地

57) 中國은 종래 태평양공동체 구상에 관해 日本의 세력확장을 위한 장기전략으로 판단하고 日本이 자국을 중심으로 太平洋經濟圈을 형성하여 大西洋圈, 北南美圈과 함께 세계자본주의를 3분화하려 한다고 비난하여 왔으나(金輔燾, “關於太平洋經濟共同體的探討,” 「國際問題研究」, 1983年 第2期, pp. 52~56), 1984년 12월 中國國務院 國際問題研究中心의 중간사 宦鄉은 “남남협력과 남북대화의 시점에서 태평양 지역국가들과의 경제협력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여 中國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宦鄉, “亞太地區發展前景與環太平洋合作,” 「太平洋地區發展前景和中國現代化」 (北京: 中國財政經濟出版社, 1985), pp. 7~8), 그 후 1985년 3월 유엔의 亞·太경제사회이사회(ESCAP) 제41차 회의에서 中國은 “中國은 亞·太地域國家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이 지역의 평화·안정·번영·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정식으로 표명하였다. 中國은 현재 아시아개발은행(1985. 10), 태평양경제협력회의(1986. 11) 및 亞·太경제협력각료회의(1991. 11)에 가입하고 있다.

域國家간의 다자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태평양공동체가 反蘇的 安保機構로 발전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美·日 주도가 아니라 蘇聯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광범한 참가 속에서 지역 경제번영을 도모하는 실질적 유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능하다면 그러한 공동체 창설을 주도할 의도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蘇聯은 시베리아개발의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면서 시베리아개발에 필요한 對外經濟協力을 亞·太地域國家(특히 동북아국가)와 진전시키기 위하여 시베리아개발과 中國의 동북경제구 그리고 南北韓과 日本을 연결하는 東北亞經濟圈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르바초프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지역경제협력과 관련하여 蘇聯·中國·日本·韓國간의 관계발전을 강조하였으며, 1987년 5월에는 東海沿岸國들의 평화와 경제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南北韓과 美·日·中·蘇 등이 참가하는 「環日本海國際會議」를 개최하자는 日本 社會黨 도이 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하는 등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1991년 4월 제주도방문시 재차 「環東海經濟圈 構想」을 제기하는 등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최근 蘇聯은 시베리아 야쿠트지역 및 사할린의 천연가스를 개발하여 이를 한반도와 日本에 파이프를 연결하는 極東에너지開發計劃(Vostok Plan)에 韓國과 日本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日本은 1975년 기본계약을 체결한 이래 日·蘇經濟關係

에서 최대의 현안으로 되어 온 「사할린 大陸棚 石油·天然가스 開發協力프로젝트」를 최근 美國系 國際石油資本인 엑슨을 參加시켜 美·日·蘇 3國間 合作投資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1991년 10월 「대블라디보스토크자유경제지역」 구상을 발표하는 등 蘇聯, 특히 러시아는 시베리아개발을 둘러싼 동북아국가간의 다자간 경제협력 및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3. 政策推進 影響要因

蘇聯이 과연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적 또는 안보적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蘇聯이 당면하고 있는 國內外的인 環境要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즉 蘇聯이 동북아지역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 역내 국가들의 시베리아개발 참여 유도, 역내 경제협력기구에의 참가, 그리고 동북아경제권 참여 등의 경제적 정책목표를 실현하려고 하여도 과연 蘇聯의 經濟力이 그것을 현재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잠재력을 가졌는가 또는 域內 國家들이 蘇聯의 그러한 정책에 응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蘇聯이 亞·太地域에서 對外的 安定基盤을 확보하고 美國의 軍事力을 견제하며, 域內 軍縮의 실현과 多者間 安保協議機構 창설이라는 目標를 관철할 수 있으려면, 역내 국가들이 蘇聯의 軍축정책을 眞意로 파악하여 이에 적극 호응할 수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蘇聯의 정책능력과 의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1991년 8월 쿠데타 실패 이후 소연방 해체위기와 함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향후 蘇聯이 동북아정책을 적극화할 수 있는 정책실현 능력이 있는가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가. 國內情勢 不安定

1985년 3월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집권 이래 추진되어 온 페레스트로이카에 따라 蘇聯의 國內情勢는 정치적 민주화로 사회가 다원화된 반면에 경제적 성과가 부진한 결과, 다양한 정치조직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대립되어 危機狀況을 맞게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한해동안 蘇聯의 국내정세는 신연방조약 체결, 보수쿠데타 발발과 실패, 발트3국의 독립, 우크라이나 독립선언 등 심각한 國內政治·經濟·軍事的 危機를 노정하였다.⁵⁸⁾

특히 고르바초프의 일방적인 군병력 감축과 국방비 삭감, 옐친 러시아 대통령(1991. 6. 12 당선)의 공산당 활동 규제 포고령(7. 20), 美·蘇 頂上會談(7. 30~31)에서의 군수산업의 민수 전환 합

58) 蘇聯의 국내정세 불안정에 따라 향후 蘇聯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되거나 전체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9). 한편 붉은 파시즘(Red Fascism)의 대두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199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서도 주장되었다. 즉 東歐와 蘇聯의 경제활성화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反自由主義의 人民主義(anti-liberal populism)와 反資本主義의 權威主義(anti-capitalist authoritarianism)가 결합하여 강력한 파시스트운동이 재생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Daniel Chirot, "After Socialism, What?: Ideological Implications of Events of 1989 in Eastern Europe for the Rest of the World," 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estroika or History's Turning Point?*, organized by the Institute of Soviet and East European Studies(Seoul National University), at Seoul, on October 26~27, 1990.

의, 연방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던 강경보수세력의 권력 약화를 의미하는 신연방조약의 체결 예정(8. 20) 등의 사태 발전에 불만을 품은 黨·軍·KGB의 強硬保守勢力은 8월 19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쿠데타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못하고 8월 21일 무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고르바초프의 권력 약화와 옐친의 부상, 그리고 발트3국을 비롯한 분리주의적 공화국의 탈소독립 요구 등 聯邦權力的 危機를 초래하였다.

쿠데타 실패 이후 蘇聯邦 人民代議員大會는 신연방조약 체결시까지의 過渡期 「國家權力的 構成」에 관한 法律을 채택(9. 5)하여, 과도체제로서 聯邦最高會議, 國家評議會, 共和國間 經濟委員會를 창설하였다. 새로운 연방체제는 기본적으로 연방을 유지한다는 구도에서 新聯邦條約 草案을 준비하는 동시에, 공화국간의 상호의존적 경제구조를 보완할 聯邦次元의 經濟調整을 강조하면서 共和國間 經濟共同體協定 체결을 모색하였다.⁵⁹⁾

현재의 소연방 해체 위기는 多民族國家를 大러시아主義에 기초하여 획일적으로 통제하여 온 스탈린主義的 全體主義 政治·經濟體制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혁명 이후 강제 병합되어 러시아민족에 의해 핍박받았거나 공화국간 경제적 분업체제 속에서 경제적 희생을 당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는 발트3국,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즈베크 등은 분리 독립

59) 1991년 10월 1일 발트3국을 제외한 12개 공화국은 經濟共同體協定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10월 18일 러시아와 카자흐 등 8개 공화국만이 서명하였다(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몰도바는 서명 거부, 아제르바이잔은 대통령 와병을 이유로 불참).

을 희망하고 있으며, 각공화국내 소수민족들도 독립공화국 구성 또는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기 공화국들을 제외한 7개 공화국은 11월 14일 연방헌법을 폐지하고 「主權國家聯邦」(Union of Sovereign States)을 새로이 구성하는데는 잠정 합의하였으나, 新聯邦條約은 문안 조정을 위한 11월 25일의 7개 共和國 代表會議에서 연방·공화국간 권한문제에 관한 이견으로 합의되지 못하였다. 한편 발트3국의 독립이 승인(9. 6)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 여부 국민투표(12. 1) 결과에 따라 독립을 확정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없는 소연방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벨로루시와의 협상을 통해 슬라브 3國間 「獨立國家聯合」(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을 결성하기로 합의, 선포(12. 8)하였다.

향후 소연방의 장래는 아직 유동적이나, 각공화국의 낮은 경제적 자립도와 러시아인 비율 등에 비추어 공화국간 결속이 완전 해체되어 개별 독립국가로 분산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며, 「독립국가연합」의 미래도 개별공화국의 공화국 독자군대 및 창설등 무분별한 주권행사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공화국간 알력이 증대되고 있어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

그러나 蘇聯의 國內情勢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蘇聯政治의 不安定이 蘇聯에 대한 서방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서방측은 蘇聯의 정치 불안정에 따른 保守回歸를 우려하여, 현재 蘇聯이 추진하는 외교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옐친을 비롯한 러시아지도부는 西方이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國際政治上의 脫冷戰的 變化가 고르바초프의 노벨평화상 수상에서 예증되듯이 페레스트로이카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페레스트로이카가 좌절되고 러시아가 과거의 스탈린주의적 전체주의체제로 회귀한다면 국제정치적 대격변이 다시 초래될 것이고, 美國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이를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것이 舊소 연방에서부터 종종 주장되어 온 「보수회귀 우려 및 경고」와 상합되면서, 러시아의 개혁정책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서방측의 공통분모를 형성시켰다고 러시아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향후 서방의 지원을 확대,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도 國內問題 解決에 더욱 주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러시아의 개혁지도부로서는 현재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改革의 可視的 成果(예컨대 생필품 수입공급 등)를 보여줄 수 있는 西方의 金融支援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국내상황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은 향후 당분간 外交보다 國內情勢 安定에 주력할 것이며, 外交政策은 국내정세 안정에 도움이 되는 範圍內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蘇聯의 外交權과 관련, 聯邦 外務部가 對外關係部로 개편되고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사임 11개월만에 대외관계부 장관으로 재기용(11. 19)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연방권력의 약화와 함께 中央機構의 外交權도 점차 축소되어 핵무

기 등 聯邦 共同問題에 관한 대외 교섭역할에 한정될 것이며, 특히 對外經濟問題에 관해서는 각공화국 외무부가 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시아政策에 관한 外交業務의 대부분이 러시아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⁶⁰⁾

나. 經濟難 加重

1991년도 蘇聯經濟는 연방해체 위기에 따른 전반적 경제위축현상으로 인하여 1990년 대비 7% 가량의 공업생산 감소와 9%의 농업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수출입도 각각 31%, 42% 감소되고, 국가세입도 15% 감소할 것이므로 總財政赤字가 3천억루블에 달할 것이다.⁶¹⁾ 곡물생산은 1990년 2억1천9백만톤에서 1991년 1억5천7백만톤으로 격감되었고, 우크라이나 등 곡물생산 공화국의 보호주의와 수송·저장시설 미비를 감안할 때, 식량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빵과 육류에 대한 배급제가 실시되고 美國 등 서방측이 對蘇 食糧支援에 합의하고 있으나, 식량문제가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蘇聯이 국제통화기금 準會員國으로 가입(10. 5)하고, 서방선진7개국인 蘇聯의 중장기외채 36억달러에 대한 상환 유예와 10억달러 단기차관 제공을 결정(11. 21)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공화국간 경제분업체제 속에서 희생당하여 왔다고 인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루

60) 러시아는 현재의 아시아·태평양部를 局으로 격상시켜, 일본부, 중국부, 한반도부, 동남아시아부, 오세아니아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朝日新聞」, 1991. 10. 31.

61) 1991년 11월 20일 고르바초프의 연방최고회의 연설.

지야, 우즈벡, 아제르바이잔 등이 蘇聯의 외채상환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어, 西方의 大規模 經濟支援이 단기간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1991년 8월 쿠데타 실패 후 改革派의 집권에 따라 市場經濟體制로의 移行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실라예프와 야블린스키 등이 경제정책 입안의 핵심으로 등장하였으므로 急進的 經濟改革案이 모색될 가능성이 크며, 이미 엘친 러시아대통령은 物價·賃金 자유화, 강력한 私的 部門 형성, 통일된 金融·통화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급진경제개혁계획」을 발표(10. 28)하고 「독립국가연합」 창설 이후 가격자유화 조치를 취하는 등 급격한 자본주의화 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새로운 연방체제가 정비되지 않는 한 蘇聯經濟 回復努力이 구체화될 수 없으며, 새로운 정치체제 속에서 급진적 경제개혁이 추진된다고 하여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려면 상당한 시일을 소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蘇聯經濟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따라서 蘇聯이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방으로부터의 외자 도입 및 경제협력을 도모한다는 蘇聯의 政策目標은 시장경제로의 이행 속도에 대한 西方의 不滿과 과연 蘇聯이 시장경제화될 것인가에 대한 서방의 懷疑가 증폭되고 있어, 問題에 직면하고 있다. 예컨대 샤탈린案(1990. 9. 7) 작성에 참여했던 젊은 경제학자 야블린스키는 최근 삭스 등 美 하바드대학의 경제학자들과 함께 蘇聯의 급진적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年150억~300억달러의 서방측 金融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방의 지원규모에 대해 150억에서 300억이라는 2배의 가변폭을 제시하

고 있어 불명확하며, 또한 프리마코프 특사가 國際通貨基金에 요청한 향후 5~6년간 年300억 내지 500억달러의 지원금액과도 상치된다. 이러한 것은 서방의 금융지원문제에 있어서도 蘇聯내의 전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며, 西方의 입장에서는 蘇聯經濟 活性化를 위해 구체적인 필요자금조차 정확히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蘇聯의 진지성을 의심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⁶²⁾

蘇聯이 현재 안고 있는 국내경제상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서 논한 국내정세의 불안정요인과 함께 결국 蘇聯이 향후 國內問題 解決에 일차적으로 주력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西方으로부터의 經濟協力 획득이라는 주로 경제적 목표 달성에 진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 점은 동북아지역에서의 정책목표 추진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한편 쿠데타 실패 이후 각공화국의 경제적 분권화로 소연방체제의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各共和國間의 經濟協力 調整이 주요 과제로서 부각됨에 따라 共和國間 決濟手段으로서 루블貨의 兌換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루블貨의 兌換화는 蘇聯의 재정능력으로는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蘇聯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서방의 대규모 현금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

62) 한편 태평양경제협력회의 등 亞·太地域 經濟協力機構들도 蘇聯의 가입 신청에 대해 蘇聯이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蘇聯은 상이한 政治·經濟體制와의 協力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M. Kapitsa, "Problems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 *Far Eastern Affairs*, no. 6 (1987), p. 5)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

와 관련하여, 걸프戰 이후 西方의 자금 흐름이 변화하여 서방측의 대규모 경제원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유일한 여력이 있는 국가는 日本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⁶³⁾ 그렇다면 향후 蘇聯의 외교, 특히 亞·太外交는 日本과의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에 일차적인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한편 최근 러시아를 중심으로 「大블라디보스토크自由經濟地域」 구상 등 역내 국가들의 시베리아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나, 蘇聯 極東地域이 내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으로 시베리아개발에 대한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첫째, 社會·經濟的 사회간접자본의 不在問題이다. 노동자가 거주할 주택이 부족하여, 「計劃」에 따르면 2000년까지 1가구 1주택을 실현한다고 하나 그것은 현재 극동의 주택수를 배증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문화시설 및 자녀교육시설도 빈약하다.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은 숙련노동자를 유치할 가능성을 억제하고, 오히려 人口流出을 야기시킨다. 이 문제는 시베리아의 全산업부문·全지역, 특히 蘇聯 極東地域의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투멘州·북부지역의 고품질 고도기술수준의 제품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勞動力 不足問題이다. 시베리아는 인구밀도가 극히 낮아,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외국인력의 활용이나 해외철수 병

63) 佐藤經明, “ソ連版マーシャル・プランは實現するか,” 「世界週報」, 1991. 6. 25, p. 7.

력의 전용도 쉽지 않다. 특히 極東시베리아地域의 총인구는 1987년초 현재 777만명이며, 蘇聯 전체에 비교하면 4분의 1을 접하는 방대한 국토에 인구비율은 2.8%에 지나지 않는다. 극동인구는 하바롭스크지방, 연해주지방, 아무르州 및 사할린州 남부에 집중되고, 더욱이 도시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연해주 지방만하여도 노동력 부족은 3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극동인구를 2000년까지 950만명으로 증대시킬 예정이나, 사회간접자본 부족에 비추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⁶⁴⁾

셋째, 輸送問題이다. 가용한 수송수단은 철도로서 시베리아횡단 철도와 최근 완공된 BAM철도 뿐이다. 이밖에 도로와 비행장 등 개발을 위한 기초시설은 너무 빈약한 형편이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장애는 投資資金의 不足問題이다. 즉 「계획」에서 예정된 극동지역 투자자금 1,980억루블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이다. 財源은 中央으로부터의 투자와 地域內 企業의 自己資金으로 충당되나, 중앙의 투자는 유럽지역 기존 기업의 기술 재정에 집중되고 있어 극동지역에까지 할당될 여유가 없다. 完全獨立採算制, 自己資金調達制에 입각하고 있는 中央의 企業은 極東地域과 같이 대체로 경영상태가 나쁜 지역에는 자금을 배분하지 않고 투자조건이 좋은 유럽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域內 企業의 생산력은 극도로 낮으므로 自己資金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겨우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

64) 村上 隆, “ソ連極東經濟の實情と長期極東總合計劃の問題點,” 「ソ連東歐貿易調査月報」(1989. 3), p. 52.

다. 따라서 가능한 手段은 外國資本의 導入이나, 현재와 같은 蘇聯 極東地域의 경제조건 하에서 그것도 그렇게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극동경제상황이 외자도입을 통해 점차 개선될 경우에만 경제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들이 상승적으로 제고되어 마침내 외자도입도 대폭 확대시키고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蘇聯 極東地域은 우선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시작부터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의 아시아政策推進 主要 動因중의 하나인 시베리아개발도 현재로서는 가속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蘇聯의 주요 과제는 시베리아개발의 관건인 西方의 投資를 유인한데 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 시베리아개발에 대한 유럽의 선진공업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日本은 시베리아개발을 지원하여 蘇聯 極東地域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면 결과적으로 日本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른바 「부메랑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蘇聯은 韓國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여타 국가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상승효과를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蘇聯은 韓國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蘇聯은 東北亞經濟圈 構想을 추진하면서 역내 경제발전과 병행하여, 경제권 속의 자연스러운 발전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政策目標 實現手段의 制約性

蘇聯은 亞·太地域國家들과의 關係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政策手段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며, 域내 국가들이 지금까지 蘇聯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군사력 뿐이었다. 즉 蘇聯은 전적으로 軍事的手段에 의존하여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왔다.⁶⁵⁾

경제적인 측면에서 蘇聯의 전체교역량에서 차지하는 亞·太國家들과의 交易量은 낮으며, 域내 국가들의 입장에서 對蘇 交易量은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亞·太地域國家들은 기본적으로 蘇聯과의 경제관계 확대가 자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는 인식하고 있으나, 蘇聯과의 경제협력이 필요 불가결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蘇聯製品の 질적 열악성, 소비자의 기호에 적응하려는 노력의 결여, 외화부족에 따른 구상 무역 중시, 지체되는 商談時間, 자료비밀주의 및 시베리아개발의 문제점 등 蘇聯經濟가 안고 있는 한계에 비추어, 域내 국가들은 蘇聯과의 경제교류를 적극화하는데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蘇聯이 域내 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를 관철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먼저 蘇聯의 국내경제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蘇聯은 亞·太地域國家들과 지속적인

65) R. Solomon, ed., *Asian Security in the 1980's: Problems and Politics for a Time of Transition* (Cambridge, Mass.: Gun & Hain, 1980), p. 8.

관계발전을 보장하는 文化的 紐帶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蘇聯의 域내 국가들과의 文化的 共通성은 극히 적으며, 歴史的 접촉도 尠천하다. 最近 蘇聯이 域내 국가들에 불쇼이발레단을 派遣하는 등 文化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으나, 그것이 영향력으로 연계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蘇聯이 亞·太地域에서 政策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手段의 한계, 즉 軍事力을 제외한 경제·문화 등 여타 政策수단의 不在는 蘇聯이 비난하고 있는 亞·太地域에 대한 美國과 日本의 이른바 經濟的·文化的 帝國主義에 비하면 蘇聯이 域내에서 소기한 政策목표를 추진하는데 명백한 한계로 작용한다. 오랫동안 군사적·호전적·팽창주의적 세력으로 상징되어 온 域내 국가들의 對蘇 認識이 바뀌지 않는 한, 蘇聯의 政策목표 실현이 어려울 것이다. 한편 最近 蘇聯의 평화이미지 구축노력에 따라 域내 국가들의 대소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으나, 經濟·文化的 領域에서 域내 국가들과의 友好關係가 병행되지 않는 한 蘇聯의 域내 政策추진은 한계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라. 安保政策推進의 限界

걸프戰 이후 확립되고 있는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美國의 지위는 蘇聯 쿠데타 과정에서도 입증되었다. 부시 美대통령은 1991년 8월 蘇聯의 保守쿠데타가 발발하자 쿠데타 주도세력을 불법적인 집단으로 규정하고 고르바초프의 복귀를 주장하였다. 美國의 이러한 적극적인 對蘇政策이 蘇聯쿠데타를 실패시킨 중요한 결정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蘇聯의 改革指導部가 향후 美國의 國益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며, 이는 蘇聯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동북아에서 특히 安保政策目標 달성을 위한 政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쿠데타 실패 이후 폭발하고 있는 蘇聯軍部內의 昏亂에 비추어 蘇聯軍部 再編이 완료될 때까지는 蘇聯이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蘇聯邦體制 再編過程 속에서 각공화국이 獨自軍隊을 창설하겠다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쿠데타 실패 후 각공화국들은 國防委員會와 國防部를 신설하여 독자적인 치안유지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자체군대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 약 45만 병력의 독자군을 창설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10. 5)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 벨로루시 등 4개 공화국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核武器에⁶⁶⁾ 대한 管理問題가 美國 등 서방국가들의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이 창설된 상황에서 각공화국들의 군대 창설 움직임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蘇聯

66) 蘇聯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러시아(1,035기), 우크라이나(176기), 카자흐(104기), 벨로루시(이동식 72기)에 배치되어 있으며, 전략폭격기는 러시아(70기), 우크라이나(30기), 그리고 전략원자력잠수함은 59척이 러시아에 기지를 두고 배치되어 있다. U.S. Department of Defense, *Soviet Military Power* (October 1991).

軍은 각공화국별 독자군대가 구성되고 연방군의 역할과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集團安保體制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즉 핵무기 보유공화국을 포함한 11개 공화국이 이미 「집단안보조약」을 체결(11. 29)하여 집단안보체제 형성과 핵무기 중앙통제에 합의하였고,⁶⁷⁾ 「독립국가연합」에서도 “舊蘇聯이 조인한 조약과 협정으로 인한 국제적 의무의 수행, 핵무기 일원관리 및 불확산을 보증”한다고 선언되었으므로 향후 蘇聯은 集團安保體制를 형성하여 공동 안전보장을 도모하고, 핵무기를 통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향후 軍部 再編方向이 이러할 것이라고 전망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中央이 蘇聯軍 전체를 일괄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재편과정이 완료되는데도 적지않는 시일을 소요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蘇聯軍部內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은 페레스트로이카 추진이래 경제발전을 위해 군사력을 축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온 改革派와 이에 반발해 온 軍部 既得權集團 간의 葛藤에서 軍部側 發言權이 점차 약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蘇聯은 향후 軍部の 犧牲이 있더라도 國內經濟問題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에서 外交政策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67)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한 11개 공화국은 11월 29일 공화국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統一軍을 형성하고, 조약가입국에 대한 침략을 전가입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集團安保體制를 형성하며, 統一軍은 핵전력 및 육·해·공군을 보유하고 統帥權은 연방대통령이 갖는다는 내용의 「집단안보조약」을 체결하였다.

4. 政策推進方向 및 展望

1991년 8월 보수쿠데타 이후 소연방 해체와 「독립국가연합」 창설 등 국내정세가 매우 유동적이므로 향후 蘇聯의 동북아정책을 명확하게 전망하기가 용이하지는 않다. 그러나 蘇聯邦이 완전 해체되었으나 동북아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러시아 동북아지역문제에 계속 관여하고자 할 것이며,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은 舊소연방의 기존 정책과 일정한 連續性을 지니고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蘇聯의 향후 동북아정책을 전망함에 있어 蘇聯邦이 해체되어도 舊소연방의 기존 동북아정책이 러시아에 의해 계승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政策推進方向과 구체적인 政策展望으로 대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가. 政策推進方向

外交政策目標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모든 政策目標들이 동시에 일괄적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政策推進에 있어서도 蘇聯이 스스로 판단하여 實現可能性이 높다고 생각하는 目標, 또는 반드시 먼저 추진하지 않으면 여타 目標들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目標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蘇聯은 동북아정책 추진에 있어서 軍事·戰略的 政策目標보다는 經濟的 政策目標, 그리고 多者的 關係보다는 兩者的 關係를 우선시할 것이다. 그것은 前節의 「政策推進 影響要因」에서 분석하였듯

이 蘇聯國內情勢의 不安定으로 蘇聯이 무엇보다도 國內情勢의 안정을 도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西方으로부터의 經濟協力 획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蘇聯의 동북아정책 목표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추구될 수 있는 것이어서 政策推進 優先順位가 명확하게 책정되고, 반드시 先行目標가 달성되어야만 次期目標 실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蘇聯의 정책목표는 경제적인 것이든 또는 군사·전략적인 것이든간에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政策推進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목표는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優先順位를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短期的 政策推進方向과 中長期的 政策推進方向을 대별하여 분석할 수는 있다. 여기에서 短期와 中長期라는 區分은 蘇聯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단기간에 실현가능하다고 인식하여 懸案으로서 적극 추진할 目標와 지금 당장 실현시킬 수는 없으나 보다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目標라는 의미에서 대별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短期的 展望에서 蘇聯의 동북아정책은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兩者關係 改善을 가속화하고 域內 國家들로부터의 자본·기술 도입 등 經濟協力を 추진한다.

둘째, 域內 經濟協力機構에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여 적어도 會員權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한다.

셋째, 域內 安保環境을 蘇聯에 불리하지 않게 또는 유리한 방향

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域內 軍縮과 多者間 安保協議機構 창출을 향한 一方的 軍縮 提議 등 蘇聯의 平和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넷째,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韓半島 軍備統制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北韓의 變化를 유도한다.

한편 동북아 국제질서에서 양자관계로서 日·蘇關係 改善과 東北亞經濟圈 參加 등 다자적 경제정책 및 역내 군축 실현과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 등 軍事·戰略的 安保政策들은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앞서 언급한 先行政策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않는 한 성취되기 어렵다. 따라서 蘇聯은 동북아경제권 참가, 역내 군축의 실현,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 등의 政策을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方向에서 政策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작고 좁은 영역(subregional basis)에서부터 시작하여 政策目標에 점진적으로 접근한다. 이에 따라 兩者間 接觸에서 시작하여, 三者間, 四者間 接觸과 協商으로 발전시킨다. 이러한 段階的 接近方式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보다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域內의 일반적 분위기를 형성하여 「지역적 포럼」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둘째, 蘇聯은 包括的 全方位外交를 추진할 것이다. 域內의 모든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외교·안보 협력을 강조하면서 經濟目標와 安保目標를 포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셋째, 蘇聯은 역내 국가들의 對蘇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역내 국가와의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확대하여 平和愛好 國家로서의 이미지를 고양하려 할 것이다. 이는 蘇聯의 정책목표 실현에는 물론이거니와 향후 역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蘇聯이 중장기적 정책목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반드시 지적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앞에서 蘇聯의 域內 多者間 安保協議機構 창설 구상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兩者間→多者間→全아시아國家間」이라는 단계적 실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듯이, 蘇聯이 정책목표 실현을 위하여 향후 政策推進의 水準과 範圍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方向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이다.

나. 對東北亞政策 展望

(1) 兩者關係 再調整

蘇聯은 현재의 개혁노선을 견지하여 우선적으로 國內情勢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서방의 對蘇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국내정세 안정화를 위해서는 西方의 적극적인 經濟援助가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면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차관제공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서방국가들을 설득할 것이다. 결국 蘇聯은 앞으로 국내정세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서방측 경제협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책을 동시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며, 이는 相互補完的인 측면을 갖고 있다.

이러한 蘇聯의 정책방향은 東北亞地域에서도 일차적으로 시베리아개발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참여 여건 조성 과 역내 국가들과의 경협 확대 노력 등 經濟目標 달성을 위한 兩者關係 증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蘇聯은 全世界의 次元에서의 美·蘇 新대당트를 바탕으로 美國의 域內 安保的 利害關係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中國과의 關係改善 및 韓國과의 國交樹立을 이루어 왔다. 즉 蘇聯은 우선적으로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美·蘇間 利害關係의 相衝으로 域內에서의 對美關係 調整이 용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對美關係 再調整을 域內 군축 및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 등 安保目標 實現政策과 연계시켜 보다 中長期的 課題로서 설정하고, 美國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域內 國家들과의 兩者關係改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이 域內 국가들과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그것은 일차적으로 經濟協力 增進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域內 국가들과의 安保的 友好關係 설정은 域內 美·蘇關係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安保問題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렵다.

향후 蘇聯의 對中國政策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1991년 5월 江澤民 訪蘇時의 共同聲明에서 나타나듯이 對中國關係發展을 통한 對美·日 牽制로 특징지어지며(蘇聯은 특히 걸프戰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美國의 域內 및 세계적 영향력 확대를 견

제하고, 中·蘇 軍事協力을 도모하여 日本의 재무장을 견제하려 한다), 실리적 측면에서 양국 국경문제를 해소하여 國境貿易을 진전시키고, 中國을 시베리아개발에 참여시키고,⁶⁸⁾ 역내 국가들의 시베리아개발에 대한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蘇聯極東經濟特區 구상과 東北經濟區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蘇聯이 中國과의 관계발전을 통하여 50년대의 同盟關係로 회귀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그렇게 되기에는 상호불신이 극심하며, 또한 그럴 필요성도 희박하다)라는 점에서 양국간 정치·군사관계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⁶⁹⁾ 蘇聯이 따라서 對中國關係에서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긴 국경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던 양국간의 緊張을 완화시킴으로써 우선적으로 蘇聯 國境地域(시베리아 포함)의 經濟發展을 위한 外部的 安定基盤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蘇聯은 韓國과의 관계발전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蘇聯은

68) 中·蘇 貿易은 최근 점증하고 있다. 1988年 18억 5천루블, 1989年 24억루블, 그리고 1990年은 27억루블로 추계되었다. <Правда>, 1991. 2. 14.

69) 한편 이에 관해 蘇聯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쿠즈멘코는 異見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우선 고르바초프 방중 이후의 中·蘇間 黨對黨關係 강화와 국경병력 철수를 위한 양국간 접촉 증대를 배경으로 1990년 여름 이후 양국 군산 복합체 지도자들 간의 직접 접촉이 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蘇聯의 對中國 무기수출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그는 蘇聯의 對中國 軍事協력이 亞·太地域內 經濟協力에서 蘇聯의 孤立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蘇聯 國內의 政治的 混亂과 經濟沈滯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軍產複合體와 黨의 일부 지도자들의 短期的 利害關係가 蘇聯의 亞·太政策의 基本目標로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Andrei V. Kuzmenko, "Sino-Soviet Relations: From Rapprochement to Strategic Alliance?" 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K-USSR Cooperation in a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cosponsored by IFANS, ITBI, and IMEMO, held at Seoul on June 10~12, 1991.

韓國과의 國交樹立(1990. 9. 30)을 바탕으로 韓國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⁷⁰⁾ 文化·學術交流 등 양국간 信賴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할 것이다. 또한 蘇聯은 北韓과의 관계에 있어서 北韓의 체제유지정책이 蘇聯의 亞·太政策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여, 北韓의 變化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蘇聯은 안보적 측면에서 韓半島 緊張緩和를 유도하므로써 蘇聯의 東北亞 및 亞·太進出政策의 돌파구로 삼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蘇聯은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적극 추구하고 있으나, 日·蘇關係 개선은 양국간의 정통적인 불신감, 日本의 對蘇 위협인식, 美·日安保關係의 특수성, 북방영토문제 등으로 단기간에 성취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蘇聯은 향후 政經分離를 주장하면서 양국간 經濟協力을 증진시킬 것을 강조할 것이며, 民間部門(특히 경제와 학술 등)에서의 對日接觸을 증대시켜 中長期的인 관점에서 對日關係 改善을 도모할 것이다.

日·蘇關係 개선은 蘇聯이 東北亞 및 亞·太政策目標들을 실현하

70) 蘇聯은 최근 韓·蘇 關係改善의 一次的 目的이 韓國의 對蘇 경제지원과 日本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반적 해석에 신경질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蘇聯外務部の 파디에프는 主權國家인 韓國과 정상적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新思考를 추구하는 蘇聯의 이미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韓國과 수교하였다고 말하고 있다(Yuri D. Fadeev, op. cit., p. 13). 이와 관련하여 소련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의 아시아 專門家 시모니야는 최근 韓國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美·日의 獨占資本이 蘇聯에서 소비재생산의 노우하우와 기술을 독점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蘇聯은 韓國, 싱가포르, 홍콩, 臺灣, 泰國과 같은 「아웃사이드」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꾀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odari A. Simonia, "Is 'Helsinki Process' Appropriate for Asia-Pacific Region?" presented in the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on *Newly Emerging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on May 13~14, 1991, at Seoul, p. 6.

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의 경제력과 역내 영향력에 비추어, 蘇聯 極東地域 경제발전에 대해 日本이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은 지대하며, 日本이 응하지 않는 한 역내 경제협력기구에의 가입, 동북아경제권 참가,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 등 蘇聯의 정책목표들이 구현되기는 어렵다.

蘇聯은 최근 日本이 첫째, 전통적인 對蘇 敵概念을 수정하고 있으며, 둘째, 日本이 對蘇 경제지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셋째, 日本政府가 北方領土問題로 政經不可分을 주장하나, 민간차원에서의 정경분리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日本과의 관계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⁷¹⁾ 이에 따라 蘇聯은 對日關係 개선을 위해 협상을 적극화하고 특히 경제영역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양자적 접근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蘇聯은 그러한 양자적 접근만으로는 對日關係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對日關係를 한반도 군비통제 및 역내 군축 그리고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등 주변정세의 전반적 개선추세 속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한편 北方領土 반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 1991년 8월 保守쿠데타가 실패한 후 발트3국의 독립으로 북방 영토 반환이 야기시킬 國內的 波及效果가 반감되었으며, 각공화국의 경제적 독립으로 공화국간 경제활동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루블

71) N. A. Simonia, op. cit., p. 7. 시모니야는 특히 日本政府가 주장하는 「政經不可分」은 정치와 경제 등 모든 懸案이 동시에 짚키지로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貨의 兌換化가 시급하지만 美國 등 서방측은 일반적으로 對蘇 現金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蘇聯으로서는 日本의 現金支援을 기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蘇聯은 북방영토 반환을 통해 日本의 대소 경제지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日·蘇關係 개선을 이룩하려 할 것이다.

(2) 域內 多者間 經濟協力과 東北亞 經濟圈

동북아지역국가간 多者間 經濟協力과 東北亞經濟圈 設立構想은 域內 국가간 경제협력이 이를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域內 국가들에 의해 원칙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域內 국가들은 다자간 경제협력과 동북아경제권 형성이 美·日 특히 日本의 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日本의 域內 영향력이 과도하게 증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東北亞經濟圈 형성은 域內 兩者間 經濟協력이 증대되고 軍縮努力이 진전되면서 域內 情勢가 平和와 協力の 霧圍氣로 전반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클 것이므로 보다 中長期的 時日을 소요할 것이나, 域內 국가간 兩者間 經濟協력이 진전됨에 따라 점차 多者間 參與의 幅과 機會는 증대될 것이다.

蘇聯은 域內 다자간 경제협력과 동북아경제권 형성이 日本 주도로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域內 국가들을 시베리아개발에 참여시키는 동시에 中國의 東北經濟區 및 北韓의 豆滿江 經濟特區 등에 域內 국가들과 다자적으로 참여하므로써 東北亞地域의 繁榮에 동

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특히 蘇聯의 經濟分權化에 따라 러시아연방이 시베리아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경제관계 설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蘇聯은 역내 다자간 경제협력기구에의 참여를 적극 모색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및 亞·太 경제협력각료회의(APEC) 등에서의 가입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3) 域內 軍縮

蘇聯은 고르바초프 집권 이래 東北亞 및 亞·太地域에서 병력을 축소하기 시작하여, 中·蘇 국경지대와 몽고로부터 대량의 지상군을 철수시키는 동시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란灣 基地의 해·공군력을 축소하여 공격력을 대폭적으로 약화시켰다. 한편 美國은 蘇聯의 군사적 위협 감소와 재정상의 이유에서 1990년 4월 韓國·日本·필리핀 등 東아시아 駐屯병력 13만5천명에 대한 1991~2000년간의 3段階 部分減縮案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美·蘇의 군사력 삭감이 양국간 군축교섭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美·蘇 양국의 자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東北亞 및 亞·太地域에서의 군축교섭이 지금까지 진전되지 못한 최대의 원인은 이 지역이 유럽과는 상이한 다음과 같은 戰略環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유럽의 경우, 美·蘇 양극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라는 정형화된 블럭間 勢力均衡體制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어느 一方의 軍縮이 他方의 軍縮을 유도하는 要因

으로 작용하는 등 군축교섭이 용이하였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의 경우, 美·蘇·中·日의 4強體制 및 兩者間 同盟關係로 이루어져 있어 軍縮 合意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一方의 軍縮이 즉각적인 효력을 나타내기도 어렵다.

둘째,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간의 지상군 대치가 군사적 긴장의 최대요인이었던 유럽에서와는 달리, 동북아지역에서는 海軍力도 美·蘇 양국 군사력의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어 戰力 構成이 복잡하다. 따라서 해·공군력에 대한 美·蘇間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유럽과 달리 동북아지역의 경우, 한반도문제 및 日·蘇간 북방영토문제 등 지역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급속한 지역 데탕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동북아지역에서의 군축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美·蘇間의 軍縮이 선행되어야 하나, 美國은 亞·太地域에서 蘇聯이 일방적 병력 삭감을 개시한 후에도 軍縮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으며, 東아시아 주둔미군을 철수시킨다고 해도 海軍力만은 기본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즉 美國은 첫째, 蘇聯의 戰力은 양적으로 감소하여도 질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어 위협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고,⁷²⁾ 둘째, 美國의 역내 군사적 개입이 없게 되면, 中·日·印度 등이 「空白」을 메우려 할 것이므로 域內 安定이 손상

72) 1991년판 「蘇聯의 軍事力」에서는 CFE조약으로 蘇聯의 자바이칼·시베리아 極東軍管區의 戰力은 오히려 증대되었는데, 이는 “蘇聯이 조약에 따른 폐기조치를 면하기 위해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同報告書에서는 과거 2년간 유럽방면

되며, 셋째, 걸프戰과 같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美國은 동북아지역내 군축, 특히 해군 군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다.

물론 美國에서도 蘇聯과의 海軍 軍縮에 응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크로우 前합참의장은 공격형 잠수함의 대폭 삭감과 전략무기 이외의 해군력의 非核武裝化를 위해 美·蘇 海軍 軍縮交渉의 개시를 제창하고 있다. 즉 蘇聯의 공격형 원자력잠수함의 數는 오호스크海 등에서의 탄도미사일탑재 잠수함 방위에 필요한 규모를 2배 이상 상회하여 美國의 군함과 상선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동시에 美國의 공격형 원자력잠수함도 蘇聯艦隊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美·蘇의 공격형 원자력잠수함의 상호 대폭 감축은 경제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상발사 순항미사일 등 海軍의 核戰力에 대해서는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의 대상으로 되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제외하고는 억지력으로서의 배치 합리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만일 잠수함탑재 핵전력의 사찰이 곤란하면 적어도 수상함과 지상배치 海軍機의 핵전력 폐기를 蘇聯과 교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로우에 의하면, 수상함탑재 핵순항

에 배치된 신예무기 가운데 戰車 1만6천량 이상, 火砲 2만2천문, 裝甲車 1만1천대가 우랄 以東地域으로 이동되었으며, 그 결과 極東軍管區의 전력은 최근 1년간 師團이 45개에서 50개로, 戰車가 12,370량에서 13,500량으로 증가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極東艦隊의 海軍機는 421대에서 385대로 오히려 축소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U.S. Department of Defence, *Soviet Military Power* (1991. 10).

미사일의 폐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미국방부 관계자들이 많다고 한다.⁷³⁾

한편 1991년 7월 美·蘇間 戰略武器減縮協定이 체결된데 이어 부시 美대통령은 1991년 9월 27일 일방적 조치를 포함한 地上 및 海上發射 戰術核의 대폭 삭감구상을 발표하였으며, 10월 5일에는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이 부시 대통령의 성명을 환영하면서 空中發射 戰術核의 廢棄까지 주장하여 양국간 핵군축 전망이 가시화되었다. 이에 따라 제2차 전략무기감축협상의 전망이 밝아진 동시에 전술핵의 폐기 가능성이 증대되었으므로 東北亞에서의 美·蘇間 軍縮 合意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증대되었다.

(4) 多者間 安保協議機構 創設

東北亞 및 亞·太地域에서 多者間 협의기구를 창설하자는 蘇聯의 구상은 역내 국가들에 의해 호응되고 있으나, 美國의 강력한 반대로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蘇聯의 구상과 유사한 다자간 안보협의기구가 東北亞 및 亞·太地域에도 있어야 한다는 필요는 1988년 10월 盧泰愚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의회의」 제의, 1990년 5월 에반스 오스트레일리아 외무장관의 「아시아版 안보협력회의」(CSCA) 제의, 그리고 클라크 캐나다 외무장관의 「북태평양 다이어로그」 제의 등 역내 지역국가들의 지역 안보·협력에 대한 관심 증대로 반영되고 있다. 한편 北

73) William J. Crowe, Jr. and Alan D. Romberg, "Rethinking Security in the Pacific," *Foreign Affairs* (Spring 1991), pp. 129~130.

韓도 1991년 4월 6~10일간 캐나다에서 개최된 「북태평양 안보협력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앞으로 역내 다자간 협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域內 多者間 安保協議機構를 창설하겠다는 蘇聯의 정책 목표는 역내 군축의 실현이라는 또 하나의 정책목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美國은 蘇聯이 다자간 협의기구 창설을 주장함으로써 平和이미지를 선전하고, 이를 통해 역내에 본격 진출하여 역내 국가들과의 經濟協力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美國의 기존 입지를 훼손시키려는 目的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日本 중의원 연설(1991. 4. 17)에서 발표한 「도쿄선언」에 대해서도 美國은 고르바초프의 이번 제의가 과거의 것과 다를 바 없는 구태의연한 것이라고 즉각 거부하였으며, 日本도 美國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日·蘇 共同聲明에조차 반영시키기를 거부하였다.

한편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기구를 창설한다는 蘇聯의 정책은 獨創性を 결여하고 있다. 즉 蘇聯의 域內 多者間 安保協議機構 창설 구상은 유럽안보협력회의 모델을 답습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蘇聯의 정책우선순위에서 東北亞 및 亞·太地域의 중요성이 낮아 蘇聯이 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명확한 청사진을 작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진지하게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최근까지도 아시아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고르바초프가 1990년 3월 12일 日本 「朝日新聞」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에 헬싱키原則을 機械的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여, 최근 들어 蘇聯이 유럽과 상이한 아시아지역의 특수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蘇聯의 아시아정책이 獨創性을 결여하여 왔다는 사실은 蘇聯의 진지성을 역내 국가들이 의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아시아版 安保協力會議(CSCA)를 창설하려는 움직임은 조만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며, 域內 軍縮이 상당한 진전을 거두기 전에는 顯在化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蘇聯은 아시아지역에서 헬싱키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蘇聯은 아시아지역의 갈등과 대결이 과거 냉전시대의 세계적인 이데올로기적·정치적 대결, 즉 外部的·政治的 要因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이러한 외부적 요인이 제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域內 國家들의 主體的인 政治的 意志에 의해 역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蘇聯은 동북아시아가 평화와 협력의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으며,⁷⁴⁾ 이런 전망 속에서 域內 軍縮도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蘇聯은 역내 국가들의 주체적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평화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多者間 安保協議機構 創設을 위해 우선적으로 域內 國家들과의 兩者的 安保協력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蘇聯의 兩者間 安保協力 모색은 이미 中·蘇 軍事交流

74) N. A. Simonia, op. cit., p. 3.

에 이어, 1991년 10월 14일 나카야마 日本外務長官과 관킨 蘇聯外務長官간 회담에서의 「日·蘇 安保隨時協議機構」 설치와 自衛隊·蘇聯海軍間 艦·海上事故 防止協定 체결 교섭 개시 합의와 韓·蘇 양국간의 고위장성 상호방문 등의 軍事交流 擴大 合意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점차 多者間 安保協力으로 발전할 것이다.

(5) 韓半島 軍備統制

한편 蘇聯은 동북아지역에서의 군축과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韓半島에서의 軍備統制와 韓半島 緊張緩和를 적극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하였듯이 동북아 전략환경이 유럽지역과 달라서 역내 군축노력이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蘇聯은 유럽과 유사한 兩者間 軍事對峙地域인 韓半島에서의 軍備統制에 대해서는 美·蘇의 利害가 어느 정도 합치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韓半島 軍備統制를 추진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美國은 이미 駐韓美軍 漸進的 部分減縮政策과 南北韓 軍備統制의 連繫戰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蘇聯은 동북아지역에서 특히 안보정책 추진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難題를 해결하는 관건으로서 韓半島問題 解決이 波及效果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韓半島 軍備統制協商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따라서 美國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체적인 한반도 군비통제와 연계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北韓이 核査察을 수락하게 되면, 그것은 北韓의 對美, 對日關係 개선의 주춧돌이 될 뿐만 아니라, 南北

韓間 軍備統制協商이 시작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또한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신뢰구축과 군축실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第3章 美國의 東北亞政策과 對蘇對應

1. 東北亞와 美國의 國家利益

동북아에서 美國이 어떤 外交政策을 추진하는가 하는 것은 美國이 이 지역에서 어떤 國家利益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安保와 經濟면에서, 美國이 동북아에서 어떤 국가이익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은 時代的인 客觀的 狀況,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美國 내부의 主觀的 認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美國이 동북아에서 어떤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몇가지 이론적인 문제가 따른다. 동북아에서 美國의 국가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쾌한 客觀적 해답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동북아에서 美國의 국가이익이라고 말하는 것은 美國의 政策決定集團이 인식하고 있는 美國의 국익이라는 다소 주관적인 내용을 가리킬 수 밖에 없다.

이 지역에서 美國의 국익에 대한 美國 지도자들의 인식도 반드시 一致되거나 一貫性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책결정집단 내부, 그리고 美國內 多樣한 政治社會勢力 내부에 認識의 差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며, 또 그들 사이의 力學關係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美國의 국가이익에 대한 美國人들의 인식 자체가 分裂된 것일 수도 있고 變化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동북아에서 美國의 국가이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曖昧性과 可變性, 그리고 主觀性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그간

국제정치학적 분석을 통하여 비교적 공통적으로 파악된 국가의 행태에 비추어 美國이 東北亞에서 추구하는 國家利益의 성격에 대한 몇가지 기본적 假定을 추출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첫째, 美國은 자국의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보다 廣範한 地域에 대하여 軍事的 影響力과 經濟的 進出을 확립하려고 한다.¹⁾ 특히 美國은 세계에서 주요한 戰略的 據點들에 대해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력한 統制力을 확립하고자 한다. 美國은 세계적 차원에서, 그리고 주요한 지역적 차원에서 최대한 자국에 유리한 勢力均衡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북아지역은 특히 전후에 對蘇封鎖를 위해서도, 또한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日本을 美國 주도의 세계질서에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유럽과 아울러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역의 하나였다. 즉 동북아에서 자국에 유리한 세력균형을 확립·유지하는 것이 전후 美國이 추구해 온 핵심적인 국가이익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安保的 利益과 經濟的 繁榮이라는 두가지 일반적인 국가이익들 중에서도 時代狀況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진다. 전후 냉전 초기에는 美國의 동북아에 대한 이해관계는 주로 절박한 안보상의 이해관계가 核을 이루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에 美國은 경제적 번영을 위해 동북아와의 경제관계가 긴

1) 어떤 나라가 자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해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국가는 원래 내재적으로 권력 그 자체의 팽창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적 논쟁이 따른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에 대한 논쟁은 생략한다.

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經濟的 利益과 軍事安保的 利益은 많은 경우에 相互補完的이다. 경제적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압적인 군사적 침략이나 점령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한 군사적 영향력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美國이 戰後에 蘇聯에 대한 봉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유럽과 동북아에서 軍事安保的 主導權을 추구했을 때, 그 주요한 요소의 하나는 유럽과 동북아에 대한 막대한 경제원조의 제공이었다. 이들 주요 지역에 대한 美國의 경제적 원조는 美國의 군사안보전략에 필요한 것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美國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인식되었다.

즉 美國이 東北亞에서 追求하는 군사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은 상호보완적이거나, 동전의 양면처럼 不可分の 關係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美國이 동북아에서 추구하는 國家利益은 美國의 國力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즉 美國의 국가이익은 美國이 갖고 있는 국력의 정도에 의하여 그 대체적인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美國이 日本에 비해 經濟力과 軍事力이 월등할 때에는 美國의 동북아에서 국가이익은 日本에 대한 일방적 「支配」 혹은 垂直的인 「리더쉽」의 성격을 띠 수 있었으나, 兩國間의 相對的인 力學關係가 변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日本의 「協調」를 확보하는 것이 동북아 및 세계차원에서 美國의 국가이익이라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몇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전후 美國인들이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규정하는데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美國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동북아를 美國의 안보에 사활적인 전략적 지역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美國은 제2차세계대전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史上 최초로 아시아에서 원자탄을 사용했다. 1948년 맥아더는 “美國의 戰略的 울타리는 이제 더이상 南北아메리카의 西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 대륙의 東岸에까지 걸쳐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²⁾ 이를 입증하듯 戰後 냉전기간에 2차례에 걸쳐 美國이 치른 地上戰은 모두 東아시아에서였다.

둘째, 美國은 최근에 이르러 동북아에서 美國이 갖고 있는 경제적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1990년 2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메네트리(Louis C. Menetrey)는 동북아가 갖는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는 4개의 세계적 강국들인 美·蘇·中·日의 이해관계가 交叉하는 지역으로서,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은 세계적 안정과 美國의 지속적인 번영에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근년에 이르러 美國과 이 지역간의 무역고가 유럽과의 무역고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과 美國의 경제적 활력은 이 지역과 불가분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美國과 日本 두 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을 합하면 세계 국민총생산의 40%를 점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므로

2) Malcolm McIntosh, *Arms Across the Pacific: Security and Trade Issues Across the Pacific*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7), p. 37.

써 메네트리는 日本을 중심으로 이 지역국가들과 美國이 우호적인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³⁾

셋째, 美國은 蘇聯威脅의 減少로 군사력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고 경제적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동북아에 대한 美國의 국가이익은 이 지역에 대한 美國의 강력한 군사적 영향력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는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美國의 인식은 국가간에 특히 경제적 相互依存이 심화된 오늘날,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에서 美國의 군사적 역할의 持續을 강조하고 있다. 美國은 오늘날 “세계경제는 전례없는 정도로 지역적 분쟁으로 인한 무질서의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美國經濟는 갈수록 상품과 원료의 국제적인 흐름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美國이 세계의 모든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는 세계경찰의 역할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美國의 死活的 利益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중한 軍事力 行使를 포함한 지도적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계속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2. 美國의 安保目標와 安保政策

美國은 國際情勢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自國 經濟力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므로써 조성되고 있는 새로운 國際環境에 적응하고 자국

3) Testimony before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of the U.S. Senate, by Gen. Louis C. Menetrey, Commander of U.S. Forces in Korea, Washington, D. C., February 8, 1990.

의 국익을 극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美國이 설정하고 있는 안보목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안보전략의 내용에는 美國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된 요소도 있지만 과거와의 강한 連續性도 내포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脫冷戰時代 東北亞에서 美國의 군사전략의 배경을 이루는 안보목표에 대한 美國의 인식과 정책개념에 내포된 변화와 연속성을 살펴본다.

가. 安保目標

美·蘇·中·日 등 4강이 군사안보적 세력균형의 필요성, 정치체제 및 이념문제, 그리고 經濟發展의 요청이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서로간에 갖고 있는 一面協助 一面葛藤의 관계에 複合性과 不確實性이 증대함에 따라 美國의 안보목표도 어느 정도 변화를 겪고 있다. 물론 향후의 동북아 국제질서에서도 여전히 군사적 초강국들인 美國과 蘇聯간의 전략적인 對決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한 정도로 지속되면서 동북아질서의 기본요소의 하나로 남을 것이다. 특히 蘇聯의 국내정치 및 경제의 변화방향에 따라서는 그 중요성이 復活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상황 혹은 체계적 변동에 따라 동북아에서 美國의 안보목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목표들이 다같이 중요성을 가지므로써 상당한 복합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 對蘇警戒

전후 40년간 美國의 동북아정책의 근간은 대소봉쇄정책을 통하

여 동북아에 대한 蘇聯의 군사적·정치적 영향력을 最小化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1년도 美 국방장관의 연례보고서는 蘇聯이 革命的 變革을 겪으므로써 서방에 대한 蘇聯의 군사적 위협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⁴⁾ 이것은 1985년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蘇聯外交가 보여온 변화를 美國이 상당 정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향후에도 蘇聯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계는 美國의 안보정책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 남을 전망이다. 첫째, 美國은 蘇聯의 정치·경제체제 개혁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민주세력이 확보한 성과가 어떤 영구적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⁵⁾ 이와 같은 美國의 불안감은 1991년 8월 일부 군부세력에 의한 반동쿠데타가 실패한 이후 크게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군부쿠데타는 결과적으로는 개혁의 견인차가 되었으나 그러한 사태발생 자체는 蘇聯政治의 미래가 안고 있는 의외성과 취약성을 부각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둘째, 美國은 蘇聯이 “지구상에서 美國을 파괴할 수 있는 여전히 유일한 강국”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고르바초프 이후 蘇聯이 전개해 온 상당한 군축노력에도 불구하고 “蘇聯軍事力은 유라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채로 남아 있으며, 蘇聯의 해공군력은 계속

4) Dick Cheney (Secretary of Defense), *Report of the Secretary of Defense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anuary 1991), p. 2. (이하 *DOD Annual Report 1991*).

5) Ibid.

현대화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⁶⁾

더구나 蘇聯의 정치적 불안정, 소련방의 통일성 약화와 같은 현상은 蘇聯의 강력한 군사력에 대한 통제력의 위기를 가져온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점은 蘇聯軍事力の 존재가 새로운 차원에서 美國의 안보에 위협적 요인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⁷⁾

이러한 두가지 요인 때문에 蘇聯의 군사적 위협은 그 정도는 약하지만 위협 자체는 엄존하는 것으로 美國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의 전반적인 세계전략에서 蘇聯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감소된 것은 명백하다.

(2) 日本에 대한 美國의 主導權 維持

日本の 경제력과 잠재적인 군사력을 美國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체제 안에 묶어두는 것이 美國의 안보목표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美國 主導, 日本 補助의 안보체제를 최적의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美國의 동북아 안보목표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日本の 세력증대가 美國의 안보주도권에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 몇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日本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강화

6) Ibid.

7) 체니 미국방장관은 “蘇聯의 쿠데타 이후 급변하는 정세와 관련해 장차 누가 蘇聯 軍隊를 통제할 것인가”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주목하였다. *Korea Herald*, August 29, 1991.

되므로써 日本은 자신의 경제력에 걸맞는 軍事力과 정치력을 갖추려 기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脫冷戰과 美國經濟力의 상대적 약화로 美國이 동북아에서 美國의 군사력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日本은 독자적인 안보능력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軍事的 役割의 廣域化를 모색하고 있다. 셋째, 이와 관련 日本은 동북아에서 일방적인 美國 주도의 군사안보체제를 탈피하여 독자적인 구상에 따라 동북아 안보질서를 구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日本이 「東北亞安보포럼」을 제안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美國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美國이 당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日本과의 관계를 어떻게 再調整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앞에서 지적한 상황변화로 인하여 美國은 日本의 군사·정치적 역할의 확대와 그로 인한 美·일간 역학 및 역할의 재조정을 수용하려는 입장이다. 물론 美國은 향후에도 東北亞 및 世界的인 차원에서 군사·정치적인 지도권을 유지하려 할 것이나 美國이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指揮만으로서는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日本의 자발적이고 우호적 협력을 확보하므로써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지역에서 美國의 핵심적 정책목표는 美·日關係를 競爭과 葛藤보다는 協力과 相互依存의 관계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美·日間 軍事·經濟關係를 再調整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은 日本의 지속적인 협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동북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美國 헤게모니의 기반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럽이 경제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군사·정치적인 차원에서도 빠른 統合趨勢를 보임에 따라 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美·日關係의 發展的 再調整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3) 中國에 대한 警戒와 協調

美國은 中國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中國政治體제의 異質性과 아울러 中國政治에 내재한 激變可能性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美國과 中國간의 관계는 닉슨행정부 以後 점진적으로 改善되어 왔다. 1960년대말 中·蘇紛爭이 본격화된 이후 1970년대 초부터 兩國은 蘇聯에 대한 견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軍事的 聯合의 성격까지도 갖게 되었으며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치는 3각관계로 파악되어 왔다. 美國은 中國에 대하여 제한된 수준에서나마 軍事販賣를 비롯한 군사적 협조관계를 유지했으며, 앞으로도 美國과 中國의 관계는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차원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이루어 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中관계는 同盟의 관계는 아니며, 相互牽制와 葛藤의 요인을 안고 있다. 1980년대 초반 美國의 레이건정권이 군비증강에 몰두하고 군축협상을 拒否하면서 美·蘇間의 전략적 妥協과 協調가 완전히 붕괴되자, 蘇聯은 中國에 유화적인 자세를 보였고 中國도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

면서 中·蘇關係는 다시 改善되기 시작했다.⁸⁾ 이후 中國은 독립자주 외교노선 아래 美·蘇 兩國과 等距離外交를 펼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1989년 고르바초프의 北京訪問 이후 兩國關係는 더욱 개선되었다. 이것은 美·中關係가 좋다 하더라도 蘇聯의 전략적 選擇이 변하면, 中國의 연합정책은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美國은 中國과 일면 협조하면서 일면 中國의 힘과 정치적 向方이 안고 있는 잠재력과 불확실성에 대하여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美國은 특히 中國의 현 집권층인 노령의 혁명1세대들이 交替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中國을 비롯한 사회주의 전반에서 벌어졌고 또 현재 진행중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혁명인 「物質的 要求의 革命」으로 말미암아 “中國은 장차 정치적 激變을 겪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아시아의 安定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⁹⁾

(4) 韓半島變化의 安定的 管理

한반도에서 北韓의 도발이라는 地域的 非常事態가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美國이 힘의 優位를 기초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北韓의 내부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 그 후의 韓半島 統一過程을 美國에 우호적인 질서확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8) Robert Legvold, "Soviet Policy in East Asia," *The Western Quarterly* (Spring 1991), p. 131.

9) Robert Scalapino, "The U.S.-PRC Relations," *The Journal of East Asian Relations* (Winter/Spring 1990), pp. 139~141.

주요 과제로 浮上하고 있다.¹⁰⁾

한반도에서 北韓의 위협이라는 문제는 “蘇聯이 世界的인 次元에서 제기했던 威脅은 감소하고 있는 동시에 주요 지역에서의 美國의 이익에 대한 잠재적 위협은 增加하고 있다”는 美國의 전반적인 인식과 연관되어 있다.¹¹⁾ 美國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제3세계의 反美세력들이 美國의 이익에 다양한 방식으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 核武器 및 化學武器와 같은 大量殺傷武器들이 제3세계 국가들에 확산되었기 때문에, 反美的 지역국가들이 조성하는 불안정과 美國의 이익에 가하는 위협의 정도는 더욱 심각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¹²⁾

美國은 한반도에서 北韓이 제기하는 위협을 그와 같은 전반적인 지역적 비상사태의 위협으로 분류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北韓의 경우 핵무기개발을 기도하므로써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0) 北韓으로부터의 威脅은 美國이 아시아에서 抑止해야 할 여러가지 지역적 非常事態들 중 첫번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체니 美國방장관이 1991년 2월 日本을 방문했을 때, 그는 蘇聯 軍部로부터의 위협에 덧붙여 美國이 아시아에서 對備해야 할 안보 이슈들로 다음을 지적했다. 첫째, 北韓의 위협, 둘째, 北韓,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中國이 指導層의 老齡化 문제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로 內部변화를 겪으므로써 초래될 잠재적인 不安定, 셋째, 中國과 印度의 “地域強國”(regional powers)化, 넷째, 美軍이 철수하면 발발할 수 있는 많은 지역분쟁들, 다섯째, 탄도미사일과 核武器 技術의 擴散 등이 그것이었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24~25, 1990.

11) *DOD Annual Report 1991*, p. 3.

12) *Ibid.*

(5) 東北亞에서 美國의 均衡者論

대체로 이러한 네가지를 핵심으로 동북아 안보목표를 설정한 美國은 과거와 같은 對蘇封鎖 일변도의 전략개념을 넘어서서 地域的 均衡者 역할을 부각시키는 전략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¹³⁾

美國이 말하는 균형자 역할은 동북아의 변화된 상황에서 美國이 추구하는 勢力均衡戰略의 새로운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냉전시대에 美國이 추구했던 대소봉쇄는 동북아에서 美國에 유리한 질서, 美國에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蘇聯의 위협이 가장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蘇聯이라는 한 나라에 치우친 특수한 형태의 세력균형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오늘날 자신의 균형자적 역할을 강조하는 美國의 세력균형정책은 蘇聯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과거에 비해 4강사이의 복합적·다극적·유동적 力學關係와 거기에서 비롯되는 不確實性에 대한 統制에 비중을 두는 세력균형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이 탈냉전의 상황에서도 자임하고 있는 균형자적 역할 역시 하나의 군사적 체계모니 유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美國은 향후의 국제정치에서 일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美

13) The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21st Century* (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p. 10; Statement by Richard H. Solomo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House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March 6, 1991), p. 12.

國은 자신의 균형자적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는 축소된 규모이지만 세계전반에 美國이 충분하고 효율적인 군사력을 유지하므로써 뒷받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美國의 균형자론은 변화된 세계에서도 美國이 군사적으로 세계적인 주도권을 유지하므로써 국제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美國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이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전략적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력한 군사적 헤게모니에 의존하여 향후 국제정치를 주도하려는 의지는 1991년 美 국방부 연례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체니국방장관은 이 보고서의 서문에서 美國이 1945년 제2차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갑작스런 군비감축(sudden demobilization)을 실시하므로써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으며, 오늘의 美國은 이러한 실수의 재발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던 것이다. 체니장관은 1948년 당시 국방장관 포레스탈(James Forrestal)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광범한 군비감축을 비판한 다음의 발언을 굳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군사력(war machine)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계사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의 군사력을 폐기해 버렸다. 그러나 우리가 신속하고 완전하게 실시한 군비감축은 우리의 善意를 나타낸 것이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조치였다. 그후 국제적 갈등이 우리의 안보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함에 따라 우리는 自衛를 위해서 우리의 군사력을 다시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¹⁴⁾ 체니는 이러한 인식

14) *DOD Annual Report 1991*, p. x.

아래 美國이 새로운 상황에서 군사력의 구조를 개편해야 하지만 美國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美國의 균형자론과 이와 연관된 강력한 군사력 유지론은 과거 냉전시대에 정립된 美國 군사정책들의 대강을 유지하는 논리적 근거로 되고 있다. 즉 기존 군사동맹체제, 美군사력 전진배치, 전략핵 중심의 핵우산정책, 지역적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기동군 전력강화와 같은 요소들을 美國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새로운 전략개념은 과거와 다른 한가지 커다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美國이 과거정책의 기본골간은 유지하되 비용절감을 위해 규모와 운영방식에서 상당한 조정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은 핵무기체계를 전략핵, 기동성 위주의 전술핵, 그리고 전략방위계획을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전진배치군사력의 규모를 축소하는 동시에 그 구조를 가능한 한 기동군 중심으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외에서 협조적인 우방국들과의 군사역할 분담을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1980년대 들어서 美國이 이미 추진하기 시작한 美군사력 주둔국의 방위분담확대 노력과 아울러 탈냉전과 美國經濟力의 상대적 약화로 부각되고 있는 美國의 새로운 전략적 필요성에서 저비용으로 美國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美國은 비용절감을 위한 군사력 개편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작업은 美國이 향후에도 국제정세를 주도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군사력은 유지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재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1991년도 美國방부 연례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잘 요약되어 있다: “전략환경이 변함에 따라 美國은 핵무기와 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지만, 내일의 도전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 美國은 어떤 상황에서도 美國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상황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a leading role in shaping international events)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 페르시아만사태에서 입증된 바 있듯이 美國은 계속 강력한 군사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군사력은 전진배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그리고 위기들을 美國에 유리한 조건으로 해결짓는데 요구되는 힘의 투사와 증원군사력(power projection and reinforcement)을 제공해 줄 것이다.”¹⁵⁾

나. 安保政策

(1) 既存 同盟關係 維持

美國은 탈냉전시대에도 강력한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美國의 안보전략에 근본적인 요소”라고 간주하고 있다.¹⁶⁾ 먼저 美國은 동맹체제가 그동안 美國安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

15) Ibid., p. 4.

16) Ibid., p. 8.

“가치관의 공유, 공통된 방위목적, 우방국들의 경제력의 결합은 美國을 위한 집단안보의 강력한 기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동맹들은 세계전반에서 美國의 이익보호에 기여했으며 지역적 안정을 향상시키고, 蘇聯의 팽창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러한 동맹체제는 “탈냉전의 안보환경에서도 결정적인 요소로 남을 것”이라는 것이 美國의 인식이다. 그 이유로 1991년 국방부 연례보고서는 다음 세가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변화하는 세계에서 위기에 대한 대응과 장기적인 전략계획을 위한 효과적인 안보정책에 강력한 동맹체제들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많은 위협요인들이 애매모호하고 안보전략이 변화하는 시대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 동맹체제들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同보고서는 “동맹체제는 일단 퇴색한 상태에서 재건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¹⁷⁾ 그런 의미에서 집단안보관계들(collective security arrangements)은 그것들을 구축하고 가꾸고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하는만큼 “장기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¹⁸⁾

美國은 아무리 탈냉전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동맹체제는 美國 안보전략의 기초라는 전제하에 동북아에서도 기존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잘 가꾸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17) Ibid.

18) Ibid., p. 12.

(가) 美·日 軍事同盟

美·日 軍事同盟의 내용은 1952년 舊안보조약, 그리고 1960년 新안보조약을 거치면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戰後 冷戰時期에 美國의 동북아 안보정책의 초점은 對蘇封鎖였다. 따라서 美國은 日本의 軍國主義 재건의 잠재력을 차단하기 위해 日本에 부과했던 平和憲法을 여러 차례 재해석하면서 日本의 재무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日本의 再武裝에 대하여 美國은 두가지 전제조건을 단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하나는 日本을 非核國家로 남겨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日本의 군사력과 軍需産業을 美國에 보조적·종속적인 것으로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美國의 군사적 주도권에 보조적인 日本의 재무장, 이것이 美國이 구상하는 日本의 군사적 역할의 요체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서 美·日 군사안보관계는 양국 공통의 군사적 위협이었던 蘇聯圈이 지난 몇년간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므로써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점은 1991년 8월 보수강경파 군부세력에 의한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특히 현저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美·日 군사동맹체제는 그 존재의의가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美國은 향후 세계질서에서 주도적인 위상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日本의 軍事安保 및 經濟的 協調가 긴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美國은 부시대통령의 日本訪問(1992년 1월 초 예정)으로 「도쿄선언」을 채택하여 국제환경 속에서 美·日 동맹체제의 안정성을 견지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탈냉전과 美國經濟力의 상대적 약화 및 日本經濟力의 확대라는 새로운 東北亞環境에 적응하기 위하여 모색되고 있는 美·日간 役割再調整은 우선 日本自衛隊 역할의 國際化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체니 美 국방장관은 1991년 5월 26일 獨逸과 아울러 日本의 군사적 역할증대에 관한 美國의 희망을 피력했다. 그는 “독일군은 나토지역외의 분쟁개입을 금하고 있는 규제에서 풀려나야 하고 日本自衛隊도 보다 광범한 역할수행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美國의 희망은 1991년 걸프戰 후 日本自衛隊의 掃海艇 과 견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되었고, 이어 日本自衛隊의 平和維持軍 (PKF)참여에 대한 美國의 지지로 나타났다.

美·日關係 재조정에는 또한 양국이 經濟 및 安保를 포괄하는 綜合的 協力關係를 구축하여 세계적 동반자관계(global partnership)를 정립한다는 美國의 구상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 구상은 日本이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정치적 역할확대를 추구하는 것을 美國이 부분적으로 지지하므로써 日本의 국제적인 政治的 位相提高를 지원 하는 대신, 美國은 日本과의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日本의 讓步를 확보하는 방향에서 양국간 경제마찰을 최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및 동북아 차원에서 안보, 경제, 정치분야에서의 美國의 리더쉽행사에 대한 日本의 정치적, 경제·재정적 협조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美國은 日本을 「敵國」으로 규정한 유엔헌장 내용을 수정하는 등 日本의 국제적 지위의 象徴的 提高, 유엔을 비

롯한 국제기구들에서의 日本의 정치경제적 發言權 강화, 世界의 主要 懸案 처리과정에서 日本과의 협의 및 日本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등과 같은 政治的 役割 확대를 지원할 것이다. 그 대신 美國은 양국간 무역역조 시정을 위해 美國이 주도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라는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日本에 대한 구조조정협상(Strategic Impediment Initiative: SII)과 관련 日本의 양보와 협조를 촉구하고 주일미군에 대한 日本의 주둔국지원 (Host Nation Support: HNS), 즉 日本의 방위비분담 증액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美國의 구상에 따라 양국은 1991년 1월 日本이 美國에 대한 주둔국지원을 매년 10% 늘려 1995년까지 향후 5년간 170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증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¹⁹⁾ 아울러 美國은 세계 개발도상국들 및 기타 경제취약지역들에 대한 「外國援助計劃」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과 관련, 日本의 보다 적극적인 寄與를 촉구할 것이며, 이로써 세계경제 및 정치적 안정을 위한 美國의 리더쉽에 수반되는 재정적 부담을 日本이 더 많이 분담하도록 할 것이다.²⁰⁾ 1992년 1월 초 부시 美大統領의 日本 방문시 양국 頂上會談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 소위 「도쿄선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美·日關係發展 構想을 보다

19) 이 액수는 1995년에 이르면 주일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유지비용전체의 73%를 日本이 부담하게 됨을 의미한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Library of Congress, "Allied Burdensharing in Transition: Status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October 25, 1991, pp. 8, 78.

20) 日本은 1989년 현재 89억 7천만달러에 달하는 외국인조계획자금을 제공했으며 이것은 전년대비 3배 증가한 것이다. 日本은 이 액수를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0.7% 수준으로 올리는데 이미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ibid.*, p. 8.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최근 日本의 軍事大國化 경향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美國의 관심을 환기시키려 하고 있다. 美國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日本의 정치적 역할 확대와 경제적 기여 증대 이외에 日本의 군사대국화 자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美國은 1987~88년 무렵까지는 蘇聯의 위협을 들어서 日本 軍事力의 확대를 촉구했으나, 그후 美國의 입장은 크게 변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美國은 日本自衛隊의 방위역할은 1千海里 防衛에 한해서 지지하고 있으며, 자위대 군사력의 양적 팽창은 반대하고 있다. 또한 美國은 自衛隊의 평화유지군 참여도 2,000 명이하의, 엄격히 비전투적인 상황에만 한정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美國은 日本의 核強國化에 대해서도 물론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이와 같은 美國의 태도는 日本이 독자안보론을 강화하면서 군사력팽창을 도모할 경우 美國의 반발을 살 것이며 兩國間 同盟關係에 균열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말한다. 日本이 탈냉전의 상황에서 美國 및 동북아 주변국가들의 경계심을 촉발시키면서까지 가까운 장래에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구체적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보인다. 그러나 美·日 양국간 경제마찰이 급격히 심화되거나 美國의 軍事力 撤收가 의외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日本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장기적으로도 日本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韓·美 軍事同盟

韓·美關係는 해방후 3년에 걸친 美軍政, 南北分斷, 韓國戰爭이라는 激動期를 거치는 가운데에서 垂直的이고 강력한 군사동맹체로 발전했다. 특히 韓國戰爭은 美國 군사력의 대규모 介入을 초래했고, 休戰 以後에도 6萬내지 4萬의 美군사력이 南韓에 恒久駐屯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韓·美軍事關係는 이처럼 한국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美군사력의 전진배치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발전해 왔다.

韓·美軍事關係는 1969년 닉슨의 괌독트린(Guam Doctrine) 이후 카터정권 초기에 이르기까지 美國의 撤軍政策의 浮沈속에서 한동안 動搖의 시기를 거친 바 있다. 그러나 1970년대 末 美·蘇間 新冷戰이 전개되면서 철군계획이 撤回되고 韓·美 양국은 다시 긴밀한 군사동맹관계를 回復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는 보수적인 레이건 정권이 들어서면서 美·蘇間 新冷戰이 보다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1970년대에 동요하던 美·日 군사동맹관계를 다시금 안정시켰던 것처럼 韓·美軍事關係도 또한 보다 緊密하고 강력한 것으로 만들었다. 韓國에 대한 美國의 군사판매가 확대되고 韓·美間 합동군사훈련이 해마다 대규모화 되었으며, 韓·美·日 3국간의 군사협력체제가 모색된 바 있다.

그러나 韓·美軍事關係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진행된 脫冷戰의 흐름속에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 調整의 계기를 맞고 있다. 1990년 韓·美年例安保協議會(SCM: 1990. 11)에서 韓·美 양국은 점진적,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조정, 그리고 韓·美 연합지

휘체제안에서의 한국군 역할 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韓·美軍事關係 재조정계획이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합의는 미국방부가 1990년에 펴낸 대아시아 군사전략보고서가 韓國에서 美國의 軍事的 役割을 기존의 主導的 役割(leading role)에서 補助的 役割(supporting role)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었다.²¹⁾

駐韓美軍의 감축을 결의한 1989년의 년-워너 수정안에 부응하여 작성된 위 전략보고서에서 美國은 주한미군의 3단계 감축안을 제시했다. 1~3년간의 1단계에서는 2,000의 공군병력과 5,000의 지상군을 철수시키며, 3~5년간의 2단계에서는 제2보병사단(the 2nd Infantry Division)의 構造改編을 고려하고, 5~10년간의 3단계에서는 韓國軍이 한국방위의 주도역할담당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그 이상의 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大綱에 기초해 美행정부가 1991년 5월 23일 의회에 제출한 년-워너 2차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 감축은 1992년 말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단계에선 비전투요원만이 철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군 감축은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1991년도 韓·美年例安保協議會(1991. 11)에서 양국은 北韓이 국제핵사찰을 거부하는 한 주한미군 2단계철수계획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韓·美 양국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맞추어 韓國軍의 역할

21) The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p. 9.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간 미군이 행사해온 韓國軍에 대한 作戰 統制權과 유엔사령부의 휴전협정 관리책임이 단계적으로 韓國軍에 이양될 계획으로 있다. 이와 관련 리스카시 주한미군사령관은 1991년 6월 “향후 6개월 이내에 유엔사 휘하의 美軍 및 韓國軍 지상군 사령관에 한국군 4성장군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것을 韓·美간 역할재조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

1991년에 진행된 韓·美關係 재조정작업은 駐韓美軍地位協定(SOFA)의 개정에서도 나타났다(1991. 4). 주한미군의 범죄처리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1966년에 처음 체결된 위 협정은 韓國政府의 刑事裁判權 자동포기조항을 담고 있어서 그간 韓·美간 不平等關係의 상징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1991년 4월 개정에서는 이 毒素條項을 삭제함으로써 변화하는 韓·美關係의 일단을 드러내었다.

1991년중 이루어진 韓·美軍事關係 재조정작업에서 가장 劇的인 것은 1991년 9월 27일 부시 美대통령의 전술핵일방폐기선언에 따른 韓半島로부터의 核武器撤收決定이다. 뒤이어 韓國政府는 1991년 11월 8일 한반도 非核5原則을 발표하므로써 그간 南北韓간 대화진척의 주요 장애요인이었던 핵문제해결에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北韓의 국제핵사찰수용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韓國政府는 韓國내 「핵부재」를 선언하게 되었다. 그러나 美國은 한반도로부터의 핵철수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韓國에 대한 核雨傘 제공정책은 불변함을 밝히고 있다.

韓·美 양국은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관계재조정작업을 진행하는 한편에서도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兩國間 同盟關係의 弛緩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해왔다. 첫째, 韓·美 양국은 韓·美·日 3국이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정세속에서 공동보조를 견지하기 위한 의견 교환과 조정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1991년 4월 30일 韓·美·日 高位政策協議會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韓·美 양국은 1985년 이후 美國측이 강력히 제기해온 戰時駐屯國支援協定(WHNS)을 1991년 7월 마무리하였다.²²⁾ 이로써 美國이 탈냉전의 상황에서도 韓·美軍事同盟體制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韓·美軍事同盟을 美國 東北亞 安保戰略의 주요 기반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견지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셋째, 美國은 韓·美간 연례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훈련을 지속할 의사임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美國은 1991년 초 페르시아 만에서 걸프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韓國에서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1991년 11월 韓·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22) 美國은 1985년 5월 제17차 韓·美年例安保協議會에서 戰時駐屯國支援協定 체결을 韓國측에 제기한 후 지속적으로 이의 조속체결을 韓國政府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韓·美 양국은 지난 1991년 7월 25일 前文, 9개 조항 및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된 이 협정안이 양국 국방부간에 가조인함으로써 6년여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 협정은 한반도 유사시 美증원군을 한반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韓國의 軍需支援을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의 「유사시」에 관한 해석, 美증원군 규모의 명시여부, 韓國의 군수지원의 한계 등을 둘러싼 양국간의 이견으로 협정체결이 지연되어 왔었다. 이번 협정에서 양국은 「유사시」에 대한 해석은 양국정부의 합의에 의해 공동결정하기로 했으며, 韓國측이 요구했던 美증원군 규모의 명시 문제는 연합사 작전계획인 「시차별 부대전개목록」(TPFDL)을 따르기로 했으며, 양국간에 가장 미묘한 갈등을 벌였던 韓國의 군수지원의 한계에 대해서는 “韓國측의 가용자산 범위내에서 美國측이 그 기능을 대체할 때까지”로 합의하였다. 이 전시주류국협정은 韓·美間 군사동맹관계가 향후에도 美國의 東北亞 안보전략에서 중요한 役割을 담당할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 兩國은 1992년 팀스피리트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었다.

마지막으로 美國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韓國에 대한 美 軍事力 前進配置 자체는 장기적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美 국방부 동아시아지역 고위 담당자인 칼 포드 수석 부차관보가 1991년 4월 초 訪韓하여 “서기 2000년이 훨씬 지나서도 주한미군병력을 상당 수준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그 좋은 예이다.

한편 美國政府는 韓國에 대한 美군사력 전진배치를 일정 수준 유지하되 이에 따르는 자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韓國에 대한 방위비분담요구를 확대해 왔다. 솔로몬 美국무부 東亞·太 담당차관보가 1991년 5월 17일 한 의회청문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韓國은 첫째, 10~30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全額 부담하며, 둘째, 1990년 7천만달러 수준의 방위비분담을 1991년에는 두배이상 증가한 1억5천만달러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셋째, 1991년엔 처음으로 4천3백만달러 규모의 人件費를 부담하게 되었다.²³⁾ 1991년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3차 韓·美政策檢討委員會(PRS)에서 美國측은 韓國측의 직접분담규모를 더욱 늘려 1995년도에는 4억2천만달러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美國은 또한 탈냉전상황에도 불구하고 韓國과 日本에 대해 空軍

23) Statement by Richard H. Solomo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The Department of State), House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March 6, 1991, pp. 11~12.

力現代化 필요성을 역설해 왔으며, 이러한 현대화작업을 美國의 주요 군수산업체들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美군수산업체와의 合作生産(日本과는 合作開發)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해왔다.²⁴⁾ 이에 따라 韓國政府는 美國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F-16기종 120대분을 일부 구입, 일부 합작생산하는 차세대전투기사업(Korean Fighter Aircraft Program: KFP)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략 70억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1992년의 韓·美關係에서도 駐韓美軍 減縮問題는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가 될 것이다. 北韓核開發問題로 韓·美 양국은 美 第2師團 兵力의 축소개편을 포함한 2단계 철수계획을 연기함으로써 당분간 미군의 추가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南北韓이 「남북한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1991.12.13), 南韓이 南北韓 동시사찰을 수용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는데다 北韓이 경제난 해결을 위해 日本 등 서방의 경제협력확보를 중요시할 전망임에 따라 北韓은 1992년 중 국제핵사찰을 수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가중되는 국방비삭감압력에 직면해 있는 美國政府는 1992년중에 주한미군 2단계 철수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美國政府는 1992년에도 팀스피리트훈련 지속을 원하고 있는 것

24) 美國은 日本과는 서로 기술교환 및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합작개발의 차원에서 일본공군력 현대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은 韓國에 대해서는 합작개발을 거부하고 전면 완제품구입이 아니면 합작생산에만 한정하여 한국공군력현대화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美國이 韓國에 대한 기술이전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ibrary of Congress, Robert Sutter, "Korea-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November 22, 1991, p. 7.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南北韓이 基本合議書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북한핵사찰과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연계하여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이 훈련은 중지되거나 적어도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北韓의 핵사찰수용이 늦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며, 그럴 경우 韓·美 양국은 南北韓間 關係改善 速度를 둘러싸고 상호의견 조정을 위한 노력이 요청될 수 있다. 美國은 부시 대통령의 전술핵 철수선언 이후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있어 韓國의 協商主導權을 인정할 것을 시사한 바 있으나, 美國의 기본입장은 北韓이 핵재처리시설 등 핵무기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국제핵사찰 완전수용 및 核開發意圖 完全拋棄를 전제로 해서만이 韓·美·日에 대한 北韓의 對外關係 改善에 협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2월 13일 南北韓이 서명한 기본합의서가 核問題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담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²⁵⁾ 美國은 韓國政府에 異議를 제기하였으며(1991.12.13), 이에 따라 南北韓關係 改善과 核問題 解決의 先後에 대한 韓·美 양국간의 이견이 외교적 문제로 발전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1992년 1월로 예정된

25) 「남북한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 등 4장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韓半島 核問題에 대한 兩側의 合意는 이와 별도의 것으로서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이 양측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것, 그리고 양측이 핵문제를 계속 협의하기 위해 12월 중으로 판문점에서 쌍방대표 2명, 전문가 3명이 참석하는 實務代表接觸을 갖기로 한 것 등이다. 남측은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로 예정된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와 핵시설에 대한 시범사찰을 連繫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임을 밝혔다.

부시 美대통령의 訪韓時 주요 협의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한국정부는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北韓의 국제 핵사찰수용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美國은 北韓의 核査察受容 以前 한국정부의 對北韓 經協擴大自制 등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부의 방위비분담증액에 대한 美國의 요구는 1992년중에도 더욱 強化될 전망이다. 현재 北韓의 국제핵사찰 거부로 駐韓美軍 2단계 철수계획이 잠정적으로나마 중단된데다, 美 大統領選舉와 관련 議會에서의 동맹국 방위분담 요구에 대해 美 행정부가 더욱 민감할 것으로 보여져 1992년중 美國의 방위분담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1991년의 韓·美關係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美國의 前進配置戰略과 核政策의 修訂을 배경으로 안보면에서 전례없는 조정을 거쳤다. 經濟關係에서도 1991년은 美國이 韓國에 대하여 지적 소유권보호, 서비스부문 및 쌀 등 농산물부문을 중심으로 강력한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므로써 1980년대 후반에 본격화된 탈냉전, 美國經濟力의 상대적 약화, 및 국가간 貿易紛爭加速의 여파가 韓·美關係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한 해였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1991년 말 南北韓關係는 관계개선의 극적 실마리를 찾은 반면 韓·美關係에는 경제 및 안보면에서 再調整過程의 本格化로 인한 다소간의 긴장요인이 발생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1992년의 韓·美關係에서는 과도기적 국면에 들어선 양국간 同盟關係를 再確認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양국정부의 상호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양국은 다같이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政治的 再編期에 들어섬으로써 서로 국내여론 반영에 치중한 나머지 경제·안보 면에서 양국간 이견조정은 상당한 시련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前進配置戰略의 維持

(가) 前進配置의 戰略的 背景

1990년 美國방부 報告書에 따르면, 美國은 현재 美國의 총 군사력 2백 13만명의 인원중에서 16.3% 인 34만 1천명을 유럽에, 그리고 6.3%인 13만 5천명을 亞·太地域에 전진배치하고 있다.²⁶⁾

이 보고서는 戰後 美國의 군사력 전진배치의 목적을 세가지로 요약하고 있다.²⁷⁾ 첫째, 蘇聯에 대한 효과적 봉쇄, 둘째, 美國의 전략적 우방들의 보호, 셋째, 美國을 가능한 한 원거리에서부터 방위한다는 것 등이다.

한편 1991년 8월에 美백악관이 펴낸 한 안보보고서는 美國이 여전히 군사력 전진배치를 유지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근거로 몇가지 이유들을 들었다.²⁸⁾ 이것들은 대체로 다음 네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먼 지역에 대한 적극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러

26) DOD,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p. 9.

27) *Ibid.*, p. 2.

28)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August 1991), p. 27.

한 美國의 의지를 과시(demonstrate)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진배치된 美군사력은 美國에 중요한 동맹관계들에 대해 필수적인 접착제(essential glue) 구실을 하며 美國의 공약을 가시적인 행동으로 뒷받침하는 신호라는 것이다.

셋째, 해외주둔 미군은 침략을 억지할 뿐 아니라 지역내 균형(regional balances)을 유지하고 군비경쟁을 완화하며 권력의 공백을 방지하므로써 갈등 유발을 사전에 억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넷째, 군사력 전진배치는 美國이 유사시 먼거리에 있는 美本土로부터 美國의 힘을 投射하는데 수반되는 부담을 덜어 준다는 것이다.

즉 美國이 전진배치를 正當化하는 근거는 전후 냉전시대에는 주로 對蘇封鎖였는데 비하여, 오늘날은 地域內 均衡維持 혹은 힘의 空白防止라는 것으로 이동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백악관 보고서는 그같은 논리에 기초하여 특히 유럽과 동아시아에 대한 전진배치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美國에 대해 “지극히 중대한 利害關係가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는 한, 또 동맹국들이 美國과의 共同努力의 일환으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원하는 한 이들 지역에 대한 「美軍의 永久駐屯」(the permanent deployment of some U.S. forces)이 요구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²⁹⁾

29) Ibid.

따라서 이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위협이 감소하고 美國 동맹국들의 방위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전진배치 군사력의 규모는 축소하면서도,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美國의 전진배치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에 필수적인 해외 군사기지도 마찬가지로 유지될 전망이다.

(나) 美軍의 前進配置와 東北亞 및 韓國

美國은 아시아의 日本, 韓國, 필리핀의 미군기지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미군의 주둔구조 (U.S. basing structure)는 앞으로 어느 정도 변화하겠지만, 이 지역에 대한 美군사력의 계속주둔은 (美國의) 전략적 이익과 지역적 안정을 보존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³⁰⁾

동북아에 대한 美國의 군사력 전진배치의 주요이유는 蘇聯에 대한 封鎖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蘇聯으로부터의 可視的인 威脅이 상당히 사라진 현재의 상황에서도 美國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근거에서 동북아에 군사력의 前進配置를 持續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美군사력 전진배치가 恒久化된 것은 물론 韓國戰爭이 직접적인 이유였고, 그만큼 北韓으로부터의 軍事的 威脅에 대한 對應이라는 것으로서 주로 合理化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넓게 보면 駐韓美軍事力은 동북아 전반에서 美國이

30) Ibid.

자신의 군사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진배치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사력에 대한 美國의 근본적인 政策變化는 동북아 혹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美國의 전진배치전략의 전면적 수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韓國이 동북아에서 美國에 긴요하고 협조적인 友邦으로 남아 있는 한, 그리고 美國이 해외전진배치 전략의 근간을 수정하지 않는 한, 최소한 海·空軍과 어느 정도의 機動軍을 중심으로 한 美軍事력을 일정한 수준 韓半島에 계속 유지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즉, 美國은 기동성 위주로 美군사력구조를 개편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美國의 입장에서 주요한 전략적 거점이 되는 지역들, 즉 유럽과 동북아에 대해서는 일종의 「據點確保 및 據點防禦」라는 차원에서도 일정한 군사력을 계속 전진배치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 필리핀에서 미군의 지속주둔 여부가 필리핀 內部에서 심각한 政治的 이슈로 등장하였다. 그 결과 美軍駐屯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더구나 피나투보화산의 폭발로 일부 기지가 영구폐쇄될 상황에 처하므로써 그동안 필리핀에 의존해 있던 亞·太地域에 대한 美國의 前進配置군의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韓國이 정치적으로 美國의 友邦으로 남아 있는 한, 韓國은 필리핀내 美軍事력을 부분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美國은 실제 韓國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³¹⁾ 그럴수록 美國의 軍事戰略에서 韓國은 前進配置의 主要 據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3) 核雨傘政策 堅持와 核擴散沮止

(가) 美國의 核抑止戰略과 東北亞

美國은 1945년 핵을 개발한 이후 美國의 영토, 전진배치된 美군 사력, 그리고 美國의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를 핵무기에 의한 억지(핵억지: nuclear deterrence)로 지켜왔다고 평가하고 있으며,³²⁾ 이러한 핵억지전략은 전례없는 핵감축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에도 美國 군사전략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美國은 전략적인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적의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핵을 사용할 의사를 밝혀왔다. 이것은 국지적인 분쟁에서도 美國의 인적, 물적 희생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최대한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991년 9월 부시 美대통령의 전술핵철수선언으로 지상 및 해상 배치전술핵은 철수·폐기될 것이나 공군용 전술핵은 유지될 전망이다. 따라서 美國은 여전히 전술핵억지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31) 1991년 11월 初 美行政府는 필리핀의 클라크 空軍基地에 주둔했던 美國空軍 特殊戰部隊가 이 기지 폐쇄 이후 韓國과 日本에 一時 이주해 있다고 밝혔다. 1천2백 명 규모로 알려진 이 공군특수부대는 非常事態對應軍의 성격을 띤 전진배치용 군대로 알려져 있어서 美본토로 옮겨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韓國과 日本에 永久駐屯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東亞日報」, 1991. 11. 3.

32) *DOD Annual Report 1991*, p. 51.

수 있다. 공군용 전술핵 뿐 아니라 북태평양에 배치된 美國의 전략핵들도 유사시 전술적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핵전략에 따라 美國이 동북아의 육상과 해상에 배치한 戰略 및 戰術核들은 두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日本과 韓國을 蘇聯이나 中國의 핵공격으로부터 防禦하는 전략적인 핵雨傘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 한반도를 포함해 동북아에서 장차 발생할 수 있는 국지적인 분쟁에서 美國이 필요하다면 戰術核을 선제 사용하므로써 이 지역에서 美國과 동맹국의 이익을 保全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日本에 대한 美國의 핵우산은 日本에 대한 戰略的 防禦의 성격이 강하며, 한반도 혹은 그 주변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전술핵무기들은 局地戰에서 선제사용 가능성도 내포한 전술적 용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나) 핵擴散과 北韓核開發 沮止

美國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들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강력한 핵확산금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핵확산 저지원칙은 美國에 적대적인 국가와 비적대적인 우방국들에 다같이 적용해 왔다. 첫째, 美國은 友邦國들에 의한 핵開發을 禁止하므로써 美國이 이들에게 독점적인 핵우산을 제공하여 우방국가들에 대한 군사·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美國은 日本의 핵강국화를 반대하면서 日本을 美

國의 핵우산하에 남겨두기를 원하며, 韓國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핵개발기도를 막아왔다. 韓國政府가 1970년대 말 독자적인 핵개발을 추진하려 했을 때, 美國은 이를 극력 反對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점은 이 시기 韓國政府와 美國간 關係惡化의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³³⁾

둘째, 美國은 北韓이 核開發을 기도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는 것을 美國의 對北韓政策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중동에서 이라크가 핵개발을 기도하면서 지역적 차원에서 美國에 적대적인 군사적 패권을 추구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美國은 北韓의 핵개발을 주시하고 있다. 美國은 한반도가 향후 地域的 非常事態發生 위험지역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 北韓이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그러한 위험성은 지극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美國은 北韓과의 관계개선의 최우선 先決條件으로 北韓의 核再處理施設을 포함한 핵개발능력 完全拋棄를 요구하고 있다.

(다) 韓半島 非核化 및 非核地帶化論과 美國의 立場

蘇聯의 威脅減少와 南北對話의 進展으로 인하여 동북아 혹은 적어도 한반도 非核化에 관한 논의가 강해지고 있다. 이것은 특히 蘇聯과 北韓에 의하여 개진된 바, 蘇聯이 근년에 주장해 온 동북아 多者間 安保協力機構(CSCA) 설립구상은 한반도의 非核地帶化

33) Peter Hayes, "American Nuclear Hegemony in Korea,"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5, no. 4 (1988), p. 357.

를 모색한다는 목표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부시 美대통령은 지난 1991년 9월 지상 및 해상에 배치된 전술핵을 철수할 것을 선언하므로써, 한반도의 非核化를 반대해 온 그간의 美國 核政策에 중요한 변화가 왔다. 이번 부시선언은 지상 및 해상발사 전술핵들을 전면폐기하고 전략핵의 현대화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뒤이어 韓國政府는 1991년 11월 8일 핵무기를 “製造, 貯藏, 保有, 配備, 使用하지 않는다”는 韓半島 非核5原則을 선언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美國 및 韓國政府의 비핵화정책과 北韓이 의도하는 비핵지대화주장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잔존하고 있다. 北韓의 비핵지대화론은 南北韓 당사자들이 다같이 핵무기를 製造, 保有, 使用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搬入되거나 通行하지 않으며, 외국이 자신의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법적 보장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美國은 한반도로부터는 공군용 핵무기도 철수할 뜻을 비치고 있지만, 광도에 있는 공군핵무기를 유사시 동원하여 對韓國 핵우산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 점에서 美國 및 韓國政府의 한반도 非核化論과 北韓의 非核地帶化論은 상당한 間隙을 안고 있는 셈이다.

北韓의 國際核査察 拒否는 이와 같은 南北韓 핵정책의 기본적인 차이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北韓이 국제핵사찰을 수용하도록 현재 美國이 강력한 국제적 압력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強壓的인 行動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터이므로 北韓은 조만간 보다 타협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결국 한반도의 비핵화는 美國 및 韓國政府의 구상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는 달리 동북아의 비핵화전망은 지극히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동북아 비핵화는 美國이 東北亞地域에 배치한 해상배치 전략핵과 이 지역에 대한 蘇聯의 해상 및 지상배치 전략핵의 철수, 그리고 더 나아가 中國 핵무기의 감축과 같은 광범하고 복잡한 과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4) 東北亞에서 美國 軍事체계모니 堅持

美國은 蘇聯·東歐圈의 붕괴와 그로 인한 脫冷戰의 유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1960년대 말 이후 現實化되고 1980년대 중반 이후 레이건政權下에서 加重되어온 군사비부담의 節減 필요성으로 인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美國의 군사적 체계모니 유지에 따르는 費用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첫째, 日本, 韓國 등 東北亞 주요 同盟國들의 軍事費負擔을 增大하기 위한 노력, 둘째, 美國軍事力의 전반적인 減縮과 構造改編을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가) 防衛分擔擴大

美國이 특히 동북아에서 지역 동맹국들의 「방위분담」을 확대하

는 방안은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美軍駐屯費用 分擔擴大

美國은 동북아에서 美國의 전진배치 군사력 유지비용에 대해 日本과 美國이 점점 더 많은 부분을 責任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특히 日本과 韓國이 그러한 부담을 감당할만한 經濟的 能力을 갖고 있다는 인식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美國은 日本의 경우 1995년까지는 주일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의 73% 이상을 日本에게 부담시킬 예정이다.³⁴⁾ 韓國에 대해서도 1995년도에 이르면 4억2천만달러까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韓國政府에 부담시킬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 美國에 依存한 韓·日 兩國의 軍事力 現代化 推進

美國은 상당한 脫冷戰 상황에도 불구하고 韓國과 日本에 대해 특히 空軍力 現代化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현대화 작업을 美國의 주요 軍需産業體들의 製品을 購入하거나 美國 軍수 산업체와의 합작생산 및 합작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것은 美國의 대외군사판매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이같은 대외군사판매 확대는 美國의 군사무기체계의 단위당 생산가를 절약하는 동시에, 美國의 무역수지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美행정부 자신이 스스

34) Statement by Richard H. Solomo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House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March 6, 1991, pp. 11~12.

로 강조하고 있다.³⁵⁾

(나) 駐屯軍事力 減縮과 構造改編

美國이 주둔 군사력을 감축하고 구조를 개편하므로써 美國의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 및 재배분하는 작업 역시 동북아시아의 경우 세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 駐屯軍 規模의 段階的 減縮

美國 政府는 변화하는 戰略的 狀況, 동맹국들의 利益, 그리고 國防豫算상의 制約을 동시에 고려하여 慎重함과 革新性(caution and innovation) 을 가지고 단계적인 군사력 감축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³⁶⁾

체니 美國방장관은 1991년 5월 22일 上院의 한 小委員會에서

35) *DOD Annual Report 1991*, p. 11.

36) 이러한 단계적 감축은 각 단계가 종결되었을 때마다 安保狀況을 재검토해 다음 段階를 고려하는 과정을 거치게끔 되어 있다. 위의 국방부보고서는 아시아지역 미 군사력을 다음과 같은 3단계에 따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第1段階(1~3년): 이 단계에서는 戰鬥兵力 減縮은 最小化(즉 支援人力 中心減縮) 하며, 아시아의 경우, 135,000의 전진배치인력 중 14,000~15,000명을 減縮한다.

第2段階(3~5년): 전투병력도 더욱 감축하되, “潛在的인 敵들이 美國의 역지능력과 意志를 誤解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第3段階(5~10년): 병력을 더욱 감축하되, 그후 상황이 許容하는대로 축소된 일정한 규모에서 전진배치군사력을 安定시키는 단계이다.

이러한 大綱을 명시하고 난 다음 이 報告書는 “北韓과 蘇聯이라는 美國 안보에 최대의 위협이 존재하는 東北亞地域”에 亞·太地域 美전진배치군사력의 대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이지역에서의 美군사력 감축은 “美國의 防衛能力과 意志, 그리고 日本, 韓國 등 同盟國들과 美國의 安保關係를 고려하여 신중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DOD,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pp. 13~14.

證言을 통해 亞·太地域 美軍事力의 10%를 縮小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에는 그 이상의 감축을 고려하고 있음을 示唆했다. 이것은 蘇聯의 위협이 감소함에 따라 1990년대 까지 美國 軍事力 총규모의 25%를 減縮하겠다는 부시와 체니의 公約實踐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다.

2) 機動軍中心 軍事力 改編

美國은 동맹관계 유지와 前進配置라는 근간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군사적 헤게모니 유지비용의 절감차원에서 전진배치된 군사력의 성격을 일부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蘇聯의 군사적 위협은 적어도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걸프戰과 같이 제3세계에서의 地域的 非常事態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美國은 걸프戰에서 군사기술과 기동성이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蘇聯을 포위하는 지상군 중심의 전진 배치전략 일변도를 지양하고 美國에 기지를 두고 유사시 분쟁지역에 急派될 수 있는 대규모 機動軍 중심의 戰略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³⁷⁾

어떤 의미에서 현재 美國에서는 前進配置 위주전략(forward deployment-oriented strategy)과 迅速配置軍 위주전략 (rapid deployment-oriented strategy)간의 논쟁이 일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냉전과 대소봉쇄시절에 확립된 전진배치위주의 전략은 탈냉전과 美國의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국방비삭감 압력으로

37)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20, 1991.

동맹국들의 방위분담 증액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高費用戰略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美國戰略은 美國本土에 근거를 두고 유사시 비상사태발생지역에 급파되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신속배치군 위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視覺이 특히 美議會안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美國의 군사전략은 전진배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신속배치군전략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美國의 전략이 그런 방향으로 완전히 轉換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平和時 집단보장 및 쌍무적 동맹관계 유지와 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前進配置戰略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유럽 및 동북아)에 계속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美國 군사전략은 전진배치전략과 美본토에 근거한 迅速配置軍戰略과의 均衡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3. 美國의 經濟目標와 經濟政策

前後 수십년간 美國이 東北亞를 포함한 세계적 차원에서 행사한 헤게모니적 리더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확립된 美國의 경제적 영향력과 그에 뒷받침된 軍事的 優越性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世界政治에서는 脫冷戰으로 군사능력의 效用은 감퇴한 반면 경제분야의 國家間 葛藤과 協力の 문제가 더욱 커다란 중요성을 점하게 되었다. 美國이 향후 국제질서에 대한 리더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도 美國이 자신의 국내경

제를 여하히 재건하고 국제경제무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美國에 유리한 무역체제를 정립할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될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정치 및 경제환경 속에서 美國은 어떠한 경제목표와 국제경제전략을 構想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가. 經濟目標

(1) 美國主導의 自由市場經濟圈 構築

제2차 세계대전에서 日本이 패퇴한 후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바탕으로 美·蘇간의 대결이 본격화되면서 동북아가 兩分됨에 따라 동북아의 경제권도 2분되었다. 이후 美國의 동북아정책은 이 지역에 강력한 시장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동북아에 대한 美國의 經濟的 進出과 군사적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1947년 말 이후 美國은 日本의 경제적 재건을 핵심으로 하여, 韓國, 臺灣,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東아시아 자본주의경제권 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반면에 蘇聯, 中國, 北韓 등 인접 공산주의국가들에 대하여는 강력한 경제봉쇄조치를 취하였다.³⁸⁾

전후 초기의 이와 같은 美國의 동북아 경제정책은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진출을 위한 長短期的인 이해관계 못지 않게 냉전적 대결이라는 급박한 軍事戰略的 차원에 의하여 지배된 것이다. 또한 美國이 경제력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들 동

38) Bruce Cumings,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p. 59~65.

북아국가들에 대한 自由主義的 경제원조와 비교적 개방적인 무역 정책의 형태를 띠었다. 당시 美國의 많은 정책입안가들은 유럽에 대한 마샬플랜이나 日本의 재건지원, 그리고 韓國과 같은 나라에 대한 경제원조는 蘇聯에 대한 封鎖에 필수적인 수단의 하나이며, 美國의 국제정치적 리더쉽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費用의 일환이라고 간주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³⁹⁾

그러나 中·蘇간 分裂, 그리고 美國, 蘇聯, 中國간의 데탕트가 발전하여 냉전적 대결이 완화되고, 日本과 韓國의 경제발전이 가시화된 1970년대부터 美國은 동북아에서 자신의 경제적 패권의 상대적 약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특히 무역마찰의 형태로 나타났다.⁴⁰⁾

이러한 무역마찰은 美國의 二重的인 經濟收支赤字가 표면화되고, 日本이 세계 최대의 債權國으로 되었으며 韓國의 對美貿易도 黑字基調로 돌아선 1980년대 중반 이후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되었다. 蘇聯의 개혁과 개방이 본격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동북아에 대한 美國의 경제정책에서 전략적 차원의 고려가 감소했다. 그 결과 무역을 둘러싼 직접적인 마찰과 경쟁이 표면화된 가운데 經濟戰의

39) Douglas Nelson, "Domestic Political Preconditions of U.S. Trade Policy: Liberal Structure and Protectionist Dynamics," *Journal of Public Policy* (January/March 1989), pp. 96~97. 美國의 이러한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자비로운 후견자(benevolent patron)의 역할로 해석되었다. 반면에 비판가들은 韓國 등 아시아지역 후진국들의 경제와 정치를 美國에 예속시킨 메카니즘이었다고 보았다. 그 결과 韓國經濟는 美國과 日本의 경제에 수직적으로 편입되어 후진국 자본주의의 경제, 사회, 정치적 모순들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파악한다.

40) Chae-Jin Lee and Hideo Sato, *U.S. Policy Toward Japan and Korea*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2), p. 153.

성격까지도 띠게 되었다. 이처럼 동북아 자본주의권 국가들인 日本, 韓國과 美國은 세계적인 차원과 동북아의 차원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경제외교를 전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美國의 동북아 경제목표는 특히 美·日經濟關係에 있어서 무역수지 개선을 통한 美國의 經濟主導權 回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美國이 동북아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강력한 시장경제권을 발전, 유지시키기 위한 전후 초기의 과제는 자본주의권의 건설과 공산권의 봉쇄였는데 비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서의 과제는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에서 日本의 對美國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응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989년에 美國人の 72%는 日本을 여전히 중요한 友邦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美國人の 73%는 “美國의 安保에 대한 최대의 도전은 日本으로부터의 경제적 도전”이라고 인식했다. 이에 따라 美國人들은 “美國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國家資源을 군사적 목적으로부터 국내적 투자로 이전하는 것”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⁴¹⁾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美國이 日本과의 경제적 경쟁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첫째, 현재의 추세대로 日本이 중요한 尖端産業분야에서 美國을 앞설 경우 美國의 안보 자체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발

41) World Policy Institute, *Defining American Priorities: Results of Survey Conducted for World Policy Institute* (New York: 1989), pp. 3~4; Samuel P. Huntington,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s,” *Survival* (January/February 1991), p. 9.

전하고 있다. 그는 이런 의미에서 “經濟는 다른 수단에 의한 戰爭의 繼續”이라는 다니엘 벨의 지적을 상기시킨다. 美國의 防衛科學委員會(Defense Science Board)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22개의 死活的인 기술분야(critical technology) 중에서 蘇聯은 2개분야에서 美國을 앞서 있는 반면에, 日本은 6개분야에서 美國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美商務部는 12개의 새로운 첨단기술 분야중 5개분야에서 日本은 美國을 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5개분야에서도 美國을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고 파악했다.⁴²⁾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美國은 중요한 軍需産業 부문에서도 日本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며, 그만큼 美國의 안보가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日本經濟力의 성장은 美國의 경제적 번영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증대하고 있다. 日本經濟力의 相對的 成長持續은 美國의 상품시장이 잠식되는 것을 의미하고, 美國의 기업과 근로계층으로부터 이윤과 직장을 앗아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⁴³⁾

셋째, 日本의 경제력 성장은 다른 영역에서 日本의 영향력 강화와 美國 영향력의 상대적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42) U.S. Department of Defense, *Critical Technologies* (Washington, D.C.: March 1989, Revised May 1989), p. 11; Huntington,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s,” p. 10.

43) 日本의 경제력 성장에 대한 美國政府의 우려는 최근 美중앙정보국(CIA)의 日本經濟에 관한 한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는 “日本은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산업체제를 구축했고, 이 체제는 세계 도처에서 기술과 시장을 엄청난 속도로 장악해 가고 있다. 日本은 세계적인 경제 초강국이 되었다. 장차 美國은 日本의 경제, 자본력에 압도될 것이고, 日本의 성장속도가 둔화되지 않는 한 (미국인의) 자손의 생활수준에 불행이 초래될지도 모른다.” 『每日經濟新聞』, 1991. 6. 9.

日本은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美國안에서 日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東北亞를 비롯한 세계 다른 지역에서 日本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며, 많은 경우에 美國의 이익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그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美國은 또한 日本 경제력의 상대적 강화가 계속되는 경우, 美國이 그간 日本에 대하여 행사해 온 국제정치적 지도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더 나아가 日本과의 同盟關係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美중앙정보국(CIA)이 작성한 최근의 한 보고서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美國이 장차 세계지배를 유지할만한 경제력이 없게 되면 日本은 아마 蘇聯이나 統一獨逸쪽으로 협력과 보호의 방향을 돌릴 수도 있다. 즉 日本이 美·日의 同盟을 이전시킬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력 저하로 美國이 日本 공산품을 구매할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日本은 또다른 지역을 찾아나서 자국의 강력한 수요를 충족시키려 할 것이다.”⁴⁴⁾

이와 같은 日本 경제력의 상대적 강화는 美·日關係에 심각한 균열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美國政府는 美·日간의 변화된 經濟的 位相을 既定事實로 받아들이고 그런 전제 위에서 平和的인 競爭과 互惠的인 協力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美國은 日本 및 유럽과의 경제관계에서 자신의 상대적 쇠퇴를 저지하고 나아가 경제적 활력과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회복 혹은 유지하는 것을 자신의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44) 「앞의 신문」.

있다. 美國은 대내적으로는 자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적 투자를 활성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우선 세계무역의 다자간 협의기구 개선을 통해 美國에 유리한 국제 및 동북아시아 무역질서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 社會主義圈에 대한 美國의 經濟目標: 牽制와 統合

蘇聯, 中國 등 사회주의권에 대한 美國의 경제적 목표는 다음의 네가지 요소를 동시에 내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蘇聯, 中國, 北韓의 군사, 경제적인 잠재력을 억제하는 것이 戰後 美國의 경제 목표의 축을 이루어 왔다. 美國은 이들 나라의 敵對的인 潛在力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무역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를 가해 왔다. 둘째, 美國은 다른 한편으로 蘇聯, 中國 등 주요 사회주의국가들을 美國이 주도하는 自由貿易經濟圈에 통합시키므로써 이들 사회주의권 內部的 體制變化를 촉진시키고 이들의 대외정책을 美國에 유리하게 純化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두가지 목표 중에서 蘇聯 및 中國 두 나라와 美國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改善되기 전에는 蘇聯, 中國의 잠재력을 억제하기 위해 이들을 고립시키는 것이 더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이들 나라와 美國이 데탕트시기에 들어선 이후에는 그러한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므로써 美國의 대사회주의권 경제정책은 二重性을 띠기에 이르렀다. 蘇聯에서 내부개혁과 대외개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최근에 이르러서는 蘇聯의 對內外政策의 변화를 促進시켜 蘇聯을 자유시장경제권에 통합시킨다는 목표가 보다 우

선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美國의 대사회주의권 경제목표의 세번째 요소는 勢力均衡의 문제이다. 中·蘇紛爭 이후 中國과 美國간에 어느 정도 접근이 이루어진 후 美國은 對蘇 세력균형전략의 일환으로 中國과의 경제관계 개선을 모색한 바 있다.

넷째로 美國의 대공산권 경제목표는 經濟的 實利를 노리는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美國이 蘇聯에 대하여 1970년대 이후 대규모 식량수출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정치·전략적인 고려 이외에도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냉전시대에 있어서 社會主義圈의 고립이라는 목표를, 그리고 데탕트시대에는 사회주의권의 경제·군사 잠재력을 제한한다는 목표와 사회주의권 국가의 자유시장 경제권과의 연계라는 이중적인 목표를, 그리고 中·蘇紛爭 이후 中國에 대해서는 세력균형을 목표로한 對中國 경제협력을 추구한 것은 美國의 대사회주의권 경제목표에서 政治·戰略的 要素가 작용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美·蘇간 脫冷戰이 본격화된 이후에 이르러서도 美國의 對蘇 및 對中國 경제목표의 基調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經濟政策

(1) 多者間 貿易關係 改善

美國은 우선 국제무역을 다루고 있는 제1차적인 다자간기구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다자간 통상협상, 즉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美國의 무역수지 개선을 기도하고 있다.⁴⁵⁾

가트의 문제점은 그것이 오래된 협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무역상품들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행을 규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가트는 美國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서비스분야와 농산물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보호주의 장벽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1989년의 세계 상품무역 총액은 3조1천억달러였는데 이 중에서 가트가 적용될 수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부문이 1조3천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⁴⁶⁾

美國의 총교역량의 약 50%는 서비스분야가 차지하고 있는데, 가트는 서비스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의 보호주의를 제한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서비스분야에 강점이 있는 美國이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 수출보조금에 관해서도 가트규정은 애매하고 혼란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각 나라들이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지급등과 같은 농산물과 관련한 사실상의 보호주의가 강화되

45)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1948년 1월에 발효한 것으로, 관세를 삭감하고, 최혜국지위 및 내국민대우와 같은 원칙들을 규정했다. 최혜국대우란 가트가맹국이 제3국에게 적용하고 있는 가장 낮은 관세율들을 다른 나라에 제공함을 의미한다. 내국민대우란 한 나라가 외국상품들에 대해서도 자국내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과 대우를 적용함을 말한다. 현재 가트가맹국은 97개국이며, 그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이 협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

46) John Schaffer, "Can the World Afford a Failed Uruguay Round?" *Current Views*, vol. 10, no. 3 (1990), p. 5.

47) *Ibid.*, p. 9.

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⁴⁷⁾ 또한 美國이 여전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지적소유권과 관련해서도 가트는 충분한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美國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⁴⁸⁾ 美國은 물론 우루과이라운드를 주도하는 동시에 기존의 국제적인 다자간 경제협력체들인 가트, 우루과이라운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서방선진7개국(G7) 회담 등에서의 자신의 지도적 역할을 견지함으로써 日本 등 경제강국들과 아세안 등 신흥공업국가군에 대한 견제 및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 雙務關係 改善

美國은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다자간 협상이 관련 당사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및 입장차이 때문에 효과적으로 진척되지 못하는 경우, 개별국가들을 상대로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특히 美國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日本, 韓國 등 아시아지역국가들에 대해 美國은 자국시장을 무기로 강력한 개방압력을 가하고 있다.

美國의 시장개방 압력은 美·日關係에 가장 중요한 긴장요인이 되고 있다. 美國의 대일교역에서 나타나는 막대한 무역수지 불균

48) 美國 국제무역위원회에 따르면 해외에서 美國의 지적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므로써 美國이 연간 당하고 있는 손실액은 450~650억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ibid.*, pp. 13~14.

형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美國과 日本의 시각이 크게 대립되므로써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日本은 美國의 생산성저하, 재정적자 등을 지적하는데 반하여 美國은 여전히 日本의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의 보호주의적 성격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美國은 美·일간 무역수지 불균형의 주요 원인을 日本經濟政策의 구조적 문제점에 있다고 보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구조조정협상」(Structural Impediment Initiative: SII)을 전면내 내세우고 있다. 美國은 환태평양에서 자국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구조조정협상을 통해 대일무역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문제해결에 실패할 때 美國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日本의 자본과 상품에 압도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⁴⁹⁾

(3) 美國 主導의 東亞·太經濟圈 構想

동북아경제권은 蘇聯 사회주의 붕괴 이후 동북아 자유시장경제권의 활성화와 中國의 대외개방확대로 대폭 팽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東亞·太經濟圈에 대한 美國의 관심이 증대해 왔다. 美國은 蘇聯·中國의 資本主義市場圈 통합진척으로 그 규모가 팽창하고 있는 데다 자신의 경제적 번영에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49) 美國무성 마릴린 마이어즈 부차관보의 1990년 9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설, 미국 공보원, 「시사평론」, (1990. 10), p. 4. 美·일간 무역수지불균형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시각에 대해서는 Henrik Schmiegelow and Michele Schmiegelow, "How Japan Affects the International Syste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4, no. 4 (Autumn 1990).

있는 亞·太地域을 자신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에 바탕한 개방된 경제권으로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美國은 經濟統合을 가속화하고 있는 유럽공동체와 亞·太地域에 대한 日本의 경제적 영향력 팽창을 견제하고 양 지역을 자신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질서로 유지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美國은 亞·太경제협력각료회의(APEC)를 自由主義的인 다자간 경제협의체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美國과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日本, 韓國, 캐나다 등 亞·太地域 국가들은 美國의 강력한 리더쉽에 대체로 동조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美·日간 무역마찰에도 불구하고 東北亞地域에는 美國과 日本이 경쟁하면서 상호협조하는 가운데 주도하는 경제권 및 다자간 경제협의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美國이 亞·太경제협력각료회의를 亞·太地域의 다자간 경제협의체로 확대발전시킬 구상을 추진해온 것은 다음과 같은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첫째, 아시아에 대한 日本의 배타적이고 일방적인 경제적 지배를 견제한다.

둘째, 유럽의 경제통합에 대응하여 美國이 주도하는 亞·太經濟圈을 형성함으로써 향후 유럽경제공동체의 배타적 블록화를 저지 혹은 견제한다.

50) 아세안(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67년 베트남 공산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형성되었다. 이들 구성국가들은 3억의 인구를 포괄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발전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에 속한다.

셋째, 아시아에서, 日本 및 아세안 등이 美國에 배타적인 소경제 불력을 형성하려는 움직임⁵⁰⁾ 견제하면서 이들을 汎亞·太的 經濟 圈에 흡수한다.⁵¹⁾

넷째, 보다 구체적으로 美國은 아시아지역국가들에 대한 美國의 상품, 용역, 자본의 진출이 보다 용이하도록 무역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亞·太경제협력각료회의에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이어즈 美國무성 부차관보는 “우리는 亞·太경제협력각료 회의가 어떤 새로운 관료체제나 무역 소불력을 창출하는 노력이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제시할 무역자유화를 위한 강력한 지역적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했다. 그녀는 이어 “亞·太경제협력각료회의는 농산물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과 지적 소유권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들에 관한 의견일치를 도울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냉전이 쇠퇴하고 캄보디아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기존의 안보중심에서 경제협력문제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들은 최근 日本이나 美國이 주도하는 경제불력(someoneelse's house)이 아닌 자신들끼리의 경제협력체(intra-ASEAN economic cooperation)로 아세안을 개편·발전시킬 것을 구상하고 있다. 泰國은 2000년까지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구상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공동특혜관세권(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Plan) 구상을, 그리고 필리핀은 경제협력협정(Treaty of Economic Cooperation) 구상을 제시했다. 아세안 자신들과의 주요 무역상대국을 대화파트너(dialogue partners)로 두고 있는데, 그 7개 나라는 美國, 캐나다, 유럽공동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日本 그리고 韓國이다. *Korea Herald*, July 27, 1991.

- 51) 1991년 7월 24일 美國무장관 베이커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연례외상회담(annual meeting of foreign ministers)에서 연설하면서, 美國이 참여한 “시험을 거쳐 입증된 제도”(tried and tested frameworks)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 및 안보동맹체를 건설하려는 제안들에 대해 신중히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것은 물론 아세안국가들이 美國을 배제한 동아시아 무역불력형성 움직임에 대해 美國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The New York Times*, July 25, 1991.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⁵²⁾ 즉 美國은 아시아경제권을 자국 주도의 자유주의적인 개방적 시장권으로 유지시킬수 있는 다자간 메카니즘으로 亞·太경제협력각료회의를 활용하는데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4) 對社會主義圈 經濟關係와 政治 戰略的 考慮

전후 美·蘇간의 냉전은 경제관계에서의 단절을 포함한 것이었다. 그러나 美·蘇간에 정치군사적 대화가 진행되면서 데탕트의 기운이 싹트던 1960년대 후반부터 美·蘇간에 경제관계의 정상화도 모색되기 시작했다. 蘇聯 지도부는 서방과의 교역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蘇聯이 서방과의 교역을 원하였던 것은 蘇聯經濟가 특히 세가지, 즉 자본재, 기술, 그리고 곡물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가지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서방국가는 美國이었다.⁵³⁾ 한편 美國은 蘇聯을 국제경제협력에 통합시키므로써 蘇聯의 대내외적인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⁵⁴⁾

그러나 美·蘇經濟關係는 1970년대의 부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1979년 美·蘇간에 신냉전이 발전하면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蘇聯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카터정권은 蘇聯에

52) 마이어즈, “위의 연설,” p. 6.

53) Hertha W. Heiss, Allen J. Lens, and Jack Brougher, “U.S.-Soviet Commercial Relations Since 1972,” in Morris Bornstein ed., *The Soviet Economy: Continuity and Change* (Boulder: Westview Press, 1981), p. 250.

54) Raymond L. Garthoff, *Detente and Confrontation: American-Soviet Relations from Nixon to Reagan*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5), p. 87.

대한 곡물수출을 금지시켰으며, 레이건정권은 더욱 광범한 對蘇聯 무역제재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美國의 선별적인 대소 경제정책은 두가지 기본적인 의도를 깔고 있었다. 첫째,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美國은 무역을 蘇聯의 대내외정책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美國의 무역은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蘇聯의 양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蘇聯과의 군사적·경제적 경쟁에서 美國의 우위를 위협할 수 있는 형태의 무역은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군사적 효용을 가진 상품이나 첨단기술의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였으며, 군수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蘇聯經濟에 진요하다고 판단된 다른 종류의 상품들도 역시 통제하였다.⁵⁵⁾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美·蘇간 냉전이 크게 완화되면서 양국간에 경제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蘇聯이 개혁과 개방으로 정책을 크게 전환함에 따라 美·蘇간에 여러가지 군축협상이 진행되었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蘇聯의 정책전환은 蘇聯 내부의 경제적 파탄이 중요한 요인이었던 만큼 고르바초프는 서방과의 정치·군사적 관계개선을 통하여 서방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대서방관계 개선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蘇聯이 막대한 해외원조와 경제협력을 절박하게 필요로

55) Ibid., p. 1116. 美國은 1969년 제정된 수출통제법(The Export Control Act)에 따라 美國의 국가안보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나라의 군사적 잠재력 향상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나 기술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Heiss, et al., "U. S.-Soviet Commercial Relations Since 1972," p. 246.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美國을 비롯한 서방은 상당히 오랫동안 분명한 선택을 유보해 왔었다. 그 이유는 첫째, 蘇聯이 정치, 경제적 안정을 언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뚜렷한 전망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서방의 금융기관들은 蘇聯政府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기업들 역시 蘇聯에 대한 투자를 망설여 왔던 것이다.⁵⁶⁾

둘째 문제는 정치적인 요인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美國은 蘇聯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蘇聯의 대내외정책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수단으로 간주해 왔다. 美國은 蘇聯이 정치 및 경제체제 모든 면에서 서구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美國은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시작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蘇聯에 대한 경제원조가 시장경제화를 비롯한 蘇聯의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蘇聯이 완전히 체제개혁에 도달하기 전에 蘇聯經濟를 회생시키므로써 蘇聯이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게끔 도와주는 결과가 되지는

56) 蘇聯의 경제재건과 시베리아개발 등에 日本의 자본은 특히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에 필요한 日·蘇關係 改善에는 주요한 장애물들이 남아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북방 4개도서를 둘러싼 영토분쟁이다. 1991년 봄 고르바초프는 이 문제에 관해 日本과의 의견접근을 위해 日本을 방문했으나 이 日·蘇 頂上會談은 북방 4개도서문제해결의 어려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蘇聯은 북방 4개도서가 蘇聯의 동북아 군사전략에서 갖는 중요성 때문에 파격적인 양보가 어려운 반면에, 日本政府에게도 북방영토회복 목표는 철회할 수 없는 정치적 목표로 남아 있다. 둘째 문제는 日本이 시베리아개발에 적극 참여할 경우 득보다는 위험성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있다. 日本은 현재 새로운 에너지공급선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은 반면에 시베리아개발은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많은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내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Ross Babbage, "Soviet Strategic Dilemmas in the North Pacific in the 1990s," in Ross Babbage, ed., *The Soviets in the Pacific in the 1990s* (Oxford: Pergamon Press, 1989), pp. 82~84. 이러한 우려는 美國을 위시한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않을 것인가를 두고 고민해 왔다. 특히 보수파와 개혁파의 균형위에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고르바초프정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蘇聯의 개혁을 촉진시키는 최선책인가에 대하여 美國 내부에 논란이 존재해 왔다.

지난 1991년 8월 蘇聯의 軍部쿠데타 실패와 그 이후 급진전되고 있는 蘇聯의 내부개혁과 대외개방확대 전망에 따라 美國은 蘇聯에 대한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蘇聯의 개혁과 안정을 촉진시키고 蘇聯의 자유시장경제권에의 통합을 완성시킨다는 목적이 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蘇聯의 급격한 변모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혼란과 불투명성 때문에 美國의 대소경제협력은 양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정치전략적인 계산과 고려에 의하여 지배될 것으로 보인다.

美國은 천안문사태 이후의 中國에 대해서도 정치 및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확대를 美國의 對中國 경제관계 증진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왔다. 美國은 같은 맥락에서 日本의 대북한 경제원조문제와 관련해서도 北韓의 핵사찰수용 및 테러리즘 포기를 그 전제조건으로 고집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 이런 점에서도 美國은 대사회주의권 경제관계를 해당 국가의 대내외정책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⁵⁷⁾

57) 앞서 지적한 蘇聯의 시베리아개발에 대하여도 美國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베리아의 본격개발이 성공할 경우, 蘇聯의 체제개혁 이전에 그것이 가져올 소련경제 재건의 정치군사적 여파를 美國은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시베리아개발은 특히 극동에 대한 蘇聯의 경제적, 정치군사적 진출을 크게 확대시킴으로써 아시아에서 蘇聯의 힘의 전반적 팽창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美國은 日本의 시베리아개발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日本이 시베리아개발 참여를 계기로 日·蘇간의 경제관계가 증대하고 긴밀해 질 경우 동북아에서 美·일간 경제적, 정치군사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악화되므로써 동북아에 대한 美國의 영향력에 증대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다.

4. 蘇聯의 東北亞政策에 대한 美國의 對應

가. 東北亞 勢力均衡에 미치는 影響과 美國의 對應

(1) 蘇聯의 變化와 東北亞 勢力均衡 改編

현재 東北亞에서는 새로운 勢力均衡이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蘇聯의 變化에 의하여 촉발되었으나 다른 몇가지 요인들과 결합되어 본격화되고 있다. 동북아 4강간의 세력균형재편은 첫째, 蘇聯체제의 붕괴, 둘째, 脫冷戰과 美경제력의 상대적 약화로 인한 美군사력의 철수추세, 셋째, 日本의 정치·군사적 역할의 상대적 강화, 넷째, 中國의 독자적 역할확대(北韓에 대한 中國의 영향력 증대포함) 현상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력균형재편은 不確實性 및 不安定을 수반하여 긴장상태를 증대시킬 수도 있으나, 현재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력균형재편은 과거 냉전적 대결의 기반이었던 美·蘇간 軍事的 對決의 解消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전반의 탈냉전기류 확산, 군사력의 효용성 감소효과를 수반하고 있다. 美國의 군사력 축소로 조성될 수 있는 힘의 空白을 日本의 군사대국화가 메꿀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美國은 군사력축소를 실현하되 역내에서 유일한 軍事超強國의 위치를 상실할 것으로는 전망되지 않는다. 日本의 軍事大國化는 촉진요인과 함께 억제요인들이 공존하고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美國의 군사적 주도권을 위협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日本의 군사대국화가

구체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中國의 독자역할확대도 군사력 팽창 보다는 정치적 발언권 확대와 역내 경제활동 확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東北亞에서 진행되고 있는 勢力均衡再編은 한반도 통일환경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수반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美國의 對蘇政策

(가) 選別的 軍縮

美·蘇關係는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의 평화이니셔티브 이후 1991년 들어 본격화된 戰略·戰術核 및 재래식 군축, 1991년 1월 걸프전 및 그 이후 중동문제 등 지역분쟁 해결과 관련한 상호협력, 1991년 7월 美·蘇 정상회담에서의 양국간 經濟關係 정상화와 美國의 對蘇經協 약속 등으로 급속히 개선되어 왔다.

美國은 동북아에서 기존 동맹체제와 전진배치전략, 그리고 일정 수준의 전략핵 및 공군용 전술핵에 바탕한 核抑止戰略을 유지함으로써 蘇聯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견지하고 소위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되, 蘇聯의 현재상황을 활용하여 동북아에서 보다 안정된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별적인 군축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蘇聯邦의 解體로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른 러시아연방은 국내경제문제 해결에 필요한 서방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무기와 재래식무기 감축에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美國은 제네바에서 蘇聯과의 군축회담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1991년 7월 30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사이에 타결된 전략무기감축협상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美國은 특히 자신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蘇聯의 지상발사탄도미사일(ICBM)의 감축을 유도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蘇聯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정 長期化는 한편으로는 美國의 對蘇警戒를 증대시키는 측면도 있으나 양국간 핵군축의 가속화를 통해 소련핵무기의 美國안보에 대한 威脅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측면도 있다. 단 美國은 자신이 強點을 갖고 있는 해상배치 전략핵무기(SLBM)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군축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戰略核에 관한 한 美·蘇間의 대폭적 軍縮을 가까운 장래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美國은 전략핵문제에 관련해서는 우선 蘇聯 전략핵무기체계에 대한 統制強化를 위한 兩國間 協의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베이커 美國무장관이 1991년 12월 14일 蘇聯을 방문해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며, 이는 蘇聯 핵무기의 통제문제가 현재 美國의 최대관심사임을 말해준다. 특히 蘇聯邦의 解體로 인한 蘇聯 국내정세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蘇聯 핵무기체계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문제는 1992년도에도 美·蘇간 주요 외교현안으로 남을 것이다.

美國은 또한 자신이 동북아정세에서 최대의 불안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北韓 核開發問題와 관련하여 蘇聯의 對北韓 압력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1992년에도 지속시킬 것이다.

(나) 慎重한 對蘇經濟協力

美·蘇양국은 1991년 7월 30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활성화를 합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美國은 첫째, 蘇聯에 最惠國待遇(MFN)부여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둘째, 美國은 蘇聯에 대한 무역신용보증의 상한을 철폐했다. 셋째,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蘇聯參與를 美國이 지원하기로 했다. 넷째, 美·蘇間 租稅 및 投資條約을 체결했다. 이와 같이 美·蘇양국은 경제교류 및 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蘇聯의 정치·경제의 불안정은 美國의 실질적인 對蘇經協에 가장 근본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美國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蘇聯의 경제재건을 도와 장기적으로 국제정세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蘇聯에 대한 서방국가들간 多者間 經協을 조직하려 하고 있다. 1992년에도 美·蘇간 경제관계는 주로 이와 같은 西方內 대소 경협을 위한 다자간 협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⁵⁸⁾

그러나 美國은 蘇聯의 체제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서방의 대소 경협을 적극 고려하되, 그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國의 대소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美國 내부의 經濟事情이다. 美國은 현재 스스로 經濟的 浸滯期

58) 브래디(Nicholas Brady) 美재무장관은 1991년 10월 중순 “美國은 蘇聯을 도울 생각이지만, 많은 돈(large amounts of money)을 이 나라에 퍼부를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蘇聯에 돈을 주는 것은 아라비아사막에 물을 붓는 것과 같으며 이것은 소련인들 자신이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orea Herald*, October 16, 1991.

에 들어서 있다는 증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美國이 蘇聯의 경제난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있더라도 美國이 실제 蘇聯에 제공할 수 있는 經濟援助能力에는 당연히 구조적인 한계가 있게 될 것이다.

나. 主要 兩者關係에 미치는 影響과 美國의 對應

(1) 美·日關係에 미치는 影響과 美國의 對應

(가) 日·蘇 安保協力 警戒

蘇聯의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과 적극적인 군축제안을 日本이 호의적으로 검토할 경우, 美·日安保同盟을 기초로 한 기존 美國주도의 동북아 안보체제는 중요한 변화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다. 日本이 북방 4개도서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 실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한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安保協議體 구상은 日本이 美國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蘇聯과의 안보협의를 독자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을 보인 것이었다.

美國은 궁극적으로 蘇聯이 포함되는 역내 국가들간의 다자간 안보협의체건설을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도 美國이 주도하는 기존의 쌍무적 동맹관계들의 중요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위해 美國은 동북아에 대한 미군사력의 前進配置戰略을 유지할 것이며, 전략방위계획(SDI) 등 美·日 양국에 호혜적인 군사기술상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美·日

간 군사기술협조체제 강화는 日本 군사기술의 소련이전 방지, 日本 尖端 軍事技術의 美國移轉 등을 위해서도 美國이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對蘇經協에 대한 慎重接近

蘇聯의 동북아 진출정책은 특히 日本과 蘇聯간의 경제 및 군사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이에 따라 美·日關係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蘇聯은 자국의 경제재건과 무역 확대를 위하여 日本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베리아개발에 있어서 日本의 자본은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만일 日本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경우 美國은 두가지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日本과 蘇聯간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동북아 경제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日本의 對蘇 經協이 본격화될 경우 蘇聯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확실한 진로를 택하기 전에 蘇聯의 경제재건을 도움으로써 동북아에서 蘇聯의 경제 및 군사적 잠재력이 美國이 원하는 수준과 속도 이상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蘇聯의 경제진출에 대한 美國의 대응은 蘇聯의 개혁과 개방을 도움으로써 蘇聯의 市場經濟化를 유도하고 蘇聯經濟의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의 통합을 촉진한다는 것과 蘇聯의 군사적 경제적·잠재력의 급속한 성장을 抑止한다는 두가지 상충되는 목적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취하는 것이다. 지난 1991년 7월 美·蘇 정상회담과 그

에 뒤이은 군부쿠데타 실패 이후 美國의 대응은 蘇聯의 개혁축진을 위한 적극적 경제협력쪽으로 기울었으나, 특히 日本과 蘇聯의 경제관계 확대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제를 가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日本의 대소 경제관계가 美國의 통제를 벗어남으로써 동북아 경제질서의 축이 日·蘇關係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美國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美國은 蘇聯의 시베리아개발에 대한 日本의 본격적인 협력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日·蘇간 경제협력의 본격화를 가로막아온 주요 장애요인은 1945년 이후 蘇聯이 점령하고 있는 北方 4개도서의 日本 반환문제이다. 蘇聯은 북방 4개도서 전체나 일부를 日本에 반환할 경우 이 지역을 日本이 非武裝地帶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美國은 북방 4개도서의 日本 반환후 비무장화를 반대할 것을 日本에 촉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동북아에서 美國이 기존의 유리한 군사적 위상을 보호함과 동시에 북방 4개도서문제의 해결과 연계되어 있는 日·蘇 경제관계 본격화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보여진다.

(다) 美·日關係 再調整 통한 美·日協力 強化

蘇聯이 동북아에서도 군축을 위한 적극적 이니셔티브를 계속해서 제안할 경우 이것은 日本의 軍事大國化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日本의 군사대국화에 대해서 美國은 기본적으로 이 중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는 日本이 경제력

에 상응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려는 것은 日本이 핵강국을 추구하지 않는 한 불가피하며 蘇聯, 中國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군사적 잠재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아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중동전 이후 美國은 지역적 비상사태 발생문제에 더욱 주목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인적, 물질 부담을 日本 등 다른 선진국들과 분담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美國은 日本軍의 재래식 군사력의 일정한 증대와 군사적 역할의 廣域化를 촉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美國은 日本의 군사대국화가 美國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보조적 차원을 벗어나 그 이상 확대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美國은 日本의 군사대국화의 지속은 이 지역에서 美國의 군사적 헤게모니를 위협할 수 있으며, 장차 日本이 독자적인 핵강국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日本의 軍事大國化는 또한 日本의 첨단 군수산업의 팽창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 분야에서 그간 美國이 누려온 독과점적 위치를 위협하는 사태를 美國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蘇聯의 對東北亞 평화공세는 대체로 日本의 군사대국화의 가속화를 어느 정도 억지할 것으로 보인다. 蘇聯이 평화공세를 지속할 경우 日本의 군사대국화의 정당성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日本의 급격한 군사력팽창 가능성은 감소될 것이다. 그런 반면에 美·日軍事同盟體制 유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 강화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日本의 東北亞地域 安保協議體

제안은 이러한 후자의 우려를 입증해 준다.

그러나 美國은 美·日軍事同盟의 골간이 유지되는 한에서 역내 국가들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점은 다자관계의 변화전망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2) 韓·美關係에 미치는 影響과 美國의 對應

蘇聯의 동북아에 대한 적극진출정책은 韓國의 북방외교노선과 결합되어 韓·蘇關係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韓·蘇간 외교관계가 정상화되었으며, 양국간 경제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韓·蘇관계의 발전과 관련해서도 美國은 日·蘇關係의 변화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두가지의 목적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

(가) 韓·美同盟 堅持 前提한 韓·蘇經濟關係發展

美國의 일차적인 목표는 韓·蘇關係의 발전이 韓·美간의 雙務的 軍事同盟體制의 弛緩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美國은 韓·蘇간 경제협력의 규모와 방식을 어느 정도 통제하려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여진다.

美國은 물론 韓·蘇關係의 발전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이롭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은 美國의 국익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美國의 안보목표는 안정확보는 물론 향후 동북아의 군사·정치·경제적 진로에 대한 체계모니적 指導

力을 행사하는데 있으며, 美國이 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북아에 구축한 기존의 안보체제 유지는 이를 위한 불가결의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美國은 蘇聯의 내부변화에 대한 인식, 蘇聯의 동북아정책의 배경과 의도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대응을 韓國政府에 촉구해 왔으며, 이것은 최근 美國이 韓·美·日 3국간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주변정세 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을 유도하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美國은 또 한국정부의 對蘇경제협력에 대하여도 그 시기와 규모를 둘러싸고 상당한 意見調整을 추구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韓國政府가 蘇聯과의 외교정상화와 관련하여 대소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韓·美 양국은 긴밀한 의견조정을 거친 것으로 보여진다. 美國은 한반도의 군사긴장완화 추구의 일환으로 韓·蘇關係의 발전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韓國의 대소 경제관계 확대를 지지했다고 할 수 있다. 美國은 韓國의 대소 경협이 美國의 경제협력 구상에 보조를 맞출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日·蘇經濟關係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美國은 蘇聯의 변화유도와 蘇聯의 군사잠재력 억지라는 두가지 목표 사이에 균형을 추구하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韓·美軍事關係의 再調整과 選別的 軍縮

美國은 蘇聯의 정책변화로 인한 東北亞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韓美軍事同盟體制의 骨幹은 維持하되 韓國에 주둔한 美·軍事力의 規模와 役割을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첫째,

美國은 駐韓美軍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둘째, 美國은 韓國에서의 作戰權과 유엔군의 機能 및 代表權의 일부를 한국군에 移讓하고 있다. 셋째, 美國은 韓國 지상에 배치한 전술핵을 철수할 뜻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北韓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美國의 對韓半島 核政策 變化는 1991년 11월 한국정부가 핵무기의 제조, 보유, 및 사용을 포기하는 「비핵5원칙」을 발표함에 따라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美國의 이같은 조치는 물론 蘇聯의 威脅이 감소된 상황에서, 그리고 美國의 경제적 요청에 의하여, 對外 軍事公約을 輕量化하는 가운데 이를 보다 경제적으로 운용하려는 전반적인 美國 외교의 추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다. 多者關係에 미치는 影響과 美國의 對應

(1) 安保的 側面

(가) 多者間 安保協議體에 대한 美國의 立場:

二元的 安保構造 受容 可能性

1990년대 동북아 전반에 등장하고 있는 한가지 특징은 역내에 多者間 安保協議體가 형성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은 蘇聯이 먼저 제기했으나, 기존의 美·日 및 韓·美간 쌍무적 군사동맹체제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안보체제를 견지하고자 하는 美國의 反對에 부딪쳐왔다. 그러나

1991년 7월 30일 美·蘇 정상회담시 중동문제 등 구체적 지역분쟁 해결에서 美·蘇가 긴밀한 협의를 추구하기로 합의하면서, 美國은 동북아의 안보문제 해결에도 美·蘇를 포함한 主要關聯國들간의 다자간 협의와 참여의 효용성을 스스로도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베이커 美 국무장관이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한 「2+4」 회담(1991년 10월)에서도 시사된 바 있다.⁵⁹⁾ 日本은 蘇聯과 북방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蘇聯을 포함한 다자간 안보포럼을 제안한 바 있으며, 아세안 역시 東南亞地域의 다자간 안보협의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여서 동북아에서도 안보문제에 관한 다자주의적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中國은 공식적으로는 蘇聯, 日本 등이 제안한 바 있는 다자간 안보포럼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日本의 군사대국화 경향 역

59) 베이커장관은 최근 한 주요 외교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韓半島에서의 和解와 궁극적인 統一의 과정은 한국인들의 이니셔티브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4대 主要國家들—美國, 蘇聯, 中國 그리고 日本—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이곳에서 교차하고 있다. 남북대화가 진전되는데 따라, 우리는 대화를 뒷받침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共通의 安保關心事를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남북한간의 협상진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東北亞에서 남북한과 4대강국간의 協議體(forum)구성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James A. Baker, “America in Asia: Emerging Arch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Winter 1991/92), p. 13.

13) 베이커장관이 獨逸問題 해결방식을 韓半島問題해결에 원용하려 한 이 구상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불필요한 간섭과 영향력을 우려한 韓國政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유보된 상태로 있다. 그 결과 「2+4회담」을 제안한 美國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범동북아적인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구성을 의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분명해질 기회가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美國이 탈냉전의 여파로 동북아에서도 多者間 協力可能性이 증대한데다, 日本과 中國 등 주요 강국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배제하기 힘들어진 상황에 美國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동북아 安保構造再編에 상당한 유통성을 부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제, 러시아연방의 불안정관리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조만간 肯定的 姿勢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美國은 앞의 安保政策基調편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美國주도의 쌍무적 동맹관계들인 美·日同盟과 韓·美同盟의 틀을 유지하면서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수용하는 융통성을 보일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유럽에 美國主導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범유럽적 안보포럼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공존하듯이, 동북아에도 美國 주도의 美·日 및 韓·美 간 兩者同盟體制와 아울러 蘇聯, 中國을 포괄한 多者間 安保協議體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이 허용하는 그같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는 蘇聯의 자유시장체제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전되면서 美·蘇간의 안보협력이 증가하고, 日本과 蘇聯이 北方領土問題에 관해 일정한 타협점을 찾을 경우에 실현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 韓半島 및 東北亞 軍縮에 대한 美國의 立場

蘇聯은 동북아 안보체제의 변화를 위한 적극적 이니셔티브의 하나로서 한반도에서의 非核地帶化를 제창해 왔다. 蘇聯은 1987년 12월 美國과 「중거리핵 全廢에 관한 조약」을 통해서 유럽 뿐 아니라 아시아에 배치된 SS-20미사일도 모두 폐기하는데 동의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대폭적인 핵감축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蘇聯은 특히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해 왔다. 지난 1990년 11월 蘇聯 대통령위원회

자문위원 메드베제프는 韓·蘇經濟協會에서의 연설을 통해 蘇聯은 한반도의 非核地帶化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남한내 美國의 核武器撤收를 주장하였다.⁶⁰⁾ 蘇聯은 또한 戰略武器減縮協商 타결을 계기로 동북아에도 더욱 실질적인 군축효과를 가져올 적극적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전망이다.

美國도 최근 地上 및 海上配置 短距離 核武器의 철수를 선언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핵군축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처럼 美·蘇가 상당한 상호군축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美·蘇간의 군사적 경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핵전력과 관련하여 美國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해상배치전략핵무기 부문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점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으며, 蘇聯은 제한된 군병력으로 광활한 국토를 지키기 위해 크게 의존해 온 지상발사탄도미사일(ICBM)체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또 美國이 전술핵의 철수를 선언했으나 空軍戰術核은 철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동성있는 전술핵체계는 전략핵과 함께 일정한 수준 이하로는 감축되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군사기술상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日本의 軍事大國化 傾向, 그리고 中國의 독자적인 핵정책견지 등의 요인으로 美·蘇가 東北亞에서 더 이상의 핵군축을 주도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0) 「한겨레신문」, 1991. 11. 23.

(2) 經濟的 側面

(가) 美國의 亞·太경제협력각료회의의 主導努力 強化

蘇聯의 경제개혁과 대외경제개방정책은 단기적으로는 蘇聯이 현재 당면한 경제적 난관 때문에 부침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자유시장권에 대한 蘇聯의 통합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동북아 다자간 경제질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써 동북아 경제권의 확대를 초래할 것이다.

첫째, 韓·美·日 3국간의 비교적 폐쇄적이었던 동북아 다자간 경제질서는 蘇聯을 포함한 보다 확대되고 다변화된 무역질서로 변화하게 된다.

둘째, 蘇聯의 시베리아개발이 본격화되고, 여기에 日本, 韓國, 美國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경우, 東北亞經濟圈은 大西洋經濟圈에 비하여 더욱 커다란 세계적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東北亞經濟圈이 蘇聯을 포용하면서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 되면 中國, 北韓 등 여전히 제한된 대외개방만 실시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들도 역시 동북아 자유무역체제에 통합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美國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확대될 동북아경제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美國은 이미 제도적인 틀을 갖추어가고 있는 亞·太경제협력각료회의에 대한 주도권확보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東北亞 社會主義經濟圈의 對外開放 促進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蘇聯의 體制 및 政策變化는 동북아에 잔존해 있는 사회주의국가들인 中國과 北韓에 대한 강력한 대외개방 압력요인이 되고 있다. 美國은 이를 계기로 中國과 北韓의 시장개혁과 대외시장개방을 촉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美國은 자신이 貿易赤字를 보고 있는 中國에 대해서는 특히 강한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므로써 中國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더 나아가 아시아 전반에 대한 美國의 商業的 浸透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美國은 北韓 역시 대외 시장개방을 통하여 美國 주도의 동북아 자본주의 시장권에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美國의 현재 對北韓政策의 중점은 北韓의 핵개발 저지에 모아져 있다. 따라서 美國은 北韓에 대한 대외개방 압력보다는 北韓에 대한 西方의 경제원조 반대 등과 같은 經濟制裁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北韓의 핵개발 문제가 해결을 본 후에는 北韓에 대해서도 대외개방을 유도하므로써 동북아의 不安定要因으로 간주되고 있는 北韓社會主義의 점진적 와해를 촉진시키려 노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第4章 日本의 東北亞政策과 對蘇對應

蘇聯의 붕괴에 따라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經濟大國인 日本의 國際的 位相이 부각되고 있다. 경제 초강대국인 日本은 경제력에 걸맞는 政治的 役割增大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日本의 정책변화는 향후 국제 및 동북아질서 개편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본 章에서는 蘇聯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질서의 개편과정에서 日本의 역할을 外交目標, 政策 및 對蘇對應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日本의 정치적 역할증대 가능성과 그 한계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1. 東北亞와 日本의 國家利益

가. 美·日同盟 下の 安保強化

동북아에서 전후 日本의 안보적 차원에서의 국가이익은 美·日安保同盟을 기반으로 日本에 대한 안보위협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전후 동북아세력균형은 美·蘇 兩極體制로 정착되면서 美國이 강력한 해양세력으로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日本은 평화헌법에 근거하여 美國과 안보동맹관계를 맺고 방어적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日本은 최근 蘇聯의 붕괴로 美國 주도의 동북아질서 형성과정에서 美·日同盟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북아질서를 저해할 수도 있는 돌발사태에 대비하여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나. 資源과 市場의 安定的 確保

동북아지역에서 日本의 경제적 이익실현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해외시장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日本은 국가안보를 美國에 의존하고 경제재건에 의한 자립국가의 달성을 위하여 經濟第一主義를 채택하였다. 경제제일주의의 채택배경은 첫째, 패전의 원인이 자원부족과 협소한 국토로 인한 빈약한 경제력에 기인하였다. 둘째, 美國이 日本에게 극동의 反共堡壘로서의 역할을 담당시키되 이는 군사적 측면이 아닌 경제적 측면에 국한된다는 인식에 있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日本의 동북아정책은 通商增進과 시장 및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을 追求하는 것이었다. 日本은 「全方位外交」와 정경분리 원칙 아래 역내의 국가들과 교역과 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 및 개도국들에 대한 경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바, 이것은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역내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 日本의 安保目標와 安保政策

최근 美·蘇의 상대적 국력 약화로 인한 동북아에서의 다원화현상이 地域不安定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日本은 이에 대비하고 자국의 정치적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軍備增強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日本의 안보목표는 美·日同盟을 견지하면서 정치적 역할의 확대, 對蘇威脅에 대한 방어, 中國에 대한 견제, 그

리고 한반도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가. 安保目標

(1) 安保役割의 擴大

美·蘇 데탕트와 탈냉전시대에 국제정치는 종래의 군사력 위주의 高位政治(high politics)에서 경제력 위주의 低位政治(low politics)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美·蘇 국력의 상대적 약화로 경제부국인 日本과 獨逸 등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日本은 經濟超強大國에 걸맞는 정치 군사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며, 美國과의 협력 아래 國際 및 亞·太地域에서의 안보문제에 관한 발언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美國은 日本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美·日同盟關係를 동북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 정치·경제적 동반자관계로 조정하려 하고 있으며, 日本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점진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美國은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日本의 경제력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日本 역시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역할(PKO 등)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향후 東北亞 및 亞·太地域의 국제정치·경제질서는 美國의 우위가 유지된 상태하의 美·日「兩頭體制」(bigemony)로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¹⁾ 또한 日本은 蘇聯의 붕괴와 美國의 영향력의 상대

1) Steve Chan, *East Asian Dynamism: Growth, Order, and Security in the Pacific Region*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90), pp. 102~104; Takeshi Inoguchi, "Four Japanese Scenarios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Affairs* (Winter 1988/89) 참조.

적 약화로 초래될 수 있는 동북아지역의 세력공백을 자신이 메꾸기 위하여 안보역할의 증대를 모색할 것이다.

(2) 潛在威脅勢力에 대한 防禦 및 牽制

(가) 蘇聯의 威脅에 대한 防禦

역사적으로 蘇聯은 日本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蘇聯을 가상적으로 한 1970년대의 美·中·日의 3각 안보협조관계는 蘇聯을 더욱 자극시켰고, 1978년 日本이 中國의 「反霸權條項」을 수락하고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자 蘇聯은 북방도서에 1개 사단규모의 지상군과 전투기부대(M-24)를 배치하고 이를 군사기지화하였다. 蘇聯은 1978년 이후부터 최신예기인 백파이어(backfire) 폭격기와 SS-20 중거리 핵미사일을 극동시베리아에 배치하여 동북아군사력을 강화하였다. 蘇聯은 美·中·日 전략협조관계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中·蘇 等距離外交를 펴온 北韓과 군사협력을 강화(군사고문단파견과 M-29이전)하였다.

이와 같은 蘇聯의 군사력강화는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蘇聯은 美·日同盟이 蘇聯에 계속적인 군사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美·日·中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蘇聯에게 심각한 안보위협요인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蘇聯은 북방도서문제에 있어서 향후 대일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²⁾ 아프가니스탄사태를 계기로 1980년대 日本은 군비증강을 강화하였는 바, 蘇聯의 극동군사력의 증강과 蘇聯·北韓과의 군사

2) Harry Gelman, "Continuity versus Change in Soviet Policy in Asia,"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4, no. 2 (Summer 1985), pp. 3~18.

협력 증대 등 蘇聯의 對美·日 군사위협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蘇聯의 국내외정세를 볼 때 蘇聯은 과거에 비하여 日本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극동소련군의 동향은 日本에게 엄연한 군사현실로 간주되고 있다.³⁾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판 日本 「防衛白書」는 蘇聯을 「潛在的 威脅勢力」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나 극동소련군의 군사력에는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日本의 경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⁴⁾

(나) 中國에 대한 協調와 牽制

日本은 1972년 中國과 외교정상화를 이룩하고 1978년 平和友好條約을 체결함으로써 공식적으로 1931년 이래의 적대관계를 청산하였다. 이 조약은 1979년 美·中 국교정상화와 美·日安保條約과 더불어 美·日·中 안보협력관계를 실현하여 對蘇戰略의 협조체제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美·日·中 3각협력체제 하에서 日本의 對中政策은 蘇聯의 잠재적 위협에 대하여 양국이 공동대응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반도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日本은 역내

3) 防衛廳 編, 「防衛白書 1990」(東京: 防衛廳 1990), pp. 46, 49; 防衛廳 編, 「防衛白書 1991」, p. 49.

4) 「朝日新聞」, 1990. 9. 18. 「防衛白書」에는 蘇聯의 잠재적 위협을 기입하였으나 가이 후 수상이 日·蘇 우호분위기를 위해서 잠재적 위협 文句를 삭제하였다며 이것은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북방 4개도서 반환교섭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의도라 볼 수 있다. 실제로 日本 방위당국은 아직도 蘇聯을 가상적 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잠재적 위협이라는 文句를 삭제한 다른 이유는 美國이 蘇聯의 해군력 감축제안을 태평양지역 해군력의 열세만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군축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 정치·군사적 안정을 위하여 한반도의 갈등상황을 방지하는데 日·中의 共同努力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日本은 지역안정을 위하여 中國과 지속적인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나 분명한 점은 강력한 中國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東北亞 戰略構圖에 있어서 中·日 양국은 지역강대국으로서 경쟁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면에서 日本은 東·南 中國海에서 中國의 군사력증강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日本은 고도의 첨단기술을 中國에 이전시키지 않고 있다.⁵⁾ 日本은 1986년 中國海軍의 대규모 기동훈련이 서태평양까지 확대됨에 따라 日本의 1,000해리 해상방위 영역인 유황도에서 양국이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양국간에 센가쿠열도(釣魚台)를 둘러싼 새로운 領土紛爭이 야기될 수 있다.

향후 日本은 중장기적으로 日·中 領土紛爭 등 갈등요인은 협상과 협조로 해결해 나가면서 적절한 경제적 협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즉 日本은 中國의 현대화계획과 관련하여 中國經濟의 급속한 붕괴나 성장은 모든 주변국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中國의 개방과 개혁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경제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日本은 잠재적인 군사안보상의 위협 가능성으로 인해 첨단산업기술 및 고도군사기술의 이전을 자제할 것으로 판단된다.

5) 中西輝政, 長谷川慶太郎, 高坂正堯, “90年代 日本の 防衛構想,” *Voice* (1990. 8), p. 131.

(3) 韓半島 安定

한반도정세에 대한 日本의 시각에는 한반도가 북방삼각체제와 남방삼각체제의 이해가 교차되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따라서 日本의 대한반도정책목표는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통한 동북아지역의 안정적 세력균형의 유지였다. 1960년대 日本은 中國과 北韓을 위협세력으로 간주하였으며, 1964년 中國의 핵실험 등으로 동북아지역에서 불안정이 증대되자, 韓國, 臺灣, 美國 등과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71년 닉슨의 訪中에 따른 美·中關係 개선으로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데탕트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7.4 공동성명」에서 韓國政府가 北韓을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자 日本은 1970년대 이후 南北韓간의 등거리외교를 강화하여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비정치분야에서의 對北韓關係를 개선하였다.

1970년대 중반 베트남전쟁의 양상이 공산계릴라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日本 국내에서는 베트남의 공산화가 아시아의 공산화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韓國防衛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였다. 日本은 한반도의 안정을 동북아안정의 필수적 요인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日本 安保目標에 있어서 한반도의 안정은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1980년대에는 蘇聯軍事力이 극동아시아에 집중배치되고 蘇聯軍의 작전해역이 東海(日本海)까지 확대되자 日本은 韓國安保가 日本防衛에 직결된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최근 日本은 南·北韓關係 改善으로 인한 한반도통일의 가능성이

증대되자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日本은 지속적인 한반도의 現狀維持를 바라고 있으며, 남·북한 통일 협상과정에 있어서 「2+4」의 구도를 유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日本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통해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 있어서 역할증대를 기도하고 있다.

나. 安保政策

(1) 美·日同盟體制 維持

日本은 美·日同盟體制를 대등한 동반자관계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美國의 방위비 분담요구도 점진적으로 수용하여 공고한 동맹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日本이 美·日安保條約體制를 유지시키려는 것은 再軍備를 통하지 않고도 美國의 군사적 보호 아래 안주하는 것이 日本의 안전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安保戰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으로 승전국들에 의하여 교전권을 박탈당한 日本이 이를 명문화한 평화헌법 9조에 의거한 것이다. 또한 日本은 韓國戰爭과 中國革命의 여파로 인한 사회주의혁명세력의 국내적 확산에 직면하여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美國의 군사적 보호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美·日安全保障條約(구안보조약)은 1951년 조인되고 1952년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동등한 雙務關係의 조약이 될 수 없었고 美國이 후견인적 입장에서 日本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띤 것이다. 따라서 日本은 기존의 일방적인 조약의 개정을 제의하여 1960년 1월 워싱턴에서 「美國과 日本國間の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 즉 新安保條約을 체결하였다. 美·日安保條約에 의하면 美國은 日本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때에는 日本 防衛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日本의 관할권 하에 있는 영역 이외의 장소에서 美國이 공격을 당하면 日本은 이것을 방위할 의무를 지지않게 되어 있다. 이점은 日本의 헌법상 集團的 自衛權을 행사할 수 없다는데 연유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日本의 경제력이 증대됨에 따라 美國은 日本에게 防衛力을 강화하도록 꾸준한 압력을 가했다. 따라서 美·日安保關係는 防衛責任과 능력 및 지출의 확대를 요구하는 美國의 압력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美·日安保關係는 1969년 「닉슨독트린」을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닉슨은 이 선언에서 同盟國들이 방위를 위해서 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美國은 동맹국에 대한 核抑止力과 軍事支援은 계속 유지할 것이나 병력의 제공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 입각해서 美國은 日本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무임승차」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⁶⁾ 美國은 日本에 대하여 오랫동안 저렴한 방위정책을 수행한 점을 비판하고 적절한 방위비분담을 요구하였다.

6) 日本이 GNP 세계 제2위가 된 1968년을 전후하여 美國과 심각한 무역마찰(섬유문 제 등)이 야기되었으며 이런 면에서 1970년 이후 美國은 日本의 안보무임승차에 批判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비판 아래서 日本은 경제력 증대에 따라 방위비를 증액했으며, 1980년대에는 專守防衛에 지역방위개념을 추가하는 해상교통로 1천해 리방위를 결정하였다.

日本은 제1차에서 3次防(1958~71)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군비증강을 해왔으나 美國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⁷⁾ 日本은 국내적으로는 美·日安保體制 비판론자인 野黨을 자극하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인접국가들의 대일 경계심을 자극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급격한 군사력 증강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1970년 후반 蘇聯의 군사력증대로 안보환경이 악화되면서 日本의 태도는 보다 적극화되기 시작했다. 즉 蘇聯의 極東軍兵力(특히 오토츠크의 해군력)의 대폭적 증강, 北方 4個島嶼에 대한 蘇聯의 군사기지건설, 1979년 아프카니스탄 침공 등은 蘇聯의 대일안보위협을 증대시키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蘇聯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美·日 양국은 日本이 해군력과 공군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日本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戰略的 責任을 맡게 되었다. 첫째, 日本이 본토 서남쪽으로 1000해리까지의 해역에 대하여 해상통신 및 보급선을 확보하고, 둘째, 쓰시마(對馬島), 쓰가루(津經), 소야(宗谷)의 3해협을 봉쇄하여 일본해와 태평양에로의 진로를 차단하고, 셋째, 日本 주변의 해역 및 공역에 대한 방위 스크린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日本은 1980년대에 들어 방위증강에 적극성(53중업)을 보였다. 美·蘇의 화해 및 상대적 국력의 쇠퇴, 中·蘇의 화해무드(국경문제 해결), 韓·蘇修交, 北韓·日本 外交正常化 회담 등으로 현재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안보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7) 부록의 防衛力 增強計劃 進陟狀況 참조.

서 日本은 동북아에 있어서 美·蘇 영향력의 상대적 약화로 생긴 힘의 공백을 자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메꾸려하고 있다. 日本은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에 대비하고 역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美·日同盟條約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美·日條約의 강화에 따른 긍정적 역할은 첫째, 동북아의 다원화 현상에 대한 갈등 및 위협가능성에 대한 抑止, 둘째, 蘇聯과의 북방영토반환 협상에서 日本 주도권의 확보, 셋째 日本의 군비증강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우려 불식 등 폭넓은 전략적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⁸⁾

그러나 美國 군사비의 전반적인 삭감, 해외주둔군의 단계적 철수에 따라 美·日同盟體制는 일방적 관계에서 대등한 쌍무적 관계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美國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궁극적인 군사안보의 保障者로서 그리고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美國은 日本에게 경제력에 상응하는 안보책임을 분담시키므로써 동북아지역의 안정유지를 위한 日本의 정치적 역할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다. 이에 대하여 日本은 지역강대국으로서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의 증대요구를 수용하고 美國과의 협조 아래 정치적 역할을 확대할 것이다.⁹⁾

(2) 防衛力 增強政策 및 軍事力 現代化

日本의 防衛政策 基調는 平和憲法 第9條에 규정된 전쟁과 군사

8) Hidenori Ijiri, “東北亞에서의 脫冷戰體制의 등장,” 「統一問題研究」, 第2卷 3號 (1990 가을), pp. 48~67;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9, 1991.

9) Chan, *East Asian Dynamism*, p. 104.

력 보유의 포기, 그리고 교전권부인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의 역대정부는 自衛權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위력 보유가 違憲이 아니라고 해석하며 專守防衛를 日本防衛의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日本은 美·日 安保條約을 전제로 하는 범위내에서 방위력을 증강하고 美國과의 安保協力を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日本防衛政策의 基調를 이루고 있다. 전후 日本의 안보태세는 美·日 安保體制의 테두리內에서 형성되었는데, 美·日 安保體制의 핵심은 美·日 양국이 蘇聯을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 위협중 통상병력에 의한 대규모공격 등 대규모의 위협에는 美國이 대처하고, 불법적 군사행위 등 소규모의 위협에는 日本이 대처한다는 것이다.

전후 日本의 방위정책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70년대까지 日本의 방위정책은 日本列島 방위지향적인 요시다 독트린에 따른 專守防衛政策의 시기와 1970년대말 이후 蘇聯의 극동군(해군) 증강과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초래된 新冷戰體制 하에서 지역방위로 전환한 시기가 그것이다. 專守防衛는 日本 防衛의 기본 方針으로서, 日本이 상대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야 비로소 자위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것도 最小限의 조치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1981년 스즈끼(鈴木) 수상은 해상교통로인 1,000해리 방위를 선언하였는데, 이는 專守防衛에서 地域防衛概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1983년 나카소네(中曾根) 수상 재직시에는 日本 주변해협 3해협(소야, 쓰루가, 쓰시마)의 봉쇄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海峽封

鎖는 美國이 요구하는 방위노력의 일환으로 유사시 蘇聯 태평양함대(블라디보스토크기지)를 동해(일본해)에 묶어 두고 美國의 태평양 制海權을 확보하는데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수방위기조에도 불구하고 日本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日本의 경제력 증대, 그리고 美國 국력의 상대적 약화에 따라 지역방위에 있어서 安保役割의 확대를 추구하여 왔다. 日本은 또한 점진적 방위증강정책에 따라 전후 4차례에 걸친 방위계획을 추진해 왔다.

第4次 防衛力增強計劃(1972~76)의 추진이 석유파동과 야당의 반대 등 국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차질을 빚자 4次防 이후에는 종래의 증강계획구상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방위청은 1976년 防衛大綱을 결정한 후 53(1980~84), 56(1983~87)中期業務計劃을 세웠고 이러한 중기업무계획을 발전시켜 59중기업무계획(1986~90)을 구상하였다.¹⁰⁾ 53중기업무계획은 防衛大綱에 나타난 기간부대의 조기정비, 각종 방위기능의 정비 및 작전, 훈련을 강조한 방위력현대화계획이었다. 이는 美國의 대극동전략을 중심으로 한 美·日 공동작전체제를 더욱 긴밀화하는데 필요한 日本의 책임분담의 몫을 충실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6중기업무계획은 大綱이 설정한 방공능력, 대잠수함능력 등을 현대화하고 교육훈련의 근대화를 지향하였다. 이 계획의 초점은 美國의 역할분담의 일환책으로 日本의 책임구역을 확대(해상교

10) 부록의 59中期防衛力整備計劃과 防衛計劃大綱의 進陟狀況 참조.

통로 1,000해리 지역방위)하는 것이었다. 59중기업무계획인 1次 중기방위력 정비계획과 2次 신중기방위력 정비계획(1991~95)은 지역방어에서 전진방어를 위한 공격적 성격의 방위로 변모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¹¹⁾

1976년 미키내각에 의한 防衛大綱은 과거와는 달리 방위계획에 있어서의 단년제 및 방위비의 상한선 설정(국민총생산의 1% 방위비 한도설)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당분간 국제정세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平時의 充分的 警戒態勢」로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 「限定的 小規模의 侵略」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大規模侵略에 대해서는 핵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는 美國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大綱의 전략은 1978년 美·日安保協議委員會에서 채택되어 美·日防衛協力을 위한 指針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면 4次防과 1976년 防衛大綱에 있어서 자위대의 전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자위대의 전력을 어느 선까지 확보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日本政府가 위협대상으로 인식하는 ①핵공격, ②통상병력의 대규모 공격, ③통상병력에 의한 사전에 계획된 소규모 공격, ④통상병력에 의한 우발적 소규모 공격, ⑤불법적(영공영해) 군사행위, ⑥간접침략(소요) 중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4次防에서는 자위대의 전력은 ④, ⑤, ⑥까지 대상으로 잡았고, ①, ②는 美國에 의존하기로 결정하였다.

11) 國防部 編, 「國防白書 1991」(서울: 國防部, 1991) 참조.

1976년의 大綱에서는 ①, ②, ③은 美國戰力에 의지하고 日本은 ④, ⑤, ⑥ 까지만 담당한다는 것으로서, 4次防에 비하여 작전대상이 한단계 낮추어졌다.¹²⁾ 日本政府는 이와 같은 대강계획을 수행해왔으나 베트남의 공산화로 美國이 약화되고 이에 따른 社會黨 등 日本 재야세력의 발언권이 증대되어 집권당인 自民黨은 소극적인 방위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반면 蘇聯은 1978년 美·日·中 3국 협력체제에 대응하여 北方島嶼를 군사기지화하고, 1979년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는 등 공세적인 군사정책을 수행하여 美·蘇對立이 첨예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日本은 蘇聯의 위협증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美國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였다. 이와 관련 日本은 1970년대의 전수방위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역방위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이 지역방위론은 단순한 방위력 증강계획의 차원을 넘어 日本의 군사적 역할의 지리적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3) 軍事的 役割의 廣域化

(가) 地域防衛戰略과 海上安保政策

지역방위론은 1983년부터 1987년까지 5개년간의 방위력 증강계획인 56중기업무계획에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그 내용은 海上安保에 대한 日本 책임구역의 확대였다. 전수방위에서 지역방위로의 전환은 1981년 종전의 200해리(본토서남) 해상방위에서

12) 김승흡, “미·일안보의 변화와 일본의 선택,” 대한정책개발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 1990. 10. 30, pp. 35~36.

탈피하여 “1,000해리 해상교통로(sea lanes)방위”를 선언한 스즈키 수상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1983년판 日本 「防衛白書」는 해상교통로방위를 “日本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 광역초개, 선박의 호위, 해협의 방비 등 각종 작전편성에 따른 누적효과에 의해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카소네 수상은 1982년 1,000해리 해상교통로의 범위를 괌~동경, 대만해협~오오사카로 명시하고, 1983년 日本 주변의 3해협(소야, 쓰루가, 쓰시마) 봉쇄를 단행하였다.

해상방위론의 대두는 1981년 레이건 집권 이후 美·蘇간의 신냉전이 고조됨에 따라 日本의 해상운송로 확보에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래의 안이한 대미의존적 군사소국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군비증강론자들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蘇聯은 3해협 봉쇄로 태평양진출을 봉쇄당한 반면 日本 역시 해상을 통한 연간 6억톤 이상의 물량수송에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¹³⁾ 따라서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정책은 종합안보적 측면에서 日本의 原油市場의 확보라는 사활이 걸린 정책이며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3해협 봉쇄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모항으로 하는 오호츠크海의 蘇聯海軍力을 日本의 3해협 봉쇄로 동해(일본해)에 묶어두고 蘇聯海軍의 태평양진출을 억제시키며 美 제7함대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蘇聯의 백과이어 전폭기의 진로를 日本 防空網으로 차단시키는 것

13) 佐藤和正, 「これか “日本の 防衛隊た”」(東京: 講談社, 1983), p. 12.

이다.¹⁴⁾ 蘇聯은 1978년부터 백과이어 전폭기를 극동에 배치시켰다.

日本の 1,000해리 방위는 蘇聯의 극동해군에 대한 견제 뿐 아니라 中國의 서태평양진출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다. 中國은 1,000해리 원양작전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모함·건조, 해병대 창설, 공군조종사의 함재기 임무부여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986년 5월 中國海軍은 처음으로 연안을 벗어나 日本 유황도 부근의 서태평양까지 진출, 대규모 해상작전훈련을 시행하였다.¹⁵⁾ 이러한 상황에서 中國이 현재의 海上戰略을 유지하면서 해역을 확대할 경우 日本과 中國 사이에는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해상방위의 강화를 목표로 한 1985년 나카소네 내각의 1차 중기방위력정비계획(1986~90)에는 장비의 공격용으로의 전환과 영해 뿐만 아니라 遠洋에 대한 攻擊의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의 총예산은 18조 4000억엔으로 동기간중 국민총생산의 1% 한도를 초과하였다.¹⁶⁾ 日本 정부가 1987년 1월 방위비는 「국민총생산의 1% 이내」라는 상한선을 철폐한 직후 키신저는 「로스앤젤

14) Paul Langer, "Soviet Military Power in Asia," in Donald Zagoria, ed., *Soviet Policy in East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p. 256. 蘇聯은 1978년부터 백과이어 전폭기를 극동에 배치시켰다. 1983년 소련합정이 대마도해협을 통과한 것은 165척이었으며, 이외에도 소야해협 205척, 쓰루가해협은 60척이었다. 佐藤和正, 前掲書, p. 26.

15) 이 훈련에는 山東半島의 靑島를 기지로 한 6척의 구축함 및 H-6 폭격기 외에 잠수함이 동원되었다. 김달중, "동북아 해상교통로를 위요한 4강의 해상전략," 金達中 編, 「韓國과 海路安保」(서울: 法文社, 1988), pp. 161~164.

16) 前田哲南, "軍事費1%構突破の構造," 「世界」(1985. 1). 1976년에는 상한선을 GNP 1% 「이내」로, 1987년에는 다시 GNP 1% 「정도」로 방침을 수정하였다.

레스 타임즈」誌에 기고한 논문에서 日本의 군비증액은 범세계적인 (global) 세력균형 유지에 불필요하다며 군사력의 강화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1987년 美國議會는 日本의 방위비가 국민총생산의 3%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決議를 채택하는 등 日本보다도 적극적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였다.

日本은 1991년 예산에서 방위예산(2차 신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을 5.8% 증액시켰고 1992년도 방위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5.38%가 늘어난 4조 6천 2백 20억엔으로 책정하였다. 日本의 방위비는 현재 세계3위로 국민총생산의 1.5%에 이르고 있다. 日本 防衛廳은 1991년에서 1995년의 2차 신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총 22조 7천 5백억엔을 들여 호위함 현대화, 핵무기 탑재가능 최신에 미사일 도입, F-15 국산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1991년도 「防衛白書」에 의하면 日本政府는 걸프戰에서 위력을 떨쳤던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도입, 다연성 로켓트(MLRS)의 도입 등을 통하여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日本政府는 걸프戰을 기화로 1991년 4월 해상자위대의 소해정을 중동에 파견한데 이어 9월 19일에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방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자위대의 해외파병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日本은 군사역할의 확대(PKF 파병)를 위한 해상자위대의 기항(연료 및 보급품의 공급)을 위하여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파키스탄에 막대한 정부원조정책(ODA)을 펴고 있다. 1991년도에 日本은 필리핀(6.47억달러), 스리랑카(1.76억달러), 파키스탄(1.93억달러), 터키(3.24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원조를 제공하였

다.¹⁷⁾ 이러한 상황에서 日本은 공산권의 붕괴로 야기된 蘇·中·北 韓의 국내정세 불안을 이용하면서, 또한 美·蘇의 군사력 감축에 따른 힘의 공백을 메꾸면서 東北亞 및 亞·太地域에서 軍事大國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나) 유엔平和維持軍 參與

日本政府는 자위대 해외파병의 정당성을 1991년판 「防衛白書」에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이 白書에 의하면 걸프戰과 관련해서 페르시아만에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해상자위대의 소해부대를 파병했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무력행사의 목적이 아닌 파견은 海外派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해외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강한 참여의사를 표명하였다. 해상자위대의 파병계획을 처음으로 피력했던 정치가는 나카소네였으며, 이는 1987년 이란·이라크전쟁의 부산물인 기뢰의 제거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日本은 1991년 4월 걸프戰으로 인한 이라크의 기뢰를 제거하기 위하여 걸프만에 6척의 해상자위대 소해정을 파견하였다. 美國은 세계평화를 위해서 日本에게 국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하며 日本을 고무시켰다.¹⁸⁾ 美國의 의도는 세계주요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美國의 주도 아래 日本의 지지와 협력을 활용하려는 것이었다.

1991년판 「防衛白書」에 의하면 日本은 최근 평화유지군 파견에

17) 「朝日新聞」, 1991. 10. 6; 「政府開發援助(ODA)白書」(1991年版).

18) 「讀賣新聞」, 1991. 6. 23.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해와 평가를 얻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日本 국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찬성 45.5%, 반대 37.9%로 긍정적 평가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¹⁹⁾ 최근 총리로 당선된 미야자와(宮澤喜一)는 총재선거를 앞두고 오자와(小澤) 전 자민당 간사장을 중심으로 한 「日本の 役割에 관한 特別調査會」의 개헌론을 용인하였다. 이는 유엔군에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9조도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야자와가 自民黨의 뉴리더들 중에서 유일하게 유엔평화유지군 참가에 대한 정책구상을 발표한 정치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위대의 해외(캄보디아 등)파병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日本의 해상자위대 파견의의는 航路의 安全을 確保하고 自衛隊의 해외파병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즈키 수상은 1981년 海上防衛線을 종전의 본토 서남 200해리에서 1,000해리로 확대하여 방위정책을 전수방위에서 지역방위로 전환시켰다.²⁰⁾

(다) 非核 3原則과 그 運用의 融通性

日本の 핵정책논쟁은 1964년 핵실험성공으로 中國이 다섯번째

19) 日本의 총리실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自衛에 대한 여론조사. 防衛廳 編, 「防衛白書 1991」, pp. 306~309.

20) 이 당시 「防衛白書」는 “자위권의 행사로 나라를 방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는 반드시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개의 상황이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기술하였다. 防衛廳 編, 「防衛白書 1983」, p. 89.

의 핵국가로 등장하므로써 시작되었다. 日本의 핵전문가들은 日本에 대한 中國의 핵위협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정도의 위협은 美國의 「핵우산」 보호로 핵대결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핵무장 옹호론자들은 日本의 비핵3원칙과 核擴散禁止條約(Non-Proliferation Treaty)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원칙과 조약으로 日本이 美國의 영원한 핵종속국이 되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에너지자원 개발기술 및 원자력 이용기술이 美·蘇의 독점 아래 있기 때문에 日本이 명실상부한 초강국으로 등장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日本의 핵정책은 핵무장주장과 비핵화의 주장을 절충한 소위 「N-t정책」이며, 日本은 현재 핵병기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핵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핵병기를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는 「N-th정책」과는 다른 「N-t핵정책」을 日本이 택한 이유는 핵병기개발 바로 전단계까지의 모든 분야의 핵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이것이 에너지자원 개발 등을 위한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가질 수 있고 군사적으로 필요할 때 핵병기에 전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²¹⁾ 日本은 핵을 「갖지 않으며, 만들지도 않으며,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非核3原則을 국시로 견지하고 있다. 日本의 핵무기제조나 보유는 原子力基本法の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또한

21) Masataka Kosaka, "Japan's Nuclear Option," in G. Kemp, R. L. Pfaltzgraff, Jr., and U. Ra'anan, eds., *The Superpower in a Multinuclear World*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74), pp. 94~95.

1976년 6월 핵확산금지조약 비준으로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으며 취득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와 함께 1967년 사토 수상이 중의원 예결의원회에서 언명한 武器禁輸 3原則에 따라 공산권국가, 유엔결의에 따라 금지된 국가(南阿共), 분쟁당사국 등 위험이 내재하는 국가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위적 측면에서도 日本이 핵무장을 할 경우, 美·日安保條約이 폐기되거나, 日本에 대한 美國의 핵우산이 철수될 것이기 때문에 日本의 국방력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다. 바로 이 점이 日本의 핵무장금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日本은 독자적 핵무장이 對中國關係를 악화시키고 中國과의 핵무기경쟁을 일으켜 양국은 심각한 갈등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日本 防衛廳은 국방의 지나친 대외의존성을 경고하고 日本이 국제정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위상의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즉 방위에 있어서 자주성과 융통성의 양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위청의 시각은 日本 國民의 「핵알레르기」반응이 약화되고 있고 최근 「신보수주의」, 즉 보수우경화 경향이 확산되는 경향에 따른 것이다.²²⁾

이러한 면에서 日本의 핵정책은 상당한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日本은 유사시 핵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운반체

22) 「朝日年鑑 1978」, p. 584.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日本이 앞으로 핵무장을 하게 될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50對50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를 보유하고 있다. 日本은 핵병기를 운반할 수 있는 F-4E 팬텀기(핵폭탄 탑재), P-3C 對潛哨戒機(핵탄두부착) 등을 보유하고 있다. 즉 日本自衛隊의 항공기도 핵병기탑재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최근 日本의 科學術廳이 우주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로케트도 핵탄두를 부착할 경우 準中距離 미사일로 사용 가능하다.²³⁾

이러한 맥락에서 日本은 핵병기라도 방어적인 것일 경우 그 보유가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까지도 개진된 바 있다.²⁴⁾ 둘째, 日本政府는 요코쓰카, 사세보 등 항구에 기항하는 美國의 군사용 선박들의 핵탑재여부를 불문에 부쳐왔다. 1988년 핵을 장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美太平洋艦隊에 배치되면서 이러한 함정이 日本에 기항할 경우 비핵3원칙 중 세번째 「搬入禁止原則」에 위반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美·日 양국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60년 교환한 공문에서 지상반입에 대해서는 「불가」라고 규정했으나, 기항이나 영해통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美國의 핵무기탑재함정의 기항이 사실상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自民黨의 일각에서는 반입금지원칙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日本의 비핵 3원칙의 실제운동은 상당한 융통성을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日本은 최근 논의되는 「비핵지대화」보다는 비핵정책을 추진하여 美國의 핵우산 유지로 안보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23) 佐藤和正, 前掲書, pp. 78~80.

24) J. Van de Velde, "Japan's Nuclear Umbrella: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for Japan,"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7, no. 4 (Winter 1988), p. 19.

1991년 9월 27일 부시 美대통령의 핵감축선언에 대하여 日本은 환영할만한 선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케다(池田) 방위청장관은 이 제안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日本의 방위력정비계획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日本은 지금까지 핵의 위협과 관련해서는 美國의 억지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日本의 방위정책과 방위력정비에는 영향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日本은 「N-t정책」을 향후에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되나 軍備現代化의 일환으로서 핵탑재가능 최신예 미사일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핵을 대체할 수 있는 첨단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을 걸프戰에서 인식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발도 가속화할 것이다.

3. 日本의 經濟目標와 經濟政策

日本은 자원과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亞·太地域의 경제를 주도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日本은 全方位經濟外交, 美·日 무역마찰 해소, 경제협력의 전략적 이용, 수출 및 첨단산업 주도에 비교우위의 확대, 그리고 日本 주도의 지역경제권 구축 등 포괄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가. 經濟目標: 亞·太地域의 經濟主導

亞·太地域에 대한 日本의 경제목표는 이미 이룩해 놓은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고 세계경제의 지역화추세에 대비하면서 이 지역에서 자원과 수출시장의 확보이다. 日本은 자원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자원, 주요 원자재 확보는 日本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日本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첨단산업분야에서의 比較優位(comparative advantage)를 바탕으로 亞·太地域의 경제권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日本은 다방면에서 시도되고 있는 역내 경제권 형성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특히 日本이 亞·太地域의 경제권 형성에 참여하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첨단기술을 통한 생산력향상, 기업의 국제화를 통한 막대한 무역흑자, 그리고 전세계 유동자금의 40%를 장악한 사실 등이 작용하였다. 日本은 亞·太地域에 있어서 지역 경제협력체를 주도적으로 창설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제블럭화 추세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나. 經濟政策

(1) 全方位 經濟外交

전후 日本 經濟外交의 특징은 資源外交라고 볼 수 있으며 자원과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日本은 政經分離原則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日本의 國家利益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냉전시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세계의 어느 국가와도 긴밀한 紐帶關係를 맺겠다는 「全天候 外交方針」을 말

한다. 전후 日本의 정책결정자들은 美·日安保同盟體制내에서 자체 방위로서 專守防衛戰略을 수행하고 경제발전에 치중하여 왔다. 그 논리적 근거는 경제와 정치를 상호분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경분리의 발상이었다. 이와 같은 경제외교는 美國의 전략적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추진되어 왔다.

日本은 1960년대 중반부터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中國과 교역을 개시하였으며 이는 中·日 外交正常化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토(佐藤)내각은 臺灣과 국교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中國과의 관계를 政經分離原則에 따라 경제교류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中國은 경제교류 뿐 아니라 정치적 관계도 요구하였다. 1972년 닉슨의 中國訪問을 계기로 日本은 中國에 수교를 제의하여 국교정상화를 이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중국정책을 전개하였다. 日本은 1950~60년대에 친한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日本은 1970년대 美·中和解 모색 등 동북아에서 데탕트체제가 도래하자, 1971년에는 구노쥬지(久野忠治)를 대표로 한 日朝友好協會를 北韓에 파견하여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²⁵⁾ 韓國政府가 7.4 공동성명에서 北韓政府를 묵시적으로 인정하자 日本은 政經分離政策에 따라 비정치분야(무역)에서 北韓과의 교류를 증진시켰다.

日本의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경제외교는 요시다내각 말기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그후 하토야마(鳩山)내각, 이시바시(石橋)내각, 기시(岸)내각, 이케다(池田)내각, 사토내각, 다나카(田中)내각,

25) 「朝日年鑑 1973」, p. 162.

미키(三木)내각을 거치는 동안 「平和外交」라고 불려 왔다. 후쿠다(福田)수상은 1977년 동남아순방 중 마닐라에서 기존의 평화외교 정책과 일치하는 개념인 「全方位外交」를 제시하였다.²⁶⁾

그러나 日本政府는 전방위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소 경제관계에서 「정경불가분」의 원칙을 적용시켜 왔다. 이는 蘇聯으로부터 북방4개도서를 반환받지 않는 한 경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지 않겠다는 日本의 의도와 함께 日·蘇關係 개선에 대한 美國의 견제가 작용한데 기인하였다. 이와 관련 1980년대 日·蘇經濟關係는 펄프기와 칩개발 등 단지 2개의 신규 공동프로젝트에 그치는 등 정체된 상태에 머물렀다.²⁷⁾

(2) 美·日 經濟摩擦 解消

日本은 교역구조에 있어서 比較優位를 통한 무역흑자가 정착됨으로써 각국과 통상마찰을 야기시켜 왔다. 通商摩擦은 1960년대 저임금과 신상품을 배경으로 한 美·日纖維摩擦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70년 이후 철강, 텔레비전, 자동차 그리고 첨단반도체 등 하이테크상품에까지 확대되었다.

美·日간의 경제마찰은 원천적으로 양국간의 貿易不均衡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美國은 日本이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회사(Japan Incorporation)가 되어 공격적인 수출국이면서 방어적인 수입국으로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

26) 內山正熊, 「外務省の機能變遷」, 「國際法 外交 雜誌」, 第71卷 (1973. 3).

27) 「蘇聯研究」, (1991. 5), p. 56.

고 있다. 美國은 日本이 국내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용하여 유통구조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²⁸⁾

이와 같은 美·日 貿易不均衡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가 취해져 왔으나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며, 양국간 상호불신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²⁹⁾ 日本은 무역불균형 시정노력으로 駐日美軍의 경비부담 증대, 대외경제지원 증대 및 대미무역문제에 있어서 美國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으나, 美國은 對日關係에 있어서 무역, 기술이전, 방위분담 등 제문제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를 연계시키자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무역문제 해결을 위한 構造調整協商(SII)은 日本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시장개방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나, 日本은 美國의 재정적자 감소와 소비절약을 강조하고 있어 양국간 무역마찰은 상호내정간섭으로 비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첨단 기술 이전문제에 있어서는 美·日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FSX)의 기술이전문제와 관련하여 美國은 技術共有를 조건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이견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³⁰⁾

美·日 양국간의 경제마찰 해소를 위해 양국 정부는 최근 무역,

28) Steven D. Cohen, *Uneasy Partnership: Competition and Conflict in U.S.-Japan Trade Relations*, 山田進一 譯, 「日米經濟摩擦: アメリカの主張」(東京: テイビーエス ブリタリカ, 1985), pp. 10~11.

29) 1991년 日本의 무역흑자는 약 800억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수출시장의 다변화로 인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日本 通産省은 지난 5년간 수입액이 250억달러 증가하였다고 언급하고, 이와 같은 수출입균형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Asian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13, 1991.

30) Bernard K. Gorden, "Asia-Pacific Rim: Success at a Price," *Foreign Affairs*, vol. 70, no. 1 (Winter 1990/91), pp. 155~156.

투자, 수입 등에 대한 경제정책 조정 뿐만 아니라 의회, 연구기관을 통한 상호불신을 조정하는 작업(SCHI)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³¹⁾ 특히 脫冷戰時代에 세계적인 차원에서 정치·경제적 동반자로서 美·日協力關係를 강화하기 위하여 日本은 방위비 증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호의적 대응 및 美·日 상호간의 기술협력 강화 등으로 美國의 불신을 점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양국의 경제갈등을 완화시키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양국은 정부, 의회, 기업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美·日 양국정부는 국내정치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부간의 이견 조정에 노력할 것이다.³²⁾

(3) 經濟協力の 戰略的 利用

日本의 外國援助計劃(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자국의 수출확대와 자원확보를 위하여 수행되어 왔다. 日本政府는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외국원조계획을 위하여 14억달러를 책정하였고 1981년부터 1985년까지는 전기간의 경험규모보다 2배 정도 큰 경제지원을 하였다. 1988년에 수립된 외국원조계획(5개년계획 1988~93)의 규모는 500억달러로 아세안(ASEAN) 제국과 중동제국을 포함한 저개발

31) Jimmy Carter and Yasuhiro Nakasone, *Ensuring Alliance in an Unsure World: The U.S.-Japanese Global Partnership in the 1990's* (Washington, D. 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September 1991), p. 4.

32) Ibid.

아시아국가에 지원하고 있다.³³⁾ 이는 일반적으로 日本의 수출 확대에 대한 배려로 지원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美國의 안보전략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었다. 최근 日本의 대외경제 지원은 경제블록화 추세에 대한 日本 주도의 경제권 형성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日本의 개발도상국 개발원조는 경제·정치적 발언권과 영향력 증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최근 日本이 유엔平和維持活動의 일환으로 海上自衛隊를 중동에 파견할 당시 자위대의 제3국 寄港問題가 국내적으로 심각히 대두되었는데 대부분의 기항지가 외국원조계획 수혜국으로 결정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³⁴⁾

(4) 輸出 및 尖端産業 主導에 의한 比較優位 擴大

日本은 현재 經濟超強大國으로 부상하였다. 1960년 후 10여년 동안 日本의 국민총생산은 年12%의 실질성장을 이룩하였다. 1988년말에는 日本의 1인당 국민총생산이 2만여달러를 기록하였고, 국제수지면에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796억달러라는 對外競爭力을 과시하였다. 日本은 부존자원의 부족과 협소한 국토로 국제환경에

33) Xiaming Zhou,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Asian Survey*, vol. XXXI, no. 4 (April 1991), pp. 341~350; Dennis T. Yasutomo, "Why Aid?: Japan as an "Aid Great Power," *Pacific Affairs*, vol. 62, no. 4 (Winter 1989/90), p. 490; Tsuno Akada, "Japan's Comprehensive Security Policy," *Asian Survey*, vol. XXXI, no. 4(April 1991), pp. 324~340.

34) 日本은 군사적 역할확대를 위하여 막대한 개발원조를 필리핀(6.47억달러)과 파키스탄(1.97억달러) 및 중동의 터키(3.24억달러)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防衛廳 編, 「防衛白書 1990」, p. 94; 「朝日新聞」, 1990. 10. 6.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시장체제에 입각한 國際協力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日本의 수출주도정책은 경제순환 면에서 해외로부터의 原資材輸入→生産·輸入代替→輸出의 순환을 의미한다.

전후 日本은 정부주도로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수입원자재를 가공, 중화학공업제품과 첨단정밀제품을 수출하는 패턴이 정착되었다. 이러한 수출 패턴은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위하여 수입의 확대를 통해 상대국과의 마찰을 조정하는 한편, 첨단기술투자에 주력함으로써 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比較優位體制를 확립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5) 日本 主導의 地域經濟圈 構築

日本은 1960년대 關稅同盟(태평양자유무역지대, 1966)을 시작으로 하여 亞·太地域經濟圈 형성에 대한 구상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왔다. 1966년 고지마(小島 清) 교수는 유럽경제공동체(EEC)를 모델로 하여 「太平洋 自由貿易地帶」(Pacific Free Trade Area)案을 구상하였다.³⁵⁾ 이 구상은 태평양지역 선진제국인 美國, 日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가맹국으로 하는 關稅統合案이었으

35) Kiyoshi Kojima, "An 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id and Development: A Proposal," paper publish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Australian Committee of the Australia-Japan Economic Relations Research Project (Septmeber 1976); Bernard K. Gordon, "Japan and the Pacific Basin Proposal," *Korea and World Affairs*, vol. 5, no. 2 (Summer 1981); 安清市, "太平洋地域 協力體制 構想에 대한 主要 當事者들의 立場과 利害關係," 「第5回 合同學術大會 論文集」(서울:韓國政治學會, 1983), pp. 433~434.

나 다른 나라들의 거부로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고지마案의 대안으로서 오오히라(大平) 수상은 1979년 11월 14일 동·亞·太經濟圈 구상의 일환으로 「環太平洋連帶構想」을 발표하였다.³⁶⁾

오오히라의 환태평양연대구상은 日本이 전후 처음으로 제시한 자원·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포괄적 總合經濟戰略인 동시에 安保戰略의 핵심구상이었다.³⁷⁾ 이러한 구상은 亞·太國家와의 경제적 유대의 결성을 통하여 蘇聯의 아시아진출과 동남아시아에서 공산화의 파급을 저지하고 이 지역에 있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日本의 아시아經濟研究所와 蘇聯·東歐經濟研究所 등에서 環日本海經濟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³⁸⁾ 환일본해경제권은 日本, 北韓, 韓國을 주요 구성국으로 해서 日本海를 共通의 內海로 하고 있는 지역이다. 蘇聯의 극동지역(특히 沿海洲, 하마로프스크地方, 사할린州, 아무르州), 中國의 東北三省(黑龍江省, 吉林省, 遼寧省)이 중심지역이 되는 「환일본해경제권」은 韓國의 입장에서 볼 때 東北아시아經濟圈에 속한다.

日本이 구상하고 있는 환일본해경제권은 현재 아시아의 육지면적중 약 20%, 전인구의 약 10%(약 2억 9천만명), 약 3兆달러에

36) 「韓日經協」(1991. 4), pp. 2~20; 尹正錫, “大平政權의 權力構造와 日本外交課題 優先順位,” 「政策研究」(1979. 1), pp. 39~51.

37) Akada, op. cit., pp. 324~327.

38) “環日本海經濟圈における國際經濟協力,” 「ソ聯東歐貿易調査月報」, (1990. 4), pp. 22~29.

달하는 국민총생산액이 집중되어 있는 大經濟圈이다.³⁹⁾ 환일본해 경제권은 日本이 이 지역에 있어서 자국의 고도기술과 자본, 韓國의 기술과 자본, 蘇聯 極東의 풍부한 천연자원(석탄, 천연가스, 비철금속, 목재, 수산물), 中國의 농산물과 노동력, 北韓의 광산물과 노동력을 상호보완하여 互惠의 原則 하에 협력과 국제적 분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日本이 제안하고 있는 환일본해경제권 구상은 역내에서 冷戰이 종식되고 긴장이 완화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점차 제고되고 있다.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은 블라디보스토크 연설(1986. 8)에서 蘇聯이 아시아·태평양국가임을 선언하고, 蘇聯 極東地方의 경제발전을 日本을 필두로 하는 太平洋 諸國의 거대한 경제력과 연계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고르바초프는 1991년 4월 東京을 방문하여 「東北아시아협력지대」의 창설을 제창하고, 이 협력지대가 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日本이 의도하는 지역경제권형성 구상은 경제블럭화 추세에 따라, 특히 유럽공동체의 통합이 가속화될 경우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日本이 그들의 의도대로 지역경제권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견제와 의구심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日本은 美國이 주도하는 亞·太경제협력각료회의(APEC)를 통해서 역내의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를 전제로 한 自由貿易經濟圈

39) 「韓日經協」(1991. 4), p. 3.

을 주창하였다.⁴⁰⁾ 이와 관련 日本은 최근 말레이시아가 제안한 바 있는 동아시아경제협력체(EAEC)를 점진적으로 해체하여 亞·太경제협력각료회의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와 달리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은 美國을 배제한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되기는 어려우며 이는 日本 뿐 아니라 中國 역시 인정하고 있다.

4. 蘇聯의 東北亞政策에 대한 日本의 對應

이 절에서는 蘇聯의 대동북아정책 변화에 대한 日本의 대응을 안보 및 경제현안 중심으로 兩者 및 多者間 側面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가.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에 대한 日本의 認識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蘇聯의 동북아정책은 큰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고르바초프는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에서 中·蘇의 관계개선(國境問題 및 軍縮)과 亞·太地域의 핵 확산반대 등 포괄적인 군축을 제의했으며, 또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는 蘇聯, 中國, 日本, 韓國, 北韓의 연안근접지역의 해·공군동결과 활동제한을 위한 평화회의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1989년 5월의 中國訪問에서 1991년 중거리핵 전력(INF) 166기 추가폐기, 극동지상군 12만명을 포함한 아시아

40) 와타나베(渡邊恒三) 통산성장관은 1991년 11월 12일 亞 太경제협력각료회의 연설에서 자유무역 및 투자의 실현 등을 위한 지역경제권화를 주장하였다. 「朝日新聞」, 1991. 11. 12.

지역 병력 20만명 삭감, 제11비행연대 해체, 그리고 극동태평양함대 16척의 퇴역 등을 실행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1991년 4월 고르바초프는 동경을 방문하여 일본중의원 본회의 연설을 통하여 군축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美·蘇·日 3角 安保會議 개최를 제의하였다. 또한 그는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위한 美國, 蘇聯, 日本, 中國, 印度 간의 5개국회의 개최도 제안하였다.

日本은 蘇聯의 軍縮宣言에 대하여 동북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極東蘇聯軍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삭감내용, 대상지역, 그리고 무기의 수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한 日本은 亞·太地域의 해군력을 군축협상 대상으로 삼는 이유에 대해서 蘇聯이 이 지역의 해군감축협상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세한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美國을 약화시키는 한편, 日本의 해군력 증강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와 같은 선언을 제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蘇聯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1991년 8월 20일 보수쿠데타가 발발하였으나 결국 개혁과의 득세로 귀결되었다. 蘇聯은 현재 국내적으로 고르바초프의 공산당 해체 선언과 연방의 재정립 등의 문제로 시련을 맞고 있다. 그러나 개혁정책과 美·蘇 데탕트는 계속 추구될 것으로 보인다. 日本은 동북아에서 美國과 蘇聯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화 및 쇠퇴되었다고 인식하고 있고, 美·蘇의 脫冷戰化에 따른 화해 및 군축실

현이 가시화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다자간 안보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日本은 동북아에서 美·蘇간의 군축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우선 美國의 극동주둔병력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駐日美軍의 감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空白을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으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日本의 군사관계자들은 蘇聯이 유럽철수병력을 우랄 동북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군축제안은 노후화된 재래식군비의 감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⁴¹⁾ 시베리아 해안지대, 사할린, 캄차카반도 등 日本과 인접한 蘇聯空軍基地의 전투기는 대략 2,500대이며, 이중 10%는 SU-27(마하 3, 작전반경 1천Km), MIG-31 등 蘇聯의 최신 전투기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배치는 美國 및 日本에 새로운 차원의 위협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41) 蘇聯의 軍事力(「防衛白書」, 1990年版과 1991年版的 比較)

		지상군	해 군	작전기	백파이어
90 년 판	총 수	약 200개사단 (190만명)	약 2990척(잠수함 340) 767만톤	약9490기	약360기
	극 동	41개 사단	약 830척(잠수함 135중 에서 原潛75)194만톤	약2240기	약85기
91 년 판	총 수	약 175개사단 (165만명)	약 2750척(잠수함 290) 694만톤	약8380기	약330기
	극 동	38개 사단 (34만명)	약 820척(잠수함 105중 에서 原潛65)212만톤	약2060기	약125기

日本은 蘇聯事態 이후 최근까지도 자위대가 극동소련군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防衛力 增強을 계속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主要 兩者關係에 미치는 影響과 日本의 對應

(1) 日·蘇間 北方領土問題 解決 摸索

최근 蘇聯의 유연한 대일외교는 경제협력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日本이 蘇聯을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간주하고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日·蘇關係 개선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북방4개도서-하보마이(齒舞)군도, 시코단(色丹), 구나시리(國後)섬, 에토로쿠(擇捉)섬-문제이다. 북방영토는 蘇聯軍이 1945년 8월 9일 對日宣戰布告 직후 남사할린(樺太)과 쿠릴-일본명 치시마(千島)-열도를 점령하면서 북방 4개도서를 점령하면서 蘇聯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日本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시 남사할린과 쿠릴열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하였다.⁴²⁾

전후 日本의 대소외교정책은 2개의 기본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북방영토의 반환이 日·蘇關係 개선의 선행조건이라는 것, 둘째, 日本은 美國의 대소전략에 의존 내지는 협력하면서 대소 관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日·蘇關係는 단순한

42) Wolf Mendl, "Stuck in a Mould: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Soviet Union," *Millenium*, vol. 18, no. 3 (Winter 1989), pp. 455~478.

영토반환의 문제가 아니라 美·蘇의 대결이라는 맥락에서 고려되어 왔다. 日·蘇關係는 美·日同盟關係내에서 양국간의 시각이 조정되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美·日·蘇 삼각관계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소련사태 이후 美·蘇關係의 실질적인 개선이 증진됨에 따라 日·蘇關係도 역시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⁴³⁾ 그러나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蘇聯의 오오츠크해군 및 극동지상군과 美國의 태평양함대 및 주한 주일미군 사이의 非對稱性을 고려할 때, 日·蘇關係의 개선은 美·蘇 사이에 군사적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은 이 지역의 군사구조의 변화가 진정한 美·蘇의 화해를 가능케 하고, 日本과 蘇聯 간의 北方領土問題 및 經濟協力關係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日本은 대소협상에 있어서 美·蘇關係, 북방도서문제, 그리고 경제지원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政經不可分」의 원칙을 蘇聯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연방의 옐친대통령은 日本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북방 4개도서에 대하여 종래의 5단계 해결론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早期解決을 시사하였다.⁴⁵⁾ 이러한 蘇聯의 입장변화는 자국

43) 1991년 3월에 蘇聯을 방문한 자민당의 오자와(小澤) 간사장은 북방 4개섬에 대해 日本의 주권을 인정할 경우 민간자금협력을 포함 모두 3조엔(180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및 원조를 제안했다. 「日本經濟新聞」, 1991. 3. 25.

44) 옐친의 5단계 해결책은 蘇聯의 영토문제의 존재인정, 4개도서의 자유경제지역화, 4도서의 非軍事化, 평화조약체결, 4개도서 귀속문제의 다음 세대 해결 등으로 4단계까지는 약 15~2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경제원조는 먼저받고 반환은 다음 세대로 미룬다는 것이다. 日本은 이를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왔다.

45) 「朝日新聞」, 1991. 9. 13.

의 경제회복을 위하여 서방세계에 1천억달러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시점에서 언급된 것은 당면한 경제난을 조속히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진다. 이러한 日本의 영토반환 요구와 蘇聯의 日本원조 필요성으로 양국의 이해가 조정되고 있으며 도서반환 댓가는 150억달러 정도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북방영토 반환의 저해요인인 美·蘇의 전략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최근 蘇聯은 상당한 군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⁴⁶⁾ 옐친은 러시아연방내 핵무기를 50% 감축한다고 발표하였고, 러시아연방 그라초프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약 320만명에 달하는 현재의 蘇聯軍兵力을 절반수준인 150만내지 200만명 정도로 감축한다고 밝혔다.⁴⁷⁾ 이는 蘇聯이 동북아지역의 군사정책에서도 역시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토문제에 임하는 蘇聯측의 입장은 國民感情을 바탕으로 한 지도자의 정치적 입지와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蘇聯은 대내외적으로 4개도서를 돈을 받고 팔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먼저 日本으로부터 經濟援助를 받은 후 점차적으로 북방도서 반환을 여론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日·蘇 양국은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1956년 국교정상화 공동선언에서 채택한 바 있는 시코탄, 하보마이 2개섬의 先返還問題

46)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쿠바주둔 소련군을 철수시키고 양국의 同盟關係의 재조정을 언급하였다. 「朝日新聞」, 1991. 9. 12.

47)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13, 1991.

로부터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최근 日本政府는 蘇聯의 심각한 경제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5억달러의 대소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⁴⁸⁾ 이에 대하여 蘇聯은 북방4개도서에 주둔하고 있는 8천명의 병력중 3분의 1을 즉각 감축할 것이며 도서반환은 2000년내에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日本과 蘇聯의 협상은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소련의 국내정치의 안정이 이루어질 경우 대소 경제협력 및 진출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며, 이는 日·蘇關係 개선의 최대현안인 영토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그러나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양국은 국민감정, 명분, 원조 및 경협범위, 그리고 군사상황까지도 고려하여 협상을 시도하여야 하므로 가지적 결과를 창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방영토는 日·蘇 양국의 협상과 美國의 양해 내지는 지원 속에 2000년내로 반환될 가능성이 높다.

(2) 日·蘇安保協議 摸索

日本과 蘇聯은 또한 1991년 10월 16일 양자간 「안보수시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 기구는 亞·太地域의 안전보장에 대해 日·蘇 양국의 외교와 국방관계자들이 수시로 만나 안건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양국의 합의의 배경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북방영토문제와 관련한 日本의 對蘇 경제지원 약속과 북

48)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October 14, 1991.

방 4개도서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병력(8천명)의 3분의 1 감축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日·蘇 양자간 안보협력기구에 대하여 이글버거 美 국무차관은 日·蘇關係 개선과 그에 따른 장래에 대해 아무런 우려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蘇聯은 영토문제와 군축에 있어서 日本과의 협력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日·蘇關係의 개선은 향후 양국관계가 전략적 관계까지 발전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美·日關係에 미치는 影響

美國의 영향력 축소와 蘇聯의 퇴조에 따라 美·日關係는 1990년 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美·日安條約은 日本의 안보역할 증대와 관련하여 새로운 존재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첫째, 동북아안보에서 日本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둘째, 美·日간의 안보동맹을 쌍무적인 관계로 강화하여 美國의 지원 아래 세계적인 차원에서 日本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美·日安條約은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역내의 불안정에 대비하여 군사적 균형을 유지시키는 안전판역할을 하는 동시에, 日本을 美·日安條約의 틀 속에 묶어 둠으로써 주변국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있다. 또한 역내 국가들은 독일이 전후 나토체제의 틀 속에 놓여 있음으로 해서 유럽제국의 불안을 해소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美·日條約을 유지하는 것이 日本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⁴⁹⁾

49) 크로우제독은 日本의 군비증강과 관련하여 병마개논리를 제시한 바 있다. William

경제적인 면에서도 美·日協力體制는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美·日 무역마찰에 따른 양국간 안보관계의 변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호주의 압력 등 美國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日本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對美關係를 유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美國과 日本은 구조조정 및 협상방식 (SCHI) 등을 통하여 양국간의 경제마찰, 지역차원 경제권 구상 (APEC 등) 및 세계적 차원의 경제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⁵⁰⁾ 日本은 경제력을 배경으로 美·日安保條約을 美國 위주의 일방적 체제에서 보다 대등한 雙務的 體制로 전환하는 수준에서 日本의 안보역할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日本의 정치적 역할증대는 美國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도 하나, 美國은 1990년대에도 군사패권 추구를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4) 中·日關係에 미치는 影響

경제적인 차원에서 日·蘇 경제협력 강화는 日本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한 中·蘇간의 경쟁을 유도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中·蘇는 對日依存度の 심화를 방지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韓國과의 경제협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또한 中國은 北韓의 고립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하여 日本의 對北韓 수교교섭

J. Crowe, Jr. and Alan D. Romberg, "Rethinking Pacific Security," *Foreign Affairs*, vol. 70, no. 2 (Spring 1991), p. 135;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9, 1991; 江田五月 外, "現代の奇視 日·米安保條約," 「文藝春秋」(1990. 7), p. 136.

50) Carter and Nakasone, op. cit., p. 4.

을 측면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보적인 차원에서 美國의 상대적 국력약화와 蘇聯의 쇠퇴로 인하여 日本은 역내에서 中國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어 양국이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日本은 中國의 서남태평양 해군진출이 자신의 海上交通路에 부담이 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향후 센카쿠열도의 領土紛爭도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日本은 경제적 측면에서 中國市場과 자원확보를 바탕으로 日本의 경제역량을 증대시키고 中·日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中國의 근대화 수행에 있어서 사안에 따른 제한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면 中國의 근대화는 군사력의 현대화를 수반하여 中·日 軍事對立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즉 日本은 對中國關係에 있어서 경제면에서의 제한적 협력과 군사면에서의 견제라는 이중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5)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동북아지역에서 데탕트가 새로이 전개되는 것과 때를 같이 韓國과 蘇聯의 국교수립에 대한 日本의 반응은 한반도에 있어서 자국의 영향력확대를 위한 對北修交 교섭의 추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인 핵사찰수용문제의 해결이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北韓은 한반도에 있어서 美國의 핵우산 제거를 골자로 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요구하는 한편, 독자적인 핵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日本은 對北韓 수교협상의 주요 현안인 핵사

찰문제와 관련하여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정을 위하여 공격이 아닌 방어적 차원에서의 핵우산 보호가 필요하다는 韓·美 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北韓의 핵사찰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北韓의 핵사찰문제는 日·北韓 修交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日本の 대한반도정책의 일환인 日·北韓 수교회담에서 日本은 근본적으로는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을 통한 한반도의 現狀維持가 그들의 국익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日本은 對 韓半島政策에서 다소 韓國으로 경사진 南北韓 등거리외교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은 남북통일협상 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발언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자간 접근방식인 「2+4」의 구도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⁵¹⁾

다. 多者關係에 미치는 影響과 日本의 對應

(1) 安保的 側面

蘇聯은 최근 東北亞 및 亞·太地域國家간의 다자간 신뢰구축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蘇聯이 제안한 바 있는 「범아시아포럼」(1990. 9)은 東北亞 및 亞·太地域내 국가간의 다자간 협력기구 구상으로서 역내의 경제·안보문제 뿐 아니라 환경문제까지도 협의하

51) 오키노기 마사오, “北韓의 政策變化와 北·日國交交渉,” 民族統一研究院 主催 第1回 國際學術會議 發表論文 (1991 10. 29), p. 9. 오키노기는 日本이 원하는 한반도 교차승인구도는 「느슨한 2+4」라고 주장하였다.

는 포괄적인 기구를 창설하자는 것이었다. 이 포럼은 신뢰구축의 실현방안으로서 군축을 포함한 亞·太 다자간 협력기구이다. 고르바초프는 1990년 4월 방일을 계기로 아시아지역 국가간의 상호불신을 제거하고 군축축진을 내용으로 하는 「도쿄선언」을 제안하였다. 「도쿄선언」은 아시아지역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美·日·蘇간의 3국회의를 우선 개최하고, 안보와 경제협력문제를 협의할 美·日·蘇·中 인도간 5개국확대회의의 창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은 蘇聯의 「범아시아포럼」과 「도쿄선언」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주요 이유는 동서 양진영이 대칭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시아의 군사대립 구도는 美·蘇 군사력의 비대칭성, 다양한 쌍무관계의 안보체제 및 역내 국가간 영토문제의 미해결 등으로 광역안보회의의 창설이 아직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에서의 美·蘇의 군축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東北亞秩序가 최근 美·蘇 양국 이외에 中國과 日本의 부상으로 세력배분이 다원화되고 있어 4강국간의 이해조정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⁵²⁾

日本은 또한 蘇聯의 안보제안이 日本의 역할증대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日本은 蘇聯軍의 감축, 領土問題의 해결이 따르지 않는 蘇聯의 제안은 실현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전용 제안

52) Akio Watanabe, "Japan's Role in the Changing Northeast Asian Order,"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2, no. 2 (Summer 1991), pp. 261~269.

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안보기구 창설을 위해서는 美·蘇의 동북아전략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美·蘇關係 개선과 양국의 국내문제는 대동북아전략 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첫째 蘇聯의 대변혁으로 인한 냉전의 사실상 종식, 둘째, 美國의 경제력 약화로 인한 군사력 증강의 한계, 셋째, 美·蘇의 상대적 국력약화에 따른 힘의 공백상태에 대한 아시아국가들의 우려 등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은 예상되는 美·蘇의 대동북아전략 변화에 대응하고 역내의 안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1991년 7월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PMC)에서 亞·太地域에서 새로운 안보협력기구(아시아 안보포럼)를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日本과 동아시아 지역국들은 세계경제의 불려화현상과 美·蘇의 군축으로 인한 이 지역의 힘의 공백에 따른 지역불안의 증대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최근 지역국들과 다자간 안보협력기구의 창설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日本의 구상은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자국의 주도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³⁾ 그러나 美國의 조심스러운 반대로 日本의 안보포럼 구상은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최근 베이커 美국무장관은 北韓의 핵개발 저지 및 동북아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다자간 접근(「2+4」)을 주장한 바 있다.⁵⁴⁾ 이

53) Michael Vatisiklis, "Japan's Role in the Changing Northeast Asian Order,"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2, no. 2 (Summer 1991), pp. 261~269.

54) James A. Baker, III, "America in Asia: Emerging Arch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vol. 70, no. 5 (Winter 1991/92), pp. 1~18.

는 美國이 자국의 구도하에 日本을 참여시켜 탈미현상을 견제하는 한편, 日本의 정치적 역할의 점진적 확대를 수용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美國의 구상은 韓國의 반대로 北韓의 핵개발 저지와 관련된 다자간 접근방식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으나 지역 데탕트 심화추세는 베이커 美國무장관이 주장한 다자간 신뢰 구축 및 군축의 실현가능성을 높힐 것이다.

(2) 經濟的 側面

日本은 세계경제의 지역화 추세에 대비하여 동북아경제권 구상에 적극적이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日本의 목표는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자원과 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中·蘇의 경제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볼 수 있다.

中國과 蘇聯은 개방과 개혁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日本의 자본과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日本, 中國, 蘇聯의 경제관계는 상호보완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日·北韓關係 역시 北韓이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日本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필요로 할 것이고, 日本은 北韓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핵사찰수용문제가 해결될 경우 北韓과의 수교를 서두를 것이다.

이상과 같은 日本의 對中國, 蘇聯, 北韓 경제협력의 촉진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이 심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中國과 北韓이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경제협력의 확대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둘째, 역내 국가 간의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때문에 수평적인 협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셋째, 日·蘇關係는 북방영토의 반환문제 때문에 日本의 정경불가분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美國의 전략적 이익이 고려되어야 할 뿐 아니라, 蘇聯, 中國, 北韓의 국내정치 불안 등 日本의 對中國, 蘇聯, 北韓 경험증대에 있어서 여러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 日本은 자신이 제안한 동북아 지역경제권 구상인 環日本海經濟圈 제안도 단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美國은 日本 주도의 배타적인 지역경제권 형성을 반대하고 中·蘇를 포함한 다른 역내 국가들도 日本 주도를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국들간의 경제협력 증대와 타지역에서의 경제블럭화 추세에 대응하여 지역경제협력기구 창설에 대한 주장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추진방향은 배타적인 지역경제 협력기구보다는 개방적인 경제협력협의체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 록

<도표 1> 防衛力 增強計劃의 進陟狀況

防衛力 整備計劃	年度	主要內容	特徵
第1次 防衛力 整備計劃	1958~1962 (일부는 1960)	주일미지상군의 감축으로 인한 陸·海·空軍의 골간방위력 구축. 육상 자위대 18만명, 해상자위대 艦艇 12만4천톤과 航空機 20대, 항공 자위대 33비행대대와 항공기 1300기의 보유가 이루어졌다.	1957년 美國으로부터 空對空 미사일 병기를 지급 받았다.
第2次 防衛力 整備計劃	1962~1966	노후된 병기의 교체 및 일본 국산화에 주력. 육상자위대는 지대공 미사일 나이키를 장비한 3개대대 배치, 편제가 10개사단에서 13개 사단으로 증편. 해상자위대도 증편되었고 공대공미사일의 양산이 이루어졌다. 총 예산은 1조 1,635억엔(약 45.5억 달러)	2차방은 1960년 부터 실시 될 예정이었으나 美·日安全保障條約의 개정으로 1961년에야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경제력에 힘입어 착실히 방위력이 이기간에 증강되었다.
第3次 防衛力 整備計劃	1967~1971	베트남전쟁의 격화(1965)로 인한 통상병기의 효율성이 강조되었다. 육상 자위대 V-107, HU-1 헬리콥터 83기 증강, 장갑차 160대, 61형 탱크 280대, 호크미사일 3개대대 신설 및 1800명의 공수부대 창설. 해상자위대 대잠 헬리콥터 회위함 1척 및 기타 호위함 13척, 잠수함 5척건조. 항공자위대 나이키·허큘리스 5개 대대 증강. 총 예산은 2조 3,400억엔(약 65억달러)	자위대의 전력을 미국의 세계전략인 柔軟反應戰略(flexible response)에 연결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동북아에서 美國의 역할을 보완하였고 재정분담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防衛力 整備計劃	年度	主要內容	特徵
第4次 防衛力 整備計劃	1972~1976	오키나와반환에 따른 지역 방위체제의 정비가 목적이었다. 육상자위대 병력18만명 확보 탱크 280대, 장갑차 170대 증강, 해상자위대 대잠헬리콥터 호위함 2척 및 호위함 9척, 잠수함 5척, 항공자위대 F-4E 46대, 지원 전투기 127대. 지대공미사일 2군창설. 총예산은 4조 6,000억엔(약 127억 달러)	이 계획 기간중 자위대 위헌론이 야당에 의하여 제기되어 계획 달성에 차질을 빚던 시기였다.

〈도표 2〉 59中期방위력 정비계획 : 주요 장비명

장 비 명		장 비 수 량
육 상 자위대	전차	246대
	화포	277문
	장갑차	310대
	지대함유탄	54기
	대전차 헬리콥터(AH-1S)	43기
	수송헬리콥터(CH-47)	24기
	지대공유도탄(호크)	4.5군
해 상 자위대	호위함	9척
	잠수함	5척
	대잠헬리콥터	66기
	소해헬리콥터(MH-53E)	12기

장 비 명		장 비 수 량
항 공 자위대	요격전투기(F-15)	63기
	수송기(C-130H)	7기
	수송헬리콥터(CH-47J)	12기
	조기 경계기(E-2C)	5기
	중동연습기(T-4)	93기
	지대공유도탄(패트리엇)	5군

구 분	1968	1987	1988	1989	1990	中 期 計 劃
방위비	약18%	약19%	약20%	약21%	약22%	약18조 4,000억엔 (1985년도 가격)

자료: 防衛廳 編, 「防衛白書 1989」(東京: 防衛廳, 1989).

<도표 3> 防衛計劃大綱의 進陟狀況

구 분		단 위	防衛計劃 大 綱	89년도 완성시	中期計劃 완성시(1990)	
자위관 정수		만 명	18	18	18	
육상 자위 대	기간	평시지역배치	사단	12	12	12
	부대	부대 기동운용부대	혼성단	2	2	2
			기갑사단	1	1	1
			특과단	1	1	1
			공정대	1	1	1
			헬리콥터단	1	1	1

第5章 中國의 東北亞政策과 對蘇對應

최근 蘇聯에서 전개되고 있는 급격한 변화에 대해 中國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 1990年代 東北亞秩序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章에서는 1990年代 동북아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는 국제질서 변화에 대해 中國이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의 동북아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검토하고, 蘇聯의 평화적 공세에 대해 中國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東北亞와 中國의 國家利益

中國은 國家安保를 유지하고 經濟利益을 추구하는데 있어 東北亞가 가장 중요한 地域이라고 認識하여 왔다. 北京이 中國政治의 중심무대였으며, 揚子江 유역의 上海가 中國經濟의 심장지대였다. 또한 東北3省(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은 공업지대로서 中國經濟와 安保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더불어 日本의 침략과 韓國戰爭 등 역사적 요인으로 인하여 中國은 韓半島를 자신의 “心臟을 겨누고 있는 短刀”라고 간주하여 왔으며, 근대 이래로 日本을 자신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대상의 하나로 여겨왔다.¹⁾ 北京과 上海가 中國의 동북부와 동부에 위치하고 있고 한반도와 日本이 東北亞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동북아시아

1) 梁伯華, 「近代中國外交의 巨變」(北京: 商務印書館, 1990), pp. 62~106; “Japanese

는 필연적으로 中國의 國益實現에 있어서 사활이 걸려있는 지역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美國의 對東北亞 적극정책과 최근 日本의 아시아에서의 政治·軍事的 영향력 강화 움직임은 이 지역에 대한 中國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동북아가 세계경제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日本과 韓國이 中國의 經濟現代化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가일층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바, 동북아시아는 앞으로도 中國의 경제적 이익추구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지역이 될 것이다.

가. 安保利益

阿片戰爭(1840~1842)에서의 패배 이후 中國은 西歐 列強의 침략으로 약 100여년 동안 國家主權을 상실당하였던 바, 國家安保의 유지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中國에게 있어서 核心的인 利益(hard-core interests)²⁾ 추구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자신의 안보에 직간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에 대해 中國은 항상 경계의 태세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冷戰時代에는 美國을 주요 안보위협 요소로 간주하여 中國은 「兩大陣營論」의 전략구도하에 蘇聯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과

Agression: Forgive, Never Forget," *Beijing Review*, September 30 ~ October 6, 1991, p. 4.

2) Thomas W. Robinson, "National Interests," in James N. Rosenau, ed.,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The Free Press, 1969), pp. 183~185; Hans J. Morgenthau, *Dilemmas of Politic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p. 66.

對美 聯合戰線의 구축을 모색하였다. 1969년 中·蘇 國境衝突 이후에는 蘇聯을 가장 직접적인 안보위협 국가로 인식하여 中國은 美國 등 서방국가들과의 연대관계를 모색하였다. 中國共產黨 第12次 全國代表大會(1982. 9)에서는 「獨立自主外交」를 향후 중국외교의 지침으로 결정하여, 中國이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응분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천명하였다.³⁾ 그후 中國은 蘇聯과 美國이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안보위협을 동시에 고려하여 양대국 사이에서 均衡者의 역할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국익에 가장 부합된다고 인식하였다.

동북아시아는 地政學的 요인으로 인하여 中國의 安保利益에 있어 사활이 달려있는 지역이다. 세계 강대국인 美國, 蘇聯, 日本이 이 지역에서 중대한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중진공업국가의 대열에 진입한 韓國과 臺灣이 이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또한 中國의 동북부가 자신의 국가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최근 日本의 軍事大國化 가능성 증대는 中國에게 동북아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 주고 있다.

中國은 對外平和와 對內發展, 西方의 對中國 「和平演變」 기도에

3) 胡耀邦, “全面開創社會主義現代化建設的新局面,” 「中國百科年鑑 1982」(北京: 中國百科全書出版社, 1982), pp. 11~13. 中國은 독립자주외교의 내용과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첫째로, 반패권주의, 세계평화, 국가간 우호관계 촉진, 둘째, 모든 국가의 일률적 평등, 셋째, 독립자주원칙의 견지, 넷째, 어느 강대국에게도 불의지, 다섯째, 평화공존 5개원칙의 견지, 여섯째, 제3세계와의 단결과 협력 강화, 일곱째, 군비경쟁 반대, 여덟째, 대외개방 채택, 아홉째, 국제연합헌장의 원칙 존중, 열째, 각국 인민간 교류 중시 등이다.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中國外交概覽 1987」(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87), pp. 15~19.

대한 반대투쟁, 그리고 5년내 國家統一 실현을 당면 3大 安保課題로 설정하고 있는 바,⁴⁾ 中國은 안정적인 동북아환경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社會主義 盟邦인 北韓과의 이념적 연대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며, 日本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신장 기도를 견제함과 동시에 美國의 대만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원을 「內政干涉」이라는 이유를 들어 적극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蘇聯과 東歐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공산주의이념의 붕괴현상에도 불구하고 中國은 美國과 日本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蘇聯과의 이념적 갈등을 전개하기보다는 正常的인 國家關係를 지속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⁵⁾ 이는 中國이 강력한 위협세력에 대처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다른 어느 목표보다도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中國은 한반도가 자신의 국가안보에 끼칠 수 있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희망하고 있다. 만약 한반도의 세력균형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中國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고려하에 中國은 기본적으로 韓國의 조속한 통일실현보다는 現狀維持를 더 원하고 있다.⁶⁾ 다시 말하자면, 中國은 한반도가 美·日 등 해양세력의 위협을 완화시켜 주는 「緩衝地帶」로서

4) 羅水, “九七前解決臺灣,” 「爭鳴」, 總第167號 (1991. 9), pp. 16~17.

5) “Li Peng Speaks on Current World Issues,” *Beijing Review*, September 9~15, 1991, p. 8; “China Respects the Soviet People’s Choice,” *Beijing Review*, September 2~8, 1991, p. 4.

6) 정종욱, “東北亞秩序와 中·日의 역할,” 「轉換期の 東北亞秩序와 南北韓關係」,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시리즈 91-01, 1991. 6. 13,

남아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⁷⁾

나. 經濟利益

第11期 3中全會 (1978. 12) 이후 4개현대화의 달성이 中國의 최우선적인 國家目標가 되었다. 4개현대화 가운데에서도 농업과 경공업 그리고 과학기술의 현대화가 가장 긴급하게 다루어졌고, 國防의 現代化는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었다. 中國은 국가경제의 발전이 국가안보 유지의 전제조건이며 대외적으로 「獨立自主的」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하는 礎石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中國은 현재 경제적 번영에 의한 국력 신장을 최우선적인 국가목표로서 설정하고 있다.⁸⁾ 동북아시아는 中國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현재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日本을 비롯하여, 韓國, 臺灣 그리고 홍콩 등 中進工業國家들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中國 자신의 經

7) 中國은 향후 1990年代 日本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따라서 中國은 韓半島에 배치되어 있는 美軍이 中國에 대한 日本의 위협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희망할 것이다. Byung-joon Ahn, "Strategic Trends in East Asia," *The Pacific Review*, vol. 4, no. 2 (1991), p. 115. 한편 中國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38선을 통과 압록강까지 진군하여 자신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였기 때문에 한국전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사실도 中國이 한반도를 자신의 안보를 위한 완충지대로서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준다. 中國이 한국전에 참전을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New York: The Macmillan Co., 1960), pp. 77~79.

8) 鄧小平, "目前的形勢和任務," 「鄧小平文選(一九七五~一九八二)」(北京:人民出版社, 1983), pp. 203~237; 胡耀邦, "全面開創社會主義現代化建設的新局面," 「中國百科年鑑 1982」(北京:中國百科全書出版社, 1982), pp. 5~8; "Improving Home Economy, Promoting World Peace," *Beijing Review*, October 7~13, 1991, p. 4.

濟特區가 대부분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한편 美國經濟에 있어서 서부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세계경제의 중심이 亞·太地域으로 이동함에 따라, 美國은 동북아를 더욱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지역에 대한 中國의 경제적 이해를 한층 강화하도록 하였다.

中國은 第13期 7中全會 (1990. 12)에서 2000년까지 추진할 경제계획을 확정하였다. 여기에서 中國은 2000년까지 1980년의 4배에 이르는 국민총생산량을 달성하여 中國人民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힘에 벽찬 목표를 제시하였다.⁹⁾ 中國은 이러한 방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資本과 技術 등 經濟的 基盤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북아지역 선진국들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이 필요하다.¹⁰⁾ 이러한 사실은 中國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관계증진을 위한 노력을 추구하도록 할 것이다.¹¹⁾

9) 中國은 2000년까지 「溫段階」에서 「小康段階」로 중국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의 개혁 개방정책에 의해서 이룩한 「溫飽段階」는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衣食問題를 해결한 상태를 지칭하며, 향후 제2단계의 경제개혁에 의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小康段階」는 醫療 住宅問題 등 어느정도 여유있는 생활을 향유하는 단계를 일컫는다.

10) 李鵬, “關於國民經濟和社會發展十年規劃和第八個五年計劃綱要的報告,”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公報」, 1991年 第12號 (1991. 5. 10), pp. 414~448.

11) Mao Liben, “Foreign Strategies in the 90s,” *Beijing Review*, August 26~September 1, 1991, pp. 13~14.

2. 中國의 安保目標와 安保政策

가. 安保目標

1990年代 동북아에서의 中國의 핵심적인 안보목표는 「獨立自主」와 體制維持를 보장해 줄 수 있고 社會主義 現代化建設과 改革·開放에 유리한 安保環境을 造成하는 것이다.

(1) 獨立自主와 影響力 增大

中國共産黨 第12次 全國代表大會에서 독립자주 외교노선을 중국 외교의 지침으로 결정한 이후, 中國은 美·蘇 양대국의 霸權追求에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이들과의 平和共存을 강조해 왔다. 中國은 美國과 蘇聯이 미칠 수 있는 위협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들 양국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自國의 安保利益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獨立自主 外交政策의 근본 취지는 美·蘇의 패권추구 전략하에서 中國의 안보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中國은 동북아지역에서 美·蘇의 軍事力을 축소시키고 이를 통해 이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안보 목표로 삼아 왔다.¹²⁾ 1990年代에도 中國은 美·蘇에 대한 牽制와

12) Thomas W. Robinson, "National Interests and Objectiv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U. Alexis Johnson, et. al. ed., *China Policy For The Next Decade* (Boston: Oelgeschlager, Gunn & Hain, 1984), pp. 130~131.

協調를 지속하는 獨立自主 外交政策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동북아에서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中國은 동북아에서 美·蘇의 패권추구에 반대할 것이며, 어느 일방에 의한 主導權 행사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이다. 한편 中國은 美·蘇와의 平和共存을 강조함으로써 안정된 안보환경을 유지하고 역내에서 역할 증대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990年代 中國은 東歐와 蘇聯에서 사회주의가 몰락함에 따라 자신의 社會主義體制 維持를 위해 美·蘇를 위시한 역내 강대국과의 평화공존을 모색하고자 할 것이다.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中國은 美國을 비롯한 西方의 制裁에 의해 威脅을 느끼게 되었고, 蘇聯과 東歐의 변혁에 따라 中國은 더욱 심각한 體制危機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국면에 대처하기 위해, 中國은 對內的으로 體制團束을 강화하고 對外的으로는 協力을 강조하고 있다. 1990年代에도 中國은 이러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므로써 자신의 安保에 유리한 환경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2) 平和的 周邊環境 造成

中國은 平和와 發展을 1990年代의 양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는 中國은 域內的 國際秩序가 安定되기를 바라고 있다. 中國에게 있어서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유지는 자신의 安保維持 뿐만 아니라 경제적 목표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동북아는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美, 日, 中, 蘇 등 4강의 이익이 교차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만

약 동북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中國은 필연적으로 美, 日, 蘇와 긴장관계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며, 결국 200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 목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中國은 1990年代에도 域内の 安定된 秩序維持를 중요한 安保目標의 하나로 간주할 것이다.

中國은 동북아지역 중에서 한반도를 자신의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요충이라고 판단하여 韓半島의 安定維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中國은 한반도의 장래가 中國의 안보에 불리한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을 우려하여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현상유지를 더 선호할 것이다.

최근 蘇聯에서 전개되고 있는 내부소요사태는 中國 邊境地域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中國 고위지도자들은 新疆, 西藏, 內蒙古 自治區를 빈번하게 방문하고 이들 지역의 안정유지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蘇聯內 少數民族의 분리독립에 따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中國은 蘇聯內部 不安에 대해 특별한 憂慮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新疆, 西藏, 內蒙古 그리고 臺灣 등지에서 소수민족의 독립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蘇聯內 中·蘇邊境 地域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은 中國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中國은 앞으로 蘇聯內部的 혼란이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수습되므로써 中·蘇 邊境地域이 안정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나. 安保政策

中國은 1990年代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고 안정된 주변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美·蘇의 霸權追求 반대, 日本의 軍事大國化 견제, 軍事力 現代化 추진, 역내의 核擴散 防止, 韓半島의 安定 유지 등의 安保政策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美·蘇의 霸權追求 反對

中國은 舊國際秩序가 強大國의 霸權主義와 強權政治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現國際政治秩序에도 이러한 요소가 상존해 있다고 주장하고, 公正하고도 合理的인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中國은 1990年代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은 國家間 相互 主權의 尊重, 相互不侵略, 內政不干涉, 平等互惠, 和平共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和平共處 五項原則」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中國은 이러한 國際秩序를 형성하므로써 비로소 國際社會에서 평등하고도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基礎위에서 國家의 自主獨立을 실현하고 國家安全을 확보할 수 있다고 認識하고 있다.

中國은 이와 같은 인식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國際秩序는 첫째, 어떤 국가도 霸權과 強權政治를 추구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국가가 자주독립적인 국가주권을 보유해야 하고, 둘째, 다른 국가에게 자국의 價値觀과 理念을 강압하지 말아야 하고, 셋째, 美·蘇 超強大國이 軍備競爭을 중지하고, 넷째, 地域 國家間 協力을 強化하고,

다섯째, 모든 국가가 國際聯合憲章의 義務를 遵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³⁾ 이와 같은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향후 中國은 동북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견제할 것이며, 국가간 평화공존을 역설할 것이다. 「反霸權主義」는 1970年代 이래 中國外交政策의 지침이 되어 왔다. 1969년 이후 中國은 蘇聯을 가장 위험한 敵이라고 인식하여 蘇聯 霸權主義에 대해 대항하는 외교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1980年代에 들어와 蘇聯의 위협이 점차 줄어들고 臺灣問題를 둘러싼 美國과의 葛藤이 심화되자 中國은 美·蘇 모두를 자신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국가로 간주하게 되었다. 中國은 美·蘇가 世界的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地域的인 차원에 있어서도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美·蘇에 대한 警戒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中國은 1990年代에도 동북아가 美·蘇의 霸權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견제하는 한편, 美·蘇와의 平和共存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2) 日本의 軍事大國化 牽制

中國은 1990年代 동북아 국제질서가 美·蘇 영향력의 상대적 減少와 日本의 政治·軍事的 영향력 확대라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과거 日本의 군사적 침략을 경험하였던

13) 萬光, “世界需要 樣的國際新秩序,” 「瞭望」, 1991年 第37期 (1991. 9. 16), pp. 39~41; 錢其琛, “建立和平穩定公正合理的國際新秩序,” 「人民日報」, 1991. 9. 26; “維護世界和平, 促進共同發展: 國際新秩序研討會發言摘編,” 「世界知識」, 1991年 第12期 (1991. 6. 16), pp. 2~9.

中國으로서는 동북아지역에서 日本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처가 자신의 안보적 차원의 政策目標에서 최우선적인 위치를 점하는 문제이다. 새로운 동북아 질서속에서 앞으로의 日·中關係는 단순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차원으로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며, 政治·軍事的인 側面에서의 葛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中國의 안보정책은 역내에서 強力한 軍事力을 지닌 日本이 出現하는 것을 牽制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中國은 동북아지역에서 과거 美國과 蘇聯의 침예한 軍事的 對決構圖가 희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갖지 못했던 영향력을 만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中國의 의도는 자연히 동북아에서 政治·軍事的 영향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日本의 의도와 대립될 수 밖에 없다.¹⁴⁾ 따라서 中國은 동북아지역에서 美國과 蘇聯의 軍事的 영향력 감소를 자신의 영향력 확대로 연결시키기 위하여서는 日本의 勢力膨脹에 대한 효과적인 牽制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中國의 동북아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 日本의 政治·軍事的 勢力膨脹 견제라는 中國의 정책목표는 현재로서는 표면화 할 수 없는 內面的인 정책 목표이다. 中國의 입장에서 볼 때 日本은 여전히 자신의 現代化建設에 필요한 資本과 技術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

14) Zhang Zhenhuang, "Building a Just World Order," *Beijing Review*, August 12~18, 1991, p. 8.

이다. 따라서 中國은 향후 日本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交流擴大와 政治·軍事的인 세력 팽창의 억제라는 목표를 어떻게 조화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

최근 中國은 日本과의 經濟的인 측면의 關係와 政治·軍事的 측면의 關係가 상호 대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우선 양국의 懸案問題 해결에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中國은 日本의 군사력 팽창에 대해 기본적으로 憂慮와 不滿을 갖고 있고 억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를 피하고 있다.

中國의 이러한 태도는 日本의 경제역량을 자신의 4개현대화 정책에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점과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서 적어도 地域問題에 대해서는 日本과의 協調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中國은 현상황에서 日本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日本 역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 과정에서 경제력을 바탕으로한 政治·軍事的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고, 일차적 대상지역인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中國과의 協調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日本은 中國의 입장에 정면 반대되는 태도를 삼가하고 있다.

이처럼 中國과 日本은 쌍방의 필요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이해가 상충되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 문제삼기보다는 가능한 분야에서 협조하면서 점진적으로 양국관계를 개선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금년 8월 가이후(海部俊樹) 총리의 중국방문에서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中國政府는 가이후 총리의 中國 방문중 中·日 양국관계의 발전은 亞·太地域의 安定과 發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과 양국간의 經濟協力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역점을 두었을 뿐 日本의 政治·軍事的 팽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中國이 日本의 정치·군사적 팽창에 대한 억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日本의 일정한 役割 增大를 묵인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얻어 내려는 태도로 평가되고 있다.

1990年代에도 中國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日本과의 協力關係를 확대하려 할 것이나,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역내에서 日本의 政治·軍事的 영향력 강화 기도에 대해 憂慮를 나타낼 것이다. 특히 1990年代 후반에 들어 日本이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게 될 경우, 中國은 日本의 역할 강화가 軍國主義로 발전될 것을 우려하여 日本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 할 것이다.

결국 1990年代 中國은 동북아에서 美國이 均衡者 역할을 지속하는 데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中國은 동북아에 배치된 美軍을 자신의 안보에 대한 威脅勢力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日本의 동북아 질서 파괴 가능성에 대한 牽制裝置로서 간주하면서 한반도와 기타 동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美軍이 완전히 철수하는 것보다는 계속 잔류하기를 바랄 가능성도 있다.

(3) 軍事力 現代化 推進

中國은 과거 軍事武器나 裝備보다는 兵力의 多寡에 의해서 전쟁

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인식하에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에 그다지 많은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¹⁵⁾ 4개현대화를 국가정책의 핵심목표로 설정한 이후에도 中國은 여전히 軍事力 現代化를 우선적인 정책사안으로 간주하지 않았다.¹⁶⁾ 이러한 軍事政策에 따라 현재 中國은 300만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軍兵力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蘇聯으로부터의 威脅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美國이 동북아질서를 주도하는 동시에 日本이 동북아에서 政治·軍事的으로 영향력을 강화하는 등 동북아의 軍事秩序가 변화됨에 따라, 中國은 기존 軍事政策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蘇聯이 中國의 安保에 커다란 위협을 미쳤을 때에는 많은 兵力을 필요로 하는 陸軍이 상대적으로 중요시 되었다. 7,3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中·蘇 國境地域의 安保를 유지하기 위해서 中國은 많은 兵力을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美國과 日本이 자신의 安保에 보다 직접적인 威脅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中國은 향후 空軍과 海軍을 더욱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7년 홍콩의 主權을 회수한 후, 中國은 臺灣을 통일시키는 것을 더욱 절실한 과제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中國과 臺灣 관계를 놓고 볼 때, 臺灣을 中國의 품안으로 완전히 통일시키기 위해서도 中國은 해군과 공군의

15) 中國은 과거 美國을 「종이 호랑이」라고 지칭하고 「인민전쟁」에 의해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다고 강변한 바 있다. 林彪, “人民戰爭勝利萬歲,” 「紅旗」, 1965年 第10期 (1965. 9. 3), pp. 1~28 참조.

16) 국방현대화를 4개현대화의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中國은 국방현대화를 다른 분야에 비해 덜 중시해 왔다.

역할을 강화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中國은 空軍力과 海軍力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軍事力 現代化政策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걸프戰에서 첨단무기의 위력이 입증됨으로써, 中國은 과거 견지해 왔던 「人海戰術」을 탈피하고 人民軍의 現代化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中國은 최근 군사력 현대화 작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중국군 참모총장 遲浩田은 100만명의 병력을 감축하여 여기에서 얻어지는 국방비 절감효과를 군사력 현대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공군력 현대화의 일환으로 蘇聯으로부터 24대의 SU27機를 구입하였다. 또한 中國은 현재 첨단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전배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항공모함을 건조하여 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中國은 1990年代 東北亞에서 蘇聯의 軍事的 役割이 축소됨으로써 생기는 힘의 공백이 美國과 日本에 의해서 대치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軍事力의 增強 및 現代化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美國과 日本은 尖端科學과 技術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이므로 中國은 이들의 軍事的 威脅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豫算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軍裝備의 尖端化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최근 中國은 과학자 錢學森이 과거 로켓, 유도탄 등의 개발에 기여한 업적을 대대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바,¹⁷⁾

17) “在授與錢學森同志 國家傑出貢獻科學者榮譽稱號儀式上 江澤民總書記的講話,” 「人民日報」, 1991. 10. 17; Xiao Zhou, “Qian, Father of China’s Rocket Development,” *China Daily*, October 30, 1991.

이는 中國이 앞으로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증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中國은 앞으로 兵力減少와 더불어 武器의 現代化 특히 海·空軍의 현대화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4) 域內 核擴散 防止

核武器의 擴散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中國 자신의 안보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中國은 南北韓과 日本의 核保有를 反對할 것이다. 中國은 최근 군사대국화를 모색하고 있는 日本이 핵무기로 무장할 경우 中國의 안보에 지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日本의 핵무장에 반대할 것이며, 北韓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日本과 韓國의 핵개발을 촉진시켜 지역안정을 해칠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美·蘇의 戰術核 廢棄에 관한 경쟁적인 선언 및 조치로 역내 국가들의 핵확산 방지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증대됨에 따라, 中國도 核政策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中國은 가이후 日本首相이 中國을 방문했을 당시 「核擴散禁止條約」에 가입할 것을 표명한 바 있으며, 조만간 가입이 확실시되고 있다.¹⁸⁾ 또한 中國 외교부장 錢其琛은 첫째, 핵무기의 철저한 금지와 폐기, 둘째, 자위를 위한 소수의 핵 보유, 셋째, 핵무기 선제 사용 반대, 넷째,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반대, 다섯째,

18) "China Reaffirms Nuclear Stance," *China Daily*, September 20, 1991; "國務院提請審議我國加入不擴散核武器條約," 「人民日報」, 1991. 10. 26.

핵확산 반대 등 5개항의 핵원칙을 천명한 바 있으며,¹⁹⁾ 北韓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²⁰⁾

이에 따라 中國은 역내 비핵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다. 우선 中國은 최근 핵사찰 수락 여부로 문제가 되고 있는 北韓에 대해 핵사찰을 수락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中國은 北韓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韓國과 日本의 군사력 증강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美國의 韓·日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²¹⁾ 中國은 北韓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美國이 한반도에 배치하고 있는 전술핵을 철거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北韓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1990年代 동북아에서의 中國의 가장 중요한 안보문제는 日本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것이므로, 中國은 日本의 핵무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北韓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19) 「星島日報」, 1991. 8. 13.

20) 1991. 10. 金日成의 北京 방문 당시 中國의 지도자들은 北韓에게 이라크와 같은 핵개발의 위험을 중지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신문」, 1991. 10. 22. 최근 韓國을 방문하였던 中國外交部 國際問題研究所 선임연구원 陶炳蔚 선생도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에서의 강연(1991. 11. 15)을 통해 이와 같은 中國의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21) 李鍾九 국방장관은 만약 北韓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韓國은 北韓의 핵시설에 대해 무력공격을 행사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北韓의 핵개발은 남북한간의 군사력 경쟁을 촉발하고 대규모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東亞日報」, 1991. 4. 12.

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²²⁾ 한편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軍事費를 지출(1991년 현재 약 21조원; 1988년도 中國의 군사비는 약 4조 3천 5백억원)하고 있는 日本이 核開發을 추진할 경우, 이는 필연코 中國의 安保에 막대한 위협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향후 中國은 日本의 核武裝을 적극 저지하고자 할 것이다. 核武器로 武裝된 日本은 東北亞에서의 中國의 기존 이익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中國의 現代化政策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中國은 앞으로 자신이 保有하고 있는 核防禦를 위한 것이며 결코 周邊國을 위협하려는 무기가 아님을 강조하고, 1991년 8월 中國을 방문한 가이후 日本首相에게 언급한 「核擴散禁止條約」에의 가입을 결정하므로써 東北亞의 核擴散防止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5) 韓半島의 安定 維持

中國은 4個現代化의 추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軍事戰略的 利益의 추구를 위해서도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南北韓關係 改善을 추구하여 왔다. 기본적으로 中國은 韓半島에서 武力衝突이 일어날 경우 자신의 安保에 심각한 威脅을 초래함은 물론 美·日 등 서방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4개현대화에 차질을 빚을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최근 日本의 軍事力 강화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中國은 韓半島가 安定된 상태로 존재함으로써 日本

22)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中國의 입장에 대해서는 黎能清, “朝鮮半島 無核區의對話應盡早實現,” 「瞭望」, 1991年 第37期 (1991. 9. 16), p. 4; 「人民日報」, 1991. 11. 18.

의 中國에 대한 잠재적 安保威脅을 어느정도 희석시켜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中國은 남북한관계 개선과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對韓半島政策을 調整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였으며, 이는 결국 中國과 南北韓關係에 質的인 變化를 초래하고 있다.²³⁾ 中國은 현재 韓國과의 非政治的인 關係의 증진, 北韓과의 關係 재조정, 南北韓間 對話와 協商 촉구, 北韓의 改革 開放 유도과 美·北韓, 日·北韓의 관계개선을 위한 與件 造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中國은 北韓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보다는 北韓으로 하여금 급변하는 東北亞 情勢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說得하는 것이 이 地域安定은 물론 中國의 安保利益에 符合된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²⁴⁾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中國은 韓半島에 대한 均衡的인 政策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中國의 태도는 北韓에 대한 유엔加入 촉구와 「두개 韓國」인정 요구 사실에서 잘 立證되고 있다.²⁵⁾ 南北韓間의 평화적인 對話와 協商을 통한 한반도문제

23) 中國은 南北韓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미 균형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北韓에 대해서는 기존의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韓國과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실례는 최근 金日成의 中國 방문시 명백하게 드러났다. 中國은 北韓과 더 이상 동맹관계에 있지 않고 단지 우호관계에 있을 뿐이라는 점을 北韓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朝鮮日報」, 1991. 10. 9.

24) 中國의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금년 유엔에서 열린 韓·中 外무장관회담 (1991. 10. 2)에서도 표출되었다. 이번 韓·中間에 최초로 성사된 회담에서 中國은 北韓의 입장과는 달리 北韓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락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25) 羅氷, 앞의 글, pp. 12~13.

의 해결 촉구 역시 한반도의 緊張緩和를 요구하는 中國의 政策基調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中國은 지금까지 韓半島의 問題는 南北韓 當事者들의 자주적인 노력, 즉 쌍방간의 對話와 協商을 통하여 解決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²⁶⁾ 中國은 앞으로 韓半島問題의 해결과정에서 南北韓間의 對話와 協商이 일차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과 周邊 關聯國들이 이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는 立場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中國의 이러한 입장은 臺灣과의 統一問題, 北韓과의 既存關係 등의 制約으로 인해 자신의 政策的 選擇空間이 제한된 상황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周邊 國家들의 지나친 影響力 행사를 排除하는 것이 자신의 國益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北韓에 대한 改革·開放 유도과 이를 바탕으로 한 北韓과 美·日 關係 改善 與件 造成 역시 中國의 韓半島政策에서 비중을 갖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中國은 1990年 9月 日本 自民黨, 社會黨代表團의 北韓訪問과 金日成-가네마루(金丸 信)의 단독회견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는 日·北韓關係의 획기적인 進展을 보여 주는 것이며, 韓半島의 安定과 아시아의 平和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²⁷⁾ 한편 中國은 北韓의 改革·開放은 北韓이 스스로 選擇해야 하는 問題라고 밝히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北韓이 中國式 改革 開放을 採擇할 것을 바라고 있다. 中國은 이러

26) Li Peng, op. cit, pp. 9~10.

27) Zhu Ronggen, “Breakthrough in DPRK-Japan Relations,” *Beijing Review*, October 22~28, 1990, pp. 9~10.

한 政策이 北韓을 국제적인 고립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韓半島의 緊張緩和에 도움이 된다고 認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中國은 한반도의 情勢가 安定된 狀態로 維持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中國은 北韓의 핵개발을 반대할 것이며, 北韓으로 하여금 현실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도록 誘導해 나갈 것이다. 또한 韓半島의 平和를 保障하는 方案의 하나로써 美·日-北韓, 中國-韓國 修交라는 交叉承認政策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바, 멀지 않은 장래에 韓國과의 國交를 正常化 할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中國은 최근 美國이 한반도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안한 「2+4」회담을 거부하였다.²⁹⁾ 中國이 이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현단계에 있어서의 한반도문제 해결은 남북한 당사자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문제를 다자간 협의에 의해서 해결하게 될 경우 美·日·蘇 등 강대국의 간섭을 초래하게 되어 한반도문제에 대해 中國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영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國際秩序가 변화되고 南北韓 關係가 진전된다면 1990年代 중반 이후에는 韓半島의 統一이 가시권내에 들어올 것으로 展望되고 있으나, 韓半島의 統一에 대해 中國은 다음과 같은 理由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否定的인 立場을 堅持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中國은 韓半島의 統一은 東北亞에서 勢力不均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判斷하고 있다. 둘째, 韓半島에서 強力한 統

29)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亞·太경제협력회의에 참가했던 錢其琛 中國外交部長의 기자회견 내용을 참고할 것. 「朝鮮日報」, 1991. 11. 15.

一國家가 出現하게 될 경우 과거 베트남이 통일되었을 때와 같이 中國의 安保에 심각한 威脅을 招來할 것으로 認識하고 있다. 따라서 中國은 韓半島의 統一로 인하여 惹起될 수도 있는 東北亞의 不安定을 憂慮하여 韓半島의 統一에는 消極的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³⁰⁾

3. 中國의 經濟目標와 經濟政策

가. 經濟目標

1990년대 동북아에서의 中國의 經濟적 목표는 우선적으로 사회주의 經濟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4개현대화의 성공적인 실현을 통해 지역 經濟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1) 社會主義 經濟體制 維持

中國은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써 「社會主義 初級階段論」을 제시(1987년 第13次 黨大會)하였다. 여기에서 中國은 사회주의 經濟체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편으로써 자본주의 시장메카니즘의 도입을 역설, 자국경제를 건실히 하고자 하였다.³¹⁾

그러나 中國이 이러한 經濟改革 조치를 취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30) "China Stalls Anti-Atom Effort on Korea,"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5, 1991, p. A12.

31) 趙紫陽, "沿着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 「明報」, 1987. 10. 26; 서진영,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편, 「中國政治經濟辭典」(서울: 민음사, 1990), pp. 201~204.

中國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 강화하는데에 있다. 이러한 경제적 목표는 北韓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中國은 동북 아지역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에는 반대할 것이다. 국가간 불평등·불합리한 경제관계를 청산하고 평등하며 합리적인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역시 中國이 장차 추구할 중요한 경제적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바,³²⁾ 이는 中國이 자국 경제가 日本과 美國 등 자본주의국가에 완전히 예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자국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완전히 예속되게 되면 美·日 등 자본주의국가에 의해 자신의 국가주권이 침해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³³⁾ 中國은 「社會主義現代化」라는 근본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 원칙하에서 대내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日本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과의 經濟的 協力關係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2) 地域 經濟大國으로의 浮上

1990年代 中國이 추구해야 할 第1次的 經濟目標은 4개현대화의 성공적인 달성이다. 中國은 경제현대화를 달성함으로써 亞·太地域에서 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국가로 부상하고자 노력하

32) "China Stands for Fair World Order," *Beijing Review*, September 16~22, 1991, p. 6; 「建立公正合理的國際政治和經濟新秩序」, 「人民日報」, 1991. 7. 17.

33) 鄧力群은 中國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경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中國은 결국 서방 강대국의 노예로 전락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中國은 앞으로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경제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鄧力群, "正確認識社會主義社會的矛盾, 掌握處理矛盾的主動權," 「人民日報」, 1991. 10. 23.

고 있다. 中國은 다가오는 태평양시대에 역내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력 신장에 의한 국력 배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中國은 장차 경제력이 국가간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자국의 경제력 강화에 역점을 두는 對東北亞政策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中國은 2000년까지 추진할 경제정책 목표를 中國共產黨 第13期 中央委員會 第7次 全體會議(1990. 12)에서 심의·확정하였다. 여기에서 中國은 2000년까지 국민총생산을 1980년의 2배로 증대(불변가격 기준)하고, 매년 6%의 성장을 이룩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대폭 향상시킴과 동시에, 교육사업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제관리체계를 제고시킨다는 계획을 확정하였다.³⁴⁾ 또한 中國은 향후 2000년까지 농업발전, 기초공업과 기초설비 강화, 가공공업의 발전, 교육과 과학기술 강화 등에 경제건설의 중점을 두고 있다.

금세기 말까지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는 기초위에서, 中國은 적어도 2050년까지 中進工業國家의 대열에 진입한다는 청사진을 계획하고 있다.³⁵⁾ 中國은 이러한 경제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자국의 능력에만 의지하는 「自力更生路線」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改革과 開放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34) 李鵬, 앞의 글, pp. 418~419.

35) "Li Peng on China's Foreign Relations," *Beijing Review*, September 23~29, 1991, p. 8; "中國共產黨的七十年," 「人民日報」, 1991. 9. 11.

있다.³⁶⁾

나. 經濟政策

동북아지역에서 經濟大國으로 부상하고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維持하기 위해, 中國은 1990年代에 다음과 같은 經濟政策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1) 對外 經濟開放 持續

中國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79년 이래 대외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1979년에는 深圳, 珠海, 汕頭, 夏門 등 네개의 도시를 「經濟特區」로 지정하였고, 1984년에는 大連, 北海, 青島 등 沿海의 14개 지역을 「經濟技術開發區」로 지정하였다. 또한 1985년에는 長江三角洲, 珠海三角洲, 閩南三角洲를 「沿海經濟開放區」로 지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1988년에는 遼東半島, 山東半島, 唐山地域에 걸친 방대한 지역을 경제개방구로 설정함으로써 연해지역 거의 전부가 대외개방구로 지정되게 되었다. 1988년 4월에는 海南島를 廣東省으로 부터 분리하여 海南省으로 승격시키고 섬전체를 經濟特區로 지정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中·蘇接境 都市들과 東北地域을 經濟開放區로 지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³⁷⁾ 더불어 금년 10월 개최된 全人大 常務委에서 中國은 揚子江

36) “李鵬總理楊談國內國際問題,” 「人民日報」, 1991. 6. 15.

37) 「文匯報」, 1991. 10. 10.

의 武漢, 九江, 蕪湖港 등을 대외개방구로 지정할 것을 결정하였다.³⁸⁾ 中國은 自力更生이라는 閉鎖政策에 의해서는 2000년대까지 중진공업국가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改革과 開放政策의 지속적인 추진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中國은 「八五計劃」(1991~1995년) 및 「十年規劃」(1991~2000년) 그리고 黨 中央工作會議(1991. 9. 개최)에서 향후 對外開放政策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十年規劃」에서 中國은 향후 십년 동안 추진해 나갈 經濟政策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中國은 生産力을 증대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改革을 深化시키고 開放을 더욱 擴大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黨 中央工作會議에서도 과거 십년 동안의 開放政策 결과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고 전제하고 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決議하였다.³⁹⁾ 이러한 지침에 따라 中國은 현재 對外開放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豆滿江 流域을 國際貿易港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외국인에게 株式의 매입을 허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두만강 유역을 國際貿易港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은 東北3省을 비롯한 中國 內陸地域을 개방하게 되는 기초작업으로 볼 수 있어서 中國의 개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과거 沿岸地域 중심의 개발정책에 따라 내륙과 연안

38) “武漢, 九江, 蕪湖港對外輪開放,” 「人民日報」, 1991. 10. 26.

39) “着重研究進一步假好國營大中型企業,” 「人民日報」, 1991. 9. 28; 李鵬, “關於當前經濟形勢和進一步假好國營大中型企業的問題,” 「人民日報」, 1991. 10. 11.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내륙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유발시켜 왔던 바, 中國은 사회불안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대외개방을 내륙지역에까지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中國이 취하고 있는 특기할만한 개방조치는 上海 證券市場을 외국투자자들에게 개방하려는 것이다. 中國은 1981년부터 경제발전의 추진에 따라 발생한 國家財政 적자를 메꾸기 위해 國債를 발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上海, 深圳, 北京 등 도시에 40여개의 증권회사가 설립되어 株式과 債券을 매매하여 왔다.⁴⁰⁾ 上海의 증권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外資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써 대외개방의 폭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⁴¹⁾

蘇聯 社會主義의 붕괴와 美國을 비롯한 資本主義國家들의 中國에 대한 압력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체제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中國이 이와 같이 대담하게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없이 내부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⁴²⁾ 中國은 改革과 開放의 확대를 통한 經濟發展에 의해서만이 증대되고 있는 국민의 민주화 욕구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초위에서 현집권층이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中國 내부의 권력구조

40) 中國의 유가증권 발행잔고는 1989년까지 1449억원, 1990년 말까지 1757억원에 달했다.

41) Gao Anming, "China to Sell Stocks to Foreigners," *China Daily*, September 20, 1991.

42) "要進一步改革開放," 「人民日報」, 1991. 9. 2; "社論: 要善於從政治上觀察和處理問題," 「人民日報」, 1991. 10. 20.

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든 中國은 앞으로도 개방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⁴³⁾

결론적으로 1990年代에도 中國은 과거 10여년 동안 실시해 왔던 對外開放의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中國은 앞으로 經濟特區와 開放區에 보다 많은 經濟的 自律權을 부여하므로써 경제 개혁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沿岸地域의 개방 및 개발에 따라 이룩한 경제발전을 內陸과 邊境地域에 까지 확산시키기 위하여 中國은 東北部地域을 비롯한 內陸地域에도 經濟開放區를 증설할 것이다.

(2) 沿岸開發 加速化

1979년 이래 中國은 沿岸地域을 중심으로 經濟特區와 經濟技術 開放區를 설치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中國은 한정된 資源과 내륙지역이 지니고 있는 불리한 경제적 입지조건으로 인하여 국가경제 발전의 우선 순위를 沿岸地域에 두어 왔다.

中國은 中國共產黨 第13次大會(1987. 10) 이후 對外開放政策을 가일층 확대하고 沿岸開發을 촉진시키기 위해 「沿海地區 經濟發展戰略」을 제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⁴⁴⁾ 이 전략을 이론적

43) 최근 陳雲, 鄧力群 등 보수파 지도자들은 점증하는 서방측의 對中 「和平演變」 전략에 따라 개방과 개혁정책의 확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점진적인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人民日報」, 1991. 10. 24; Harry Harding, *China's Second Revolution: Reform After Mao*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7) 참조.

44) 이에 대해서는 鍾誠, “中國沿海經濟發展戰略的提出和實施,” 「中國對外貿易」, 總第 143期 (1989. 1), pp. 6, 10 참조.

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에서 趙紫陽은 「國際大循環論」을 주창하였다. 여기에서 中國은 경제발전의 입지조건이 비교적 유리한 연해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내륙지역의 교통·운수시설을 강화한 후 중서부 지역의 경제개발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설정하였다.⁴⁵⁾ 이에 따라 中國은 「經濟特區」→「沿海 開放城市」→「沿海 經濟開放區」→「內地」의 순서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⁴⁶⁾ 내륙지역은 外資의 도입에 있어서 불리하며 人力의 확보 및 기타 경제개발에 요구되는 경제적 기반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中國은 앞으로도 연안지역의 우선 개발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中國은 과거 廣東省과 福建省의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해 왔다. 이들 지역에서 이룩한 경제발전 성과를 바탕으로, 中國은 앞으로 上海를 중심으로 한 浦東地域을 1990年代 중점 경제개발구로 설정하였다. 금년 3월에 개최된 全國人民代表大會(第7期 第4次會議)에서 中國은 기존 경제개발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상해지역의 浦東開發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임을 결의하였다.⁴⁷⁾ 이에 따라 中國은 2000年代까지 上海市를 中國의 금융, 무역, 과학기술, 정보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경제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는 中國은 外資의 도입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에 있

45) 안석교, 앞의 논문, pp. 71~74.

46) 岳岩, “堅定不移的擴大對外開放,” 「人民日報」, 1991. 10. 18.

47) 「人民日報」, 1991. 10. 11.

는 上海, 深假, 그리고 1997년 英國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홍콩 등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적극 추진 할 전망이다.

과거 10여년 동안의 經濟開發 결과 中國은 매우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제개발의 중점을 연안지역에 두었기 때문에 廣東省과 福建省 등의 일부 개방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룩하였다.⁴⁸⁾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륙지역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게 되어 沿岸과 內陸地域間 경제적 격차가 심화·확대 되었다. 이러한 지역간 경제적 격차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中國은 東北部와 北西部 地域을 經濟開放區로 지정할 것을 계획하는 등 경제개발을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⁴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內陸地域의 經濟的 立地條件이 沿岸地域보다 불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1990年代에도 中國은 연안지역의 개발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3) 域內 國家와의 經濟協力 強化

東北亞地域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日本 및 韓國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1978년 이래 中國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目標이다. 그 중에서도 日本의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는 것은 中國의 對동북아 경

48) 中國 광동성과 복건성의 경제성장 실태에 대해서는 "The South China Miracle," *The Economist*, October 5, 1991, pp. 21~24 참조.

49) "Reform and Open Policy in the 90s," *Beijing Review*, September 9~15, 1991, p. 13.

제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문제중의 하나이다.⁵⁰⁾

改革·開放 초기 中國은 동북아시아국가들과의 경제협력(日本 제외) 보다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제1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국가들의 경제적 역량이 급성장하고 기대하였던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자 中國은 동북아시아의 新興工業國 및 아세안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1989년 6월 4일 天安門事態 이후 서방세계의 경제적 제재조치가 취해지면서 中國은 對美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편으로 經濟協力關係의 多邊化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中國은 日本을 비롯한 동북아시아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⁵¹⁾

中國은 국내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外國의 資本導入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바, 그 중에서도 日本은 가장 핵심이 되는 국가이다.⁵²⁾ 1979년 이후 中國은 日本으로부터 많은 액수(1979년부터 1987년까지 16억 1천만달러)의 借款을 제공받아⁵³⁾ 이를 경제발전을 위해 유익하게 활용하여 왔다. 中國에 제공된 日本의 자본

50) 中國이 4개현대화를 추진한 이후 금년 8월 가이후 日本總理의 중국방문에 이르기까지 中國지도자들은 日本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예외없이 경제협력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中日友好合作具有重要意義,” 「人民日報」, 1991. 9. 26.

51) 中國은 1990年代에도 日本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中國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Mao, op. cit., pp. 12~14; 「人民日報」, 1991. 8. 11; “中日關係發展的新起點,” 「人民日報」, 1991. 8. 14.

52) 1989년 中國의 외자도입 총액은 115억달러였으며, 그중 日本으로부터의 외자도입 액수는 30억달러에 달했다. 中國對外經濟貿易部編,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 90/91」, pp. 550~551.

53) 産業研究院, 「東아시아 經濟協力 可能性과 韓國의 位相」(1989. 12), p. 150.

은 中國이 안고 있는 내재적 제약 때문에 中國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어느 정도 촉진제 역할을 하였을 뿐 중국경제 발전에 소기의 성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95년까지 지속될 제3차 엔차관은 중국지도부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현대화 건설의 관전적인 기간인 「8. 5計劃」기간(1991~95)중에 제공되기 때문에 中國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도입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中國은 정부차원의 엔차관 뿐만아니라 민간베이스의 금융협력을 통해 日本의 자본을 도입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沿岸 開放都市에 經濟特區를 건설하면서부터 中國의 전반적인 경제발전 전략에서 외국기업의 對中國 직접투자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中國은 日本企業의 對中國 직접투자과 기술이전 확대 유도를 중요한 경제적 목표의 하나로 간주하게 되었다. 결국 中國은 투자환경 개선 및 정비를 통해 中國에 대한 日本企業의 직접투자를 증용하는 노력을 적극화 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으로부터의 技術移轉 역시 中國이 對日 경제관계에서 중요하게 인식해 왔던 문제이며, 앞으로도 中·日關係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中國은 4개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日本에 큰 기대를 걸게 되었고, 일찍이 趙紫陽은 “中·日 經濟技術協力은 中·日友好關係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기초”라고까지 강조한 바 있다.⁵⁴⁾

54) 「人民日報」, 1985. 5. 22.

그러나 日本의 對中國 직접투자과 技術移轉 문제는 中國이 對日 경제협력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문제인 동시에 가장 큰 한계를 안고 있는 문제로서 남아있다. 물론 최근 양국간 관계발전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보다 개선될 가능성을 갖고 있기는 하나 단시일내에 극복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日本은 시장의 장래성과 관련하여 中國에 대한 投資에 매력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정치불안, 投資關係法 및 投資環境의 未備, 그리고 開放政策의 持續性 불투명으로 인하여 實際投資에 있어서는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中國은 자국의 經濟體制를 改革하고 投資環境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中國은 현재 外資를 도입하기 위해 株式發行을 계획하고 있으며, 투자관련법을 정비하고 국내 시장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日本이 현재 中國의 경제계획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므로 中國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日本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과 폐쇄성 그리고 中國 정치체제의 경직성은 여전히 日本의 對中國 경제지원을 망설이도록 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탈냉전화 심화, 中國의 對外開放政策 추진, 韓國의 적극적인 北方政策 전개 등으로 韓·中間에도 경제협력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中國은 韓國이 中進工業國家로 부상하여 아시아 경제부국으로 발돋움하자 韓國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더욱이 1990년 蘇聯과 修交하는 과정에서 韓國은 蘇

聯에게 3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는 바, 이는 中國으로 하여금 韓國으로부터 자본 및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관계개선 노력을 배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최근 中國이 豆滿江流域 개발을 계획하고 山東半島 등 渤海灣地域을 개방구로 지정한 것은 韓國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日本이나 美國보다는 경제적으로 종속될 우려가 극히 적기 때문에, 韓國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中國의 노력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韓國의 對中國投資를 촉진하기 위해 中國은 현재 양국간에 교환 설치하고 있는 貿易代表部를 머지않은 장래에 정식 大使館으로 승격시킬 가능성이 있다.⁵⁵⁾

한편 中國은 현재 정치개혁을 유보한 채 경제발전을 이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 과거 權威主義的 統治體制下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한 韓國으로부터 경제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하고 있다. 또한 韓國은 후진국으로부터 단시일내에 中進國의 대열에 진입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도 中國은 韓國으로부터 경제성장 경험을 적극 습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中國은 中國式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공고히 하고 國家經濟를 현대화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資本·技術을 日本과 韓國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55) 亞·太經濟協力會議 참석차 韓國을 방문했던 錢其琛 中國外交部長은 李相玉 外務部長官과의 회담시 무역대표부의 기능을 준대사관으로 격상시킬 것을 합의한 바 있다.

(4) 對美·日 貿易葛藤 調整

美·日과의 불공정한 무역관계에서 유발될 수도 있는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것도 장차 中國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경제정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현재 中國은 日本과의 交易에서 막대한 赤字를 보고 있으며, 美國과의 交易에서는 연간 약 100억달러의 黑字를 기록(1990년 104억달러 흑자 기록)하고 있다. 中國의 對外經濟規模가 확대되고 對外開放의 幅이 더욱 커지게 될 경우, 中國과 이들 交易對象國과의 貿易收支·不均衡도 더욱 확대되어 상호간 커다란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美·日과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葛藤要因을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므로써, 中國은 금세기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는 社會主義 現代化 建設을 순조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中國과 日本間的 貿易不均衡 問題는 양국간의 경제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양국간 현안문제로서 줄곧 제기되어 왔다. 1980年代 중반 이후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이 심화되면서 中國은 이 문제를 中·日經濟關係의 최대 懸案으로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日本側의 성의있는 대응조치를 요구하여 왔다. 中國은 1950년부터 1986년까지의 37년중 25년 동안 中國이 赤字를 보았으며 적자의 누계가 2백25억달러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양국간 관계정상화 이후 1986년까지 14년간의 적자누계가 2백13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⁶⁾

56) 魏小榮, “擴大對日出口, 積極均衡發展中日貿易,” 「國際貿易」, (1987. 7), p. 18.

이와 같이 中·日 兩國의 무역불균형문제가 양국관계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기미를 보이게 되자, 양국은 1986년 가을 日·中 貿易擴大協議會와 對日經濟貿易工作協助組를 조직하여 무역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획기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中國은 앞으로 이 문제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日本의 경제력이 세계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日本이 中國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함으로써, 中國은 日本과의 경제교류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인식하면서도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中國은 일본측에게 막대한 對日 무역적자에 대한 보상으로 자본과 기술원조를 요구하고 중국상품에 대한 특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美·中間 貿易問題를 둘러싼 갈등 역시 1990年代 中國이 직면할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다. 현재 中國은 美國과의 교역에서 연간 약 100억달러에 이르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990년 1천1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美國에게 있어서 中國은 日本과 臺灣에 이어 세번째의 무역 적자국이다. 따라서 美國은 중국상품의 미국 시장에 대한 덤핑수출, 미국상품에 대한 中國의 보호장벽, 美國의 특허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 사례를 들어 中國을 비난하고 있다. 美國은 美·中 양국간의 불공정한 무역관계를 시정하므로써 무역적자폭을 축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美國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中國에게 취하고 있는 제반 조치로 인하여 현재 美·中關係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美·中間 貿易問題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갈등중에서 美國의 中國에 대한 最惠國待遇(MFN) 延長問題는 美·中關係를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美國은 中國과의 교역에서 연간 약 100억달러에 달하는 貿易赤字를 줄이는 방안으로써 中國에게 부여해 온 最惠國대우를 취소할 것을 고려해 왔다. 만약 最惠國대우를 취소하게 되면 中國은 심각한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더구나 국내 경제개발에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며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中國으로서는 美國의 最惠國대우 연장 여부에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中國은 知的所有權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일부 民主人士들을 석방하고, 購買使節團을 美國에 파견하여 약 12억달러 상당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왔다.⁵⁷⁾

이와 관련 美國 行政府는 아시아질서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中國의 협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中國의 개혁 개방정책이 지속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中國에게 最惠國待遇를 1992년 6월까지 「條件附」로 연장해 주었다. 그러나 美國議會는 中國內 人權問題와 中國의 제3세계에 대한 武器輸出을 빌미로 美國이 中國에게 부여하고 있는 最惠國대우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美議會는 또한 中國의 교도소가 수출상품 생산 기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美國에 수입되는 중국상품의 일부도 죄수

57) “盡力防止中美關係惡化,” 『明報』, 1991. 6. 20; “希望中美共同努力消除影響雙邊貿易的人爲障礙,” 『人民日報』, 1991. 6. 16; “China Buys 13 More Boeings in \$500m Deal,” *China Daily*, October 19, 1991.

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中國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철회 할 것을 역설해 왔다.

최근(1991. 11) 베이커(James A. Baker) 美國무장관이 中國을 방문하여 인권문제와 핵확산금지조약에의 가입 약속을 댓가로 1992년에도 中國에게 최혜국대우를 연장해 줄 것임을 표명한 바 있지만,⁵⁸⁾ 향후에도 이 문제는 美·中 양국간 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 美國은 최근 中國에게 市場開放의 日程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중국상품에 대한 稅關檢査를 강화하고 있다. 최혜국대우 연장을 둘러싼 美·中 양국간 갈등은 蘇聯 보수파 쿠데타 실패 이후 美國內의 對中政策 再檢討 촉구 움직임이 강화됨에 따라 美·中關係를 더욱 더 긴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中國이 금세기 말까지 中進工業國家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美國 및 日本과의 경제적 협력관계 유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中國은 美·日과의 경제적 갈등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중국시장의 대폭적인 개방 및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 등)를 취해야 할 것이다.

(5) 蘇聯과의 經濟交流 增大

中·蘇 양국은 1989년 고르바초프의 中國 방문을 계기로 1960년대 이후의 침예한 대립을 청산하고 현재 政治·經濟 分野를 비롯한

58) "Officials: Preserve Sino-US Relations," *China Daily*, November 16, 1991.

제반 영역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991년 5월 江澤民 中國共産黨 總書記의 蘇聯 방문 이후에는 中·蘇 양국간의 교류가 점차 확대·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들 양국간의 협력은 특히 경제분야에서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1990년 中·蘇 양국간 무역액은 39억달러로서 1989년 대비 6%가 증가 했으며, 특히 國境貿易은 1990년 10억달러를 기록하여 1989년 보다 약 10배가 증가 되었다. 한편 1991년 中國은 蘇聯에게 7억 3천만달러 상당의 소비재 구매차관을 제공한 바 있다.⁵⁹⁾ 蘇聯은 이미 中國에게 있어서 홍콩, 日本, 美國, 獨逸에 이은 5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되었다.

최근 中國은 蘇聯과의 접경도시인 黑河, 滿州里 등 국경도시에 對外經濟開放區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中國은 8.5계획 기간중 東北3省과 內蒙古自治區를 邊境開放區로 지정하여 기존의 沿海 開發區와 연결하여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中國이 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될 내륙지역의 개방과 개발을 위한 조치의 하나이다. 中國은 沿岸地域과 內陸地域間的 경제적 격차를 완화시켜 내부불만이 야기 될 소지를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도 中國은 앞으로 中·蘇 國境都市를 개방하는 등 中·蘇 양국간의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편 1989년 이래 美國을 비롯한 서방이 中國에 대해 무역제재 조치를 취한 결과 中國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곤란을 겪어 왔다.

59) "Soviets Set to Swap Arms for Chinese Food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28, 1991, p. 11.

中國은 서방으로부터 경제건설을 위해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中國은 「治理整頓」이라는 緊縮政策을 더욱 강화 할 수 밖에 없었다. 中國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 조치가 해제된 최근에 들어와서야 中國은 비로소 긴축정책을 중단하고 경제개혁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서방과 中國間의 이와 같은 경제적 갈등은 中國으로 하여금 제3의 경제협력 상대를 모색하도록 하였다.⁶⁰⁾ 최근 蘇聯共產主義의 붕괴와 美國의 세계질서 주도 움직임에 따라 향후 美國의 對中 經濟壓力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中國은 앞으로 蘇聯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중요한 비중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6) 東北亞經濟圈 形成에의 參與

주변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公正·合理的인 國際經濟秩序를 확립하고 경제적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것도 역시 中國이 1990年代에 실현해야 할 중요한 경제목표의 하나이다. 中國은 아직도 日本과 韓國을 위시한 주변국가들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中國은 자신의 현대화 건설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도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주변 국가들과 經濟協力體形成을 희망하고 있다. 中國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

60) 최근 中·蘇間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中·蘇 양국 모두 상대방을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로서는 취급 할 수 없다.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단지 이들이 美國을 비롯한 서방 경제대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Sergei N. Goncharov, Vladimir S. Myasnikov, "China, Soviet Union Forge Commonsense Liason," *Korea Herald*, June 26, 1991, p. 5.

계를 발전시키므로써 이를 자신의 4개현대화건설 수행에 최대한 활용하려 하고 있으며, 中國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東北亞經濟圈을 형성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의 하나이다.⁶¹⁾

中國은 역내 국가간 경제적 공동번영을 1990年代의 중요한 국가목표로 설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려 하고 있다. 中國은 現國際秩序가 和解와 協力の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나 갈등의 요소가 여전히 잔존해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발국가와 미개발국가간의 南北問題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中國은 동북아지역을 포함한 국제경제질서가 남북간 모순을 극복하고 남북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세계경제의 기본 추세가 地域主義, 블록경제 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추진되면서 선진국가들의 保護貿易主義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는 유럽공동체(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통합되어 유럽경제지역(EEA)이라는 강력한 지역경제블록이 태동되었고, 북미지역에서도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의 창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지역국가들도 자신들의 경제권 형성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中國 역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향후 1990年代 中國은 동북아 지역경제권 형성에 적극 동참하여 지

61) 西尾哲, “亞洲新經濟圈的形成與日中兩國의對應,” 「人民日報」, 1991. 11. 15.

역 경제강국으로의 부상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中國은 현재 新國際經濟秩序를 건설하고 동북아시아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자신의 경제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日本, 南北韓, 蒙古, 中國 등 동북아시아국가들이 참여하는 지역경제블럭을 형성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⁶²⁾ 中國은 여전히 지역적 강대국(regional power)일 따름인 바,⁶³⁾ 동북아시아에서 보다 영향력을 신장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지역적 경제권을 형성하여 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할 것이다. 최근 국제정세 변화에 힘입어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에도 과거 경제협력에 장애로 작용했던 정치적 역학관계 및 이데올로기적 장벽이 크게 완화되면서 역내 국가들간 경제협력 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라 中國도 지역경제권 형성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즉 中國의 蘇聯 및 蒙古와의 관계정상화, 韓·中關係 발전, 韓·蘇修交, 남북한관계 개선, 日·北韓 접촉 증대 등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완화 및 상호협력 기운이 증대되면서 中國은 이 지역 국가들간 경제협력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中國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동북아경제권 형성 구상은 동북아시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유럽공동체와 같은 국가간의 전면적인 經濟統合을 단시일내에 이룩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62) 馬洪,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과 동북아 경제협력,” 「IPECK 북방경제」, 제1권 제9호 (1991. 10), pp. 38~40.

63) Steven I. Levine, “China in Asia: The PRC as a Regional Power,” in Harry Harding, ed., *China's Foreign Relations in the 1980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pp. 107~145.

中國도 여전히 동북아지역에는 국가간 이념과 체제상의 대립지속,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그리고 역내 국가간 분쟁요인이 잔존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多者間 經濟協力體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⁶⁴⁾

따라서 中國은 역내 국가간 협상을 통해 亞·太경제협력각료회의(APEC)와 유사한 형태로 經濟協力協商機構, 經濟協力諮問機構를 점차적으로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中國은 이러한 기구에서 동북아경제협력체의 구성에 대한 단계별 절차와 활동규칙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역내의 쌍무협작과 다자간 협력문제를 논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⁶⁵⁾ 中國이 제시하고 있는 東北亞協力 構想을 위한 短期的인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構成國家와 協力體의 경제(특히 外換, 貿易)정책의 조화, 둘째, 關稅의 상호 우대정책 실시, 셋째, 경제권내의 각국과 지구에 설치한 經濟特區와 經濟開發區를 조화시키는 경제계획 수립, 넷째, 東北亞協力 開發基金 창설, 다섯째, 東北亞經濟 貿易 人力養成센터 설립 등이다.⁶⁶⁾ 이러한 구상들은 모두 2000年代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 中國의 현대화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 中國의 「東北亞經濟圈」 構想은 日本의 「環日本海經濟圈」 構想과 서로 대립되는 점이 있다. 中國이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경

64) 馬洪, 앞의 논문, p. 40; Zhai Feng, "Northeast Asian Zone Envisioned," *China Daily*, November 1, 1991; 陳福民, "東北亞經濟區的發展潛力," 「經濟導報」, 總2246期 (1991. 11. 18), p. 35.

65) "Active Role for China-New APEC Member," *China Daily*, November 11, 1991.

66) 馬洪, 위의 글.

제권은 中國의 동북3성(吉林省, 遼寧省, 黑龍江省)과 蘇聯의 극동 지방 및 北韓이 서로 인접하는 혼춘지역을 다국간 경제협력 기지로 하여 日本과 韓國이 자본, 기술을 적극 투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의 環日本海經濟圈은 中, 蘇, 南北韓, 日本의 5개국과 홍콩, 대만을 포함한 경제블럭을 구축하고 여기에서 日本 자신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 日本은 中國 동북부지역에 滿洲國을 건설하는 등 「大東亞共榮圈」을 건설하고자 시도하였던 바, 이러한 맥락에서 中國은 동북아경제권이 日本에 의해 주도적으로 형성되는 데에는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⁶⁷⁾

또한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일환으로 中國이 추진하고 있는 혼춘 경제특구 건설계획도 北韓과 蘇聯의 경제특구 건설과 경합을 벌이고 있어서 韓國과 日本의 자본 유치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므로 中國은 당분간 동북아지역에서 유럽공동체와 같은 다자간 경제협력체를 구상하기 보다는 특정 국가간 무역자유화 등 제한된 지역경제권 구상을 선호하는 한편 역내 국가들과의 쌍무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자신의 현대화건설을 촉진하는데 매진할 것이다.

67) 美國의 부정적인 입장 뿐만 아니라 中國과 蘇聯의 우려 때문에 동북아에서 日本의 주도하에 다자간 경제협력체가 형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4. 蘇聯의 東北亞政策에 대한 中國의 對應

유럽지역이 蘇聯의 政治·經濟·安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蘇聯은 전통적으로 東北아시아에 대해서도 많은 비중을 두어왔다. 제한된 國力을 바탕으로 유럽지역에서의 國益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蘇聯은 동북아시아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이 地域에서 蘇聯의 利益에 대립되는 反蘇 軍事同盟體制가 形成되는 것을 우려하여 왔다. 蘇聯의 이와 같은 우려는 1960年代末 이래 첨예화된 中國과의 대립과 최근 막강한 經濟力을 바탕으로한 日本의 政治·軍事的 影響力 強化 움직임에 의해서 더욱 고조되었다. 한편 蘇聯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의 대부분이 우랄산맥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바,⁶⁸⁾ 蘇聯은 최근 들어 이 地域의 개발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蘇聯은 자연적으로 동북아시아가 자신의 경제적·안보적 이익추구를 위한 중요한 대상의 하나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蘇聯의 이러한 政策은 地政學的·歷史的 要因에 의해 中國으로 여금 커다란 관심을 야기하기에 충분하였다. 과거 中國은 蘇聯의 東北亞經濟圈 形成 주장을 蘇聯의 이 地域에 대한 影響力 신장 기도라고 인식하여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왔으나,

68) 國立政治大學國際關係研究中心 編, 「蘇聯」(臺北: 國立政治大學國際關係研究中心, 1984), pp. 315~342.

1989年 中·蘇關係가 正常化된 후에는 지지 태도를 나타냈으며 시베리아개발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⁶⁹⁾ 특히 시베리아개발문제는 中國의 東北部地域開發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中國은 동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中國은 蘇聯의 이러한 경제면에서의 적극정책으로 인하여 日本, 韓國의 자본과 기술이 시베리아로 유입되므로써 對中國 경제지원이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蘇聯의 東北亞에 대한 軍事·安保政策은 지정학적 요인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中國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中國은 蘇聯이 주창해 온 域內 多者間 安保協力機構의 창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유보적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⁷⁰⁾ 앞으로도 이러한 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地域 軍縮實現 주장에 대해서는 中國 자신의 現代化建設을 위한 평화로운 周邊環境 造成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東北亞의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해서도 公式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으나, 中國은 核武器의 撤

69) 中國은 蘇聯의 시베리아개발이 中國의 노동력과 蘇聯의 자원 그리고 日本, 韓國의 자본이 결합되어 이루어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中國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금년 3월 田紀雲 中國 부총리가 蘇聯을 방문하였을 때, 中國은 蘇聯에게 약 9억 9천억엔에 달하는 상업차관을 蘇聯에 제공하는 등 최근 들어 中國은 蘇聯經濟의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信太 謙三, “對蘇接近으로 美國의 압력을 저지하려는 中國,” 『世界週報』, 1991. 4. 30, p. 59.

70) 蘇聯의 역내 안보협력기구 창설에 대한 中國의 입장에 대해서는 외교안보연구원, 「세바르드나제 소련외상의 블라디보스토크 연설과 우리의 대응방안」 (1990. 9), pp. 11~12; “Li Peng on China’s Foreign Relations,” *Beijing Review*, September 23~29, 1991, p. 9 참조.

廢는 美·蘇軍事大國의 주도로 추진되어야 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核武器는 이들 強大國의 利益과 東北亞의 平和에 커다란 위협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實質的으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⁷¹⁾

한편 安保的 側面에서 中國은 1989年 이후 東歐를 비롯한 社會主義圈의 붕괴와 資本主義國家들의 社會主義國家에 대한 「和平演變」企圖에 직면하여 社會主義國家와의 連帶關係를 계속 강화하는 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는 中國이 社會主義國家의 지도자가 되어 「新社會主義聯盟」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제기되고 있다.⁷²⁾ 또한 美國의 中國에 대한 人權問題와 貿易不均衡問題로 인한 壓力은 中國의 對西方 警戒심을 더욱 자극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그러나 經濟發展이 中國의 가장 核心的인 國家目標로 남아 있어서 中國의 이러한 認識은 對西方 關係 회복문제를 고려하여 실제 政策으로 표출될 것이다. 즉 中國은 蘇聯과의 정상적인 關係維持와 서방과의 경제관계 強化를 동시에 모색하는 방향의 政策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71) 和平演變에 대한 中國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築起抵禦和平演變的鋼鐵長城,” 「人民日報」, 1991. 8. 16 참조.

72) 羅冰, “中共和蘇朝聯盟圈,” 「爭鳴」, 1991年 第164號 (1991. 6), pp. 16~18.

가. 域內 勢力均衡에 미치는 影響과 中國의 對應

蘇聯은 산적한 國內問題로 인하여 東北亞를 포함한 全世界的 次元에서 經濟的·軍事的 影響力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반면 美國은 東北亞에서 기존의 강력한 役割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日本은 과거에 비해 영향력을 신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趨勢는 1990年代 東北亞 國際秩序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東北亞秩序의 變化에 대해 中國은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機會로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의 利益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첫째로 中國은 蘇聯의 弱化에 따라 中·蘇 國境地帶에 대한 軍事的 負擔에서 벗어나 對美·日關係에 보다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1990年代 東北亞秩序가 自國에 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側面에 있어서 中國은 蘇聯의 影響力 減少와 美·日의 役割 強化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天安門 事態(1989. 6) 이후 美國의 中國에 대한 「和平演變」 기도에 직면하고 있는 中國은 蘇聯의 勢力弱化가 中國에 대한 美國의 「內政干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中國은 域內에서 美國 세력이 강화될 경우 臺灣의 生存을 延長시켜 中國의 統一을 遲延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中國은 蘇聯의 影響力 衰退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동북아에서의 힘의 공백을 日本이 代替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中國은 앞으로 蘇聯 內部情勢의 진전과 蘇

聯의 東北亞政策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域內에서 美·日의 霸權追求를 牽制하기 위해 蘇聯과의 전략적인 協力關係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中國은 社會主義 同盟國인 北韓과의 既存 紐帶關係도 지속해 나갈 것이며, 美·日과도 關係增進을 도모하여 이들의 中國에 대한 안보적 위협을 해소하고자 할 것이다. 아울러 日本이 東北亞 勢力均衡을 파괴할 可能性이 증대할 경우, 中國은 韓半島에서 강대한 統一國家가 출현하므로써 日本의 中國에 대한 위협을 緩衝시키는 작용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나. 中·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과 中國의 對應

蘇聯 공산주의의 몰락과 이에 따른 영향력 약화로 蘇聯은 美國, 日本 그리고 韓國과의 政治·經濟的 協力 強化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蘇聯은 1990년 10월 韓國과 國交를 樹立하였으며, 日本과 美國에 대해 경제적·군사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蘇聯의 동북아에 대한 平和攻勢와 經濟進出政策은 蘇聯과 北韓間 關係를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으며, 반면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中國과 北韓 關係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최근 中國과 北韓은 金日成의 訪中을 비롯한 고위급 지도자의 빈번한 상호 왕래를 통해 기존 우호關係를 유지·강화하고 있다. 蘇聯 공산주의의 붕괴에 따라 자신의 안보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고 認知하고 鄧小平 등 革命 第1世代가 實權을 장악하고 있는 한, 中國은 역내 사회주의 동맹국인 北韓과의 기존 유대關係를 지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蘇聯의 동북아에 대한 「新思考」政策은 中國과 北韓間 유대관계를 적어도 단기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강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1990年代 蘇聯의 對東北亞政策에 대해 中國은 對外開放과 對內改革을 심화하므로써 中國式 社會主義를 발전시킬 것이며, 北韓도 美·日 등 西方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國際的 孤立으로부터의 탈피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中國과 北韓의 對內外政策 變化(理念보다 經濟的 實利 중시 경향)는 중장기적으로 中國과 北韓間 理念的 紐帶關係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⁷³⁾

다른 한편에 있어서 蘇聯의 동북아에 대한 軍縮 이니셔티브와 經濟的 協力政策은 장기적으로는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촉진시키고 東北亞의 平和를 유도할 것이며, 中國의 北韓에 대한 影響力을 증대시키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中國은 東北亞에서 보다 유리한 戰略環境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에 대한 정책 선택에 있어서 보다 많은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蘇聯의 韓國과의 政治關係 樹立·強化는 北韓의 韓·中修交에 대한 반대를 어느 정도 무마시키는 작용을 하여, 中國은 韓國과의 外交關係를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韓國과의 經濟協力을 적극 모색하고자 하는 中國의 희망이 現實政策으로 강력하게 추진

73) 1990年代 中國의 대외관계는 理念보다도 經濟的 實利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되어 나갈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江澤民暢談國際國內大事,” 「人民日報」, 1991. 11. 2 참조.

될 경우 韓·中修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⁷⁴⁾

아울러 蘇聯의 東北亞에 대한 경제적 적극 進出政策은 中國의 國益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蘇聯이 日本과 韓國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할 경우 中國이 日本과 韓國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협력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게 된다. 따라서 中國은 北韓과의 이념적 결속 강화보다는 日本과 韓國과의 경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므로써 實利를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1990年代 중반 이후 中國에서 革命 第1世代가 전면에서 사라지고 보다 現實主義的인 指導者가 대거 부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바, 中國은 蘇聯의 政策變化에 의해 韓半島에 초래될 현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결국 1990年代 中國은 北韓과의 기존 紐帶關係를 지속하면서도 韓國과 경제관계를 강화할 것이며, 韓·中間 경제협력 증대는 국교수립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74) 현재 87세의 고령인 鄧小平은 후계체제의 구축을 가장 중요한 정책사안의 하나로 삼고 있다. 江澤民과 朱鎔基로 이어지는 개혁파의 입지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鄧小平은 그의 사망 이전에 南韓과의 수교문제를 타결지으므로써 후계체제에게 한반도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만약 이러한 요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게 된다면 韓·中間의 수교는 鄧小平의 有故 이전에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中國과의 수교를 조기에 타결짓기 위해서, 韓國政府는 北韓과의 지속적인 관계개선, 中國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므로써 양국간의 신뢰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며, 中國에서 혁명 제1세대가 정치무대에서 사라지고 보다 실용주의적인 지도자들이 전면에 등장하여야 할 것이다.

다. 多者關係에 미치는 影響과 中國의 對應

(1) 安保的 側面

(가) 多者間 安保協力機構 創設에 대한 立場 및 對應

과거 中國은 蘇聯이 제창하였던 域내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창설 주장을 蘇聯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확장과 中國에 대한 군사적 包圍戰略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반대하여 왔으며, 최근에도 中國은 蘇聯이 모색하고 있는 域내 안보협력기구 창설은 域내에서 中國의 안보이익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蘇聯의 구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⁷⁵⁾

中國은 東北亞의 복잡한 地域的 紛爭과 葛藤을 하나의 安保協議體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現段階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中國은 동북아시아에서 안보협력기구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도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中國은 다자간 안보협력기구의 창설은 우선 兩者間 관계 정상화와 관계개선에 의해 域내 국가간 신뢰의 증진과 긴장완화를 도모하여 안보적 이해를 구축한 다음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中國이 東北亞地域에서 域內 多者間 安保協力機構를 만드는 것

75) Li Luye, "Curr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Beijing Review*, August 19~25, 1991, p. 8; Chen Qimao, "International Pattern in Asia-Pacific Region: Brewing Changing,"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2, no. 3 (Autumn 1991), p. 340.

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동북아지역내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는 中國의 安保利益에 결코 완전히 부합되는 방향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1990年代의 東北亞 國際秩序는 中國에 의해서 主導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 中國의 安보에 위협이 되는 美國과 日本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⁷⁶⁾ 中國은 域內 多者間 安보協力機構는 美·日의 利益에 도움이 되고 中國의 利益에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로는 현국제환경 하에서 새로운 형태의 안보협력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中國내 保守派와 改革派간의 외교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대립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90年代에 中國 내부 권력구조의 개편이 예상되고 있어서 中國의 지도자들은 가능한 한 派閥鬭爭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거리를 만들려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中國 권력구조상의 문제도 中國으로 하여금 동북아지역내 다자간 안보협력기구의 창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1990年代 중반 이후 동북아의 國際秩序가 美國 또는 美·日同盟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主導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中國의 利益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전개 될 경우, 中國은 域內 多者間 安보

76) “建立公正合理的國際政治和經濟新秩序,” 「人民日報」, 1991. 7. 17; Chen op. cit.

協力機構의 창설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中國은 東北亞에서 美國의 霸權에 대항하고 日本의 軍事力 增大를 견제하기 위하여 역내 안보협력기구를 창설하여 동북아의 勢力均衡을 유지해 나가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

(나) 域內 軍縮實現에 대한 立場 및 對應

현재 蘇聯은 東北亞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 포괄적인 軍縮 努力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蘇聯은 이 지역에 배치된 모든 戰術核武器를 廢棄할 것과 대규모의 兵力減縮을 발표한 바 있다. 蘇聯의 實用主義的 指導者들은 광범위한 軍縮 實現에 의해서만이 현재 蘇聯이 당면하고 있는 經濟的 危機局面을 타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북아지역의 非核地帶化를 포함한 地域 軍縮 實現을 역설하고 있다.

蘇聯의 이러한 軍縮 提議에 대해 中國은 자신의 現代化建設을 위한 평화로운 주변환경 造成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지지 입장을 나타내 왔다. 中國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軍事力이 美·蘇에 비해 열등하며, 따라서 세계적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는 美國과 蘇聯이라는 인식 하에 이들의 즉각적이고도 광범위한 軍縮이 전제되어야만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⁷⁷⁾ 中國은 1990년대의 국제질서속에서는 세계전쟁이나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으나, 地

77) 胡繩, “爲了世界的平和和發展,” 「人民日報」, 1991. 9. 19.

域的紛爭이나 戰爭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中國은 적어도 地域的 次元의 軍縮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中國은 美·蘇 兩國이 世界的 霸權을 추구해 왔고 앞으로 계속 패권을 추구할 것이므로 質的인 軍備競爭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中國은 기타 세계 각국들도 상호간 모순되는 安保的 利益을 고려하여 계속적으로 軍備競爭을 벌여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⁷⁸⁾ 中國은 동북아지역에서의 軍縮 實現 가능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韓半島에서 南北韓間의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日本의 經濟力에 걸맞는 軍事力 강화 움직임이 상존하는 한 동북아의 완전한 軍縮 實現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美國과 蘇聯의 軍事力도 앞으로 어느 정도 감축될 것이나 大規模의 감축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中國은 최근 美·蘇 兩國間의 競爭的인 핵무기 減縮論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이의 성공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中國은 美·蘇의 核武器 減縮提議는 이들의 霸權的 地位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中國은 현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동북아 군축은 세력공백을 초래하고 이를 日本이 대체하므로써 中國의 이익을 저해하며, 이 지역에서 美·蘇

78) 黃庭偉, 楊明杰, “九十年代國際政治新秩序展望,” 「瞭望」, 1991年 第33期 (1991. 8. 19), p. 40.

의 主導權을 維持 強化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中國은 核武器의 撤廢를 비롯한 地域 軍縮 實現은 美·蘇 軍事大國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⁷⁹⁾

한편 韓半島의 軍縮과 非核地帶化에 대해서도 中國은 적극적인 지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錢其琛 中國外交部長은 北韓의 핵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표하면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역설한 바 있다. 中國은 韓半島의 非核地帶化는 日本의 핵무기제조를 비롯한 재무장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蘇聯의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약화에 따른 日本의 政治·軍事的 勢力 伸張 기도에 직면하고 있는 中國으로서는 韓半島의 軍縮을 시발로 하여 東北亞의 平和霧圍氣를 확산시키는 정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79) 黃泳, “美對核戰略作重大調整,” 「瞭望」, 1991年 第41期 (1991. 10. 14), pp. 45~46; 中國政府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美·蘇의 핵감축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 바 있다. “中國政府는 핵무기의 전면 금지와 철저한 폐기를 일관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우리는 9월 29일자 부시대통령의 핵무기 감축선언을 환영하며, 이 선언이 핵무기의 전면적인 폐기라는 우리의 목표 실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핵보유국인 美·蘇가 핵무기 감축에 특수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 바, 美·蘇는 핵실험, 생산, 배치는 솔선해서 중지해야 하고 그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종 핵무기를 솔선해서 대대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中國政府는 생각하고 있다.” 「人民日報」, 1991. 9. 30.

(2) 經濟的 側面

(가) 域內 國家와의 經濟協力에 대한 立場 및 對應

市場經濟體制의 도입에 의해서만이 자신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蘇聯은 현재 市場經濟體制의 도입에 의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蘇聯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방대한 資本을 결여하고 있어서 外國의 資本과 技術 支援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蘇聯은 앞으로 東北亞地域내 경제대국인 日本과 韓國 그리고 臺灣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蘇聯의 이러한 經濟政策에 대해 中國은 자신이 처한 경제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中國은 蘇聯의 경제적 진출정책은 기본적으로 東北亞國家간 경제적 협력관계를 다 변화시킬 것이나 中國에게는 이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蘇聯의 經濟改革·開放政策은 日本과 韓國 資本의 中國에 대한 投資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결국 中國 자신의 경제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과, 자신의 4개현대화 건설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中國은 판단하고 있다.

蘇聯과 마찬가지로 中國도 역시 西方 선진제국의 資本과 技術支援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韓國과 日本 등 域內 國家의 蘇聯과의 경제적 협력관계가 강화될 경우 이들의 中國과의 경제협력관계는 그만큼 약화될 수도 있다고 中國은 우려하고 있다. 한편 中國은 과거 蘇聯의 域內 國家와의 경제협력 강화 노력을 蘇

聯의 이 地域에 대한 영향력 신장 기도의 일환으로써 인식해 왔다. 따라서 中國은 蘇聯이 추진하고 있는 域內 國家와의 경제협력 증진이 蘇聯의 東北亞에 대한 영향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中國의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立場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특히 최근 蘇聯의 臺灣과의 경제관계 강화 움직임에 대해 中國은 政治的인 理由로 인하여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⁸⁰⁾ 「一國兩制」方式에 따라 國家의 統一을 달성하고자 하는 中國은 臺灣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 蘇聯의 臺灣과의 경제교류 및 협력 강화는 자신의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세기 이내에 국가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中國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中國은 앞으로도 中國의 統一 實現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蘇聯·臺灣間 經濟協力關係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日本과 韓國을 위시한 域內 國家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蘇聯의 노력은 최근 들어 中國이 희망하고 있는 地域經濟圈 형성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中國은 蘇聯의 東北亞地域內 國家와의 경제적 협력 강화 노력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⁸¹⁾ 즉 蘇聯의 域內 資本主義國家와의 경

80) John W. Garver, "Chinese Foreign Policy: The Diplomacy of Damage Control," *Current History*, vol. 90, no. 557 (September 1991), p. 243.

81) 中國의 이와 같은 입장은 1991년 5월 강택민의 蘇聯 방문시 분명하게 드러났다. 「中華人民共和國和蘇維埃社會主義共和國聯盟聯合公報,」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公報」, 1991年 第18號 (1991. 7. 18), p. 682.

제협력 증진은 궁극적으로 이들 國家와 中國과의 경제관계를 한층 촉진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나) 東北亞經濟圈 形成에 대한 立場 및 對應

蘇聯은 과거 東北亞地域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강화라는 목표하에 지역경제블럭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東北亞經濟圈의 형성은 蘇聯의 시베리아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이 地域에서 蘇聯의 경제적 영향력 증대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中國은 이와 같은 蘇聯의 政策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왔다. 中·蘇關係가 아직 긴장상태에 있었을 때, 中國은 蘇聯 주도하의 東北亞經濟圈 形成 企圖를 東北亞에서 中國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정책으로 인식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中國은 蘇聯이 中國을 제외시킨 채 日本과 함께 東北亞地域의 경제를 주도하려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근 蘇聯共產主義의 沒落 및 이에 따른 冷戰體制의 종식 그리고 日本의 東北亞地域에서의 급속한 정치·경제적 영향력 증대 움직임에 직면하여, 中國은 蘇聯의 東北亞經濟圈 형성 움직임을 새로운 입장에서 인식하게 되었다. 蘇聯이 추진하는 東北亞經濟圈 형성은 美國과 日本의 이 地域에서의 경제적 패권추구에 대한 牽制裝置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⁸²⁾ 이는 中國이

82) 中國과 蘇聯은 1991년 5월 개최되었던 中·蘇頂上會談에서 불합리한 국제경제질서를 타파할 것에 합의하고 강대국의 어떠한 형태의 패권추구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中華人民共和國和蘇維埃社會主義共和國聯盟聯合公報,” 앞의 책, p. 682; Arthur S. Ding, “Peking’s Foreign Policy in the Changing World,” *Issues & Studies*, vol. 27, no. 8 (August 1991), p. 26.

이제 蘇聯을 더 이상 中國의 利益에 저촉되는 國家로 인식하기보다는 日本과 美國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기도를 저지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국가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蘇聯이 東北亞經濟圈을 형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동북아지역국가들과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시베리아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있다. 시베리아개발에 있어서는 日本과 韓國의 자본 및 기술 지원 이외에도 中國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바, 이는 中·蘇間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시베리아개발은 蘇聯의 풍부한 資源과 中國의 勞動力이 결합되어 中國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蘇·中·北韓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유역개발계획에 대해 中國과 蘇聯이 모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동북아지역경제권 형성에 대한 蘇聯의 입장과 中國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中國은 蘇聯의 자원과 中國의 노동력 그리고 日本·韓國의 자본의 결합을 촉진시킬 역내 경제공동체 형성에의 참여를 적극 모색 할 것이다. 한편 동북아에서 日本의 경제적 영향력이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인 바, 中國은 日本의 영향력 저지 차원에서도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대한 蘇聯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의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東北三省開發, 華東經濟圈開發을 계획하고 있는 中國은 蘇聯의 역내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노력으로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현대화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역내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므로 2000年代까지 원칙적으로 동북아경제권 형성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그러나 日本 주도하의 경제권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낼 것이다.

第6章 北韓의 東北亞政策과 對蘇對應

北韓은 對外政策이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책을 말한다”¹⁾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일정한 政治的 目的의 실현이란 北韓의 外交政策 目標를 의미하며, 北韓의 외교정책 목표는 국가안전 유지, 국제적 위신 증대, 경제적 번영, 南韓과의 정통성 경쟁과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²⁾ 北韓은 이러한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정책 이념을 「자주, 평화, 친선」으로 체계화하여 대외정책을 추진해 왔다.

본 장에서는 동북아에서 北韓의 안보목표와 정책, 경제목표와 정책을 분석·전망한 후, 蘇聯의 동북아정책에 대한 北韓의 대응을 양자관계와 다자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東北亞와 北韓의 國家利益

北韓은 지정학적 위치, 小國이라는 國家屬性, 정권수립 이후 역사적 경험 등의 요인에 의해 東北亞 國際環境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北韓은 韓·美, 美·日

1)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179.

2) 北韓 外交政策 目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inn-Sup Shin, “Government and Politics,” in Frederica M. Bunge, ed., *North Korea: A Country Study* (Washington, D. C.: The American University, 1981), pp. 193~206; B. C. Koh,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p. 122~151 참조.

동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對中·蘇 軍事同盟體制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자체의 국방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北韓은 「자력갱생」 원칙에 입각하여 經濟政策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북아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中·蘇와 경제관계를 긴밀히 하는 한편, 日本과의 經濟交流 활성화를 모색해 왔다.

北韓의 외교정책은 南韓이라는 경쟁대상, 또는 통일의 대상에 의해 制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특징을 보인다. 北韓은 정치·외교적으로 한반도에서 「하나의 조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對東北亞政策도 추진하고 있다.

2. 北韓의 安保目標와 安保政策

小國이라는 國家屬性, 南韓과의 대치상황에 따라 北韓 安保目標의 핵심은 體制維持에 있고, 이 목표의 적극적인 측면으로 「남조선혁명」 이후 全韓半島의 共產化統一은 北韓의 국가목표인 동시에 안보목표이다. 이는 北韓體制가 존속되는 한 견지될 것이나, 체제유지라는 목표의 중요성은 사회주의국가들의 정치변혁, 韓·蘇 修交, 韓·中 무역대표부 설치 등 동북아 양자관계 재조정, 南韓과의 격차심화, 경제난 가중 등의 요인에 의해 증대되고 있다. 한반도통일과 체제유지라는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北韓의 安保政策은 첫째, 자주국방과 對中·蘇 동맹관계 유지, 둘째, 韓·美·日 3각군사동맹 반대, 셋째, 주한미군철수, 비핵지대화, 불가침선언 및 군축의 추구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 安保目標: 韓半島統一과 體制維持

전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이라는 北韓의 국가목표, 안보목표는 현재까지 변화된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 1972년 12월 27일 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5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한다”라고 규정하여 北韓의 國家目標은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한 韓半島統一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에도 한반도통일이라는 北韓의 안보목표는 지속될 것이나, 北韓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體制維持라는 안보목표의 중요성은 보다 증대될 것이다.

北韓은 동유럽국가들의 급격한 政治變動이 초래되기 이전까지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사상문화적 침투와 경제적 압력에 대한 우려의 표명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나타냈다.³⁾

3) 김일성,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 「근로자」, 제550호 (1988. 2), pp. 3~11 참조; 김정일은 1988년 10월 12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행한 담화에서 “현시기 인류의 자주화위업은 우리 시대의 기본흐름을 역전시켜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서로 공모결탁하여 연합된 세력으로 세계자주력량을 반대해 나서고 있으며 반제자주의 핵심력량인

김일성은 1989년 “신년사”에서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의 改革·開放政策에 따른 변화양상은 帝國主義者들의 책동에 의한 것이고, 사회주의만이 인류에게 바람직한 제도이며 사회주의의 고수가 가능하다는 점과 北韓은 社會主義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⁴⁾ 이러한 基調에 입각하여 北韓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변혁을 “제국주의자들에게 현혹된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이는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 전략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⁵⁾ 김일성은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권의 변혁을 “예견치 않았던 복잡한 사태”로 표현하고, 그 원인은 帝國主義의 평화적 이행 전략이라고 언급하였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기 위한 이른바 <평화적 이행> 전략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상문화적으로 침투하여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원조>를 미끼로 하여 경제적으로 매수하며 반사회주의분자들을 부추겨 사회정치적 혼란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을 자본주의에로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고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약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내용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體制變革에 대한 北韓의 우려와 그 원인이 帝國主義에 있다고 해석하는 점을 알 수 있다. 김정일,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근로자」, 제565호 (1989. 5), p. 4.

- 4) 김일성, “신년사,” 「근로자」, 제561호 (1989. 1), p. 9.
- 5)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 전략은 말 그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되돌려세워 온 세계를 황색세계 다시말하여 자본주의화하려는 악랄한 반공전략이다.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 전략의 특징은 그것이 힘의 정책으로 뒤받침되고 평화책략을 전면에 내세운 반혁명적 량면전술책이라는 것이다.” 『로동신문』, 1990. 12. 14.

되돌려 세우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⁶⁾

이와 함께 北韓은 대내적으로는 體制固守를 위해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것!”이라는 구호 아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방법으로 黨 업적의 고수와 계승발전, 주체사상 교양 강화,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등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의 전개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⁷⁾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우리식 사회주의는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이며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토대 위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장 활력있는 사회”라고 언급하여 北韓社會의 우월성을 재강조하였다. 김정일은 1991년 5월 5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통해 北韓式 社會主義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우리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여야

6)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근로자」, 제578호 (1990. 6), p. 17.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평화적 이행>의 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의 길로 되돌려세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저들의 지배권안에 넣으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7) 곽학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방침,” 「근로자」, 제570호 (1989. 10), pp. 15~20. 이 글에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간다는 것의 개념정의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 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든 것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합니다”라고 결론을 맺음으로써 체제고수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⁸⁾ 이러한 體制守護型의 宣傳 및 象徵操作에서 北韓이 체제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난다.

北韓은 이와 같이 체제유지를 위해 대내적 선전에 주력하는 한편 南韓과의 관계에서도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南韓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처한 北韓은 김일성의 1988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중립적이며 빨럭불가담적인 하나의 련방국가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⁹⁾라고 언급하여 해방후 최초로 南北韓 共存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南北韓 競爭體制를 공존체제로 전환시키려 했다.¹⁰⁾ 김일성은 1988년 9월 8일 국가수립 40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공존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시켰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자치정부를 련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야 합니다.¹¹⁾

이와 함께 北韓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제의한 「고려

8) 「로동신문」, 1991. 5. 27.

9) 김일성, “신년사,”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9」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09), p. 6.

10) 이러한 해석은 이정식, “공존과 혁명과 통일논의,” 유세희·이정식 편, 「전환기의 북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p. 245 참조.

11)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조선중앙년감 1980」, p. 29.

민주련방공화국」의 내용을 수정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즉 北韓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설제안 이후 「두 제도」의 병존을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으나,¹²⁾ 1990년 10월 18일 김일성은 제2차 南北高位級會談 韓國代表團과의 회견에서 처음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자고 제의하였다.¹³⁾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¹⁴⁾라고 언급하여 한반도내 두개 정부의 존재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南韓에 의한 「흡수통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¹⁵⁾ 이는 北韓이 「수세적 공존」의 입장에서 對南政策을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

12) 김일성은 제6차 당대회 보고에서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라고 밝혔다. 「조선중앙년감 1981」, p. 56.

13) 「로동신문」, 1990. 10. 19. 이후 김일성은 1990년 11월 29일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조선의 북과 남에 있는 두개의 제도와 두개의 정부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서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실지로 가능한 통일방안이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당한 통일방안입니다”라고 언급하여 10월 18일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로동신문」, 1990. 12. 11.

14) 이와 함께 김일성은 “잠정적으로는 련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련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밝혀 기존 聯邦制案의 수정을 시사하였다.

15) 이어서 김일성은 “최근 다른 나라의 흡수통합방식에 현혹된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방정책>을 내걸고 청탁외교를 벌리면서 남의 힘을 빌어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을

統一이라는 北韓의 국가목표가 포기되었다는 징후는 현재까지 명백히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北韓은 최우선적으로 體制維持를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安保政策

北韓의 안보정책은 「국방에서 자위」 원칙에 입각한 정치사상적 준비강화, 경제력 강화, 4대군사노선의 실현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¹⁶⁾ 國防에서 自衛에 기초하여 北韓은 자체의 군사력 강화에 매진해온 한편, 中·蘇와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北韓은 극단적인 反美主義와 日本軍國主義의 부활에 대한 우려를 기반으로 한 反美反帝鬪爭의 지속 및 駐韓美軍撤收, 한반도의 非核地帶化, 不可侵宣言, 軍縮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1) 自主國防과 對中·蘇同盟關係 維持

北韓 안보정책의 基調는 「국방에서 자위」이다. 北韓은 국방에서 자위를 “군사분야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자체의 힘으로 자기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있습니다”라고 언급하여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16) “우리 당 국방건설정책의 기본내용은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게 군인들과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전쟁에 대처할 수 있게 나라의 물질적 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며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철저히 실현하여 원수들의 온갖 형태의 무력침공도 단때에 물리칠수 있게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사건」(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870.

나라를 보위하는 혁명적 원칙,”¹⁷⁾ “국방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 원칙,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지켜야할 주체적립장을 밝혀주며 자주독립국가의 국방건설의 방향과 내용, 방도를 밝혀주는 원칙”¹⁸⁾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北韓의 안보정책은 국방에서 자위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왔고, 구체적인 정책내용은 1962년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¹⁹⁾ 김일성은 1966년 10월 제2차 당 대표자회에서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이라는 보고를 통해 기존의 군사력 강화 방침을 더욱 정교화 시켰으며,²⁰⁾ 1970년 11월에 개최된 제5차 당대회에서 행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국방력 강화의 성과를 공언하였다.²¹⁾

현재까지 北韓의 안보정책은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하에 지속되

17) 위의 책, p. 98.

18)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88.

19) 北韓은 196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並進政策을 채택하여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구호 아래 추진하였다. 「정치사전」, p. 820; 「조선중앙년감 1963」, p. 158. 이 전원회의에 대한 분석은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The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p. 594~595 참조. 이후 北韓의 軍事力 強化政策은 1964년 2월 27일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행한 결론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에서 더욱 체계화되어 표명되었다. 「김일성저작선집 4」 (1968), pp. 85~86.

20) 위의 책, pp. 363~365;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213~215; Scalapino and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p. 596.

21) 제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北韓이 성취한 국방력 강화의 결과에 대해 “당의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이 훌륭히 관철된 결과 우리의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되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인민이 다 총을 쏠줄 알며 총을 메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온 나라의 모든 지역에 철옹성같은 방위시설들을 쌓아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까지도 다 요새화하였습니다. … 오늘에 와서는 튼튼한 자립적인 국방공업기지가 창설되어 자체로 조국보위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 기체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조선중앙년감 1971」, p. 12.

고 있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한다는 것은 自主獨立國家 建設의 근본원칙이며 이는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는 군사적 수단이라는 것이 北韓이 주장하는 논리이다. 또한 이 원칙을 관철한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保衛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원칙의 3가지 내용은 첫째, 자기 나라를 옹호보위할 수 있는 자체의 수단을 가진다는 것, 둘째,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은 자체의 힘이라는 것, 셋째, 당의 영도밑에 전체 인민이 단결한다는 것 등이다.²²⁾ 이와 함께 國防에서 自衛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제시된 수단은 자위적 무장력의 보유,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의 수립, 인민무력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의 발양, 자체의 국방공업 건설, 후방의 강화 등이다.²³⁾

北韓 안보정책의 근간은 국방에서의 자위와 함께 對中·蘇 동맹관계의 유지에 있다. 北韓은 1961년 7월 6일 체결된 「조쏘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과 7월 11일 체결된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조약」을 통하여 中·蘇와의 동맹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北韓은 지정학적 요인, 역사적 경험, 정치·군사·경제적 요인 등에 따라 中·蘇의 지원과 협조를 국가생존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왔으며, 中·蘇와 同盟關係를 유지하는 것은 北韓의 불가결한 安政策인 것이다. 北韓의 군사력은 中·蘇로부터의 군사원조에 크게 의존해왔으

22) 「철학사전」, p. 88. 이 가운데 둘째 항에 대한 설명은 “자기 나라를 보위하는 것을 남에게 의탁할 수 없다. 기본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이며 자체의 힘이 준비되어 있어야 외부의 원조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23) 위의 책, pp. 88~89. 이 가운데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의 수립을 위한 수단은 “전군을 간부화하고 현대화하며 전국을 요새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며, 특히 北韓의 武器體系는 주로 소련제 무기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北韓은 군현대화를 위해서도 蘇聯에 의존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蘇聯 자체의 근본적 변혁으로 인해 北韓·蘇聯간 軍事協力關係는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 反帝反美鬭爭의 持續

北韓이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안보정책은 韓·美·日 3각동맹에 대한 반대이다. 北韓은 3각군사동맹이란 “본질에 있어서 아세아판 <나토>를 만들며 일단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 <자위대> 무력을 지체없이 조선전쟁에 인입시키자는 것이다”라고 인식하고,²⁴⁾ 이 체제를 “무력으로 조선의 인공적인 분열을 영구화하며 새로운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침략과 전쟁의 체제”²⁵⁾로 이해하고 있다.

北韓이 韓·美·日 3각군사동맹에 반대하는 정책의 기저에는 극단적인 反帝國主義, 反美主義와 日本軍國主義의 부활에 대한 우려가 내재하고 있다. 北韓은 “미제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흉악한 제국주의이며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서 인류의 가장 흉악한 공동의 원수이다”²⁶⁾라고 규정하고, 반제반미통일전선과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한편, 日本에 대해 “일본군

24) 김구식,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 「근로자」, 제578호 (1990. 6), p. 81.

25) “조선반도에서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자,” 「근로자」, 제531호 (1986. 7), p. 11.

26) 「정치사전」, p. 413. 김정일은 1983년 5월 3일 맑스 탄생 165돌에 즈음해 발표한 논문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책동을 더욱

국주의는 미제국주의와 종속적 동맹관계에 얽혀있는 위험한 침략 세력이며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이다”라고 정의하고, “그들은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편승하여 자기의 해외팽창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날뛰고 있다... 일본군국주의는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으며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고 있다”²⁷⁾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의거하여 北韓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며 미제의 아세아전략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고리로 된다”²⁸⁾고 주장한다.

反帝反美主義와 日本軍國主義의 再生에 대한 경계를 기조로하여 北韓은 동북아에서 韓·美·日 3角軍事同盟의 형성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오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 사이에는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이 강화되고 있다”²⁹⁾라는 기술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北韓이 韓·美·日 3각군사동맹의 형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韓·日會談의 개최시부터이며, 韓·日條約의 체결로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아세아에서의 식민지지탱점으로,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틀어쥐고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남조선을 말그대로 커다란 전쟁화약고로, 핵전쟁기지로 전변시켰다”라고 기술하였다. 김정일, “탐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 「조선중앙년감 1984」, pp. 108~109.

27) 「철학사전」, pp. 263, 421. 그리고 “지금 일본의 반동지배층들은 일본을 <경제대국>으로부터 <군사대국>으로 만들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은 아세아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인민들의 평화위협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있다”라는 기술에서 日本에 대한 北韓의 인식이 드러난다. 위의 책, p. 89.

28) 위의 책, p. 263.

29) 위의 책, p. 89.

「韓·美·日 3각군사동맹」이 형성되었다고 인식하였다.³⁰⁾

北韓은 韓半島에서의 긴장과 새로운 戰爭의 위험은 美國의 對韓半島政策과 함께 3각군사동맹에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은 1986년 9월 6일 「조선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한 연설에서 “미제는 저들의 침략적인 대아세아전략을 수행하는데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 남조선사이에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기 위한 책동을 한층 로골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동지역에서 미국의 침략과 전쟁 책동이 날로 더욱 위험한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³¹⁾ 라고 지적하였다. 北韓의 이러한 정책은 김일성이 1988년 9월 “미국은 전략적인 요충지인 남조선을 틀어쥐고 미국, 일본, 남조선을 하나의 축으로 하여 저들의 침략적인 아세아, 태평양전략을 실현해보려 하고 있습니

30) 1966년 10월 개최된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은 보고를 통해 미·일에 대한 격렬한 비난과 함께 韓·日條約의 폐기, 3각군사동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시켜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국주의 세력을 남조선괴뢰들과 결탁시켰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조작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 오늘 일본군국주의는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 세력은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고 있습니다. 미제와 일본 사토정부와 남조선 괴뢰도당사이에 는 쌍무적 군사협정을 통하여 사실상 3각군사동맹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을 전격히 규탄합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남조선에 대한 그의 침략은 단호히 저지되어야 하며 미제의 조종밑에 체결된 <한일조약>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김일성 저작선집 4」 (1968), pp. 319~325.

31) 김일성,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인류앞에 나선 초미의 과제,” 「조선중앙년감 1987」, p. 70.

다”³²⁾ 라고 언급한데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北韓은 3각군사동맹은 조약으로 調印되지 않았을 뿐 集團의인 군사블럭으로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 가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³³⁾ 北韓은 자체의 국방력 강화와 함께 中·蘇와 軍事協力을 공고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3)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 追求

北韓은 1956년 4월에 개최된 제3차 당대회에서의 김일성의 총결보고를 통하여 쌍방군대의 최소한 축소, 외국군대철수 등을 주장한 이래, 韓國에 대해 주한미군의 철수, 軍縮問題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나아가 北韓은 1980년대에 들어 非核·平和에 대한 주장을 고조시켰다. 김일성은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당 대회에서 행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하여 外交政策의 理念을 「자주, 친선, 평화」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평화」라는 外交政策 理念을 설명하면서 조선노동당은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비난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의 수호를 위해서 군사블럭의 해체, 외국에 있는 군사기지 철폐, 외국군대의 철수, 非核地帶와

32)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가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p. 29.

33) “조선반도에서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자,” p. 11; 고철재, “날로 강화되는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반동들간의 군사적 결탁,” 「국제생활」, 제44호 (1989. 9), pp. 40~42; 「로동신문」, 1991. 10. 30 참조.

平和地帶의 창설, 신흥세력 국가간의 紛爭의 평화적 해결 등을 주장하였다.³⁴⁾

「평화」라는 이념은 北韓이 국가수립 이후 계속하여 「평화애호국가」임을 표방한 것을 체계화한 것이다. 이 보고문에 나타난 世界平和와 安全을 확보하는 방안은 이전의 어떤 논리보다도 구체화된 것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한반도를 非核地帶, 平和地帶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北韓의 입장은 주한미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다고 北韓이 인식하고 있는 核武器 철수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北韓이 주장하는 비핵지대는 “핵무기의 시험, 생산, 소유와 그 사용, 핵무기운반수단의 통과와 공항, 항구의 리용이 금지되고 핵기지, 핵시설이 없는 지역”을 의미하고, 비핵지대의 창설이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³⁵⁾

北韓은 1976년 8월 東京에서 개최된 「한국문제긴급국제회의」에

34)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수호할 수 있습니다. …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군사력을 해체하여야 합니다. 모든 군사력을 해체하는 것과 함께 다른 나라에 있는 침략적 군사기지를 철폐하고 외국군대를 철수하여야 합니다. …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넓혀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구라파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사용을 금지하며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것을 주장합니다. 현시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신흥세력 나라들사이의 분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조선중앙년감 1981」, pp. 66~67.

35) 황헌,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인류앞에 나서고있는 초미의 문제,” 「근로자」, 제525호 (1986. 1), p. 91.

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래, 1978년 11월 東京에서 개최된 「조선의 통일을 위한 제2차 세계대회」에서 南韓에서의 미군과 핵무기의 완전 철수를 제기하였고, 1986년 6월 23일 정부명의로 「조선반도에서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제안」을 발표했다.³⁶⁾ 이후 北韓은 평양에서 비핵·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³⁷⁾

한편 北韓은 19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를 개최하여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를 상정하여 美國, 南韓과의 3자회담의 개최를 통한 對美平和協定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문제 협의, 그리고 南北韓의 不可侵宣言을 채택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³⁸⁾ 김일

36) 北韓은 이 성명에서 “첫째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들이 자기의 영토, 령공, 령해를 통과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미국정부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남조선에 대한 새로운 핵무기 반입을 중지하며 이미 반입한 모든 핵무기들을 단계별로 축감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완전히 철수하며 조선반도에서 핵무기사용과 관련한 모든 작전계획들을 취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우리의 제의와 관련하여 그 어떤 협상이 필요하다면 그 협상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에 어드나 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선중앙년감 1987」, p. 599.

37) 「北韓 및 共産圈動向」, 第75號 (1987. 10), pp. 80~86; 第88號 (1988. 10), pp. 63~65 참조. 한반도의 비핵 평화지대화에 대한 北韓의 관점은 김수천,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키는 것은 조선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절박한 과업,” 「근로자」, 第533호 (1986. 9), pp. 72~76 참조. 김일성은 1990년 “신년사”에서도 “우리는 우리나라에 조성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선반도를 비핵,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38) 「조선중앙년감 1985」, pp. 122~123.

성은 1986년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행한 施政演說에서 한반도의 비핵·평화지대 건설을 언급한 후, 南北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의 개최를 통한 南北韓의 긴장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의하면서 美國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불가침선언 채택을 재차 강조하였다.³⁹⁾

北韓은 1987년 7월 23일 정부명의로 「조선반도에서 단계별 다국적 무력감축협상」을 제의했으며,⁴⁰⁾ 1988년 11월 7일에는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를 개최하여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제의하면서 3자회담을 개최하여 미군철수, 군축 합의를 기초로 美·北韓 평화협정과 남북 불가침선언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인·정착시킬 것을 제의하였다.⁴¹⁾ 이러한 北韓의 입장은 김일성이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 가운데 「조국통일 5개방침」의 첫째 항인 「조선반도의 긴장상태 완

39)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조선중앙년감 1987」, p. 104.

40) 이 제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한 병력의 단계별 축소후 1992년부터 10만명 이하의 병력 유지,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철수, 군사기지 철폐, 군축현황의 상호통지, 평화지대 건설, 다국적군축협상 제안 등이다. 「조선중앙년감 1988」, p. 243; 박제해,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자,” 「근로자」, 제 554호 (1988. 6), p. 84 참조.

41) 北韓은 이 제의에서 통일지향, 외군철수, 북남군축, 당사자협상을 내용으로 하는 平和保障 4原則과 함께 포괄적인 平和方案으로 첫째,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미군무력의 단계적 철수, 북남무력의 단계적 축감,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통보와 검증,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을 제시하였고, 둘째,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치적 대결상태의 완화, 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 그리고 고위급정치회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선중앙년감 1989」, pp. 150~154.

화와 평화보장」에서 반복 제시되었다.⁴²⁾

北韓은 1990년 5월 31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를 개최하여 1988년 11월에 제의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南北韓 신뢰구축, 무력감축, 외국무력의 철수, 군축과 그 이후 평화보장 등에 관한 10개항의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 제안」을 제시하면서 불가침선언과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하였다.⁴³⁾ 또한 北韓은 1991년 7월 30일 외교부성명을 발표하여 한반도 비핵지대의 창설방안을 보다 구체화시켰다.⁴⁴⁾

北韓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강도를 더하며 주장·선전하고 있는 駐韓美軍 撤收, 한반도 비핵지대화, 불가침선언, 南北韓 軍縮 등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모두는 北韓이 國內政治에서 정치적 상징조작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北韓이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해 온 이면에는 武力에 의한 韓半島統一 의도가 있다고 하겠으나, 한편 北韓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군에 의한 「흡수통일」의 안전판으로 간주한다는 가정도 상정해 볼 수 있다.

42) 김일성은 이 施政演說에서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중요 문제는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과 남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줄이고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외국군대를 철수시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p. 14.

43) 「로동신문」, 1990. 6. 2. 특히 불가침선언 문제는 1990년 9월 이래 4차례에 걸쳐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시 北韓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주요 쟁점이다.

44) 「로동신문」, 1991. 7. 30.

北韓의 非核地帶化 주장 역시 평화애호국으로서의 국제적 이미 지 고양과 韓國으로부터의 核撤收를 겨냥하는 한편 자체의 核開發을 은폐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하겠다.⁴⁵⁾ 北韓이 줄곧 제기해 온 不可侵宣言, 軍縮問題 역시 이중적 성향을 내포한 것이나, 北韓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軍비축소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北韓이 「하나의 조선」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北韓의 주장에는 政治的 修辭의 성격이 강하게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對南平和攻勢의 일환으로 이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체제유지와 경제난 해소를 위해 南北韓 軍縮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南韓 당국을 배제한 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및 핵문제를 對美協商 카드로 활용하면서 對美接近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 北韓의 經濟目標와 經濟政策

北韓의 經濟政策 목표는 「경제에서 자립」이다. 이를 北韓은 “경제적 예측과 의존을 없애고 나라와 인민의 물질적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키며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⁶⁾ 라고 정의한다. 北韓이 自立的 民族經濟를 건설하

45) 北韓의 核問題에 대해서는 Leonard S. Spector and Jacqueline R. Smith, “North Korea: The Next Nuclear Nightmare?” *Arms Control Today*, vol. 24, no. 2 (March 1991), pp. 8~13 참조.

46) 경제에서 自立的 意義에 대해 김정일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를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들에게 넉넉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였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1983」, p. 142.

기 위해 표방하는 기본정책은 自力更生의 원칙이다. 北韓은 자력갱생을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나가는 립장과 정신”이라고 정의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자력갱생은 “자기 나라의 건설은 자기 나라 인민이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진행하는데서 나타난다”⁴⁷⁾라고 설명한다.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경제에서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北韓의 실질적인 經濟目標은 「경제의 주체화, 과학화, 현대화」로 표출되고 있으며, 경제정책은 자력갱생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이다. 그러나 北韓은 經濟難을 해소하기 위해 「통제된 개방」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 經濟目標：經濟의 主體化, 科學化, 現代化

경제에서 자립원칙은 北韓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며, 이는 北韓의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 제3차 7개년계획 (1987~1993)의 基本課業으로 제시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가운데 「주체화」로 표출되었다.

北韓은 1977년 12월 17일 최고인민회의의 法令으로 제2차 7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基本課業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 단계씩 높이는 것이다”라고 명시하였다. 제2차 7개년계획의 기본 과업에서 드러나는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인민경제의 주체화」라

47) 「철학사전」, pp. 424~425; 김광수, “자력갱생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담보,” 「근로자」, 제580호 (1990. 8), pp. 36~41 참조.

는 점으로써 이는 自力更生政策의 강조이며,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라는 구호이다. 이러한 北韓의 입장은 이 법령의 마지막 부분에서 철저히 강조되어 있다.⁴⁸⁾ 北韓이 이 시기에 자력갱생을 강조한 이유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과중한 外債의 부담으로 對外經濟交流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北韓은 제2차 7개년계획을 1985년 2월에 성과적으로 수행했다고 공표하고, 2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1987년 4월 23일 제3차 7개년계획에 관한 법령을 채택했다. 제3차 7개년계획의 基本課業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 것”⁴⁹⁾이라고 제시되었다. 계속해서 그 기본과업은 현대화된 주체적인 경제의 건설과 함께 科學技術의 발전을 통해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며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인민생활수준을 한계단 높이 올려세우는 것”⁵⁰⁾이라고 지적되었다. 이로써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 역시 제2차 7개

48)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第IV輯」(서울: 國土統一院, 1988), p. 218.

49) 위의 책, p. 911. 제3차 7개년계획에 대한 분석은 B. C. Koh, “North Korea in 1987: Launching a New Seven-Year Plan,” *Asian Survey*, vol. XXVIII, no. 1 (January 1988), pp. 62~63 참조.

50) 이에 덧붙여 제시된 기본과업은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에 “총체적으로 공업생산은 1.9배로 늘이며 그 가운데서 생산수단생산은 1.9배, 소비재생산은 1.8배로 늘일 것이다. 이 기간에 농업생산은 1.4배이상 늘일 것이다. 그리하여 새 전망계획기간에 사회총생산은 1.8배로, 국민소득은 1.7배로 장성시킬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第IV輯」, p. 911.

년계획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⁵¹⁾ 北韓의 經濟目標은 경제의 「주체화, 과학화, 현대화」의 달성임을 알 수 있다.⁵²⁾

나. 經濟政策

(1) 自力更生

北韓이 경제부문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경제의 현대화, 과학화이나, 그 기본정책은 경제의 주체화라는 자력갱생원칙에 있다.⁵³⁾ 이러한 北韓의 경제정책 기조는 1986년 5월 31일 “김일성고급당학 교창립 40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강의록”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인민경제의 주체

-
- 51) 제3차 7개년계획의 부문별 과업중 ‘과학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킬데 대하여’에는 “최신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인류가 달성한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며 특히 극소형전자계산기, 빛섬유통신, 생물공학, 새로운 에너지를, 새로운 재료의 개발리용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넣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점에서 北韓은 경제의 과학화를 위해 先進科學技術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측면이 드러난다. 위의 책, p. 920.
- 52) 北韓이 「현대화」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생산의 자동화, 로봇화, 전자계산기화”이며, 「과학화」란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세워” 생산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 7. 10. 「로동신문」 사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토선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자” 참조.
- 53)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자력갱생을 전제로 하고있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에 부딪칠수 있다. 그러므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는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 수 있다.” 허영익,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중요 과업,” 「근로자」, 제534호 (1986. 10), p. 64.

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며 모든 생산활동을 과학화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경제를 주체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 현대화와 과학화를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⁵⁴⁾

北韓은 자력갱생원칙을 현재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은 1990년 “신년사”와 1990년 5월 24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행한 施政演說에서도 자력갱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北韓은 1987년부터 제3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北韓 경제침체의 기본원인은 이러한北韓의 자력갱생정책의 고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 정치·군사 우선정책에 따른 과도한 군사비 지출,⁵⁵⁾ 中·蘇로부터의 경제협력과 지원 감소⁵⁶⁾ 등은北韓經濟의 침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54)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조선중앙년감 1987」, p. 54. 김일성은 1986년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행한 施政演說에서 “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힘있게 다르쳐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였다.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위의 책, p. 98.

55)北韓은 국민총생산액의 20~24%를 軍事費에 투입함으로써 경제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 「國防白書 1990」(서울: 國防部, 1990), pp. 116~117.

56) 특히 1990년 11월 2일北韓과 蘇聯이 무역대금의 硬貨決濟協定을 체결한 이후, 中國 역시北韓에게 무역결제 방식의 전환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北韓의 외화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1990년 현재 北韓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1,064달러로 추계되며, 北韓의 경제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經濟成長率에 있어 1990년에는 휴전 이후 최초로 -3.7%를 기록했고 1987~1990 4년간의 평균성장률은 1.21%로 연평균 성장률 목표인 7.9%에 크게 밑도는 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⁵⁷⁾ 그리고 1991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2차회의에서는 1991년도 예산규모를 173.5억 달러로 책정하였고, 예산증가율은 세입기준으로 1990년의 6.2%보다 대폭 축소된 4.0%에 머물렀다.⁵⁸⁾ 北韓이 긴축예산 기조로 전환한 것은 경제침체 상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다.

이와 함께 北韓의 貿易赤字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北韓의 外債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 1990년말 현재 北韓의 외채총액은 78억 6천만달러에 달한다.⁵⁹⁾ 이는 北韓의 경제침체를 나타내는 지표임과 동시에 經濟狀況의 악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일성이 1991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첫째 과업으로 제시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운다”는 것은 이들 산업분야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北韓經濟 전분야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⁶⁰⁾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의 부족으로 산업시설의 가동률이 45%에 지나지 않고 있고, 주민생활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食糧事情은 극도

57) 統一院, 「1990年度 北韓經濟 綜合評價」(서울: 統一院, 1991. 8), p. 3.

58) 「北韓 및 共產圈動向」, 第118號 (1991. 5), p. 13.

59) 統一院, 「1990年度 北韓經濟 綜合評價」, p. 32.

60) 김일성, “신년사,” 「근로자」, 제585호 (1991. 1), p. 5.

로 악화 상황에 있다.⁶¹⁾ 또한 北韓經濟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서는 투자자금의 부족, 생산설비의 노후화, 기술낙후, 생산의욕의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경제관리의 측면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대안의 사업체계」 역시 계획과 생산을 원활히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²⁾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北韓은 政權維持와 체제의 정당화를 위해 民生問題의 해결이라는 필수불가결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국민의 불만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목적”이라고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改革과 開放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지만, 개혁·개방은 경제의 시장화 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를 초래하여 체제에 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즉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경제의 활성화, 實用主義路線의 채택이 불가결하지만, 이는 역으로 체제에 대한 위협요인이 된다는

61) 北韓의 에너지공급구조는 석탄 70%, 수력 16%, 유류 10%, 기타 4%로 에너지의 석탄의존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석탄생산부진(1990년 실제생산량 3,300만톤)이 에너지 부족의 기본원인이다. 또한 1989년 이후 외화사정의 악화, 中·蘇의 경화결제 요구 등으로 인한 원유도입부족이 北韓의 에너지난을 가중시키고 있다(北韓의 정유능력은 년 350만톤이나 1990년 원유도입량은 中國 110만톤, 蘇聯 44만톤, 이란 98만톤 등 252만톤으로 추정됨). 1991년 추수기까지 北韓의 식량부족량은 160만톤 정도이며, 北韓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증진을 강화하고 있다. 統一院, 「1990년도 北韓經濟 綜合評價」, pp. 8, 11~13 참조.

62) 김일성이 1991년 “신년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을 새롭게 강조하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여 단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책임성과 창의성을 높여 제기되는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경제관리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점에 北韓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⁶³⁾ 北韓은 자력갱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나, 이 원칙에 입각한 對外經濟關係의 擴大는 北韓의 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것이다.

(2) 統制된 開放政策 追求

北韓이 표방하고 있는 「경제의 주체화」라는 논리는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北韓의 경제목표인 自立經濟는 폐쇄적인 자력갱생 원칙의 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⁶⁴⁾ 北韓은 제2차 7개년계획과 제3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經濟의 現代化, 科學化를 달성하기 위해 對外經濟關係의 확대를 모색해 왔다.

北韓이 對外經濟關係의 확대를 모색·추진하고 있다는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는 對外貿易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이다.⁶⁵⁾ 김일성은 제6차 당대회에서 대외무역의 확대발전을 강조했고,⁶⁶⁾ 1984년 1월 26일의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에서는

63) 朴漢植·高秉喆, “金日成 以後의 北韓政治 展望,” 「金日成 이후의 北韓」(서울: 國土統一院, 1990), p. 26.

64) 즉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협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철학사전」, p. 54.

65) 北韓은 이미 1970년대 초에 대외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1970년대 중반에 들어 外債의 부담으로 난관에 봉착했었다. 北韓이 對外貿易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다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9월 국가수립 30주년 경축대회에서의 김일성의 보고에서 드러나며, 이후 1979년과 1980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도 그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었다.

66) 김일성은 제6차 당대회에서 행한 사업총화보고를 통하여 社會主義 經濟建設의 10대 전망목표의 제시와 함께 對外貿易의 확대발전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 보고에서 김일성은 “현시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대외무역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결정을 채택하여 대외무역의 확대방안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⁶⁷⁾ 北韓은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84년 12월의 당 중앙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도 대외무역의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일성은 1985년 6월 9일 「世界」誌 편집국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합영법 제정의 意義와 앞으로의 經濟合作과 交流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 나라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 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채택하고 공업과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 합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합영법이 발표된 다음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와 경제합작과 기술교류를 진행할 것을 새롭게 요구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인민경제의 규모가 비할바 없이 커지고 경제부문들이 매우 다양하여진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외무역을 더욱 확대발전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여 對外貿易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수출품생산의 확장, 수출액의 제고, 대외무역의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조선중앙년감 1981」, pp. 51~52. 北韓은 제6차 당대회 이후 지속적으로 對外貿易의 擴張을 모색하였다. 그 구체적인 예로는 1980년 12월의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차 전원회의와 1983년 11월의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8차 전원회의의 주요 議題가 대외무역의 확장에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67) 「조선중앙년감 1985」, p. 124; V. Smirnov, "Development of Foreign Economic 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r Eastern Affairs*, vol. 42, no. 4 (1984), p. 39. 이 최고인민회의 결정의 전문은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第IV輯」, pp. 589~597 참조.

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며 우리나라와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언제나 환영할 것이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진행하여 나갈 것입니다.⁶⁸⁾

위의 김일성의 언급에서 北韓이 합영법의 제정을 매우 중시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외경제교류, 합작을 추진하려는 政策意志를 알 수 있다. 1985년 3월에는 「합영법시행세칙」, 「외국인소득세법」, 「합영회사 소득세법」을, 5월에는 「합영회사 소득세법세칙」, 「외국인 소득세법 세칙」 등을 각각 제정하여 對外開放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⁶⁹⁾ 1986년 8월 8일에는 朝總聯 合營事業研究會와 北韓의 합영사업 준비위원회간에 조선국제합영총사를 설립하기 위한 합의서를 조인하였다.⁷⁰⁾ 이를 통해 北韓은 조총련과의 합영사업을 발전시키려고 도모하였다. 이후 北韓은 1987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2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3차 7개년(1987~1993) 계획에 대하여」라는 결정을 통해 대외무역의 확대, 경제합작, 합영의 발전을 공식화했다.⁷¹⁾

이상의 논의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北韓이 對外開放을 보

68) 「조선중앙년감 1986」, p. 18.

69) Hy-Sang Lee, "North Korea's Closed Economy: The Hidden Opening," *Asian Survey*, vol. XXVIII, no. 12 (December 1988), pp. 1272~1273; 박동철, "북한의 대외개방 추세와 전망," 「統一問題研究」, 제1권 3호 (1989 가을), p. 111; 연하정, "최근 북한의 경제개방화정책," 정상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p. 257~258; 정송남, "발전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 「국제생활」, 제59호 (1990. 12), pp. 20~21 참조.

70) 「北韓資料」, 第64號 (1986. 9), pp. 26~28; Lee, "North Korea's Closed Economy," pp. 1273~1277.

다 과감히 추진할 수 없는 국내적인 制約要因에도 불구하고, 對外 經濟關係를 확대하려는 정책에 대한 論理는 이미 세워졌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北韓이 경제의 현대화, 과학화의 추구를 포기하지 않는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北韓이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합영사업을 추진해 온 실질적인 성과는 미약하다(표 6-1, 6-3 참조).

北韓은 현재 <표 6-1>에서 나타나듯이 만성적인 貿易赤字를 기록하고 있으며, 圈域別 貿易構造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北韓 총무역거래량의 60% 정도가 中·蘇와 이루어지고 있어 北韓經濟의 對 中·蘇 依存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과 日本과의 무역거래량이 전체의 10%를 차지하여 北韓의 대외무역에서 日本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표 6-2 참조). 따라서 北韓은 동북아국가들 가운데 中·蘇와의 경제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日本과의 經濟交流를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⁷²⁾ 中·蘇로부터의 對北韓 經濟協力과 支援은 보다 감소될 전망이므로 北韓은 자본과 기술확보를 위해 美·日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시키

71) 이 법령의 전문은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第IV輯」, pp. 910~924 참조. 김일성은 1988년 9월 8일 국가수립 40주년 기념식에서의 보고문,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72) 北韓은 1970년 제5차 당대회 이후 日本과의 관계개선 의사와 經濟交流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하면서 1971년에는 「일조천선련맹」, 「일조우호추진련맹」을 결성하였다. 김일성은 1971년 9월 25일과 10월 8일 일본기자와 행한 담화에서 日本과의 관계개선 의사와 貿易關係의 발전을 표명하였고, 1972년 5월 “일본혁신시장회 대표단과 한 담화”와 10월 「世界」지 편집국장과의 담화에서도 日本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른 경제교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北韓은 日本에 대한 접근을 계속 추진했으며 이에 대해 日本은 제한된 범위에서 부응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고, 南韓과의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⁷³⁾

<표 6-1> 北韓의 對外貿易 推移

(단위: 억 달러)

구분 /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총수출(A)	3.7	8.1	14.4	13.5	14.9	16.7	20.3	19.5	20.2
총수입(B)	4.4	10.9	17.4	17.2	21.1	24.0	32.1	28.5	26.2
총무역액(C=A+B)	8.1	19.0	31.8	30.7	36.0	40.7	52.4	47.9	46.4
무역수지(A-B)	-0.7	-2.8	-3.0	-3.7	-6.2	-6.2	-11.8	-9.0	-6.0

자료: 姜正模,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p. 27;
統一院, 「1990年度 北韓經濟 綜合指標」(서울: 統一院, 1991), p. 21.

<표 6-2> 圈域別 貿易構成比

(단위: %)

구분 연도	개발도상국가	서방선진국가		사회주의국가		
		서구·기타	일본	동구·쿠바·몽고	중국	소련
1970	2.4	11.5	7.1	17.0	14.4	47.6
1975	10.0	18.1	12.5	12.8	23.7	22.9
1980	16.9	11.4	16.9	9.0	20.0	25.8
1985	9.5	5.7	14.9	10.7	16.6	42.6
1986	9.0	6.1	10.3	8.2	15.4	51.0
1987	10.0	9.1	10.8	8.9	12.4	48.8
1988	15.5	5.5	10.6	7.0	11.1	50.3
1989	15.6	4.7	10.4	7.7	11.7	49.9

자료: 姜正模,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p. 28.

73) 1988년부터 1991년 8월까지 南韓이 北韓의 물품을 반입한 것은 216건, 6,222만 9천달러이고, 반출한 품목수는 226건, 총액은 9,747만 3천달러에 달한다.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한교류협력동향」, 제3호 (1991. 10), p. 12.

<표 6-3>

年度別 合營實績現況

區分	85		86		87		88		89		90.6		계	
	誘致	進出	誘致	進出	誘致	進出								
日本 (朝總聯)	3	4	4		14		12		15		2		50	
蘇聯	1						1	3	4	8	1	2	7	13
中國						1		2	1				1	3
東歐諸國							3	2					3	2
西方國家					1		4						5	
第3世界		1				1				1				3
計	4	4	4		15	2	20	7	20	9	3	2	66	21

자료: 姜正模,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p. 56.

北韓의 경제침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對外經濟開放의 확대이지만, 北韓은 對外開放을 체제유지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대외개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南韓이 北韓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에 대해 北韓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평화적 이행>전략에 따라 북에 <자유화>바람을 불어넣어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체도를 뒤집어엎고 저들의 체제를 북에까지 연장해보려는 것이다”라고 논평하였다.⁷⁴⁾ 따라서 北韓은 대외개방이 북한주민에 주는

74) 「로동신문」, 1990. 12. 7.

영향을 극소화시켜 體制維持가 손상받지 않는 범위에서 「통제된 개방」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은 「제한된 지역」을 自由貿易地帶 또는 經濟特區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⁷⁵⁾

4. 蘇聯의 東北亞政策에 대한 北韓의 對應

北韓은 蘇聯의 적극적인 對東北亞政策 推進에 구체적인 반응을 보였다기 보다, 사회주의체제의 변혁과 세계적 차원에서의 화해·협력 추세, 동북아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과정에서 南北韓 유엔 동시가입과 美國·日本과의 관계개선 시도 등 대외정책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蘇聯의 급격한 정치변동은 北韓의 對中國關係 緊密化를 가속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北韓과 동북아 4강과의 관계전망, 南北韓關係 전망 및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경제 및 안보협력에 대한 北韓의 입장을 검토하려 한다.

가. 主要 兩者關係에 미치는 影響과 北韓의 對應

(1) 中國과의 關係 緊密化와 對蘇關係 維持

北韓과 中國은 사회주의권의 체제변동을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和平演變) 전략에 기인하는 것으로 비난하면서 정치·이

75) 北韓은 1991년 8월 30일 「동북아경제기술발전 국제세미나」에서 선봉지구의 「경제 무역지구」 개발계획을 밝혔다. 「東亞日報」, 1991. 8. 31;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 교류협력 동향」, 제3호 (1991. 10), pp. 19~20.

데올로기적 공동보조를 취해왔으며, 中·北韓간의 전통적인 友好關係는 고위지도자의 빈번한 상호방문에서 나타나듯이 효율적으로 지속되어 왔다.⁷⁶⁾ 특히 北韓이 天安門事態를 「반혁명폭란」으로 규정하고 中國共產黨의 무력진압 조치를 지지한 이래 양국의 유대는 더욱 공고화되었다.⁷⁷⁾

반면 韓·蘇修交는 北韓에게 커다란 정치·외교적 손실이었다. 北韓은 蘇聯이 추진해 온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인정하면서 군사·경제적 교류를 지속해왔다.⁷⁸⁾ 그러나 韓·蘇修交에 대해서 北韓은 “딸라로 팔고사는 <외교관계>”라는 제하의 1990년 10월 5일자 「로동신문」 논설을 통해 蘇聯의 행위를 「배신」이라고 비난하고, 韓·蘇修交는 결국 <두개 조선> 인정, 北韓의 국제적

76) 中·北韓간 高位指導者의 상호방문은 1989년 4월 趙紫陽의 訪北, 1989년 11월 김일성의 訪中, 1990년 3월 江澤民의 訪北, 1990년 9월 김일성의 訪中, 1990년 11월 연형묵의 訪中, 1991년 5월 李鵬, 6월 錢其琛의 訪北, 1991년 10월 김일성의 訪中으로 이어지고 있다.

77) 北韓은 1989. 7. 1. 「로동신문」 논설 “중국공산당장건 68돐”이라는 제하의 논설에서 천안문사태를 「반혁명폭란」으로 규정하고 중국공산당의 무력진압 조치를 지지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동기, “공산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길로 확고히 전진하는 중국인민,” 「국제생활」, 제51호 (1990. 4), pp. 30~31 참조. 北韓은 “피로써 맺어진 불패의 조중친선”이라는 제하의 1991. 7. 1.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이 강화되고 있는 오늘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위업과 아세아의 평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고 언명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혁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입장을 밝혔다.

78) 北韓은 1989. 7. 6. 「로동신문」 논설 “불패의 조중친선”에서 “오늘 쏘련에서는 사회경제 발전을 다그치고 사회주의를 새로운 수증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편사업이 심화발전되고 있으며 쏘베트사회의 갱신과정이 적극 추진되고 인민들의 복리가 날로 증진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蘇聯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고립, 개방에로의 유도와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제도의 전복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⁷⁹⁾ 韓·蘇修交 체결과정에서 北韓·蘇聯關係는 상당히 소원해지기는 했으나 기존의 同盟關係가 와해되는 국면으로까지 진척되지는 않았다.

北韓은 蘇聯의 개혁·개방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고, 韓·蘇修交와 1991년 8월 蘇聯의 쿠데타 실패를 계기로 中國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화 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⁸⁰⁾ 中國에서 蘇聯과 같은 政治變動이 발생하지 않는 한 中·北韓은 정치·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주의체제의 고수라는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긴밀한 協調體制를 유지할 것이다.⁸¹⁾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中國은 자체 경제역량의 한계 때문에 北韓에게 실질적인 經濟援助를 제공

79) 「로동신문」, 1990. 10. 5.

80) 中·北韓은 1991년 8월의 소련사태 직후 8월 24일 中國 당대의연락부장의 평양방문, 8월 24일 中 北韓外交部長 회담, 8월 30일 「'91년 과학기술협조의정서」 조인, 10월 김일성의 訪中 등에서 나타나듯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81) 北韓은 1991년 10월 4~13일간 김일성의 訪中結果를 토의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 관한 보도에서 양국 지도자들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 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며 끝까지 완성할데 대한 확고부동한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였다”라고 지적하였다. 「로동신문」, 1991. 10. 17. 또한 北韓은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41주년 기념일에 “조중친선은 불패이다”라는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우리 인민은 위대한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를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1991. 10. 25. 1991년 10월 中國訪問時 김일성은 鄧小平과의 회담에서 석유공급, 경제원조, 원자력발전소 건설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中國은 매년 175만톤의 석유공급 (우호가격 50만톤, 바터거래 50만톤, 국제시장가격 보다 5% 싼 가격으로 75만톤), 매년 600억 人民幣의 무이자 차관제공, 100억 인민폐의 이자차관 제공을 약속하였고, 김일성은 中國의 형제적 지지에 감사하기 위해 평양에 鄧小平 銅像을 건립하기로 하였다고 보도되었다. 「金日成要爲鄧立銅像,」 「爭鳴」, 第169號 (1991. 11), p. 18.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양국의 경제관계는 현실적인 차원으로 재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蘇聯의 政治變革으로 北韓은 中國에 더 기울어질 것이나, 현재 北韓의 경제·군사적인 측면에서의 對蘇依存도에 비추어 北韓은 蘇聯과의 기존 동맹관계를 단절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⁸²⁾ 北韓은 蘇聯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기존의 同盟關係를 최대한 유지시키려할 것이다. 그러나 韓·蘇修交, 蘇聯의 쿠데타 발발시 北韓의 묵시적 지지, 蘇聯 자체의 근본적인 體制改革, 南北韓 유엔 동시가입 등의 요인에 따라 蘇聯의 對北韓 경제·군사지원 축소, 蘇·北韓 軍事同盟體制의 변화가능성은 증대되었다고 평가된다.

(2) 對美·日關係 改善

北韓은 美國, 日本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국교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北韓이 1991년 5월 27일 유엔가입 의사를 표명한 후 9월 17일 유엔총회에서 南北韓의 유엔동시가입이 실현된 것은 北韓의 對美·日 接近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7월 16일 國

82) 예를 들면 北韓은 1990년까지 蘇聯으로부터 국제가격의 30%수준으로 원유를 공급받아 왔고, 北韓의 생산부문중 전력의 60%, 철강의 33%, 석유화학제품의 50%, 섬유의 40%가 소련의 지원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蘇聯은 北韓의 최대무역상대국으로서 1989년에 들어 1983년 이래 처음으로 전체 거래규모에서 전년대비 감소를 나타냈지만 北韓의 전체무역고 가운데 蘇聯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매년 45-50%에 이르고 있다. 徐鎭英 編, 「現代中國과 北韓 40年: 資料와 統計」(서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89), p. 352; 江原規由, “'89年の 對外貿易,” 「北韓의 經濟와 貿易展望」(서울: 國土統一院, 1990), p. 70.

際原子力機構(IAEA)와 핵안전협정표준문안에 假署名하여 핵사찰 수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9월 이사회에서 서명을 거부한 것은 美·北韓, 日·北韓關係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北韓·日本關係에서 1990년 9월 日本의 자민당과 사회당 대표단이 北韓을 방문하여 조선로동당과의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간 國交正常化에 합의한 것은 日·北韓關係 개선을 가속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였다.⁸³⁾ 양국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본 회담이 1991년 1월 30일 개최된 이래 9월 2일까지 4차례의 본 회담에서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요 쟁점은 한반도의 관할권문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北韓의 핵사찰수용, 남북대화 개최, 일본인치의 고향방문 등이다.⁸⁴⁾ 北韓의 核査察收容이 현실화된다면 이러한 쟁점중 남은 주요 문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에 관한 양국의 의견조정 뿐이며, 이는 별 어려움없이 타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의 修交는 조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北韓과 美國은 1988년 12월 6일 北京에서 참사관급 외교관 접촉을 시작한 이래 1991년 11월 현재 18차례의 회합을 가졌으며, 관계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을 상호 제시하고 있다. 美國은 北韓에 대해 남북대화의 진전, 비무장지대에서의 신뢰구축, 미군유해의 송환, 반미 적대선전활동의 중지, 테러사용의 포기, 핵안전협정 가입

83) 이 공동선언의 전문은 「국제생활」, 제57호 (1990. 10), pp. 25~26 참조.

84) 일·북한 국교정상화 본회담에 대한 北韓의 견해는 「로동신문」, 1991. 9. 3 참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北韓의 대미 요구사항은 접촉수준의 격상, 주한미군철수, 韓·美군사훈련 중지, 평화협정 체결,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양국정부의 협의체 구성 등이다. 이러한 쟁점들 가운데 北韓의 핵사찰수용 및 핵개발포기, 그리고 韓·美軍事關係의 재조정에 따른 주한미군과 核武器의 철수가 실현된다면 美·北韓關係는 급진전되어 관계정상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⁸⁵⁾

(3) 對南「守勢의 共存」推進

北韓은 1988년이래 南北韓 共存體制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北韓의 유엔가입결정은 그동안 北韓이 견지해온 「하나 조선」정책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南北韓 공존체제로의 이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北韓이 기존의 對南政策을 변경시키지 않는 한 南北韓關係 개선의 급속한 진전은 불가능하나, 南北韓 유엔동시가입은 南北韓關係 개선에 긍정

85) 南北韓 유엔동시가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서 南北韓關係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南北韓 유엔동시가입은 南北韓이 유엔에 의해서 「국가」로서 승인을 받는 효과를 초래하므로 국제사회에서 체제의 合法性을 인정받기 위한 南北韓간의 外交的 競爭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고, 현실인정은 관계개선의 시발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南北韓이 영토의 존중,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유엔憲章을 수락함으로써 南北韓關係가 平和共存體制로 제도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南北韓의 긴장완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南北韓간에 실질적인 經濟交流가 활성화될 수 있는 한편, 현 休戰體制의 平和體制로의 이행을 둘러싼 불가침협정, 군축, 유엔사 및 주한미군문제, 한반도 비핵지대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유엔이라는 상설 대화창구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南北韓의 직접접촉은 더욱 촉진될 수 있으며, 유엔 및 산하의 각종 국제기구내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엔동시가입이 반드시 南北韓의 相互承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北韓의 유엔가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南北韓의 關係改善이 일시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北韓이 유엔가입결정을 공표한 5월 27일자 외교부 성명을 통해 南北韓 유엔동시가입이라는 “비정상적인 사태는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난국”이라고 규정하고 단일 국호, 단일의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천명했다는 사실에서 北韓의 유엔가입 의도는 명백히 드러난다.

더욱이 유엔가입결정 이후 北韓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는 김정일의 담화문을 반복 보도하면서 體制結束 強化에 주력하는 한편, 8월 1일부터는 김일성이 조국평화 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과 행한 담화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⁸⁶⁾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統一戰線戰術에 입각한 통일우선주의의 강조와 주한미군 및 핵무기철수, 비핵지대화 등 對南攻勢를 강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현재 北韓이 기존의 對南政策을 전향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징후는 없다. 또한 北韓은 유엔가입에 즈음한 9월 18일자 외교부성명에서 “우리 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조선으로 조국과 민족을 통일할 데 대한 기본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유엔가입을 기화로 하여 <두개 조선>으로 나라의 분열을 고정화하려는

86) 「로동신문」, 1991. 8. 5; 1991. 8. 6 참조.

어떠한 시도도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인정한다”⁸⁷⁾고 강조한 점에 비추어 北韓의 對南政策이 전향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1991년 12월 13일 제5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 단일문건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합의는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短期的으로 北韓은 국제적 고립 탈피와 체제고수의 일환으로 南北對話와 統一戰線戰術을 병행하면서 비정치적 교류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北韓은 對美·日 關係正常化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美·日이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남북대화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北韓은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핵무기철수, 비핵지대의 수립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대남·대미 협상카드로 사용할 것이다. 또한 北韓은 다원화된 南韓社會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족대단결」을 내세우면서 對南平和攻勢와 함께 통일전선전술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⁸⁸⁾ 이와 함께 北韓은 대외적으로 유연한 정책을 추구한다는 징표로 스포츠·문화·학술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南韓과의 交流를 증진시키고,

87) 「로동신문」, 1991. 9. 19. 北韓의 이러한 입장은 제46차 유엔총회에서 행한 연형묵 총리의 연설에서도 반복되었다. 연형묵은 이 연설에서 “조선의 북과 남이 오늘은 비록 각각 유엔에 들어왔지만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 인민은 민족의 대단결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며 유엔에서 하나의 의석을 가지고 인류의 공동위업에 기여하게 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로동신문」, 1991. 10. 4.

88) 1991년 9월 8일 국가창건 43주년 기념행사의 보고에서 부주석 박성철은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민족대단결이야말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또한 그 본질적 내용을 이룹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1991. 9.9.

자체의 경제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南韓과 直間接交易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993년 개최 예상되는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北韓의 對內外政策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⁸⁹⁾ 中期的(1993~ 1995)인 측면에서 유엔동시가입에 의한 「두개 조선」인정, 南北韓 국력격차의 심화, 한반도 현상인정에 대한 국제적 압력 증대 등의 요인에 의해 北韓이 南北韓간의 교류·협력을 수용함으로써 南北韓關係가 실질적인 「共存段階」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분단 50주년이며 南北韓 軍事力 均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995년을 계기로 北韓은 「守勢的 共存」의 입장에서 「두개 조선」을 고정하므로써 體制維持를 도모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南北聯合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일성의 有故 또는 김정일애로의 권력이양 이후 예상되는 北韓內部的 급격한 政治變動은 이러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나. 多者關係에 미치는 影響과 北韓의 對應

(1) 安保的 側面

北韓의 안보정책은 自主國防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北韓

89) 北韓은 黨大會 개최시 대내외정책의 재조정을 공표해 왔다. 1993년에 제7차 당대회 개최가 예상되는 근거로는 1992년 4월 김일성 80회 생일 기념행사로 인해 1992년 개최는 北韓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과 北韓은 제3차 7개년계획 (1987~ 1993) 종료시점에 맞추어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 南韓에 의한 吸收統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體制維持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자체의 국방력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對中·蘇 군사동맹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려할 것이다. 이와 함께 北韓은 주한미군, 핵무기의 철수, 군축, 비핵지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對美 直接接觸의 모색과 대남평화공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北韓의 당면과제는 경제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에 과도한 軍事費 지출은 억제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北韓이 韓·美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南北韓 군축 등이 실현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北韓은 1991년 1월 13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아시아 안보협력기구 창설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⁹⁰⁾ 이러한 北韓의 입장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이 談話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美·蘇間 軍縮, 쌍무적 군사조약의 폐기, 외국군대와 군사기지의 철수, 주한미군 및 핵무기의 철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아시아 安保協力機構의 형성이 가시화 된다면 北韓은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기구에 불가피하게 참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經濟的 側面

北韓은 亞·太地域에서 日本 주도의 經濟共同體 형성에 반대할 뿐

90) 「北韓 및 共産圈 動向」, 第115號 (1991. 2), pp. 40~41.

만아니라 美國 주도의 경제권 형성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北韓은 美國이 亞·太地域을 경제적으로도 지배하려한다고 인식하고 그 수단이 곧 「환태평양공동체」 구상이라고 주장한다.⁹¹⁾ 北韓은 근본적으로 資本主義的 國際經濟秩序를 발전도상국을 착취하는 「낡은 국제경제질서」로 인식하며 부정하고 있다. 北韓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南南協調를 강조하면서 비동맹국가와 발전도상국가와의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⁹²⁾

北韓의 경제침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對外經濟開放을 확대하는 것이나, 北韓은 대외개방을 체제유지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대외개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北韓은 체제유지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통제된 개방」 정책을 적극 전개할 것이며, 이는 「제한된 지역」의 자유무역지대화, 經濟特區 설정 등의 방법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를 통해 北韓은 동북아시아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려할 것이며,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多者間 經濟協力도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北韓은 자본주의적 국제경제질서와 경제협력기구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나, 시베리아개발, 中國의 동북경제구를 포

91) 박현규, “부위정권의 무모한 아세아, 태평양 침략교리,” 「국제생활」, 제42호 (1989. 7), p. 36 참조.

92) 北韓이 南南協調와 對外經濟關係의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명문화한 것은 1984년 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에서 채택된 「남남협조와 대외경제관계를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결정이다. 北韓은 남남협조 정책에 입각하여 발전도상국들간의 쌍무적, 지역적 및 지역간협조의 확대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국가들과 협조와 교류를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

함한 여타 경제특구에 적극 진출할 것이며, 北韓 지도자들은 이미 태평양연안국가들의 經濟的 動態性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연안국가들과의 다자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⁹³⁾

93) John Curtis Perry, "Dateline North Korea: A Communist Holdout," *Foreign Policy*, no. 80 (Fall 1990), pp. 173~174.

第7章 國際 및 東北亞秩序의 現況과 展望

美·日·中·蘇 4강과 南北韓의 利害가 상호 교차되고 있는 동북아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美·日·韓國의 남방 3각체제와 中·蘇·北韓의 북방 3각체제가 그 기본틀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85년 집권한 고르바초프 蘇聯共産黨 서기장이 蘇聯의 근본적인 體制改革을 수행하고 美·蘇 화해를 추구하므로써 蘇聯을 축으로 하는 東歐社會主義體制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경제면에서 동서 양진영간의 대결로 특징지워지던 냉전시대의 兩極體制가 붕괴되어 일반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그 영향으로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조도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국제질서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90년대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 국제질서의 현황이 분석되고 변화가 전망되어야 한다.

1. 國際秩序의 現況과 展望

가. 國際秩序의 現況

(1) 國際政治秩序의 現況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국제질서는 1962년 쿠바 미사일위기 때까지의 동서냉전기와 쿠바위기의 평화적 해결로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동서데탕트기로 발전되어 왔다. 1979년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美·蘇關係를 다시 악화시켜 국제질서는 동서간

의 데탕트로부터 신냉전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85년 3월 집권한 蘇聯의 지도자 고르바초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외관계 등 제분야에서의 「公開性」과 「新思考」 및 「民主化」를 강조하는 새로운 개혁(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추진하므로써 이념과 권력정치 및 경제적인 면에서의 동서대립이 종식되고, 1980년대 후반 이후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蘇聯의 개방과 개혁정책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등 근본적인 체제개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美·蘇간의 脫冷戰 내지는 신데탕트의 심화로 신국제질서가 태동하고 있다.

(가) 蘇聯 社會主義體制의 崩壞

「전세계에서의 사회주의혁명 완성」이라는 이념적 목표를 갖고 있던 蘇聯은 그동안의 과도한 군사비지출로 인한 경제침체와 기술낙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이념과 전체주의체제의 병폐 제거, 개방, 정치적 다원주의의 수용 및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 등 체제개혁을 추진하므로써, 70여년간 유지되어 오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었다. 蘇聯은 특히 1991년 8월 보수파에 의한 쿠데타 실패 이후 체제개혁을 가속화시켜 공산당의 사실상 해체, 발틱 3국의 독립, 연방과 공화국간 신조약 체결, 국호개칭, KGB 해체, 서구경제와의 통합추구 및 러시아공화국 국유재산의 私有化 발표, 군병력의 감축과 군제개편 등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정치·경제체제의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서방측은 蘇聯의 체제개혁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개혁추진 과정에서 改革派나 保守派에 대한 조직화된 지지기반의 부재, 국민욕구의 폭발, 정치·경제개혁의 지체, 체제개혁의 성과 부진, 소수민족문제, 당과 정부 및 군부내에서 개혁파와 보수파 간의 갈등, 연방과 공화국 간의 권력배분문제 등과 같은 변수들이 蘇聯의 정치와 경제상태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나) 美·蘇간의 신데탕트

蘇聯은 스탈린식 중앙계획경제체제하에서 생산성 저하와 기술낙후 등으로 체제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美國은 무역 및 재정적자의 누적, 경기침체 지속, 산업구조 개편의 지연 등으로 노동생산성 저하와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무기의 살상력이 제한적일 때는 制限戰爭이 가능했으나 核戰力時代에는 핵무기가 전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핵무기 사용은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레이건 美國大統領과 고르바초프 蘇聯共產黨 서기장은 3차례 걸친 頂上會談(1985. 11, 1986. 10, 1987. 12)을 통해 동서간의 긴장완화 분위기를 진전시키고 핵무기 통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美·蘇간의 모든 중거리 미사일을 제거하기로 합의를 본 1987년의 中距離核戰力(INF)廢棄協定の 조인은 군축문제의 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는 美·蘇가 실질적인 무기감축을 단행한 첫 군축협정으로서 국제질서가 新冷戰體制로부터 신데탕트체

제로 진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0년 11월 유럽에서의 재래식 전력감축협상(CFE-I)과 1991년 7월의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의 타결로 현재 美·蘇간에는 데탕트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美·蘇 양국은 전술핵무기의 철수 및 폐기(1991. 9~10)를 선언하므로써 획기적인 군축합의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美·蘇 군축의 가속화 경향은 탈냉전시대에 핵위협을 감소시키고 평화공존을 통한 국제사회의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美·蘇 양국은 1989년 12월 몰타 정상회담에서 냉전종식에 합의하는 한편 1990년 9월 헬싱키 정상회담을 통하여 상호협력시대를 개막시켰다. 이러한 美·蘇간의 신데탕트는 탈군사화 및 탈이념화 경향을 강화시켜 美·蘇 양국의 대외정책 뿐만 아니라 일반 국제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蘇聯은 西獨의 동독흡수통합 및 통일독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잔류를 승인하고 獨逸과 不可侵 및 經濟協力條約을 체결하므로써 獨逸과의 관계강화를 통한 「유럽一家」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蘇聯은 동구로부터 주둔군 철수, 바르샤바조약기구 해체를 단행하고, 자국의 安保利益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구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서구경제권으로의 통합을 허용하고 있다.

셋째, 서구제국은 대소 위협인식의 약화로 서구안보의 대미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서구 자체의 독자성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정치통합을 추진중인 유럽공동체도 최근 유고사태를 계기로 유럽 지역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獨·佛聯合軍의 창설을 구상(1991. 10. 16)하는 등 독자성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재래식전력 감축협상이 타결되고, 1990년 11월 유럽安保協力會議(CSCE)의 파리정상회담에서 탈냉전의 새시대가 공식 선언된 후, 美國과 蘇聯은 지역안보면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 걸프戰은 유엔을 통한 美·蘇協力の 주요 계기가 되었으며, 美·蘇 양국은 자신의 정책에 있어서 국내문제의 해결에 비중을 두고 캄보디아 및 中東平和會談의 예에서 보듯이 지역분쟁의 문제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면서 군사적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다) 新國際秩序의 胎動

위와 같은 蘇聯과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독일통일 및 美·蘇간의 신데탕트 등 일련의 국제정세 변화는 1990년대 초에 신국제질서를 태동시키고 있다. 현재 태동중인 新國際秩序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蘇聯이 현재 국내정세의 불안정과 경제난에 직면하고 있어 국제정치환경에서 美國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美國은 硬性的인 힘(군사와 경제)과 軟性的인 힘(이념과 리더쉽)을 보유한 다차원적인 초강대국으로 존속하고 있고,¹⁾ 이러한 美國의 지위는 금세기 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 Joseph S. Nye, Jr., "Why the Gulf War Served the National Interest," *The Atlantic Monthly* (July 1991), pp. 63~64.

美國이 구상하고 있는 신국제질서는 첫째, 東西冷戰과 이념대립을 청산하고 정치적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확산시키며 둘째, 국제사회의 행동규범으로서 「法の 支配」원칙 아래 국가들의 안보를 보장하고, 냉전시대의 유산인 「힘의 균형」원칙보다는 집단안보체제를 지향하며 셋째, 공존공영을 위한 국제적 경제협력을 자유주의원칙 아래 추진한다는 것이다.²⁾ 美國의 이러한 신국제질서 구상은 국가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의 증대를 통하여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자유민주주의이념과 시장경제체제로의 확산을 지향하는 美國 주도의 평화공존적인 국제정치환경을 조성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국제질서는 아직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로의 국제적인 통합기운이 계속될지 확실하지 않고, 신국제질서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과 행동양식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갈등과 불안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첫째, 兩極體制의 붕괴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역세력균형의 변화는 민주화과정과 세력공백 등으로 발생하는 상이한 종교 및 종족들간의 갈등 등 지역자체의 내재적 갈등요인들로 지역적 무력 분쟁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둘째, 東歐諸國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혁을 통한 민주정권의 기반이 정착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셋째, 현대 군사무기의 확산과 「軍事國家」(weapon state)의 등

2) 부시 美대통령의 1991년 9월 23일 유엔연설. *New York Times*, September 24, 1991.

장으로 地域霸權 추구의 가능성(이라크 등)과 지역불안요인(北韓 등)이 증대되고 있다.

넷째, 기존 蘇聯聯邦의 해체와 구성 공화국들의 분리주의 심화는 蘇聯의 장래 뿐 아니라 신국제질서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現國際秩序의 현황을 종합해 볼 때, 1990년대 초의 국제질서는 美·蘇 냉전체제의 붕괴로부터 신국제질서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특징지을 수 있고, 냉전유산의 지속과 새로운 규범의 미정착 등 이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으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와 같은 군사적 대결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어 국가상호간의 이익균형을 기초로 하는 화해와 협력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2) 國際經濟秩序의 現況

第2次 世界大戰의 종결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美國은 절대적인 經濟力의 우위를 바탕으로 國際經濟秩序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日本 및 서유럽국가들의 經濟力 強化, 新興工業國의 浮上 등 1970년대의 국제경제의 변화는 美國의 상대적인 經濟力 弱화를 초래하였다. 1980년대에도 지속된 美國의 貿易赤字 累積과 日本, 西歐經濟의 계속적인 발전은 美國의 國際經濟的 地位를 계속 하락시켰다. 따라서 現國際經濟秩序는 국제경제의 문제점을 多者的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고 그 비용을 경제강국들

이 분담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蘇聯의 改革과 開放으로 시작된 蘇聯 및 동구권국가들의 市場經濟體制로의 편입노력은 현국제 경제질서에 대한 變化要因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胎動시키는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 社會主義經濟의 市場經濟體制로의 編入 努力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의 改革과 開放政策으로 蘇聯과 동구국가들의 社會主義體制가 崩壞된 이후 이들 국가들은 社會主義經濟를 市場經濟體制로 轉換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蘇聯은 보수쿠데타의 실패로 보다 급속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中國은 政經分離原則에 따라 社會主義體制를 고수하고 經濟만의 개혁과 개방을 摸索하고 있으며, 經濟面의 개혁과 개방은 蘇聯보다 오히려 진전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世界經濟는 北韓을 비롯한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資本主義 世界經濟로 編入되는 過程에 있다.

(나) 多者間 協商을 통한 自由貿易의 擴散과 地域主義

國際經濟의 發展에 있어서 근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多者間 協商을 통한 貿易의 自由化 推進과 地域主義의 發展이다.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은 상충된 일면을 가지고 진전되어 왔다.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은 自由貿易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바, 이는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서비스, 지적소유권, 금융, 농산물 시장분야에서의 무역장벽을

낮추도록 요구하는 각국의 제안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유럽공동체(EC)는 유럽單一化法에 따른 1992년 市場單一化를 위하여 유럽의 經濟統合을 공고히하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결합을 통해 유럽경제지역(EEA)으로 擴張하려고 하고 있다. 美國은 캐나다와의 自由貿易協定(FTA) 발효에 이어 멕시코와의 自由貿易協定 締結을 가속화시키므로써 北美自由貿易地帶(NAFTA)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地域主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으나 亞·太경제협력각료회의(APEC)는 아직 常設機構로 정착되지 못한 채 협의만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 3中國(中國, 臺灣, 홍콩)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다) 國際經濟秩序의 重層化

美國은 상대적인 經濟力의 弱化和 日本經濟의 지속적인 성장 및 獨逸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경제의 발전으로 단독으로는 國際經濟秩序를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따라서 美國은 주요 경제강국들과의 협의하에 國際秩序管理의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또한 韓國을 비롯한 新興工業國家들의 부상으로 국제경제에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군이 생겼다. 이들 국가들은 국제경제의 관리에 있어서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의 二分法的인 對立으로 인한 마찰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동시에 開發途上國들에게는 모범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변화는 國際經濟秩序가 重層化된 構造로 移行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새로운 國際經濟秩序를 모색하는데 있어, 현존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는 要因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社會主義經濟의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이 성공리에 실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世界經濟가 持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社會主義經濟의 資本主義經濟體制로의 개편에 드는 비용을 성공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가에 좌우될 것이다. 또한 한정된 세계자본의 흐름은 社會主義經濟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향후 국제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둘째, 世界經濟의 地域主義화와 多者間 協商에 의한 自由貿易의 확산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하여 성공리에 끝날 경우 國際經濟는 다자간 협상에 의하여 自由貿易의 擴散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공동체가 배타적인 地域機構로서 타지역 국가들의 역내진출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면 연쇄효과를 일으켜 여타 지역기구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美國이 북미자유무역지대의 결성과 관련하여 世界經濟의 지도적 위치보다는 북아메리카의 발전에 치중한다면 美國에 아직도 큰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國際經濟秩序는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다.

셋째, 國際經濟秩序의 관리에 대한 주도권의 향방문제이다. 국제경제질서를 주도적으로 관리해 온 美國經濟의 構造調整이 성공리에 실천될 것인가의 여부, 美國의 주요 交易相對國과의 貿易摩擦

解決方式 및 또한 國際經濟秩序의 주요 행위자들의 의도와 역량에 따라 국제경제질서의 주도권의 향방은 결정될 것이다.

나. 國際秩序의 展望

1990年代初의 現國際秩序가 美·蘇 冷戰體制의 崩壞로부터 新國際秩序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약 10년간의 國際秩序에서는 舊秩序의 構造와 作動原理들이 잔존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날 것으로 展望된다.

(1) 國際社會의 變化

1990年代 國際環境은 脫冷戰이 深化되면서 國際政治 일반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들을 가져다 줄 것이다. 경제적 相互依存性 증대와 시장경제체제의 세계적 확산,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의한 自由民主主義理念의 확산, 國家權力의 弱化和 民族主義 發興, 다양한 橫國家의 問題(환경, 마약, 테러, AIDS 등)에 대처하려는 國際機構와 機能 強化와 국제적 레짐 등장 등의 諸 要因들이 國際政治構造와 국가간의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거 국가간의 관계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던 軍事力의 重要性은 약화되고 經濟力의 중요성은 더욱 浮刻될 것이다.

(2) 單極構造下的 多極化體制

1990年代 國際環境의 變化는 국가간의 권력 배분에서도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冷戰時代의 兩極體制에서 單極으로 작용하였던 社會主義體制의 붕괴 및 국내정세의 불안으로 인하여 國際政治·經濟秩序의 再編過程에서 蘇聯의 역할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日本의 經濟力 浮上, 독일통일과 유럽통합 및 제3세계의 경제발전 등은 지역강대국의 부상과 地域主義의 擴散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발언권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美國은 정치·경제·군사 부문에서 日本, 獨逸 등 추종국들보다는 우월한 위치를 견지하는 다차원적인 힘을 가진 초강대국으로 「新國際秩序」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美國經濟協의 상대적 약화와 지역세력의 상대적 부상 등으로 美國은 蘇聯, 日本, EC, 中國 등의 協力과 支持를 유도할 것이다.

(3) 國際關係의 流動性

脫冷戰時代의 國際關係도 상당한 유동성과 복잡성을 띠게 될 것이다. 蘇聯의 국력약화는 美·蘇간의 관계를 극도로 변화시켰고, 蘇聯의 독일 및 日本關係도 경제적 의존성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과거 冷戰時代의 진영간의 관계들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은 國際關係의 多變化를 촉진시킬 것이다. 脫冷戰時代에서 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이 줄어들어

동맹관계의 의미는 감소되고, 各國은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이에 따른 국가간의 經濟的 摩擦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곧 국가간의 관계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변화되고 이러한 유동성은 國際政治·經濟秩序의 안정유지에 불확실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 國際機構 및 國際的 「레짐」의 機能強化

1990年代에 예상되는 다양한 위협요인들, 즉 걸프전과 같은 전통적인 地域紛爭 및 새로운 挑戰要因들로 부각되고 있는 테러, 마약, 환경, 핵확산 및 후진국 외채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國際機構 및 專門機能集團(레짐)들의 기능강화와 참여의 확대가 요구될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國際政治의 「民主化」와 「多元化」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5) 美國 主導의 「新國際秩序」展開

美國은 「新國際秩序」의 창출과정에서 첫째, 경제적 역량약화로 기존의 동맹국과 주요 국가들에게 國際政治·經濟秩序 維持를 위한 「責任과 役割」을 분담시키고 저비용으로 자국의 국제적 위치를 견지하려 할 것이다.

둘째, 美國은 자국의 취약점인 經濟沈滯를 극복하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美國은 과거 냉전시대와 같이 동맹국에게 일방적으로 경제적 시혜를 베풀기보다는 相互主義와 多者主義에 입각한 自由貿易을 강조할 것이다.

셋째, 美國은 地域主義의 擴散과 지역강대국의 등장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협세력을 제거하기 보다는 주요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美國은 蘇聯에 대한 經濟的 支援으로 蘇聯의 완전 붕괴를 막고, 日本과 독일을 기존의 동맹관계에 존속시키므로써 이들의 팽창을 견제할 것이며, 中國에 대해서는 開放과 改革을 지지하므로써 國際協力을 유도할 것이다.

넷째, 美國은 地域紛爭 가능성이 높은 제3세계에 대해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지원하고, 美國의 이익이 지대한 지역국들(걸프지역, 中美, 이스라엘, 韓國 등)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고, 선별적인 개입을 지속할 것이다.³⁾ 또한 美國은 橫國家問題의 해결을 위하여 多者間 協力を 制度化하는 「레짐」구축에 노력할 것이다.

1990年代의 국제질서를 주도할 美國은 對外政策면에서 일면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타면 自國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相互主義, 多者主義, 橫國家主義 등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⁴⁾ 多極體制와 橫國家主義 및 국가간 相互依存性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 美國이 극단적인 고립주의정책을 추구할 경우에는 美國의 이익을 적절히 수호하지 못할 것이다. 美國이 유엔 등 國際機構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세계주의 또는

3) William G. Hyland, "Charting a New Course," *Foreign Affairs* (Spring 1990), p. 12; Zbigniew Brzezinski, "Selective Global Commitment," *Foreign Affairs* (Fall 1991), pp. 1~20.

4) Patrick M. Cronin, "American Global Leadership After the Cold War: From Pax Americana to Pax Consortis," *Strategic Review* (Summer 1991), pp. 9~20.

배타적인 地域主義를 추구한다면 國際安保環境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美國이 일방적인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美國이 주장하는 「新國際秩序」構築은 「舊國際秩序」의 재구축이라는 비판을 받아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2. 東北亞秩序의 現況과 展望

가. 東北亞秩序의 現況

東北亞秩序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고 있는 國際秩序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점진적으로 지역데탕트 추세가 확산되어 四強關係 再定立과 多者間地域信賴 構築 움직임 등이 보이고 있으나, 유럽과는 달리 아직 冷戰體制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1) 兩者關係 再定立과 地域데탕트 趨勢 擴散

(가) 蘇聯: 和解政策 追求와 影響力 減少

蘇聯은 과거 東北亞에서 초강대국의 일원으로서 美國과 더불어 域內 秩序를 주도하였다. 1990년대에도 東北亞에서 蘇聯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 이는 蘇聯이 1980년대 이래 누적되어 온 國內經濟의 沈滯와 근본적인 체제개혁에 따른 최근의 국내사태의 혼란으로 인하여 더 이상 東北亞에서 군사적 패권을 추구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蘇聯은 1980년대 후반부터 東北亞에서

대외적 안정기반 모색 및 역내 국가들과의 經濟協力이라는 新思考 外交를 지향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는 美國, 中國, 日本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⁵⁾ 경제발전을 위하여 蘇聯의 극동지역을 동아시아의 상호의존적인 경제권에 편입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노선에 따라 蘇聯의 安保概念도 「絶對的 安保」로부터 「共同安保」로 변화하였고, 동북아에서의 안보정책도 제로섬게임(zero-sum game)적 적대개념에서 탈피, 상호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相互依存關係를 深化·擴大하고 있다.

蘇聯은 신사고외교를 통한 평화공세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역내 국가들과 양자關係를 개선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는 對中 關係正常化(1989), 韓·蘇修交(1990), 日·蘇關係 改善을 위한 북방 영토문제협상 가능성 시사 및 日·蘇 安保隨時協議機構 創設合意(1991) 등이다. 또한 蘇聯은 동북아의 데탕트 확산을 위하여 역내 蘇聯軍의 감축 및 戰術核 廢棄宣言(1991)을 발표하였으며, 범아시아포럼, 비핵지대화, 美·日과의 해군력 감축을 계속 주장하므로써 역내국가들의 대소 위협인식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蘇聯의 동북아 화해정책은 동북아 4강국간의 대결적 전략구조를 화해구조로 전환시켜 蘇聯의 안보부담을 줄이고, 美國, 日本, 韓國 등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蘇聯의 대동북아정책 변화는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어 역내

5) Byung-joon Ahn, "Strategic Trends in East Asia," *The Pacific Review*, vol. 4, no. 2 (1991), p. 110.

국가들의 대소 위협인식은 감소되었으며, 최근 日本 「防衛白書」(1990, 1991년판)는 蘇聯의 위협이 감소된 것을 반영하여 蘇聯을 위협세력에서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蘇聯의 이니셔티브는 蘇聯의 對美·日 경제의존도 심화로 美國의 양해없이 실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蘇聯의 대동북아정책은 美國의 기존이익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보다는 美國의 구상에 협력하는 제한된 참여로 한정되고 있다.

(나) 美國: 地域安保의 均衡者役割 遂行

탈냉전시대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아 있는 美國은 과거와 다름없이 동북아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나 美國은 국제정세 변화 및 국내경제 침체 등으로 대동북아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 美國은 냉전종식, 걸프戰 승리 및 蘇聯의 위협감소 등으로 동북아에서 대소견제를 위한 패권지향보다는 지역세력의 균형자로 역할전환을 하고 있다.

美國은 재정 및 무역적자에 따른 경제침체와 蘇聯威脅의 급격한 감소로 국방예산삭감 계획을 더욱 촉진시키고 동북아에 전진배치된 미군감축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군감축계획은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연-예를 들어 北韓의 핵개발과 관련한 주한 미군철수 지연-될 수 있지만, 美國은 1992년까지 동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총병력(135,000명)의 10%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美國은 日本 등에게 방위비 증액 등 안보역할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美國은 日本과의 동맹관계를 주축으로 역내 안보질

서를 유지하고, 日本의 정치적 역할증대를 유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美國의 대한반도정책은 분쟁 발발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美國은 韓國과의 기존 군사방위 협력 관계를 지속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韓國에게 駐韓美軍의 비용 분담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美國은 北韓의 核開發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해치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美國은 최근 「2(南北韓)+4(美·中·日·蘇)」라는 6자회담 제의 등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새로운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에 있어서 多者間 협력의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⁶⁾ 美國은 앞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北韓의 핵사찰수용 및 핵재처리시설 제거 등을 조건으로 北韓과의 관계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美國은 韓國과의 군사적 유대관계를 계속 발전시킬 것이며, 蘇聯의 위협감소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을 對蘇牽制보다는 對北韓 戰爭抑止와 地域安보維持를 중심으로 조정하고 있다. 동북아의 탈냉전화 추세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美國은 역내에서 균형자 역할의 수행과 관련 韓國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시 하고 있다.

6) James A. Baker, III, "America in Asia: Emerging Arch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vol. 70, no. 5 (Winter 1991/92), pp. 11~13.

(다) 日本：政治役割增大 摸索

경제적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日本은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경제력에 부합되는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新國際秩序 形成過程에서 日本經濟力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美國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蘇聯과 中國은 국내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어 국제적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日本은 東北亞秩序 再編過程에서 美國의 동반자로서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日本이 美國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역내에서 자국의 政治 役割을 점진적으로 증대하려는 것이다. 美國도 이러한 日本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어서 역내에서 日本의 역할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日本은 蘇聯의 세력 감퇴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동북아에서의 勢力均衡의 空白을 메꾸려 하고 있다. 또한 日本은 대소 경제지원과 경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蘇聯과의 관계개선 및 領土返還의 조기타결을 추구하고 있으며, 蘇聯은 자국의 경제난 때문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日·蘇간 북방영토문제는 美·蘇간의 전략적 이해 및 美·日安保同盟關係와 연계되어 있어서 상당한 협상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에 비해 협상타결 전망이 제고되고 있다.

또한 日本은 역내 강국의 일원인 中國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여 中國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韓·蘇修交에 따라 日本은 北韓과의 수교 교섭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韓半島問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과 北韓간의 수교협상은 현재 난관에 봉착해 있는 바, 北韓이 核査察과 核再處理施設 除去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그 중요한 장애물로 남아 있다.

결론적으로 日本은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막대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蘇聯, 中國, 韓半島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에서 美國의 영향력 축소에 따라 자국의 경제, 안보 역할을 증대시켜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日本은 최근 유엔平和維持活動에 자위대를 파견하여 國際秩序의 안정 유지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 日本의 국제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日本은 蘇聯, 中國, 北韓의 정치불안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유지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역분쟁 가능성에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라) 中國: 政治安定과 國際協力 摸索

韓·蘇修交 이후 가속화된 北韓과 蘇聯간의 관계약화, 蘇聯의 캄란만 해군력 축소와 이에 따른 베트남과의 관계약화 등 蘇聯의 亞·太地域에서의 영향력 약화는 中國의 안보에 대한 蘇聯의 위협을 감소시켰다.⁷⁾ 또한 中國은 최근 베트남의 캄보디아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동참에 부응하여 과거 갈등관계에 있었던 베트남과의

7) 蘇聯軍이 蒙古, 아프가니스탄,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中·蘇關係가 정상화됨에 따라 中國은 蘇聯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더 이상 심각하게 느끼지 않게 되었다. John W. Garver, "Chinese Foreign Policy: The Diplomacy of Damage Control," *Current History*, vol. 90, no. 557 (September 1991), pp. 244~245.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이로써 中國은 자국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역내에서 계속 중요한 안보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中國은 천안문사태 이후 국내정치불안과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美國, 日本, 蘇聯 등 역내 강대국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美國과는 인권문제, 무기수출 및 무역불균형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으나 中國은 양국간의 이해관계 조정으로 점진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蘇聯의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中國은 蘇聯의 개혁효과가 과급될 것을 우려하여 대내적으로는 체제단속에 치중하고 있으나, 안보적인 이유에서 蘇聯과의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中國은 역내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日本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견제를 지속하고 있다. 中國은 풍부한 인력, 자원 및 시장을 바탕으로 美國, 日本, 韓國 등과의 경제협력 증대를 모색하면서 대국으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바, 역내에서 가장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日本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과 마찬가지로 中國은 地域強大國으로서의 군사적 야심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蘇聯이 남겨 놓은 힘의 공백을 메꾸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中國은 군사적으로 日本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나, 日本이 공세적 군사력을 급증하지 않는 한 現代化課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日本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안보문제에 대한 협의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中國의 대한반도정책은 과거 對北韓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정경

분리원칙 아래 對南北韓 二元化政策을 취하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實用主義政策을 견지하고 있다. 中國은 蘇聯 및 동구사태 이후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하여 北韓과 정치·안보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나, 日·北韓修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韓國과 관계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반도의 安定維持가 中國의 현대화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바, 中國은 北韓의 독자적이고 도발적인 군사위협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南北韓간의 관계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동북아 안보체제의 구상에 대한 中國의 입장은 현 단계에 있어서는 부정적이다. 中國은 美國과 蘇聯이 역내에서 주둔군을 철수하는 등 패권추구의 포기가 가시화되거나 日本의 평화정책이 준수되지 않는 한 새로운 安保體制의 구축보다는 기존의 양자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신뢰축적하의 다자간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美國이 北韓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바 있는 「6者會談」 제의에 대해서 中國이 거부 자세를 보인 것도 이와 같은 입장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하겠다. 中國이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유는 새로운 安保體制 구축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美·日의 공동지배와 日本의 군사력 증강, 中國의 핵감축 필요성 제기 가능성 및 中國의 독자성 상실 등이 中國의 안보에 부정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현재 中國은 지역국가들과의 양자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8) Li Luye, "Curr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Beijing Review*, August 19~25, 1991, p. 8.

있으며, 안보문제에 있어서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간 접근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中國은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념보다도 국가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으나 서구의 이념공세와 패권추구를 견제하고,⁹⁾ 국내정치안정을 위하여 당분간 中國式 社會主義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마) 北韓: 開放可能性 增大

최근 北韓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악화 등으로 심각한 체제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체제경쟁 상대인 韓國의 국력신장과 북방외교의 성공은 北韓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韓國은 이미 蘇聯과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中國과는 국교수립의 전단계인 貿易代表部를 설치하였다. 한편 금년 9월 韓國은 유엔에 北韓과 동시가입하였고, 亞·太경제협력각료회의를 개최하여 3中國(中國, 臺灣, 홍콩)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韓國은 역내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였고, 북방외교의 성공과 국력신장을 통해 보다 유리한 안보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盧대통령은 최근(1991.11.8) 北韓의 핵개발 저지를 목적으로 「韓半島 非核5原則」을 선언하여 한반도의 비핵화 분위기를 조성하므로써 지역안정 유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北韓은 蘇聯과 東歐의 체제개혁, 蘇聯과 中國의 韓國과의

9) "China's Party Sees a Threat From the West," *Washington Post*, November 12, 1991: "築起制御化平演變的鋼鐵長城," 「人民日報」, 1991. 8. 16.

관계발전, 北韓 내부의 경제난 악화 등의 요인으로 체제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체제위기와 국제적 고립에 직면한 北韓은 韓國과 유엔동시가입을 단행하고, 美·日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등 대외개방을 모색하고 있다. 北韓은 또한 최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남북관계 발전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北韓의 대외개방 노력에 주요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체제위협 증대 가능성 외에 핵사찰수용을 거부하는 北韓의 태도이다. 北韓은 對中·蘇同盟關係의 악화¹⁰⁾ 및 韓國의 국력우위 등으로 인하여 체제유지에 위협을 느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핵사찰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北韓이 핵사찰수용을 반대하는 목적은 對美·日關係 개선과 경제협력 및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문제와 연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北韓은 美國, 日本, 中國, 蘇聯 등 국제 및 주변국의 반대여론에 직면하고 있어 핵사찰수용을 계속 거부하고 핵무기생산을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北韓은 체제유지 및 경제지원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경우 핵사찰수용과 對美·日關係 개선 등을 통한 제한적인 개방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北韓은 蘇聯이 제안한 바 있는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北韓은 현단계에서 지역안보를 위해서는 安保協力機構를 창설하는 것보다 美·蘇간 군축, 쌍무적 동

10) 中國은 김일성의 방중시(1991. 10) 中國과 北韓은 동맹관계라기보다는 단순히 우호관계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맹조약의 폐기, 외국 군대와 군사기지의 철수 등 제반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北韓이 이와 같은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蘇聯이 北韓의 안보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국제적인 개방압력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2) 相互依存의 深化와 美·日의 經濟主導

동북아경제를 지리적으로 보면 日本, 韓國, 北韓, 中國, 臺灣, 香港 및 蘇聯의 시베리아와 極東地域이 해당된다. 美國의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역할은 안보적 역할과 함께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역내 경제관계에서의 美國의 중요도는 1990년도에 日本, 韓國, 臺灣의 총수출액 대비 대미수출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美國을 제외한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의 공통적 유형은 수출주도형이라는 점으로서 이 국가들의 수출증가율은 세계평균 성장율을 훨씬 웃돌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경제는 역동성이 충분하며 세계경제의 自由主義化와 相互依存의 심화를 가장 능동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경제성장 면에서도 日本은 선진국경제로 이미 정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평균 3.7%의 성장율을 기록하였으며 신흥공업국가들의 경제성장율은 더욱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바, 1980년대에 韓國은 연평균 9.3%, 臺灣은 7.4%, 香港은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中國 역시 1980년대의 경제개방에 힘입어 연평균 9% 이상의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기

록하였다.

동북아경제권에 속하는 신흥공업국들인 韓國, 臺灣, 홍콩의 對外經濟關係의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는 美國, 日本과의 무역이 각 해당국가의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데 있다. 이 지역의 새로운 경제주체로 등장한 中國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蘇聯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진출이 적극화될 경우 蘇聯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東北亞經濟에서는 美國과 日本의 의도와 역할이 중요하다.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권 형성과 관련하여 地域協力體를 구성하자는 제의는 역내 국가들에 의하여 여러번 제안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된 경우는 없고, 보다 포괄적인 지역으로 亞·太地域에 경제기구를 설립하자는 제안들과 관련하여 현재 亞·太경제협력각료회의가 정부간 협의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美國은 최근 말레이시아의 美國을 배제한 동아시아경제권의 형성 제안에 대하여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동북아를 포함한 亞·太地域에 배타적인 地域主義가 부상하는 것에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며 美國을 배제할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동북아경제와 관련해서는 日本, 韓國, 北韓을 주요 구성국으로 中國의 東北3省과 蘇聯의 極東地域을 포함하는 環日本海經濟圈에 대한 논의가 日本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日本의 이러한 구상은 동북아에서의 경제적 주도권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보겠다.

(3) 轉換期的 不確實性: 脫冷戰의 進展과 冷戰의 殘在 持續

과거 東北亞秩序의 양상은 美·蘇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차원의 냉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美國, 蘇聯, 日本, 中國 등 강대국들의 이해가 교차되고 있는 現東北亞秩序는 아직 유럽에서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실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적인 脫冷戰 趨勢에 따라 기본적으로 데탕트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역내 국가간 경제관계의 심화와 中國과 蘇聯의 시장경제체제에의 편입 노력은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에 바탕을 둔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에서는 과거 냉전시대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中·蘇關係 改善, 韓·蘇修交, 韓·中貿易代表部 交換設置, 日·蘇關係 改善, 日·北韓修交 交渉, 南北韓 유엔동시가 입 등 역내 국가간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동북아의 脫冷戰化를 촉진하고 있다.

東北亞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냉전화는 蘇聯의 정책변화와 평화이니셔티브가 지역의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東北亞秩序에는 아직도 냉전의 잔재가 상존하고 있으며, 유럽에서와 같은 새로운 安保體制의 형성 움직임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그 요인은 냉전의 유산인 분단과 영토문제 그리고 냉전적 사고의 지속 및 군사경쟁 등을 들 수 있다. 즉 이 지역에서는 日·蘇간 領土紛爭, 中·蘇간 국경문제 미해결, 美·中關係 경색, 그리고 南北韓간 긴장관계 지속 등 갈등요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지역데탕트의 심화추세로 韓國과 中國의 分斷問題가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으나, 신속한 해결 가능성도 보이고 있지 않다. 蘇聯의 民主化改革 실시와 日本의 적극적 對蘇 경제지원으로 日·蘇간 영토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점차 제고되고 있으나, 蘇聯의 국내정치 불안은 영토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日·蘇간 영토문제의 해결은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中國과 北韓은 아직도 社會主義體制를 고수하는 등 냉전적 사고의 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념적인 대립 지속은 지역국들의 국제협력과 지역데탕트의 확산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신뢰구축과 군축은 지역데탕트를 심화시키는 주요 지표가 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美國, 蘇聯, 中國의 군축조치는 각국의 경제적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행되고 있으나, 그 실적은 기존의 군사력을 감안할 때 미미하다. 지역국들은 최근 동북아질서의 변화 움직임이 자국의 安利益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군비증대를 기도할 가능성도 있다. 北韓의 핵무기개발 노력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北韓의 핵개발문제는 지역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유럽에서 일어난 냉전체제의 붕괴현상이 동북아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정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럽은 군사·정치면에서 모두 전형적인 兩極體制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美·蘇간의 화해에 따라 이 지역의 안보체제도 자연스럽게 탈냉전적 사고가 주류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북아는 유럽과 달리 양자

간의 동맹관계로 勢力均衡이 유지되고, 또한 美·蘇 이외에 中國과 北韓은 독자적인 군사·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 속도와 이에 수반되는 노력이 유럽과 동북아에서 일치될 수 없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現東北亞秩序는 위와 같은 냉전의 잔재로 지역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탈냉전이라는 국제조류에 부응하여 역내 국가들은 국내문제 해결을 위하여 兩者關係를 개선하고 있어 地域紛爭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지역분쟁요인을 안고 있는 당사국들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어 지역데탕트 추세는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 東北亞秩序의 展望

1990년대의 동북아에서는 전세계적인 탈냉전 확산추세에 편승한 동북아 4강 및 南北韓의 양자관계 개선과 국내문제 해결 우선 등으로 지역데탕트 추세가 심화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과도기적인 불안정국면이 초래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美國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공존적인 동북아질서가 정착될 전망이다.

특히 蘇聯이 국내 정치·경제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역내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감소될 것이며 역내 국가들은 과거의 안보위주 대외정책을 지양하고 경제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은 경제발전을 통한 정치안정을 추구하여 경제면에서 상호의존관계를 심화시키고 역내 경제협력의 강화를 위

하여 개방적인 경제협의를체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1) 美·日間の 成熟된 同伴者關係 確立

1990년대 동북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美·日關係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美國은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 동북아에 대한 蘇聯의 위협감소 및 地域紛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반대하는 국내여론 등을 감안하여 美·日 兩者關係를 과거의 「受惠者」에서 「同伴者」關係로 발전시키고 日本과 韓國 등 동맹국들에게 적절한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여 저비용·저수준으로 美國의 안보역할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¹¹⁾ 이와 관련 美國은 지역 핵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日本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美·日關係를 책임분담을 넘어 「세력공유」 차원의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동북아지역에서의 美·日同盟은 군사·안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활성화되어 1990년대의 동북아질서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美國은 궁극적인 군사·안보의 보장자로, 日本, 蘇聯, 中國의 지역패권주의를 견제하면서, 美·日同盟을 주축으로 蘇聯과 中國의 협력하에 동북아질서 안정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11) 美國은 日本에게 1995년까지 주일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의 73% 이상을 부담시킬 예정으로 있으며, 韓國에 대해서도 1995년도에 이르면 4억2천만달러까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부담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朝鮮日報」, 1991. 7. 3.

(2) 域內 多者間 信賴構築努力 增大

동북아에서의 탈냉전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美·蘇간 또는 南北韓간의 군비통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와 같은 양자 및 소지역수준에서의 군비통제 실현은 역내 국가들간의 다자간 신뢰구축노력으로 파급될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蘇聯은 「범아시아 포럼」 등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을 제안한 바 있으나, 美·蘇간의 비대칭적 전력구조, 지역국들의 공통위협인식 결여 등으로 포괄적인 군축실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시 美대통령의 일방적인 戰術核 廢棄 및 撤收 宣言, 蘇聯의 획기적인 전술핵 폐기 및 군사력 감축제안으로 美·蘇간의 점진적인 戰力減縮 가능성은 제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蘇聯은 경제개혁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亞·太 및 東北亞地域에서의 美國과의 軍縮協商에서 일방적인 양보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美國도 蘇聯의 위협감소와 자국의 경제문제 등의 요인으로 군사비를 대폭 감축할 예정이다. 따라서 美·蘇간에 동북아지역의 군비통제가 합의될 가능성이 높으며 美·蘇간 군비통제의 진전은 지역국들의 군축노력을 촉진시키는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다.

한편 北韓은 유엔 동시가입을 계기로 체제의 국제적 인정 및 南北韓간의 대외적 공존 효과를 얻었으며, 韓國에서의 美軍의 점진적 감축, 전술핵 철수계획 및 南北韓 고위급회담 진전에 따라 南北韓간의 군비통제와 군축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전망된다.

中國은 1990년대에도 經濟改革·開放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군사력 증대를 이차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일방적인 군축 등 군비통제 노력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中國은 최근 「核擴散禁止條約」에의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日本도 역내에서 蘇聯이라는 위협세력이 쇠퇴하고 中國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美國, 中國, 蘇聯, 韓國을 자극할 정도로 공세적인 군사력을 급격히 증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의 현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역내 주요 국가들은 유럽安保協力會議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으나 소지역단위로 다자간 지역안보구상을 위한 협의는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蘇聯의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 약화는 과거 蘇聯이 주장하였던 다자간 지역안보구상에 대하여 역내 국가들이 蘇聯에 대응하는 차원을 벗어나 현실적인 필요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1988년 10월 盧대통령의 「東北亞 平和 協議會議」 제의, 1990년 7월 클라크 캐나다외무장관의 신뢰조성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유럽안보협력회의형 기구 창설 주장과 에반스 호주외무장관의 「아시아판 안보협력회의」(CSCA) 개최 주장,¹²⁾ 그리고 1991년 7월 나카야마 日本外務長官의 亞·太地域 안보회의 기구창설 제의 등은 전술한 蘇聯의 제의에 접근하고 있다. 이들

12)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27, 1990.

제안은 亞·太地域에서 포괄적인 협의기구의 창설과 병행하여 국지적인 분쟁처리나 緊張緩和를 위한 행동을 취하자는 내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美國은 최근 北韓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촉진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동북아 4강과 南北韓간의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비록 이 방안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라는 관점에서 韓國의 반대로 철회되었으나, 동북아 지역안보를 위한 美國의 기존정책이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체제에 대한 다자간 접근 모색은 기존 동맹관계의 기반위에서 진행될 것이며, 美國은 균형자, 중재자, 안보의 보장자로서 세력균형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강대국들의 패권추구를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3) 開放的 地域主義의 浮上

동북아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체 구성 제안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으나, 역내국들의 경제발전 차이와 체제적 상이성 등의 이유로 단시일내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동북아지역만의 제도화된 지역경제기구가 설립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며 亞·太地域을 포괄하는 亞·太경제협력각료회의(APEC)가 역내 국가간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협의체의 기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경제의 국제적 분업구조가 정착될 경우 동

북아지역의 地域經濟協力機構가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동북아에서 美國의 기득권 유지와 日本의 경제주도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거부감 등으로 유럽공동체와 같은 강력한 기구의 구성보다는 포괄적인 협의체 형태의 동북아 경제협력기구가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4) 單極構造下的 多極化

세계질서의 변화 추이와 마찬가지로 동북아 국제질서도 다극화의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美國은 정치·전략적인 면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中國과 日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상되어 4강관계는 재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동북아 세력균형은 美國을 정점으로 하는 蘇聯, 中國, 日本간의 느슨한 4강체제로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多元的인 세력들이 이러한 4강체제 하에서 일정한 정도의 독자성을 가지고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곧 1990년대 동북아질서는 「單極構造下的 多極化」(uni-multipolar)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안보면에서는 주요 국가들인 美國, 日本, 中國, 蘇聯 등 4강간 양자관계의 改善과 相互協力の 증대로 동북아질서가 보다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美國은 동북아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에 대해서 견제를 가하여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美·蘇의 데탕트 심화와 相互軍縮으로 이 지역의 화해무드가 심화될 것이고, 中國과 日本은 蘇聯의 영향력 약화로 야기될 수 있는 세력공백을 메꾸어 나갈 것이다. 한편 蘇聯

은 국내 정치·경제문제로 상당기간 동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 동북아정책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中國도 체제강화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내정치 우선으로 北韓, 베트남 등 접경국가 이외의 대동북아정책에서 적극성을 띠기는 어려울 것이며 주변환경의 안정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지향할 것이다. 다만 中國과 蘇聯의 국내정치불안은 지역안정에 있어서 여전히 가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4강간의 협력관계는 지속될 전망이 높다.

둘째, 경제면에서 美國은 동북아국가들에 대하여 쌍무적인 압력과 多者間協商인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하여 시장개방압력을 점증시키고 있다. 美國의 시장개방압력은 東北亞國家와 美國과의 경제적 마찰 뿐만 아니라 동북아국가 사이에도 서로가 상대방 국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연쇄적 효과를 일으켜 역내 국가간의 경제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990년대의 동북아경제권은 선진국인 日本을 축으로 하는 國際的 分業構造가 정착될 것으로 보이며 과거 선진국(日本, 美國)과 신흥공업국(韓國, 臺灣, 홍콩)으로 二分되어 있던 국제경제구조가 中國經濟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심화와 北韓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 진전에 따라 선진국·중진국·개발도상국의 三分된 형태로 변화, 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990년대에는 美國, 日本 등 역내의 선진국들과 韓國 및 주변 동아시아 新興工業國의 경제외교가 향후 동북아질서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는 이념보다도 國家利益이 더욱 중시되므

로써, 역내 국가간 관계는 과거와는 달리 변동성(volatility)과 이중성(ambivalence)이라는 특징을 보일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¹³⁾ 오늘의 우호국(경쟁국)이 내일의 경쟁국(우호국)이 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역내 국가들에게 있어서 공동의 위협이 줄어들어 역내 양자간 軍事同盟의 성질도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동북아질서 속에서의 國際關係는 기본적으로 和解와 協力이 지배할 것이나, 국익추구를 위한 상호간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역내 국가들의 경쟁은 국제적인 협력이라는 틀안에서 競爭的 共存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13) Huntington,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s," p. 6.

第8章 結論：韓半島 統一環境 및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국제적인 脫冷戰化 趨勢와 共產圈의 崩壞는 동북아 국제정치에도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탈냉전시대의 東北亞秩序는 中·蘇의 개혁지속 및 동북아 4강간의 관계재정립 등 과도기에 접어들고 있어 한반도의 통일환경에 주요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美·蘇의 군사력 감축 추세와 日·中의 부상 등 주변 4강간의 勢力改編이 이루어지고 있고, 韓國의 北方政策 성공과 국력신장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에 직면한 北韓의 정책변화를 촉구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蘇·中·北韓 등의 정치·경제적 불안요인은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蘇聯의 體制改革과 中國의 開放政策 지속 등은 4강간의 관계를 개선, 지역데탕트 추세를 심화시키고 平和共存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변화는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南北韓 關係발전에 긍정적인 요인들로 작용할 것이다.

1. 韓半島 周邊環境의 安定的 發展

국제정치의 탈냉전화추세는 냉전체제에서 빚어진 지역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탈냉전 분위기는 한반도를 위요한 동북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문제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주요 4강간의 관계 및 남북한과의 관계

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 전통적인 안보위협세력으로 간주되고 있는 蘇聯, 中國, 北韓 등이 국내정치·경제문제 등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여유가 부족하고, 美·日·韓國 등과의 관계개선 및 대화를 추구하고 있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蘇聯은 근본적인 體制改革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산적한 國內政治·經濟問題의 우선적인 해결을 위하여 주변환경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蘇聯은 당면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韓國을 포함한 西方側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蘇聯의 정책변화와 東北亞에 대한 經濟·安政策 제안들은 동북아 및 한반도 안정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北韓에 대한 개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中國은 現代化를 위한 開放政策의 지속으로 국제협력을 중요시하고, 北韓에 대한 개방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中國은 實用主義 외교노선과 政經分離原則에 따른 對南北韓 二元化政策 추구로 현실인정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고 있다. 1990년대에 예상되는 中國의 후계문제와 관련하여 鄧小平 이후의 中國政治는 강·온파 간의 집단지도체제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改革政策과 권력승계를 둘러싼 강·온파간 파벌대립은 권력투쟁으로 발전되어 국내정치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고, 이것은 지역불안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日本은 脫冷戰 趨勢에 편승하여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기 위하여 北韓과의 修交協商을 진행시키고 있다. 日·北韓간의 수교협상이 南北韓간의 고위급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되어 진행될때는 한반도 긴장완화 및 통일환경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日本은 北韓의 핵사찰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南北韓關係 개선 정도와는 상관없이 北韓과의 수교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日·北韓修交가 실현되는 경우, 北韓의 경제난 완화와 현체제강화에 도움이 되어 한반도 통일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北韓의 개방을 유도하고 주변4강국의 남북한 교차승인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美國은 동북아 및 한반도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보장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美國은 東北亞地域 및 韓半島 안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北韓과의 관계재설정을 모색하고 있으나, 北韓의 핵開發은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美國은 北韓의 핵사찰수용과 美·北韓關係改善 및 經濟協力을 연계시키고 있다. 또한 美國은 日·北韓修交 협상에서도 北韓의 핵포기를 수교조건으로 제기토록 하고, 中國과 蘇聯을 통해서도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현재 美國이 구상하고 있는 외교적 설득 노력이 실효성이 없을 때 물리적인 제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美國은 蘇·中·日의 對南北韓 관계개선으로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축소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韓國과의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면서 北韓과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관계개선을 모색할 것이다.

北韓은 共產圈 崩壞와 開放壓力 증대 및 경제난 등의 對內外的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北韓은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 정책적인 유연성을 보이는 동시에 體制維持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北韓의 대남적화통일전략 포기과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 것인가는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서명된 합의서에 대한 北韓측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北韓은 자체적으로 核開發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그 목적은 전통우방인 中·蘇로부터의 소외와 국제적인 고립, 南北韓 體制競爭에서의 열세에 따른 安保威脅增大에 대처하고 체제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北韓은 핵무기개발문제를 체제유지, 對美·日關係 개선·촉진 및 對南協商 등에 다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北韓이 당면한 과제가 經濟難 解消를 통한 體制維持에 있다면, 北韓은 국제여론과 주변4강의 압력을 무릅쓰고 핵개발을 강행하기보다는 對美·日關係 개선 및 韓國의 경제지원 획득을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北韓은 외부지원에 의한 경제난 해소가 체제유지에 역행한다는 인식 아래 체제개혁과 개방을 거부할 경우에도,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무릅쓰고 핵무기개발을 강행하기보다는 對美·日關係 개선과 南韓과의 협상에서 그들에 유리한 협상카드로 핵개발문제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현재 美·蘇와 유엔 등 국제사회는 중동문제와 캄보디아문제 등,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와 같은 추세는 韓半島의 脫冷戰化와 南北韓 平和體制構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東北亞情勢는 과거 냉전유산인 영토와 분단문제, 군사경쟁 및 이념대립 등이 점진적으로 불식되고 지역국들간의 和解와 協力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동북아지역 데탕트의 심화와 확산 추세는 南北韓關係 개선 및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긍정적인 주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韓半島問題 解決을 위한 國際的 努力增大

冷戰時代의 산물인 한반도문제는 냉전종식을 위한 상징적, 실질적인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한반도의 안정은 東北亞地域安保와 經濟協力 增大를 위한 핵심고리로 간주되고 있어 동북아 4강은 和解·協力趨勢를 발전시키기 위해 韓半島에서 平和와 安定을 구축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는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美·蘇는 유럽의 軍縮經驗을 바탕으로 한반도 軍備統制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평화 이니셔티브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부시 美國大統領의 9. 27선언(1991)에 따른 전술핵무기의 일방적인 철수제의와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의 한걸음 더 나아간 전술핵폐기 주장(1991. 10. 5)은 동북아에서의 美·蘇간의 軍縮合意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北韓의 核開發問題와 관련하여 北韓의 우방국인 中·蘇도 北韓의 핵개발에 반대하고 있고, 美·日은 北韓과의 關係改善 및 經濟協力을 고려함에 있어 北韓의 핵사찰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美國의 국방비 삭감,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戰術核 撤收宣言(1991.9.27) 및 노태우대통령의 非核5原則宣言(1991.11.8) 등의 정세변화는 北韓을 실현성있는 군비통제 및 군축 등 南北韓 간에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협상으로 유도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베이커 美國務長官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안보이해를 조정하고 남북대화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南北韓 및 美·日·中·蘇가 참여하는 「2+4」회담 개최를 주선할 용의를 표명하였다(1991.11.8). 나아가서 베이커 美國務長官은 유럽식 신뢰구축방식과 재래식 무기감축방식의 한반도적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南北韓 軍縮協商을 제시하였다. 美國이 과거와는 달리 동북아안보 및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자간 협상방법을 제의하고 있는 것은 北韓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韓半島 및 東北亞情勢安定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베이커 美國務長官의 제의는 중장기적으로 주변국들의 긍정적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노태우대통령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東北亞平和協議會議」(6者會談)를 제안한 바 있고(1991.10.18 유엔총회 본회의 연설), 蘇聯은 이미 多者間 接近을 주장해 왔다. 日本은 한반도안보와 南北韓關係에 발언권 확대를 모색하기 위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中國은 다자간 접근에 회의적이지만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韓半島問題의 다자간 협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北韓의 유엔동시가입은 「하나의 조선정책」의 사실상 포기 로 간주될 수 있고, 南北韓 平和共存體制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南北韓 유엔동시가입은 統一의 중간단계로서 平和 障礙要因을 제거하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유엔은 현장에서 분쟁의 당사자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여론과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韓의 유엔가입은 韓半島問題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1990년대 周邊情勢의 변화는 불안정요인의 상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韓半島의 平和體制 수립과 平和統一 기반 구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美國이 蘇·日 등이 주장한 바 있는 지역의 정치·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를 제의한 것은 향후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2+2」 또는 독일식 「2+4」 공식의 접근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美國의 태도변화는 美國이 「地域均衡者」로서 南北韓 協商結果와 나아가서 평화통일 합의를 보장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3. 南北韓 平和體制 構築과 4強의 交叉承認

北韓의 金日成體制는 유엔동시가입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 평화공존을 향한 정책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北韓의 태도변화는 국제적 고립의 탈피로 對西方接近을 용이하게 하고 北韓에 대한 국제적인 체제인정을 도출하여 北韓이 우려하는 吸收統一의 위협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美國의 일방적인 先撤核 撤收宣言 및 盧대통령의 非核5原則宣言은 美國과 韓國의 NCND政策으로 빚어지는 北韓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핵문제를 포함한 南北韓 軍備統制 및 軍縮協商을 위한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北韓은 군사비부담 가중으로 빚어지는 경제난의 타개와 韓國의 국력우위로 인해 對南革命戰略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고위급회담과 3개분과위원회(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의 협상진전에 따라 南北韓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교류협력이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北韓은 대내적으로는 「하나의 조선정책」을 주장하고 대외적으로는 南北韓의 실체를 인정하는 이중정책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北韓의 태도변화와 南韓의 통일을 향한 노력은 남북정상회담과 南北韓간의 교류·협력 증대로 이어질 것이며 南北韓간 직접협상을 통한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으로 한반도평화체제

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탈냉전시대의 국제적인 평화공존추세로 한반도의 안정에 대한 주변 4강의 이해가 접근되고 있다. 美·日·中·蘇 주변 4강은 한반도의 安定維持와 南北韓의 실체인정이 동북아 정세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北韓도 체제유지를 위하여 4강의 현실 인정 추세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南北韓關係의 진전에 따라 동북아 4강의 교차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한민족공동체」實現 可視化

현재 김일성체제는 體制維持와 經濟難의 해결을 위하여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개방을 모색하고 있다. 中國의 天安門事態와 蘇聯과 東歐의 근본적인 體制改革은 北韓의 과감한 開放政策 추구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는 北韓의 權力體制 改編이 예상되어 北韓의 對內外政策에 중요한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南北韓關係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金日成의 노령화, 경제난과 개방압력 증대로 김일성 유일체제의 장기적인 지속은 곤란할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으로 예상되는 지도체제 개편에서 金正日의 承繼可能性은 높으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의 결여와 개혁세력의 도전으로 현재 김일성과 같은 一人獨裁體制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일성의 은퇴 또는 사후의 權力構造는 世代交替와 開放의 필요성 증대로 혁명과 이념을 강조하는 보수파의 세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거나, 또는 보수·개혁파간의 집단제도체제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개방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南北韓關係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와 관련 1990년대 중반부터는 南北韓의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北韓의 지도층 개편에 따른 정책변화로 南北韓關係 改善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교류와 협력의 증대는 北韓의 「남북연합」 수용 등 공존공영을 바탕으로 한 「한민족공동체」의 구축이 가시화할 것이다.

5. 우리의 考慮事項

가. 傳統友邦과의 安保紐帶 持續

1990년대 國際情勢 및 東北亞情勢는 脫冷戰時代에서 전반적인 데탕트 무드가 심화되어 東北亞 6者間(美·日·中·蘇·南北韓)의 和解·協力關係가 조성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中·蘇·北韓의 國內政治不安은 동북아정세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이들 국가의 급격한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冷戰時代로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韓國은 脫冷戰時代의 過渡期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역불안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안전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美·日 등 傳統友邦과 기존의 포괄적인 안보유대關係를 강화하여 돌발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韓國은 蘇·中과의 關係發展을 도모하여 北韓의 開放을 유도하고 韓半島의 安定과 평화통일을 위한 國際的 協力を

지속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 東北亞 多者間 安保構築 摸索에 伸縮的 對應

韓半島 및 東北亞 安保情勢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北韓의 核開發問題는 南北韓間의 직접 협상과 國際的 對北壓力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北韓의 핵사찰수용 등 핵개발문제와 관련하여 韓國은 南北韓 高位級會談에서 北韓의 핵개발 포기가 南北韓 政治·軍事 信賴構築의 관건임을 분명히 하고 北韓의 성의를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美·日·中·蘇 등 주변 4강이 北韓의 핵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대북압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美國측이 시사하고 있는 한반도문제 및 동북아를 위한 多者間接近 모색은 北韓의 핵개발 저지와 실효성있는 南北韓 군축실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반도안정을 위한 주변 4강의 국제적 보장확보, 北韓開放을 위한 4강의 외교적 압력증대, 韓國의 對中·蘇 협력강화 및 日本 군사력팽창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美國이 제시한 바 있는 동북아 6자회담(2+4) 등 다자간 접근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北韓과 美·日關係 개선 촉진으로 南北韓關係 개선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한반도문제에 대한 다자간 접근은 南北韓間 직접 협상을 통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이후에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 韓國은 다자간 접근방식에 의한 한반도문제 토의와

東北亞 安保秩序 재편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일·안보외교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 對北方 經濟協力 擴大

蘇·中의 對外經濟開放 등 국제적인 經濟協力 확대 추세와 北韓의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대화 개시 등 동북아시아국들의 양자 및 다자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地域經濟協力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세계경제의 지역 불력화 추세와 선진제국들의 자유무역 압력으로 교역의 다변화 및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고, 資源과 技術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中·蘇 및 北韓과의 經濟協力 機會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中國과 蘇聯은 日本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면서 자국의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韓國을 협력상대자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中國과 蘇聯의 시장과 자원 및 尖端技術分野의 상호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中·蘇에 거주하는 교포는 우리에게 유용한 인적자원이 될 것이다.

北韓과의 經濟協力は 北韓의 여건을 감안하여 北韓의 개방과 경제력을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진적인 經濟協力方法은 體制崩壞와 「吸收統合」우려에서 빚어지는 개방에 대한 北韓 지도층의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를 완화시키고 北韓內 개방세력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므로써 南北韓協商의 실질적인 진전과 平和統一의 기반 구축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 韓半島問題의 韓半島化

최근 獨逸의 통일은 分斷의 國際化가 동서독정부 주도 아래 이룩된 분단극복 노력과 통일에 장애요인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 우리는 韓半島問題 해결에서 남북당사자간의 해결이라는 입장을 일관성있게 견지해 오고 있다. 노태우대통령의 유엔총회연설(1991.9.25)도 한반도문제의 해결은 南北韓對話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재강조함으로써 한반도문제 토의의 韓國化를 시사한 바 있다. 사실, 南北韓問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南北高位級會談 등 양국간의 책임있는 당국자간에 南北韓關係에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 아래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南北韓關係 발전을 위한 국제적 여건조성 등 국제적 협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南北韓問題 해결에서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증진문제(非核化問題, 不可侵協定, 그리고 平和體制構築) 등에 대한 國際的 協力 및 保障과 관련하여 주변 4강 및 유엔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가. 蘇聯關係

韓國共產圈研究協議會. 「韓國의 極東·시베리아 投資進出에 대한 美·日·中·蘇의 視角과 그 對應方案 研究」. 경제기획원 연구비 지원 결과보고서, 1989. 12.

Assetto, Valerie J. *The Soviet Bloc in the IMF and the IBRD*. Boulder: Westview Press, 1988.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9.

Gorbachev, M. S.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7.

Solomon, R. ed. *Asian Security in the 1980's: Problems and Politics for a Time of Transition*. Cambridge, Mass.: Gun & Hain, 1980.

U. S. Department of Defence. *Soviet Military Power*.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1.

Zagoria, Donald S. ed. *Soviet Policy in East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Козлов, С.Н. и др. <О советской военной науке>. Москва. 1964г.

Лухин, В.П., И.Б.Булай, В.А.Кременик, ред. <США и Проблемы тихоого океана>,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79г.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военных терминов>. Москва. 1966г.

4. 美國關係

- Dick Cheney (Secretary of Defense). *Report of the Secretary of Defense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anuary 1991.
- Drell, Sidney. *Facing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9.
- Gaddis, John Lew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Postwa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Garthoff, Raymond L. *Detente and Confrontation: American-Soviet Relations from Nixon to Reagan*.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5.
- McIntosh, Malcolm. *Arms Across the Pacific: Security and Trade Issues Across the Pacific*.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7.
- Nacht, Michael. *The Age of Vulnerability: Threats to the Nuclear Stalemate*.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5.
- Statement by Richard H. Solomo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House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March 6, 1991.
- Testimony before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of the U. S. Senate, by Gen. Louis C. Menetrey, Commander of U. S. Forces in Korea, Washington D. C., February 8, 1990.
- Testimony by Robert Komer before the Committee of Budget of the House of the Representatives, February 1983, Serial No. 98-3.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3.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August 1991.

U. S. Department of Defense. *Critical Technologies*. Washington, D. C.: March 1989, Revised May 1989.

U. 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21st Century*.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World Policy Institute. *Defining American Priorities: Results of Survey Conducted for World Policy Institute*. New York: 1989.

다. 日本關係

國防部. 「國防白書 1991」. 서울: 國防部, 1991.

「政府開發援助(ODA)白書 1991」.

防衛廳 編. 「防衛白書 1983」. 東京: 防衛廳, 1983.

_____. 「防衛白書 1990」. 東京: 防衛廳, 1990.

朝日新聞社 編. 「朝日年鑑 1973」. 東京: 朝日新聞社, 1973.

_____. 「朝日年鑑 1978」. 東京: 朝日新聞社, 1978.

佐藤和正. 「これか “日本の防衛隊た”」. 東京: 講談社, 1983.

Chan, Steve. *East Asian Dynamism: Growth, Order, and Security in the Pacific Region*.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90.

Cohen, Steven D. *Uneasy Partnership: Competition and Conflict in U.S.-Japan Trade Relations*, 山田進一 譯. 「日米經濟摩擦: アメリカの主張」. 東京: ティービーエス ブリタリカ, 1985.

Pfaltzgraff, Robert L. Jr., and Ra'anan, U. eds. *The Superpower in a Multinuclear World*.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74.

라. 中國關係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편저. 「中國政治經濟事典」. 서울: 민음사, 1990.

國立政治大學國際關係研究中心 編. 「蘇聯」. 臺北: 國立政治大學國際關係研究中心, 1984.

鄧小平. 「鄧小平文選(1975~1982)」. 北京: 人民出版社, 1983.

梁伯華. 「近代中國外交的巨變」. 北京: 商務印書館, 1990.

中國百科年鑑出版社. 「中國百科年鑑, 1982」. 北京: 中國百科年鑑出版社, 1982.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中國外交概覽, 1987」.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87.

Harding, Harry. *China's Second Revolution: Reform After Mao*.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7.

_____. *China's Foreign Relations in the 1980s*.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84.

Johnson, U. Alexis, et., al. eds. *China Policy for The Next Decade*. Boston: Oelgeschlager, Gunn & Hain, 1984.

Morgenthau, Hans J. *Dilemmas of Politic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Rosenau, James N.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The Free Press, 1969.

Whiting, Allen S.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New York: The Mac-millan Co., 1960.

마.北韓關係

姜正模.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國防部. 「國防白書 1990」. 서울: 國防部, 1990.

國土統一院. 「金日成 이후의 北韓」. 서울: 國土統一院, 1990.

_____. 「北韓의 經濟와 貿易展望」. 서울: 國土統一院, 1990.

朴在圭 編. 「北韓의 對外政策」.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전4권」. 서울: 國土統一院, 1988.

徐鎭英 編. 「現代中國과 北韓40年: 資料와 統計」. 서울: 高麗大學校 亞世亞問題研究所, 1989.

유세희·이정식 편. 「전환기의 북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정상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鄭鎭潤. 「北方三角關係: 北韓의 對中-蘇關係를 中心으로」. 서울: 法文社, 1985.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1989」.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1990.

統一院. 「北韓概要 '91」. 서울: 統一院, 1990.

_____. 「1990年度 北韓經濟 綜合評價」. 서울: 統一院, 1991.

_____. 「第4次 南北高位級會談 結果 分析」. 서울: 統一院, 1991.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한교류협력동향」.

Bunge, Frederica M. *North Korea: A Country Study*. Washington, D. C.: The American University Press, 1981.

Gelman, Harry and Levin, Norman. *The Future of Soviet-North Korean Relations*. Santa Monica: Rand, 1984.

Koh, Byung Chul.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Scalapino, Robert A. and Lee, Chong-Sik. *Communism in Korea*. 2 vo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5.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2. 論文

가. 蘇聯關係

金輔耀. “關於太平洋經濟共同體的探討.” 「國際問題研究」(1983年第2期).

辛承權. “中·蘇의 韓國에 대한 政策變化와 展望.” 「中蘇研究」, 第11卷 第3號 (1987 가을).

國連歐洲經濟委員會. “ソ連·東歐의 經濟改革と西側經濟援助.” 「ソ連東歐貿易調査月報」(1990. 12).

宦郷. “亞太地區發展前景與環太平洋合作.” 「太平洋地區發展前景和中國現代化」. 北京: 中國財政經濟出版社, 1985.

グランベルグ, A, A.ルビンシテイン. “シベリアの對外經濟活動への參入.” 「ソ連東歐貿易調査月報」(1989. 10).

- ソ連東歐經濟研究所. “1990～1991年のソ連經濟.” 「ソ連東歐貿易調査月報」(1991. 1).
- ファ ミンスキー, I. P. “新5カ年計劃期におけるソ連の對外政策.” 「ソ連東歐貿易調査月報」(1990. 3).
- 宮内邦子. “ソヴェト軍事ドクトリンの變遷: 抑止か破催か.” 「ソ連研究」, 第7號 (1988. 10).
- 木村 汎. “「太平洋共同體」構想とソ連.” 「ソ連研究」, 第3號 (1986. 10).
- _____. “總論/ソ連のアジア太平洋政策の展開.” 「ソ連研究」, 第3號 (1986. 10).
- 木村明生. “アジア安保構想: スターリンからゴルバチョフへ.” 「ソ連研究」, 第3號 (1986. 10).
- 美上下兩院 合同經濟委員會. “社會主義諸國の改革とGATT, IMF, 世界銀行への加盟(1989. 10. 27).” 「ソ連東歐貿易調査月報」(1990. 3).
- 小川和男. “環日本海經濟圏における國際經濟協力.” 「ソ連東歐貿易調査月報」(1990. 4).
- 小泉直美. “ゴルバチョフの軍備管理/軍縮政策.” 「ソ連研究」, 第7號 (1988. 10).
- 佐藤經明. “ソ連版マーシャル・プランは實現するか.” 「世界週報」(1991. 6. 25).
- 村上 隆. “ソ連極東經濟の實情と長期極東總合計劃の問題點.” 「ソ連東歐貿易調査月報」(1989. 3).
- _____. “ソ連極東經濟の實情と長期極東總合計劃の問題點.” 「ソ連東歐貿易調査月報」(1989. 3).
- 平井友義. “「新思考」下のソ連對外政策.” 「ソ連研究」, 第10號 (1990. 4).

- Acharya, Amitav. "The United States Versus the USSR in the Pacific: Trends in the Military Balance."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9, no. 4 (March 1988).
- Akio, Yutaka. "The Soviet Union's Asia Policy: Past, Present, and Future." *Japan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 no. 1 (Spring/Summer 1991).
- Arbatov, A. "How Much Defence is Sufficient?" *International Affairs* (April 1989).
- Aslund, Anders. "The New Soviet Policy towards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The World Today*, vol. 44, no. 2 (February 1988).
- Bandura, Y. "The Pacific Community: A Brainchild of Imperialist Diplomacy." *International Affairs*, no. 6 (June 1980).
- Bilveer, S. "The Pacific Community Concept: The View from Moscow." *The World Today*, vol. 41, no. 1 (January 1985).
- Bogomolov, A. "Evolution of Pacific Cooperation Ideas." *Far Eastern Affairs*, no. 1 (1987).
- Bunin, V. "Japan and Washington's Asian Pacific Strategy." *Far Eastern Affairs*, no. 3 (1987).
- Chirot, Daniel. "After Socialism, What?: Ideological Implications of Events of 1989 in Eastern Europe for the Rest of the World." 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estroika or History's Turning Point?*, organized by the Institute of Soviet and East Europ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t Seoul, on October 26~27, 1990.
- Crowe, William J., Jr. and Alan D. Romberg. "Rethinking Security in the Pacific." *Foreign Affairs* (Spring 1991).
- Denisov, V. "Some Aspects of the US New Far Eastern Strategy." *Far Eastern Affairs*, no. 2 (1983).

- Dienes, Leslie. "Economic and Strategic Position of the Soviet Far East." *Soviet Economy*, no. 1 (1985).
- Duffy, G. and J. Lee. "The Soviet Debate on 'Reasonable Sufficiency'." *Arms Control Today* (October 1988).
- Fadeev, Yuri D. "New USSR Foreign Policy: A Product of Soviet Perestroika." 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K-USSR Cooperatin in a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cosponsored by IFANS, ITBI, and IMEMO, at Seoul, on June 10~12, 1991.
- Garthoff, Raymond L. "New Thinking in Soviet Military Doctrine." *The Washington Quarterly* (Summer 1988).
- Kapitsa, M. "Problems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 *Far Eastern Affairs*, no. 6 (1987).
- Kokoshin, A. A. "A Soviet View on Radical Weapon Cut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March 1988).
- Kuzmenko, Andrei V. "Sino-Soviet Relations: From Rapprochement to Strategic Alliance?" 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K-USSR Cooperation in a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cosponsored by IFANS, ITBI, and IMEMO, held at Seoul on June 10~12, 1991.
- Marer, Paul. "Centrally Planned Economies in the IMF, the World Bank, and the GATT." J. C. Brada, E. A. Hewett, and T. A. Wolf. eds. *Economic Adjustment and Reform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9.
- Phillips, R. H. and J. I. Sands. "Reasonable Sufficiency and Soviet Conventional Defense: A Research Not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3, no. 2 (Fall 1988).
- Simonia, Nodari A. "Is 'Helsinki Process' Appropriate for Asia-Pacific Region?" presented in the 20th International Confer-

ence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on *Newly Emerging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on May 13~14, 1991, at Seoul.

Stephan, John J. "Asia in the Soviet Conception." in Donald S. Zagoria. ed. *Soviet Policy in East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Stolyarov, Y., and Shmyrmov, A. "The 'Pacific Community': Economic Integration or a Military-Political Bloc." *Far Eastern Affairs*, no. 3 (1983).

Tikhomirov, V. "Reunification Two Approches." *New Times*, June 1, 1985.

Zagoria, Donald S. "Soviet Policy in East Asia: A New Beginning." *Foreign Affairs*, vol. 68, no. 1 (1988/89).

Zhurkin, V. "How to Break the Vicious Circle." *New Times*, no. 40 (1987. 10. 12).

Кунадзе, Т. Об обороне достаточности вое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СССР.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no. 10 (1989).

4. 美國關係

Statement by Senators John McCain and William Cohen. "Reorienting Defense in the 1990's." *Congressional Record*, April 5, 1990.

Babbage, Ross. "Soviet Strategic Dilemmas in the North Pacific in the 1990s." in Ross Babbage, ed. *The Soviets in the Pacific in the 1990s*. New York: Pergamon, 1989.

Baker, James A., III. "America in Asia: Emerging Arch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Winter 1991/92).

Cummings, Bruce.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

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Huan, Guocang. "The Dynamics of Sino-Soviet Relations." *The Western Quarterly* (Spring 1991).

Hayes, Peter. "American Nuclear Hegemony in Korea."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5, no. 4 (1988).

Heiss, Hertha W., Lens, Allen J., and Brougher, Jack. "U.S.-Soviet Commercial Relations Since 1972." in Morris Bornstein, ed. *The Soviet Economy: Continuity and Change*. Boulder: Westview Press, 1981.

Huntington, Samuel P.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s." *Survival* (January/February 1991).

Legvold, Robert. "Soviet Policy in East Asia." *The Western Quarterly* (Spring 1991).

Nelson, Douglas. "Domestic Political Preconditions of U.S. Trade Policy: Liberal Structure and Protectionist Dynamics." *Journal of Public Policy* (January/March 1989).

Scalapino, Robert. "The U.S.-PRC Relations." *The Journal of East Asian Relations* (Winter/Spring, 1990).

Schaffer, John. "Can the World Afford a Failed Uruguay Round?" *Current Views*, vol. 10, no. 3 (1990).

Schmiegelow, Henrik, and Schmiegelow, Michele. "How Japan Affects the International Syste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4, no. 4 (Autumn 1990).

다. 日本關係

- Ijiri, Hidenori. “東北亞에서의 脫冷戰體制의 등장.” 「統一問題研究」, 第2卷 3號 (1990. 가을).
- 길승흠. “미·일안보의 변화와 일본의 선택.” 대한정책개발연구소 세미나. 1990. 10. 30.
- 安清市. “太平洋地域 協力體制 構想에 대한 主要 當事者들의 立場과 理解關係.” 「第5回 合同學術大會 論文集」. 서울: 韓國政治學會, 1983.
- 오꼬노기 마사오. “北韓의 政策變化와 北·日國交交渉.” 民族統一研究院 主催 第1回 國際學術會議 發表論文. 1991. 10. 29.
- 尹正錫. “大平政權의 權力構造와 日本外交課題 優先順位.” 「政策研究」 (1979. 1).
- 江田五月 外, “現代의 奇視 日·米安保條約.” 「文藝春秋」 (1990. 7).
- 內山正熊. “外務省의 機能變遷.” 「國際法 外交 雜誌」, 第71卷 (1973. 3).
- 前田哲南, “軍事費1%構突破의 構造.” 「世界」 (1985. 1).
- “環日本海經濟圈における 國際經濟協力.” 「ソ聯東歐貿易調查月報」 (1990. 4).
- Akada, Tsuno “Japan’s Comprehensive Security Policy.” *Asian Survey*, vol. XXXI, no. 4 (April 1991).
- Crowe, William J. Jr., and Romberg, Alan D. “Rethinking Pacific Security.” *Foreign Affairs*, vol. 70, no. 2 (Spring 1991).
-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vol. 38, no. 30 (August 27. 1986).
- De Velde, J. Van. “Japan’s Nuclear Umbrella: U. 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for Japan.”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7, no. 4 (Winter 1988).

Gelman, Harry. "Continuity versus Change in Soviet Policy in Asia."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4, no. 2 (Summer 1985).

Gorden, Bernard K. "Asia-Pacific Rim: Success at a Price." *Foreign Affairs*, vol. 70, no. 1 (Winter 1990/91).

_____. "Japan and the Pacific Basin Proposal." *Korea and World Affairs*, vol. 5, no. 2 (Summer 1981).

Inoguchi, Takeshi. "Four Japanese Scenarios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Affairs* (Winter 1988/89).

Kojima, Kiyoshi. "An 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id and Development: A Proposal." paper publish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Australian Committee of the Australia-Japan Economic Relations Research Project, September 1976.

Langer, Paul. "Soviet Military Power in Asia." in Donald Zagoria, ed. *Soviet Policy in East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Mendl, Wolf. "Stuck in a Mould: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Soviet Union." *Millenium*, vol. 18, no. 3 (Winter 1989).

Menon, Rajan. "New Thinking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Problems of Communism*, vol. XXXVIII (March/June 1989).

Vatikisliis, Michael. "Japan's Role in the Changing Northeast Asian Order."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2, no. 2 (Summer 1991).

Yasutomo, Dennis T. "Why Aid?: Japan as an "Aid Great Power"." *Pacific Affairs*, vol. 62, no. 4 (Winter 1989/90).

Zhou, Xiaming.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

gram.” *Asian Survey*, vol. XXXI, no. 4 (April 1991).

라. 中國關係

정종욱. “東北亞秩序와 中日의 役割.” 「轉換期の 東北亞秩序와 南北韓關係」, 民族統一研究院 세미나 시리즈 91-01 (1991. 6. 13).

羅冰. “九七前解決臺灣.” 「爭鳴」, 總第167期 (1991. 9).

_____. “中朝稿中蘇朝聯盟圈.” 「爭鳴」, 總第164期 (1991. 6).

馬洪.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과 동북아 경제협력.” 「IPECK 북방 경제」, 제1권 제9호 (1991. 10).

萬光. “世界需要怎樣的國際新秩序.” 「瞭望」, 1991年 第37期 (1991. 9. 16).

薩本望. “布什國家安全戰略報告剖析.” 「瞭望」, 1991年 第35期 (1991. 9. 2).

黎能清. “朝鮮半島無核區的對話應盡早實現.” 「瞭望」, 1991年 第37期 (1991. 9. 16).

“維護世界和平, 促進共同發展--國際新秩序研討會發言摘編.” 「世界知識」, 1991年 第12期 (1991. 6. 16).

李鵬. “關於國民經濟和社會發展十年規劃和第八個五年計劃綱要的報告.”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公報」, 1991年 第12號 (1991. 5. 10).

林彪. “人民戰爭勝利萬歲.” 「紅旗」, 1965年 第10期 (1965. 9. 3).

程萬泉. “走向國際大循環的發展道路.” 「瞭望」, 1987年 第48期 (1987. 11. 30).

鐘誠. “中國沿海經濟發展戰略的提出和實施.” 「中國對外貿易」, 總第143期 (1989. 1).

- “中共13期7中全會審議通過關於制定十年規劃和八五計劃的建議。”
「經濟導報」，總2203期 (1991. 1. 7).
- “中華人民共和國和蘇維埃社會主義共和國聯盟聯合公報。”「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公報」，1991年 第18號 (1991. 7. 18).
- 黃泳. “美對核戰略作重大調整。”「瞭望」，1991年 第41期 (1991. 10. 14).
- 黃庭偉，楊明杰. “九十年代國際新秩序展望。”「瞭望」，1991年 第33期 (1991. 8. 19).
- Chen, Qimao. “International Pattern in Asia-Pacific Region: Brewing Changing.” *The Korean Journal of Interantional Studies*, vol. 12, no. 3 (Autumn 1991).
- “China Respects the Soviet People’s Choice.” *Beijing Review*, September 2~8, 1991.
- “China Stands for the Fair World Order.” *Beijing Review*, September 16~22, 1991.
- Ding, Arthur S. “Peking’s Foreign Policy in the Changing World.” *Issues & Studies*, vol. 27, no. 8 (August 1991).
- Garver, John W. “Chinese Foreign Politics: The Diplomacy of Damage Control.” *Current History*, vol. 90, no. 557 (September 1991).
- “Improving Home Economy, Promoting World Peace.” *Beijing Review*, October 7~13, 1991.
- “Japanese Agression: Forgive, Never Forget.” *Beijing Review*. September 30~October 6, 1991.
- “Li Peng on China’s Foreign Relations.” *Beijing Review*, September 23~29, 1991.
- “Li Peng Speaks on Current World Issues.” *Beijing Review*, September 9~15, 1991.

Mu, Youlin. "More on China's Independent Diplomacy." *Beijing Review*, January 30, 1984.

"Reform and the Open Policy in the '90s." *Beijing Review*, September 9~15, 1991.

Zhang, Zhenmhuang. "Building a Just World Order." *Beijing Review*, August 12~18, 1991.

Zhu, Ronggen. "Breakthrough in DPRK-Japan Relations." *Beijing Review*, October 22~28, 1990.

마.北韓關係

박동철. "북한의 대외개방 추세와 전망." 「統一問題研究」, 제1권 3호 (1989. 가을).

Koh, B. C. "North Korea in 1987: Launching a New Seven-Year Plan." *Asian Survey*, vol. XXVIII, no. 1 (January 1988).

Lee, Chong-Sik. "New Path for North Korea." *Problems of Communism*, vol. XXVI, no. 2 (March/April 1977).

Lee, Hy-Sang. "North Korea's Closed Economy: The Hidden Opening." *Asian Survey*, vol. XXVIII, no. 12 (December 1988).

Perry, John Curtis. "Dateline North Korea: A Communist Hold-out." *Foreign Policy*, no. 80 (Fall 1990).

Rhee, Sang-Woo. "North Korea in 1990: Lonesome Struggle to Keep Chuch'e." *Asian Survey*, vol. XXXI, no. 1 (January 1991).

Shinn, Rinn-sup. "Foreign and Reunification Policies." *Problems of Communism*, vol. XXX (January/February 1973).

Smirnov, V. "Development of Foreign Economic 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r Eastern Affairs*, vol. 42, no. 4 (1984).

Spector, Leonard S. and Smith, Jacqueline R. "North Korea: The Next Nuclear Nightmare?" *Arms Control Today*, vol. 24, no. 2 (March 1991).

고철재. "날로 강화되는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반동들간의 군사적 결탁." 「국제생활」, 제44호 (1989. 9).

고학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방침." 「근로자」, 제570호 (1989. 10).

김광수. "자력갱생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담보." 「근로자」, 제580호 (1990. 8).

김구식.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 「근로자」, 제578호 (1990. 6).

김수천.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키는 것은 조선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절박한 과업." 「근로자」, 제533호 (1986. 9).

김일성. "조선로동당의 건설의 력사적경험." 「조선중앙년감 1987」.

_____.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인류앞에 나선 초미의 과제." 「조선중앙년감 1987」.

_____.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조선중앙년감 1987」.

_____.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조선중앙년감 1989」.

_____.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근로자」, 제578호 (1990. 6).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1983」.

_____ . “맑스 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
「조선중앙년감 1984」.

_____ .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조선중앙년감 1989」.

박제해.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자.” 「근로자」, 제554호 (1988. 6).

박현규. “부쉬정권의 무모한 아세아, 태평양 침략교리.” 「국제생활」, 제42호 (1989. 7).

방철수. “미제의 대조선정책은 아세아, 태평양전략의 중요교리.” 「근로자」, 제565호 (1989. 5).

신동기. “공산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길로 확고히 전진하는 중국인민.” 「국제생활」, 제51호 (1990. 4).

정송남. “발전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 「국제생활」, 제59호 (1990. 12).

“조선반도에서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자.” 「근로자」, 제531호 (1986. 7).

허영익.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중요과업.” 「근로자」, 제534호 (1986. 10).

황헌.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인류앞에 나서고있는 초미의 문제.” 「근로자」, 제525호 (1986. 1).

3. 其他

가. 日刊紙

「京鄉新聞」.

「東亞日報」.

「서울신문」.

「朝鮮日報」.

「中央日報」.

「한국일보」.

Korea Herald.

New York Times.

「讀賣新聞」.

「日本經濟新聞」.

「朝日新聞」.

「明報」.

「文匯報」.

「人民日報」.

China Daily.

「로동신문」.

나. 週刊紙

Far Eastern Economic Review.